



제7편 정치

제1장 정당활동

제2장 선거

제3장 지방자치



제1장 정당활동

제1절 미군정시대

1. 국내 정치상황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하기에 앞서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와 정무총감 엔도 류시쿠(遠藤柳作)를 통해 항복 후 조선에서의 치안유지 및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당시 민족주의자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송진우(宋鎭禹), 여운형(呂運亨), 안재홍(安在鴻) 등에게 요청하였다. 여운형, 안재홍 등은 일본측의 요청을 수락하고 일제치하에서 비밀결사단체였던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치안유지와 아울러 과도적인 독립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1945년 8월 17일 결성하였다.¹⁾

건국준비위원회는 당초 좌·우 및 중도파 등 여러 계파의 인사들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점차 좌파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안재홍 등 우익세력이 탈퇴하였고, 결국 여운형 중심의 건국동맹과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한편 좌파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여 9월 1일에는 건준위에서 이 탈한 중도우파인 안재홍 등이 국민당을, 9월 16일에는 송진우·김병로 등 우익세력들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러던 중 1945년 9월 9일부터 미군이 38선 이남지역에 진주하여 미군정이 남한지역의 통치를 맡게 됨에 따라 건국준비위원회와 조선인민공화



여운형, 안재홍 등은 일본측의 요청을 수락하고 일제치하에서 비밀결사단체였던 조선건국동맹을 모체로 치안유지와 아울러 과도적인 독립정부 수립을 준비하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1945년 결성하였다.

1) 당시 일본측의 요구사항은 ① 전국의 정치법과 경제법을 석방할 것, ②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할 것, ③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정치활동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④ 학생과 청년을 훈련·조직하는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⑤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조직·동원하는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등 5개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 「대한민국정당사」 제1집(1945-1972), 121-122쪽.

2) Gregory Henderson(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pp.136-147 참조.



〈사진 3-7 : 1〉(1948)
우남 이승만 대통령 취임선서

국은 무효화되었으며,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은 조선인민당으로 개편되었다. 하지(John R. Hodge)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군정은 공산주의자를 거부하는 입장에서 공산주의라고 생각되는 요소는 무조건 척결하였으며, 민족청년단과 대한독립청년단을 포함하는 많은 우익단체들에게 조직과 자금지원을 하여 좌익운동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미군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의 각종 정치적 폭동이 남한을 휩쓸었다.²⁾

전후 한반도 문제의 처리를 놓고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三相)회담’에서 한민족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안을 결의하였으나 한국인들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하였고,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소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한국 문제는 유엔에 상정되었다. 이즈음 남한지역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단독정부 수립운동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미군정 당국의 지원 하에 1946년 6월부터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운동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결국 ‘남북총선에 의한 정부구성’이라는 유엔의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정치 상황하에서 장기간의 망명생활 동안 미국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바 있는 이승만(李承晩)이 남한을 위한 가장 적합한 지도자로 등장하였다.

2. 정당활동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당활동이 시작된 것은 미군정기간인 1946년 11월 23일에 미군정 법령 제 55호로 ‘정당에 관한 규칙’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특히 해방 후 정부수립 시까지 좌·우익간 이념갈등을 둘러싸고 수많은 정당들이 생성과 소멸 및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당,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한국독립당 등이다.

1) 국민당

국민당은 1945년 9월 1일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건준위의 좌경화에 불만을 품고 탈퇴한 중간우파의 안재홍(安在鴻)을 중심으로 공화당, 근우동맹(槿友同盟), 동지회, 사회민주당, 자유당 등을 흡수하여 창당되었다. 그러나 국민당은 여러 이질적 세력들이 연합하였던 관계로 지지기반이 불명확하고 미약하여 후에 일부는 환국한 임시정부의 주축인 한국독립당에 흡수되고, 또 일부는 오세창(吳世昌)·권동진(權東鎭)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한민족당에 합류하였다. 그 후 1947년 7월 2일 당수 안재홍이 미군정청 민정장관에 임명됨으로써 국민당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2)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은 해방직후 팽창일로에 있던 좌익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우익 민주세력의 총집합체로서 원세훈(元世勳)의 고려민주당, 김병로(金炳魯)의 조선민족당, 백남훈(白南薰)의 한국국민당, 송진우(宋鎭禹)의 국민대회준비위원회 등 4파가 연합하여 1945년 9월 16일에 창당되었다.³⁾

한국민주당은 경운동 천도교기념관에서 있었던 창립총회 결의문에서 “우리는 독립운동의 결정체이고 현재 국제적으로 승인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소위 정권을 참칭하는 일체의 단체 및 그 행동은 여하한 종류를 불문하고 이것을 단호히 배격한다”⁴⁾라고 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전면적으로 배격하고 중경(重慶)의 임시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한국민주당은 1945년 10월 귀국한 이승만과 11월 귀국한 김구, 김규식 등을 지지하였으며,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에 대하여 반탁운동(反託運動)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46년 5월 8일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안을 지지하고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후 정치정세에 따라 한국민주당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민주국민당, 민주당, 신민당, 자유당 등 세 세력으로 분산되었다.

3)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

일제치하에서 지하로 잠복하였던 공산주의세력들은 해방 직후 활동을

3) 한국민주당은 성격상으로는 대부분 보수파이고 기호파와 호남파들의 재벌 및 중산계층의 정당이었고 일제시대에 관료층 역임한 사람들이 많았다. 신명순(1993), 『한국정치론』, 법문사, 10쪽.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134-135쪽.

개시하였다. 그 중에서 이영(李英), 최익한(崔益翰), 정백(鄭柏) 등 장안파가 먼저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박헌영(朴憲永)을 중심으로 한 콤폴트(세칭 재건파)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9월 12일 조선공산당을 결성하였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자 민족주의 진영은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조선공산당은 인민당과 연합하여 찬탁운동(贊託運動)을 전개하였다.

국내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분열과 투쟁을 일삼던 조선공산당은 1946년 9월에 미 군정청의 간부체포령에 의해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으며, 그해 9월부터 10월까지 철도, 출판, 전신, 전화, 전기 등 제 분야의 파업을 주도한 데 이어 10월에는 대구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공산당은 11월 23일 인민당과 신민당을 흡수하여 남조선노동당(남로당)으로 개편되었다. 남로당은 노동조합전국평의회(全評), 농민조합연맹(全農), 민주청년총동맹(民靑), 부녀총동맹(婦盟), 문화단체총연맹(文聯) 등 사회단체들의 배후에서 북조선노동당과의 연락하에 질서의 교란과 민심의 선동을 일삼았으며, 1948년 4월의 제주도 폭동과 10월의 여수·순천사건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1949년 10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정당등록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남로당은 완전히 비합법화되었다.

4) 조선인민당(근로인민당)

미 군정청이 남한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장악함에 따라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건국준비위원회는 고려국민동맹, 인민동지회, 일오회(一五會) 등을 흡수하여 1945년 11월 12일 조선인민당으로 개편되었다.

조선인민당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에 대하여 조선공산당과 함께 찬탁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그 후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별로 활동하지 못하다가 1947년 5월 24일 근로인민당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1947년 7월 당수인 여운형이 암살되자 당 조직이 와해되었다.

5) 한국독립당

중경(重慶)에서 귀국한 임시정부 세력을 주축으로 한 한국독립당은

1930년 상해에서 결성된 이래 김구(金九) 임정주석을 중심으로 유지해 오다가 1946년 4월 18일 국민당, 신한민족당과 통합하였다. 한국독립당은 한국민주당과 함께 우익진영의 양대 축으로서 반탁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며, 좌우합작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김규식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독립당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을 주장하는 이승만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1947년 11월 15일 유엔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자, 한국독립당의 김구는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을 시도하였다. 그 후 김구는 1948년 4월 1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공산당의 기만과 무성의로 그의 남북협상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1949년 6월 김구가 암살된 후 한국독립당의 조직은 와해되었다.

3. 성남·광주지역의 정당활동

미 군정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은 조선총독부령의 ‘면에 관한 규정’ 및 ‘도의 관할구역’에 의해 대부분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지역이었고 일부는 광주군 돌마면에 속하였다. 1946년에 행정업무를 관할하기 위하여 중부면 성남출장소(城南出張所)가 탄리에 개소되었다가 1948년에는 수진리로 이전되었다.⁵⁾

이 시기는 정부수립 이전이고 근대적 의미의 정당이 이제 막 출범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역단위의 정당활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시의 정당은 건국과정에서 좌·우간 이념갈등과 관련한 이합집산의 연속이었으며, 지역활동을 담당하는 지구당도 없었고 주로 중앙단위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5) 성남시(1998),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성남시정, 28쪽.

제2절 제1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1948년 5월 10일 유엔감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국회의 구성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명, 한국민주당 29명, 대동청년단 12명, 조선민족청년단 6명, 기타 정당·단체 13명, 무소속 85명 등으로, 이승만 노선을 지지해 오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건국 초 정부형태는 한국민주당 측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제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선출과정에서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국민주당은 초대 내각 구성에서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이승만과 결별하게 되었으며, 1949년 2월 10일 다른 당파들을 흡수하여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으로 당명을 개칭한 후 제1공화국 전 기간에 걸쳐 야당으로서 이승만 정부와 투쟁을 전개하였다.

1950년 5월 30일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석은 이승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대한국민당과 야당인 민주국민당이 각각 24석을 확보한 가운데 11개 정당과 사회단체 등에 널리 분포되었으며, 특히 무소속이 126석을 확보하여 정국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50년 6·25의 발발로 정부와 국회가 부산으로 피난한 가운데 이승만은 야당 세력이 많은 국회에서 초대 선거 때와 같이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자신의 권력기반이 될 정당의 창설과 대통령의 직접 선출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였다.⁶⁾

신당 창당은 1951년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하여 이승만이 신당조직의 필요성을 밝힘에 따라 이승만 지지 세력들이 자유당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원내와 원외에서 각각 결성되었으며, 이 두 당은 1952년 3월 통합하여 자유당(自由黨)을 창당하고 당수에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한편,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1951년 11월부터 정부에 의해 통과가 시도되었으나 야당측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



건국 초 정부형태는 한국민주당 측의 의원내각제와 이승만의 대통령제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6) 신병순, 앞의 책, 14~15쪽.

하다가, 결국 1952년 7월 4일 야당안과 정부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으로 상정되어 제엄령이 선포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⁷⁾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선거와 제3대 부통령선거가 실시되어 대통령에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 부통령에 무소속의 함태영(咸台永)이 당선되었으며,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의석 203개 중 자유당 114명, 민주국민당 15명, 대한국민당 3명, 국민회 3명, 무소속 68명 등이 당선됨으로써 자유당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자유당은 제3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하여 1954년 11월 27일 초대 대통령의 '3선제한'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개헌안은 개헌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203명의 2/3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되어 부결이 선포되었으나 이를 후 소위 '사사오입(四捨五入)' 원리에 의해 개헌안이 통과로 번복된 것이다. 그러나 사사오입 개헌은 부산 정치파동에 이어 영구집권을 위한 불법을 또 한번 자행한 것으로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야당계 인사들이 결집한 민주당이 발족되는 계기가 되었다.

1956년 5월 15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선거와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는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서거한 가운데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무난히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張勉) 후보가 자유당이 심혈을 기울인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자유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1956년 8월에 실시된 시·읍·면장 및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와 1958년 5월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자유당의 저조와 민주당의 약진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민의의 소재를 보여주었다.⁸⁾ 1956년 8월에 실시된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서 자유당 당선자 비율이 크게 저하되고 민주당 또는 무소속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자유당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승리한 반면 민주당은 도시지역에서 승리함으로써 1960년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이 장기집권을 위하여 조직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자행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시민들과 경찰의 충돌로 야기된 마산사태를

7) 1952년 2월부터 시작하여 7월에 종료된 이 정치적 사건을 '부산정치파동'이라고 일컫는다.



대통령에는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서거한 가운데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무난히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張勉) 후보가 자유당이 심혈을 기울인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자유당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8) 1956년 8월에 실시된 시·읍·면장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에서 자유당 당선자 비율이 크게 저하되고 민주당 또는 무소속 비율이 증가되었으며, 1958년 5월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당 의석은 제3대 국회에 비해서 33석이 늘어난 반면 자유당 의석은 5석이 줄었다.

시작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이승만은 4월 26일 대통령 직에서 물러남으로써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2. 정당활동

제1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정당은 제헌국회(1948년) 16개, 제2대 국회(1950년) 11개, 제3대 국회(1954년) 4개, 제4대 국회(1958년) 3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많은 정당 및 정치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었다가 점차 통합·정돈되는 모습을 띠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당은 이승만 중심의 여당인 자유당과 이에 맞선 한국민주당 - 민주국민당 - 민주당 등으로 이어지는 야당세력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 밖에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소수 세력이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태동한 진보당·민주혁신당 등 혁신세력 정당이 있었다.

1) 자유당

자유당은 전쟁과정에서 야당 주도의 국회와 행정부간의 극심한 불화상황에서 1951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신당의 필요성에 관한 담화 발표를 계기로 원내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자유당과 원외의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원외자유당의 두 갈래로 추진되었다.

원내자유당 결성은 이미 5월 29일 94명을 소속의원으로서 한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가 통합된 공화민정회(共和民政會)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으며,⁹⁾ 원외 자유당은 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와 더불어 국민회, 대한청년단, 대한노동조합총연맹, 대한농민조합총연맹, 대한부인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9월 3일 신당발기준비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추진되었다.

원내와 원외에서 이원적으로 진행되던 신당 창당은 11월 30일 준비위원회를 통해 당명 및 정책문제를 협상하는 등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원내세력은 12월 3일에, 원외세력은 12월 23일에 자유당(自由黨)이라는 하나의 간판아래 각각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을 설립하게 되었다.

9) 이시영 초대부통령의 사임으로 1951년 실시된 부통령 보궐선거에서 여당측의 신정동지회가 지명한 이갑성(李甲成) 후보가 민주국민당과 공화구락부가 합작하여 지지한 김성수(金性洙) 후보에게 패한 후, 정부측에서 야당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신정동지회와 공화구락부를 통합한 공화민정회라는 교섭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210쪽.

원내자유당과 원외자유당이 대립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으로, 원내자유당은 내각책임제 개헌을 통하여 이승만을 상징적 대통령에 앉히고 장면(張勉)을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로 추대하여 실권을 행사하고자 했고 원외자유당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하여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이범석(李範奭)을 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실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¹⁰⁾

따라서 1952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의 국회 표결은 재석의원 163명중 원내자유당 93명을 포함한 143명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원내자유당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에 반대함에 따라 원외자유당은 삼우장과(三友莊派) 의원 45명을 포섭하는 등 독자적 세력 확대에 치중하였으며, 그 후 원내자유당과 자유당으로 통합하면서 소위 발췌개헌안의 국회통과를 이루었다. 자유당은 1952년 8월의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범석을 지명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이승만이 무소속의 함태영을 지지했기 때문에 투표결과 대통령에 이승만과 더불어 부통령에 함태영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승만은 부산정치과동에서 보여준 민족청년단의 강력한 조직력에 위협을 느껴 이범석을 견제대상으로 간주하고 선거에서 국무총리인 장택상을 시켜 함태영을 당선시킨 것이다.¹¹⁾

이에 자유당의 족청계(族靑系)는 중앙당에서부터 지구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간부를 자파로 교체하고 특별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족청계를 숙청하였으며, 반면 이승만은 족청계 각료를 해임시키고 자유당 간부직에 민족청년단 출신을 기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족청계 제거작업에 착수하여 1954년 1월 이범석 등을 자유당에서 제명하기에 이르렀다. 자유당에서 족청계가 제거된 뒤 자유당의 지도체제는 이기붕 지도체제로 넘어갔으며, 이때 자유당은 중앙당의 조직강화를 위하여 1953년 11월 전당대회를 통하여 중앙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중앙당의 부장·차장제도를 신설하였다.

이기붕 지도체제로 당을 정비한 자유당은 1954년의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03석중 114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조항 철폐를 골자로 하는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켜 이승만과 자유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10) 김운태 외(1999), 『한국정치론』(제4전정판), 박영사, 381쪽.

11) 지병문 외(2001), 『현대 한국 정치사의 세로운 인식』, 박영사, 137쪽.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조항 철폐를 골자로 하는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켜 이승만과 자유당이 장기집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련하였다.

1956년 5월의 정·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선거에서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380만표를 얻어 400만표를 획득한 민주당의 장면(張勉)에게 패하였다.

그 해 8월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자유당이 조직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결과 시·읍·면의회의원 선거에서는 평균 68%의 당선율을, 서울시와 도의회의원 선거에서는 57%의 당선율을 기록했다. 그 후 자유당은 1957년 3월 제8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헌개정과 당 기구 개편을 단행하여 그 때까지 부장·차장회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당조직을 당무회의 중심으로 바꾸었으며, 1958년의 제4대 총선 결과 총 233석 중 과반수가 넘는 126석을 확보하였다.

자유당은 1960년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1958년 12월 야당의원들을 배제한 채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하던 시·읍·면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1959년 3월 내무부장관 및 도지사, 경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를 자유당 출신 정치인들로 단행하여 관료·경찰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1960년 3월의 제4대 정·부통령선거에서 무리한 부정선거 전략으로 제1공화국의 붕괴를 자초하였다.

2)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민주당

해방 후부터 제1공화국 수립 시까지 소위 인민공화국을 타도하고 그 후 미·소 공동위원회에 민족적 주장을 내세워 대한민국 수립에 많은 공을 세웠던 한국민주당은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선거에서 총 의석의 불과 12.7%인 2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국민주당은 위축된 당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한촉성국민회의의 신익희(申翼熙) 세력과 대동청년단의 지청천(池青天) 세력을 규합하여 1949년 2월 10일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을 결성하였다. 원내에 70석을 지닌 민주국민당은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의 야당이 되었다.¹²⁾

1949년 농지개혁법안의 입법을 둘러싸고 민주국민당(민국당)은 소장 혁신계 의원들과 대립하였는데, 민국당은 자당의 정치적 기반인 소장료수

12) 한국민주당 29석, 대한촉성국민회 55석, 대동청년단 12석으로 총 96석이지만 통합과정에서 일부가 이탈하여 70석이 되었다.

입 내지 경작제도의 붕괴를 우려하여 농지개혁을 기피하는 입장이었다. 민국당은 1949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남로당의 대남정치공작에 국회의원이 관련된 소위 ‘프락치사건’으로 인하여 소장과 의원 13명이 구속되는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각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민국당은 이러한 세력 확장을 기반으로 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민국당은 1954년의 제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03석 중 15석만을 획득하여 참패하였다. 그러나 민국당은 11월 29일 초대 대통령의 ‘3선 제한’ 철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위 사사오입 개헌안의 통과로 무소속동지회, 순무소속의원 등과 함께 60명으로 호헌동지회(護憲同志會)라는 원내교섭 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모체로 민주당(民主黨)이 창당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결국 자유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무리한 사사오입 개헌파동이 야당의 원들을 단결하고 결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좌익전향자, 독재 및 부패행위가 현저하여 사회규탄을 받는 자 등을 배제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조봉암(趙奉岩) 등 혁신계의 참여 여부가 주된 논란의 대상되었다. 신익희, 조병옥, 박상훈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파는 혁신계의 참여에 반대한 반면, 장택상, 신도성 등 민주대동파는 혁신계의 참여에 찬성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약 9개월 동안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혁신계가 배제된 채 보수계 인사들만을 중심으로 하여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이 결성되었다. 민주당은 종전부터의 장면·정일형 등의 홍사단계, 현석호·이태용 등 자유당 탈당파, 무소속구락부 등을 규합하여 원내 세력 33석을 유지하였다.¹³⁾

민주당은 자유당 정권에 대항하는 범야세력을 결집시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그 결과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제3대 총선에 비해 훨씬 많은 79석을 확보하여 자유당과 함께 양당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서울과 도시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상승은 자유당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여 야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했으며, 결국 1960년 3월 정·부통령선거에서 자유당의 붕괴를 초래하게 하였다.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좌익전향자, 독재 및 부패행위가 현저하여 사회규탄을 받는 자 등을 배제하려는 시도와 관련하여 조봉암(趙奉岩) 등 혁신계의 참여 여부가 주된 논란의 대상되었다.

13) 위의 책, 225쪽.

3) 혁신 정당

제1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혁신진보 성향의 정당으로는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들 수 있다. 먼저 진보당은 1956년 1월 26일 조봉암, 서상일, 박기출, 이동하 등이 진보당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창당과정에서 조봉암과 서상일 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화되어, 결국 서상일·이동하 등은 민주혁신당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탈퇴하였다. 진보당은 3월 31일 전국추진위원회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정강·정책안을 채택하고 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에서 5월 15일 실시되는 정·부통령선거에 대비하였다. 제1야당 후보인 신익희(申翼熙)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선거결과 진보당의 조봉암(曹奉岩) 대통령후보가 이승만 후보의 500만여 표에 비해 약 200만 표라는 적지 않은 득표를 기록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1956년 11월 진보당 창당대회가 개최되어 위원장에 조봉암, 부위원장에 박기출(朴己出), 김달호(金達鎬), 간사장에 윤길중(尹吉重)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인 1월 11일 조봉암, 박기출 등 주요간부 1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었으며, 2월 25일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 조봉암이 사형됨으로써 진보당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진보당의 등록취소 이유를 보면, ① 진보당은 대한민국과 UN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 소련, 중공 등의 주장과 같이 체코, 폴란드, 인도 등 적성국가를 주로 하여 구성되는 감시단의 감시 하에 남북통일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식선언하고 있고, ② 진보당 간부들은 북한이 밀파한 간첩·파괴공작대들과 항상 접선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당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으며, ③ 진보당은 목적달성의 전제단계로서 공산당의 비밀당원 및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을 음해·파괴하려고 기도하여 왔다는 것 등이다.¹⁴⁾

민주혁신당은 1957년 10월 15일 진보당 창당과정에서 조봉암과의 의견차이로 탈퇴한 서상일(徐相日)을 중심으로 한 혁신세력이 창당한 정당으로, 통일방안으로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거를 지지하는 등의 정책을 표방하였다.

14) 위의 책, 234쪽.

3. 성남·광주지역의 정당활동

제1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은 군정시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속해 있었다. 지역단위의 정당 활동은 몇 차례에 걸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948년의 제헌 국회의원 선거의 성남지역이 속해 있는 광주군에서는 제헌 국회의원으로 대한독립촉성회 소속의 신익희(申翼熙)가 무투표 당선되었는데, 그는 1950년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국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당시 정당으로는 민주국민당 이외에는 수시로 이합집산하는 군소정당이 대부분이었으며, 이들은 정당기반이 없다는 점에서 무소속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1954년의 제3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한국당 또는 민주당의 양자 대결구도가 정립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선거과정을 통해 여·야간의 대결이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3대 총선에서는 자유당의 최인규와 민주국민당의 신익희가 입후보하여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신익희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세중 서거함에 따라 실시된 1956년의 보궐선거에서는 자유당의 박재덕과 민주당의 신하균이 대결하여 신익희의 아들인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시 자유당의 최인규와 민주당의 신하균의 대결에서는 최인규(崔仁圭)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3절 제2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4·19혁명으로 1960년 4월 26일 이승만대통령이 사임하고 제1공화국이 붕괴됨에 따라 외무부장관으로 수석 국무위원이던 허정(許政)이 이끄는

〈사진 3-7-2〉 윤보선 대통령
(오른쪽) 과 장면 국무총리



과도정부가 출범하였다. 허정 과도정부 수반은 4월 28일 담화를 발표하여 국민의 여망에 따라 3·15 부정선거의 책임을 밝혀 엄정 처단할 것과 경찰을 중립화하여 무질서한 상태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후 정치·사회적 혼란 속에서 제2공화국 수립을 위한 개헌작업이 진행되어 그 해 6월 15일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의원 총 의석 233석 중 175석을 획득했으며, 참의원에서도 총 의석 58석 중 31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선거결과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에서는 신·구파가 각각 당선자 대회를 열고 별도조직을 만드는 등 분당의 조짐이 역력했다. 신파는 1960년 8월 당선자대회를 열고 ‘13인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구파도 별도로 당선자대회를 열고 ‘23인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민주당은 제1공화국에서부터 신파와 구파의 양대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집권당이 되면서 세력다툼이 노골화된 것이다.¹⁵⁾

그 해 8월 8일 국회가 개원되자 민의원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는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신파측은 의장에 자파의 곽상훈(郭尙勳), 부의장에 구파의 이영준(李榮俊)과 무소속의 이재형(李載澄)을 내정하고 그들의 당선을 위하여 온갖 정략을 폈으나, 결국 구파측의 정략이 주효하여

15) 구파는 신익희, 조병옥, 김준연, 윤보선 등 지주 출신으로 일본·미국 등에 유학한 사람들이고, 신파는 이승만으로부터 소위된 자유당 인사들과 흥사단계, 조선민주당계들로서 장면, 오위영, 조재천, 위상섭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무소속 몫으로 배정한 부의장에는 이재형 대신 구파에 가까운 서민호(徐珉濤)가 당선되었다. 한편 참의원 의장단 선거에서는 신·구 양파가 의장에 무소속의 백낙준을, 부의장에는 신파측이 고의동, 구파측이 소선규를 각각 맡았으나 구파측의 승리로 소선규(蘇宣奎)가 부의장으로 당선되었다.

8월 12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는 구파의 윤보선(尹潽善)이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208표라는 절대다수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의원내각제에서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국무총리의 선출문제에 있어서는 신파와 구파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8월 16일 국무총리로 구파의 김도연(金度演)을 지명하였으나, 국회표결에서 찬성 111표, 반대 112표로 재석 과반수보다 3표 부족하여 인준이 부결되었다. 이에 8월 18일 제2차로 장면(張勉)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으며, 8월 19일 국회표결에서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117표, 반대 107표로 인준이 가결되었다.



장면 내각은 출범 후 민주당 구파와 소장파의 압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으며,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장면 내각은 출범 후 민주당 구파와 소장파의 압력에 끊임없이 시달렸으며, 안정된 정치기반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 구파는 별도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고 1961년 2월 20일 신민당(新民黨)을 결성하였으며, 민주당내 소장파도 신평회(新風會)를 결성하여 민주당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자파의 내각참여를 요구했다.



〈사진 3-7-3〉 윤보선 대통령 취임

한편 4·19 혁명과제의 실천범위와 속도 등을 둘러싼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의 갈등도 장면 내각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 장면 내각은 당초 소급입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1960년 10월 4·19 부상자들의 국회의사당 점거 및 소급입법 제정요구에 따라 결국 소급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면 내각은 처음에는 4·19 주도세력을, 그리고 나중에는 경찰 관료와 보수 세력을 소외시킴으로써 정치적 지지기반을 상실하였다.

제2공화국에서 정치·사회적 혼란과 혁신세력의 대두, 그리고 시위의 증가 등도 장면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전국교원노조연맹을 중심으로 한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진보적 학생



전국교원노조연맹을 중심으로 한 교원노조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와 진보적 학생들의 외세척수 및 남북한의 직접교류 주장 등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16) 김호전 외(1995), 『한국현대 정치사』, 법문사, 248-249쪽.

들의 외세척수 및 남북한의 직접교류 주장 등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결국 장면 정부는 집권 후 약 9개월 동안에 정치권내에서 안정적 세력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압력에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정부가 제시한 독재주의 배격, 법치주의 구현, 자유경제원칙 등 제반 민주적 가치들은 현대 한국정치사에 큰 의미를 가진다.¹⁶⁾

2. 정당활동

제2공화국 시기의 정당 활동은 4.19혁명 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 내의 신·구파간의 갈등 및 대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결국 구파는 신민당이라는 다른 정당으로 분리·발족하였으나 5·16쿠데타로 곧 해산되었다. 그 밖에 제1공화국의 자유당 잔류파가 중심이 된 공화당과 사회대중당·한국사회당 등 혁신정당 세력이 있었다.

1) 민주당

민주당은 7.29총선에서 압승하여 제2공화국 정부에서 정권을 담당하였으나, 국무총리 인준과정에서 신·구파 간의 대립이 노골화되었다. 선거 직후 민주당 소속의원 당선자 세력분포를 보면 구파측은 민의원 84명 참의원 17명이고 신파측은 민의원 75명 참의원 13명이었으며, 중도파가 10여명이 되었다.¹⁷⁾ 장면 총리는 거국내각의 구성을 공약하였으나, 구파측의 입각 거부와 신파내 소장의원들의 반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신파중심 내각을 구성하게 되었다. 신파중심의 내각구성은 구파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구파는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장면 내각의 3차례에 걸친 개각과정에서 양파간의 알력은 더욱 심화되어 결국 1961년 2월에는 구파가 신민당(新民黨)으로 발족하여 신파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그 동안 민주당의 신파와 구파는 연립내각 구성문제 등을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였으나 별 소득이 없었으며, 이철승(李哲承)·김재순(金在淳) 등 18명의 신파 소장 의원들이 ‘소장동지회’를 구성

17) 김현우(2000), 『한국정당동향운동사』, 온유문화사, 341쪽.

하고 구파의 소장의원들과 협력하여 신·구파간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성과가 없었다.

2) 신민당

제2공화국 정부의 국무총리 선출을 둘러싼 경쟁에서 패배한 민주당 구파는 1960년 8월 구파의원들만을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구파민주당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과 장면 내각에 입각을 거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8월 31일 구파는 86명의 의원으로 '구파동지회'라는 명칭의 교섭단체를 결성하고 원내총무에 유진산(柳珍山), 부총무에 이민우(李敏雨), 김영삼(金泳三)을 선출하였다.

구파동지회는 11월 8일에는 신당발기준비대회를 개최하여 선언·강령·정책 등을 채택하였으며, 1961년 2월 20일 신민당(新民黨)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신민당은 창당선언문에서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등의 유업을 계승한 보수정당임을 자처하였으나, 신민당의 정강·정책이나 당헌·당규 등이 민주당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당이 모두 보수정당이라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신민당은 '반쪽만의 야당'이란 말을 듣고 있었는데, 신민당이 민주당에서 분당하여 나온 이유와 양당의 성향, 구성인물을 볼 때 신민당이 온전한 야당이 되기는 어려웠다.¹⁸⁾

18) 위의 책, 363쪽.

3) 자유당, 공화당

제1공화국에서 집권세력이었던 자유당 의원들은 4.19혁명 이후 대부분당을 떠났으며 조정규, 이활(李活) 등 일부 잔류파 의원들은 자유당 정권의 과오를 시인하고 보수혁신의 여러 정파들을 규합하여 자유당의 재건을 기도하였다. 1960년 6월 104명의 국회의원이 자유당을 탈당했으며, 그 중 4명은 '헌정동지회'를 결성하였다.

1960년 7·29 총선에 약 100여 명의 자유당 당원이 자유당, 헌정동지회 또는 무소속 등으로 출마하였으나, 민의원 의원과 참의원 의원을 합하여 10여 명만이 당선되었다. 이에 자유당 잔류파는 신민당의 중도파, 통일당,

조민당 중견파, 한국사회당 탈퇴자, 한국독립당 보수파, 노동당 탈퇴파, 민족주의민주사회당 잔류파 등 7개 정치세력과 연합하여 11월 15일 공화당(共和黨)을 결성하고 최고위원으로 김준연, 이갑성, 이윤영, 조경한, 조경규 등 5인을 추대하였다. 공화당의 창당으로 자유당은 소멸되었다.

4) 혁신 정당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에 비해 혁신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세력들은 정치적 입지와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으며, 더욱이 지도층 내부의 분열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제2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혁신정당들로는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통일사회당 등이 있다.

먼저 1960년 5월 13일 진보계와 근민당, 민혁당 계열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회대중당은 7·29 총선에서 민의원 의원 129명, 참의원 의원 6명을 공천하였으나 민의원에 4명, 참의원에 1명만이 당선되었다. 그 후 사회대중당 내부에서 진보당계와 비진보당계간, 그리고 진보당계 내부에서도 김달호(金達鎬)계와 비 김달호계 간의 견해 차이로 김달호계 만이 11월 24일 별도로 사회대중당을 창당하였다.

한국사회당은 1960년 5월 21일 전진한 등 민족주의민주사회당 세력이 결성한 정당으로, 7·29 총선에 총 21명의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민의원에 1명, 참의원에 1명만이 당선되었다. 그 후 전진한이 8월 4일 탈당 선언을 함으로써 한국사회당은 와해되었으며, 일부세력은 사회당의 비진보계와 연합하여 독립사회당을 결성했다.

혁신동지총연맹은 1960년 5월 12일 김창숙(金昌淑), 장건상(張建相), 유림(柳林), 권오순(權五淳) 등이 결성한 정당으로, 7·29 총선에 14명의 공천자를 입후보시켰으나 전부 낙선하였다. 그 후 일부는 사회대중당의 비진보당계와 독립사회당의 결성을 추진하였으며, 장건상 등은 윤길중과 혁신당 결성을 추진하였다.

그 후 혁신정당의 각 파는 통합을 추진하여 1961년 1월 21일 서상일 등의 사회대중당 이탈파, 사회대중당의 윤길중계, 한국사회당, 혁신연맹, 고정훈의 사회혁신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사회당을 결성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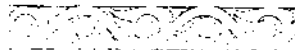
제2공화국은 제1공화국에 비해 혁신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세력들은 정치적 입지와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으며, 더욱이 지도층 내부의 분열로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 「대한민국 정당사」 제1집 (1945-1972), 258쪽.

3. 성남·광주지역의 정당활동

제2공화국 기간인 1960~1961년 사이 성남지역은 주로 광주군 중부면에 속하여 광주군 선거구에 편입되어 있었다. 1960년의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광주군 선거구에 출마한 12명의 후보자들 중 2명만을 제외하고 10명이 모두 무소속 출마자들이었는데, 이는 자유당 정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많은 구여권 인사들이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는 무소속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민주당과 자유당의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물리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당시 민주당 후보는 장동국, 자유당 후보는 박재덕이었는데 각각 5,835표, 2,564표로서 신하균 후보의 24,098표에 비해 역부족이었다. 당선된 신하균 후보는 본래 민주당 소속이었던 야권 인사로 제3공화국 초기에 가서 민주당 구파 중심의 민정당에 참여하게 된다.

제4절 제3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5.16 군사혁명 정부는 5월 19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사법부를 통제하며 내각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발족시키고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여 제2공화국의 헌법을 정지시켰다.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하여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되고, 1960년 7.29총선을 통하여 수립된 제2공화국은 헌정(憲政)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중단시켰다.

1962년 말에 이르러 군사혁명 정부에서는 민정이양준비로서 헌법 개정

20) 이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정당관계법이 제정되었는데, 정당법 제정의 목적은 건전한 정당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복수정당의 보장과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안희수(1995), 『한국 정당정치론』, 나남출판, 373쪽.

을 비롯하여 정당법과 선거 관계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회부되어 유권자의 85.3%가 참여하여 78.8%의 찬성을 얻음으로써 확정되었으며, 개정헌법에 따라 정당 법안이 12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과하였다.²⁰⁾ 그리고 1963년 1월 15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5.16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이 2월 26일에 가장 먼저 창당되었으며, 이어 재야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민정당, 민주당, 신정당, 자유민주당 등이 창당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첫 번째 대통령선거인 제5대 대통령선거가 1963년 10월 15일 실시되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1월 26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민주공화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제3공화국의 공화당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가의 제1차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는 군사쿠데타로 인해 결여된 정치체제의 정통성을 보완하려는 의도와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²¹⁾

그 결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2~1966)에는 연평균 8.3%,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67~1971년)에는 연평균 11.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제3공화국 정부는 1964년 3월 여당과의 연석회의에서 5월중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정당, 민주당, 자민당, 국민당 등 야당들과 대학생들은 한·일 회담 반대시위를 전개했으며, 특히 학생시위는 6월까지 계속 확산되어 6월 3일에는 전국적으로 가두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1965년 8월 11일 한·일 협정 비준안이 월남파병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1967년 5월 3일에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와 6월 8일의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정부는 1969년부터 대통령 3선을 허용하는 개헌작업에 착수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7.25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21) 1961년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이었으며, 가계소득 가운데 70% 정도는 의식주에 소비되고 있었다. 경제기획원(1975), 『한국경제연감』, 286~287쪽.

안을 자신의 신임과 결부시켜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개헌안은 통과를 저지하려는 학생시위와 야당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9월 14일 국회에서 공화당의 개헌 지지파 의원들만 소집된 가운데 변칙적으로 통과되었다. 그리고 '3선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약 65%의 찬성을 얻어 통과됨으로써 박대통령의 3선 출마의 길을 터놓게 되었다.²²⁾

그 후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선거와 5월 27일의 제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기집권과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공화당은 어렵게 승리했다.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약 95만표 차이로 선전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총 204석 중 89석 확보라는 예상외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그 밖에 공화당 정부의 정치·경제적 정책에 대한 불만은 1971년부터 의료파동, 사업파동, 광주단지 주민파동, 한진상사사건 등으로 표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정권적 위기에 직면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1972년 '10월유신'을 선언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형태의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하였다.



〈사진 3-7-4〉박정희 제5대 대통령 취임

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286쪽.

2. 정당활동

제3공화국 시기의 정당은 5.16 주도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당과 민정당·민주당-민중당-신민당 등으로 이어지는 야당세력으로 대별된다. 제2공화국의 민주당 신파와 구파는 제3공화국 수립과 동시에 각각 민정당과 민주당을 창당하였다가 민중당으로 통합하였고, 민중당은 대통령후보 문제로 잠시 분당하였던 윤보선 등의 신한당과 함께 신민당으로 통합하여 제4공화국까지 이어졌다.

그 밖에 1963년 초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재야정치세력이 단일야당 형성을 위하여 발기한 연합정당의 성격을 가진 '국민의 정당'이 있었으나 약

1년여 기간 동안 존속한 후 민주당에 흡수·통합되었고, 혁신 정당은 거의 발을 붙이지 못했다.

1) 민주공화당

1963년 1월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5·16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신당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1월 10일 김종필 등 12명이 최초의 발기모임을 가진 데 이어,²³⁾ 1월 18일에는 재건동지회, 학술단체, 지식인층, 소수의 구정치인 등 78명의 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공화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개최되고 위원장에 김종필을 선출하였다. 신당 결성과정에서 당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5·16 주도세력 내부에 반발세력이 나타났으나 2월 2일 창당준비대회를 개최하는 등 창당 작업은 김종필(金鍾泌)의 구상대로 진행되었다.²⁴⁾

그러나 당의 2원화 조직체제 도입 등 반발이 거세져서 창당의 산파역인 김종필은 결국 2월 25일 민주공화당(공화당) 창당을 하루 앞두고 외유길에 오르게 되었다.

공화당은 창당과정에서 빚어진 분규를 수습하고 2월 2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총재에 정구영(鄭求瑛), 당의장에 김정렬(金貞烈)을 선출했으며, 5월 27일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정희(朴正熙)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했다. 그리고 그 해 8월에 개최된 제3차 전당대회에서는 정구영 공화당 총재가 당고문에 추대되고 박정희가 당총재로 선출되었다.

1963년 10월의 대선과 11월의 총선에 대비하여 김종필이 귀국하여 당의장을 다시 맡게 되었으며, 공화당은 제5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를 당선시킴과 아울러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175개의 의석 중에서 지역구 88명과 전국구 22명을 당선시킴으로써 67.1%의 당선율을 기록하였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 공화당은 당내 조직체계를 둘러싸고 육사 8기생 및 공화당 사무직원을 중심으로 김종필을 지지하는 주류와 김종필에 반대하는 군부출신 및 민간정치인들로 구성된 비주류간에 대립이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가 격화되자 김종필이 책임을 지고 당의장직을 사임하고 2차 외유를

23) 신당 조직을 위한 최초의 발기모임의 참석자는 김종필(金鍾泌), 김성진(金成鎭), 김정렬(金貞烈), 김동환(金東煥), 김재순(金在淳), 김원전(金元全), 박현숙(朴賢淑), 서태원(徐泰源), 윤일선(尹日善), 윤주영(尹宙榮), 이원순(李元淳), 조응천(趙應天) 등 12명이다. 민주공화당(1973):『민주공화당사』, 공화출판사, 36쪽.

24) 김종필 특권으로 알려진 당의 2원조직에 대해 김동하(金東河) 등이 비민주적이며 창당과정에 사용된 정치자금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민주공화당의 결성은 처음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떠나게 되었다.

1965년 1월 당헌을 개정하기 위한 주류측과 비주류측의 협상으로 오랫동안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공화당 조직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의 2원조직 문제가 일단락되고 사무총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인사권과 재정권이 분리되었으며, 사무국 조직에 비해서 당소속 국회의원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요원의 임명 제청권을 지니게 됨으로써 사실상 2원조직은 와해되고 지구당은 지구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원화되었다. 사무국의 인원도 약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 반김종필세력인 비주류세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자유당출신의 구정치인들이 공화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비주류에 가담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함으로써 공화당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화당은 1965년 12월 제3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총재로게 선출하고 김종필을 당의장으로 선출했으며, 1967년 2월 제4차 전당대회에서 박정희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하였다. 그리고 1967년의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朴正熙) 후보는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보다 약 116만표를 많이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해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화당은 의원총수 175명 중 지역구 102명과 전국구 27명을 당선시켰다. 그러나 총선 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야당과 학생들의 데모가 확산되면서 공화당은 사태수습을 위하여 관련자들을 몇 차례에 걸쳐 제명하였으며, 이로써 공화당 소속 의석은 개헌가능 의석수인 117석에 못 미치는 114석이 되었다.

제7대 총선 후 공화당 내부에서 발생한 몇 차례의 권력구조의 변동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강화로 귀결되었다. 먼저 김종필 중심의 공화당 주류는 1968년 초 공화당의 정치적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국민복지회사 건과 1969년 4월 8일 야당이 제출한 권오병 문교부장관 해임동의안의 국회통과와 관련한 '4·8 항명파동'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와해되었다. 그리고 김종필 세력의 몰락과 더불어 부상한 김재호(吉在號), 백남익(白南億), 김성곤(金成坤), 김진만(金振晩) 등 4인체제도 오치성 내부부장관의 해임동의안을 둘러싼 '10·2 항명파동'으로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박정희를 정점으로 하는 친정체제가 확립되었다.²⁵⁾



자유당출신의 구정치인들이 공화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비주류에 가담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키고자 함으로써 공화당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374-388쪽.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은 박정희 후보를 내세워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와 접전끝에 승리하였으며, 그 해 5월의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총 국회의원 175명 중 지역구 86명과 전국구 27명을 당선시켰다.

2) 민정당

1962년 3월 윤보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범야 대동단결로서 민간세력을 총규합하여 순수한 단일야당을 형성할 것”을 제창한 것을 효시로 하여, 1963년 1월 정치활동의 재개와 더불어 구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범야단일정당 형성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각 정파가 몇 차례에 걸쳐 단일정당을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결국 김병로(金炳魯), 윤보선(尹潽善), 이인(李仁), 전진한(錢鎭漢) 등을 중심으로 구신민당, 구자유당, 구민주당 등 일부와 무소속이 연합하여 민정당을 결성하기로 하고 1월 27일 창당발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5월14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

민정당은 6월 12일 윤보선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하고 대통령선거전에 돌입하는 한편, 당초 의도하였던 범야 단일정당 형성을 위해 신정당, 민우당과 3당이 통합하는 ‘국민의 당’ 창당을 추진하였으나 대통령후보 지명문제에 대한 계파간 견해 차이로 결렬되었다.

1963년의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야당후보의 난립으로 고전하던 민정당은 10월 2일 허정(許政) 국민의당 대통령후보에 이어, 송요찬(宋堯讚) 자유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사퇴로 윤보선이 사실상 야당 단일후보가 됨으로써 종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1963년의 제6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보선은 유효투표의 45%에 해당하는 약 450만표를 득표하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에게 패배하였다.

그 해 11월의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은 지역구 131석 중 27석과 전국구 14석을 획득하여 제1야당으로 등장하였다.

한·일 국교회담이 진행되면서 민정당은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대일 저자세 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일 국교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언론윤리위원회법안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인 윤보선계와 온건노선을 취한 유진산계간의 알력이 첨예화되어 1964



한·일 국교회담이 진행되면서 민정당은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대일저자세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한·일 국교협상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년 10월 8일 유진산(柳珍山) 의원이 민정당에서 제명되었다. 민정당은 당내 분규를 수습한 뒤 당세 확장을 위하여 자유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11월에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자유민주당을 흡수·통합하였다. 자유민주당은 김재춘(金在春)이 주축이 되고 송요찬, 소선규, 김도연, 김준연 등이 규합하여 1963년 9월 3일 창당된 정당으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6명, 전국구 3명을 당선시키고 민주당, 국민의 당과 함께 삼민회(三民會)라는 명칭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민정당은 1965년 1월 초 한국군의 월남 파병문제가 제기되자 찬·반 양론을 벌인 끝에 월남파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으며,²⁶⁾ 한·일 국교정상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자 민주당과 함께 ‘대일 굴욕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 순회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민정당과 민주당은 통합을 추진하여 5월 3일 통합야당인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3) 민주당

1963년 1월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구 민주당출신인 박순천, 이상철, 홍익표, 현석호 등이 모임을 갖고 정당결성을 협의하였다. 민정당이 주도하는 범야단일정당 협상이 결렬되자 이들은 독자적인 창당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2월 1일 민주당 창당준비대회에 이어 7월 18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박순천(朴順天)을 당수로 선출하였다. 다른 정파와 달리 민주당은 지도적 인사들 대부분이 정치활동정화법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허정 등의 신정당(가칭)과 통합을 모색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1963년의 제5대 대통령선거에는 입후보자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11월의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8석과 전국구 5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자유민주당, 국민의 당과 함께 삼민회라는 교섭단체를 결성하여 국회 활동에 임했으며,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자 민정당 및 재야 각계와 연합하여 ‘대일 굴욕외교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민주당은 1964년 9월 17일 ‘국민의 당’을 흡수·통합하였으며, 1965년 5월 3일 통합야당인 민중당을 창당하였다.

26) 그러나 1965년 1월26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정당 소속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군의 월남파병안이 통과되었다. 월남파병의 반대 이유로는 ① 병력이 뚜렷하지 못하고 희생이 클 수 있으며, ② 국제적 연쇄반응과 여에 따른 국내정세의 우려할 사태 가능성이 있으며, ③ 출병으로 휴전선 방위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위의 책, 469쪽.



민주당은 자유민주당, 국민의 당과 함께 삼민회라는 교섭단체를 결성하여 국회 활동에 임했으며,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가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자 민정당 및 재야 각계와 연합하여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4) 국민의 당

국민의 당은 1963년 초 구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활동이 허용되면서 재야 정치세력이 단일야당 형성을 위하여 발기한 연합정당의 성격을 가진 정당이다. 당초 국민의 당은 김병로·윤보선 등 민정당계, 허정 등 신정당계, 이범석 등 민우당계, 정민회, 무소속 등 이미 창당을 완료하였거나 창당 준비중에 있는 정파들이 재야세력의 결속된 힘만이 군정세력과 맞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한 통합운동이었다.²⁷⁾

27) 김현우, 앞의 책, 403쪽.

이러한 취지에서 1963년 8월 1일 창당발기인대회에 이어 9월 5일 창당대회를 개최했으나, 윤보선과 허정간의 대통령후보 조정 및 민정당계의 법통고수 문제로 국민의 당으로의 야권통합은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국 9월에 민정당계 인사들이 별도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윤보선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우기로 함에 따라 국민의 당은 비 민정당계만의 불완전한 야권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 국민의 당은 대통령후보로 허정(許政)을 내세웠으나 선거전에 대통령후보를 사퇴하였으며,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2명만이 당선되었을 뿐이다. 국민의 당은 민주당, 자유민주당과 함께 삼민회를 구성하여 국회활동에 임했으며, 1964년에 민주당에게 흡수·통합되었다.

5) 민중당

국민의 당이 민주당에, 자유민주당이 민정당에 각각 흡수·통합됨으로써 야권은 크게 2개의 정당으로 정비되었으나 재야정당 단일화 여론이 고조되면서 1965년 5월 3일 양당이 통합하여 단일야당으로서의 민중당이 창당되었다.

5.3 통합선언 이후 6월 14일 개최된 민중당 창당대회에서 민정당계의 윤보선과 민주당계의 박순천이 대표최고위원 경합을 벌인 결과 소수그룹의 박순천(朴順天)이 선출되는 뜻밖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수파인 윤보선이 소수파인 박순천에게 패배한 이유는 자유민주당계 일부 및 민정당계의 유진산계와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²⁸⁾

28) 전당대회 전의 양당의 의석수는 민정당 47석, 민주당 15석이었으며 소위 진산파 등으로 유진산계가 윤보선과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다. 위의 책, 449쪽.

한편 제3공화국이 출범한 후 여·야간 정치적 쟁점의 핵심이었던 ‘한·일

협정'이 1965년 6월 22일 정식으로 조인되자 민중당은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연좌데모와 성토대회, 단상점거 등 장내·외 투쟁을 벌였다. 시국수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7월 20일 박정희 대통령과 박순천 대표최고위원간의 여·야 영수회담이 열렸고, 이 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한·일 협정 비준동의안과 월남파병동의안을 다룬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한·일 협정의 국회비준과 관련하여 민중당내에서 박순천 중심의 온건협상파와 윤보선 중심의 강경 반대파가 대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보선, 정성태, 서민호 등 강경파 의원들은 원외 세력과 연합하여 11월 1일 신당 결성을 선언하였고 1966년 3월 30일 신한당(新韓黨)을 창당하였다.

민중당은 당초 제6대 대통령선거의 대통령 후보로 원외인사인 유진오(兪鎭午)를 지명하였으나, 1967년에 접어들어 통합 야당과 대통령후보 단일화문제가 급진전되면서 2월 7일 신한당과 신민당으로의 통합을 선언하고 대통령 후보에 윤보선, 당수에 유진오를 선출하였다.

6) 신민당

민중당과 신한당의 통합야당인 신민당은 1967년의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윤보선(尹潽善)을 대통령후보로 내세웠다. 제5대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이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되어 두 번째로 격돌한 선거였는데, 윤보선은 약 452만표를 획득하여 약 568만표를 얻은 박정희 후보에게 약 116만표 차로 패배했다. 윤보선은 대통령선거 결과의 발표가 있는 후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다.

1967년의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당은 지역구 27석 전국구 17석으로, 공화당의 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6.8 총선 이후 선거 부정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여·야간의 극한적인 대치상황이 장기화되자 공화당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을 제명하고, 신민당과의 정국수습을 위한 대표회담을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대한 공동성명서와 의정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제7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6개월가까이 끌어온 부정선거 파동은 일단락되고 국회개원 142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었다.²³⁾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 「대한민국정당사」, 제1집 (1945-1972), 668쪽.

1969년에 접어들어 일련의 3선개헌 논의가 전개되면서 신민당은 8월 5일 ‘3선개헌 저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순회시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3선개헌 저지투쟁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한편 신민당은 3선개헌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에 지지의사를 밝힌 성낙현 의원 등 소속의원 3명을 제명하고, 이들의 의원직 박탈과 개헌저지를 위해 9월 7일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해체를 결의했다. 이로써 신민당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게 되었고, 이들은 곧바로 ‘신민회’라는 명칭의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국회에 등록했다.

신민당은 해체된 지 13일만인 9월 20일 창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체제와 인원을 그대로 복원하였다. 3선개헌 저지투쟁이라는 상황에서 한 정당이 해체되었다가 13일 만에 재건되는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³⁰⁾

3선개헌안은 신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9월 17일 공화당 소속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5.1%인 755만여 표를 얻어 확정되었다.

신민당은 1970년 1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당수에 유진산(柳珍山)을 선출하였다. 이에 앞서 자유당과 한국독립당을 흡수·통합하고, 이철승 등 원외 인사 20명과 윤길중 등 혁신계 인사 16명이 신민당에 입당하는 등 당세를 확장하였다.

신민당은 1971년의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9월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였다.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둘러싸고 40대기수론을 제창한 김영삼(金泳三), 이철승(李哲承), 김대중(金大中) 등이 경쟁하였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2차 투표를 한 결과 채석 884명 중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표, 무효 16표로 김대중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었다.

1971년의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약 539만표를 획득하여 약 634만표를 획득한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신민당 후보의 패인은 유권자들의 보수적 심리, 지역정서의 표출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당내 유력인사들이 국민당으로 당적을 바꾼 당 내부의 결속 결여문제도 들 수 있다.³¹⁾

그 해 5월에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은 유진산 대표위원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 1번으로 등록하는 소위 ‘전국구 파동’이

30) 위의 책, 688쪽.

31) 김현우, 앞의 책, 490쪽.

발생함으로써 지도체제의 내분을 겪게 되었다. 유진산의 제명을 요구하는 김대중 등 비주류측과 이에 맞서는 주류측간의 협상과정을 거쳐서 유진산이 총재직 사표를 제출하고 김홍일(金弘立) 전당대회 의장이 대표위원 권한대행을 맡기로 함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1971년의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지역구 65석, 전국구 24석 등 총 89석을 획득하는 예상외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총선 후 신민당은 7월 20일 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김홍일, 김대중, 양일동이 입후보한 가운데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3차 투표에서 재석 975명 중 444표를 얻은 김홍일이 370표를 얻은 김대중을 누르고 대표위원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1972년에 신민당은 지도체제 개편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상황에 직면하였다. 9월 26일 전당대회에서 유진산(柳珍山)을 다시 대표위원으로 선출하였으나, 김홍일계 등 비주류측의 거부로 양파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당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신민당은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국회 해산과 더불어 일체의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됨에 따라 당 활동이 중지되었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민당은 유진산 대표위원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전국구 1번으로 등록하는 소위 '전국구 파동'이 발생함으로써 지도체제의 내분을 겪게 되었다.

3. 성남·광주지역의 정당활동

해방 직후인 1946년 이래 설치·운영되어 온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는 증가된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64년에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었다. 그 후 1969년 5월부터 서울시 철거민 집단입주가 시작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1971년 9월에 경기도 관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었다.³²⁾ 그러나 아직 단독 선거구로 되지는 못하였으며, 제3공화국 시기에는 오히려 전국구 비례대표제 채택 등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가 줄어들면서 성남시가 속한 선거구는 광주군과 이천시의 통합선거구로 확대되었다.³³⁾

지역단위의 정당활동은 제3공화국 전 기간을 통해 5.16 주도세력이 중심이 된 민주공화당과 민정당·민주당-민중당-신민당 등으로 이어지는 야당세력간의 선거를 통한 대결로 압축할 수 있다.

32) 1971년 성남출장소의 관할 인구수는 14여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성남시, 앞의 책, 29쪽.

33) 제3공화국헌법 성립 후 이루어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는 총래의 233개에서 131개로 축소되고 전국구가 그 3분의 1인 44석이 신설되어 총 175석이 되었다.

34) 그밖에 이·동 단위에는 활동장을 두고 그 밑에 활동차장, 청년활동차장, 부녀활동차장 등을 두었으며, 자연부락 및 반 단위에는 연락장 밑에 연락차장 및 핵심당원들을 두기도 하였다. 김윤태 외(1985), 『한국정치론』, 박영사, 321쪽.

35) 민주공화당, 앞의 책, 97쪽.

특히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창당 시부터 조직원리로서 인물중심의 정당 탈피, 국민적 정당을 내세우면서 중앙사무국 아래 시·도지부 사무국을 두고 그 밑에 지구당 사무국을 두었으며, 각 지구당 사무국은 읍·면·동 단위에 관리장과 관리차장을 두는 등 지구당 활동이 활발하였다.³⁴⁾ 이 같이 민주공화당은 단위행정 조직마다 체계적인 기간조직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였는데, 성남지역이 속해 있는 광주지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비해 야당세력들은 당현상 지구당 조직은 있었으나 체계적인 지방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 정당들은 대통령선거시 중앙, 시·도, 지구당별로 대통령 선거 중앙대책위원회, 대통령선거 시·도대책위원회, 대통령선거 지구당 대책위원회 등 별도의 선거대책기구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1963년 제5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민주공화당의 지구당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였다.³⁵⁾

성남·광주지역의 정당으로는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창당 직후인 1963년 3월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 창당을 등록하였고, 민정당과 민주당의 통합야당인 민중당이 중앙당 창당 2년 후인 1967년 5월에 지구당을 등록하였으며 그 후 민중당과 신한당의 통합으로 신민당이 되었다.

제3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성남·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을 등록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7-1]과 같다.

표 7-1 성남·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멸일자	비고
광주군·이천군	민주공화당	유충목(俞興穆)	1963. 3. 13	1973. 6. 3	
	자유당	엄유섭(嚴維燮)	1963. 10. 18	1973. 6. 13	
	민주사회당	김홍수(金興洙)	1966. 11. 3	1973. 6. 29	
	통일사회당	김상균(金相均)	1967. 3. 20	1973. 9. 4	
광주군·이천군	민중당	권오전(權五典)	1967. 5. 6	1973. 7. 2	
	국민당	곽인식(郭寅植)	1970. 12. 4	1973. 7. 2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의 주된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3공화국 시기의 성남·광주지역에 있어서의 국회의원 선거 상황을 살펴보면, 제3공화국 수립 직후 실시된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이천군)

의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정당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최하영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그리고 1967년의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16 주도 세력인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 후보가 신민당의 신하균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앞질러 당선되었으며, 차지철 후보는 1971년의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신민당의 유기준 후보를 이겨 재선되었다.

제5절 제4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소(北蘇), 북중(北中)간의 군사동맹 강화와 북한의 가중되는 남침위협은 냉전체제 완화와 평화공존체제라는 국제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금지 등 약 2개월간 초헌법적 조치를 단행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에 의해서 헌법개정안이 공고되고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헌법개정안은 91.5%의 지지를 얻어 확정되었다. 12월 15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고 12월 23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대통령선출이 있었으며, 12월 27일에는 박정희 후보가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유신체제(維新體制)에서 대통령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고 국군통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지명권, 긴급조치선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경쟁적 정치과정과 의회민주주의 질서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중앙집권적 권력에 의한 통제와 억압이 강화되었다.

유신체제 등장 이유의 크게 보아 대의정치의 무능, 남북대화의 지원, 국제정세 변동에의 대처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동시에 첫 번째 이유로

1970년대



북소(北蘇), 북중(北中)간의 군사동맹 강화와 북한의 가중되는 남침위협은 냉전체제 완화와 평화공존체제라는 국제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사각지대를 형성하였다.

다른 두 가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남북대화와 국제정세 변동은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행중인데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해도 현재와 같은 무능한 대의기구 하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혁신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신체제의 등장은 국제정치적 측면 내지는 남북대화보다는 국내 정치상황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상황이 1971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에게 어렵게 이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집권이 어렵다는 상황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³⁶⁾

유신정권은 정치적으로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권위주의체제를 성립시킨 한편 경제성장을 통해서 정통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화학 공업화를 국가의 우선적인 정책으로 설정하고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였는데,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장률 및 수출성장률 증가라는 효과와 아울러 소득불균형, 지역격차, 대기업 집중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³⁷⁾

제4공화국에서는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축소되었다. 민주공화당은 유신정우회라는 교섭단체의 등장으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반분할 수밖에 없었으며, 야당인 신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제도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항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극한 투쟁의 방법을 추구하였다.

신민당은 1973년 2월 27일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1978년 12월 12일의 제10대 총선에서 공화당 의석에 육박하는 한편, 득표율에서도 공화당을 앞섬으로써 집권층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한국 선거사상 처음으로 중선거구가 채택되어 여·야 후보가 동반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하였지만 신민당은 분명한 약진을 이루었다.

1974년에 들어 야당과 재야운동단체,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을 중심으로 유신체제 반대를 위한 개헌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개헌논의를 금지시켰다. 1975년에 들어서도 개헌에 대한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법 제49조에 따라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야당의 반대 속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은 총 투표자의 73.1%의 찬성을 얻었다.

197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종교인, 학자, 지식인, 해직기자, 인권변호사

36) 안해균(1986),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39-240쪽.

37) 1973년에 상위 10대 재벌기업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던 것이 1978년에는 10.9%로 증가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지역간 소득격차 등도 심각하게 나타났다.

등을 중심으로 한 재야단체는 민주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동안 점차 증가세를 보여온 노동자 집단도 방림방직(1977), 청계피복(1977), 동일방직(1978), YH무역(1978-1979) 등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YH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은 민감한 정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대외적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는데,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인권문제 및 주한 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유신체제에 대하여 커다란 압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1977~78년 박동선(朴東宣)의 미국내 로비활동은 한·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79년 5월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선명 야당의 기치를 내건 김영삼(金泳三)이 중도통합론의 이철승(李哲承)을 누르고 총재로 선출됨으로써 제1야당인 신민당의 지도 체제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김영삼 총재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사건으로 10월 3일 국회에서 제명되었고, 이는 곧 부마(釜馬)사태로 발전하였다. 얼마 후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유신체제에 대한 도전은 대외적 차원에서도 제기되었는데,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인권문제 및 주한미군철수와 관련하여 유신체제에 대하여 커다란 압력을 행사하였다.

2. 정당활동

제4공화국에 있어서 정당활동은 10월 유신으로 중선거구제, 후보자의 기탁금제, 무소속 출마의 허용, 선거유세의 대폭적인 제한 등 정당정치적 성격을 완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가운데,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야당인 신민당의 양대 정당체제로 요약된다. 그 밖에 이 시기의 정당으로 신민당 세력의 한 분파인 민주통일당과 혁신세력인 통일사회당이 있었다. 통일사회당은 1967년 이래 정당 활동을 해 오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속요건을 보완하지 못하여 1973년 7월 2일자로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12월 21일에 다시 창당되었다.

1)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은 1972년 10월 대통령 특별선언이 있자 긴급 당무회의를

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1).
『대한민국정당사』제2집
(1972-1980), 74쪽.

소집하여 대통령의 특별선언 등 일련의 조치를 지지할 것을 의결하고, 12월 27일까지 일체의 정치활동 및 정당 활동을 중단하였다. 1973년 1월 5일 정치활동 재개 후 첫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유신과업을 수행한다는 목표 하에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고 개정 정당법에 맞추어 시·도지부 사무국을 시·도 연락실로, 구·시·군 지소를 구·시·군 연락지소로 축소·개편하는 등 당헌을 개정하였다.³⁸⁾

2월에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146석 중 73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3월 7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이 추천한 73명을 유정회 의원으로 선출함에 따라 국회 내 친여세력은 공화당과 유정회로 이원화되었다.

한편 1974년 1월 민주공화당의 초대 총재와 4대 당의장을 역임한 정구영(鄭求瑛)과 사무총장을 역임한 예춘호(芮春浩)가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탈당함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68석을 획득하여 신민당의 61석보다 7석을 더 많이 획득하였으나, 득표율에 있어서 신민당보다 1.1% 뒤졌다.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평가가 점차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후 공화당은 11월 12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당헌을 개정하고 김종필(金鍾泌)을 제3대 총재로 선출하였으며, 대통령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세우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1980년 2월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종필 총재의 취임 후 박찬중, 오유방, 남재희 등 소장의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의 쇄신과 체질개선을 요구하는 정풍운동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정풍파 의원들을 회유·설득하여 17명중 8명이 정풍파 대열에서 이탈하였으며, 4월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이후락, 임호, 박찬중, 오유방 의원을 공화당에서 제명시킴으로써 정풍운동을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1980년 5·17조치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됨에 따라 민주공화당은 창당 17년 8개월 1일만에 헌법 부칙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 해산되었다.

2) 신민당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중단되었던 정치활동이 1972년 12월 재개되었으나, 9월 26일 전당대회에서 빚어진 유진산계와 김홍일계간의 분쟁이 격화되어 분당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1973년 1월 유진산 당수가 조속한 시일 안에 당 기구를 정상화하고 선거대책본부를 정상화한 뒤 당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힘으로서 신민당의 내분은 진정되었다.

신민당은 곧이어 정일형(鄭一亨) 당수 권한대행 체제를 갖추고 1973년의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였는데, 이 선거에서 146석 중 52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선거 직후 유진산의 당수직 사퇴서를 반려하기로 결정하고, 5월 7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헌에 따라 유진산(柳珍山)을 총재로 선출하였다.

1974년 8월 유진산 총재의 사망으로 후임 총재를 선출하기 위해 개최된 전당대회에는 김영삼, 김의택, 정해영, 고흥문, 이철승 등 5명이 입후보하여 3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선을 벌인 결과 김영삼(金泳三)이 총재로 당선되었다. 김영삼 총재체제하에서 신민당은 원내·외에서 개헌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당내에 헌법개정추진기구를 설치·운영하였다.

1975년에 접어들어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 양일동 등 재야 및 야당지도자들이 야당통합 원칙에 합의하고 신민당과 민주통일당의 합당, 재야인사 영입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나 양당간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아 결국 야당통합은 결렬되었다.

1976년 초 김영삼 총재의 지도노선을 둘러싸고 신민당내 주류측과 비주류측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결국 주류측과 비주류측간의 협상을 거쳐 신민당은 9월 15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집단지도체제 당헌을 채택하고 대표최고위원에 이철승(李哲承), 최고위원에 신도환, 이충환, 유치송, 고흥문, 김재광 등을 선출하였다.

이철승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정부·여당과 협력해야 한다는 중도통합론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선명야당의 회복을 주장하는 비주류측 당원들이 '야당성 회복 투쟁동지회'를 결성하고 이철승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주류측과 비주류측간의 노선투쟁은 1978년 제10대 총선 때까지 지속되었다.



YH무역회사 여종업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과 일부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전당대회시 대의원의 무자격을 이유로 김영삼 총재 등 총재단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법원에 제소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있었다.

1978년의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은 81명의 공천자 중 61명이 당선되었으며, 유효득표 면에서 공화당의 31.7%보다 1.1% 더 많은 32.8%를 획득하였다. 이에 따라 자신감을 얻은 신민당은 대여투쟁과 대정부 비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종래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등 당내 체제를 정비하였다.

신민당은 1979년 5월 개최된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김영삼(金泳三)을 다시 총재로 선출하였다.

그 해 8월에는 YH무역회사 여종업원들의 신민당사 농성사건과 일부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의 전당대회시 대의원의 무자격을 이유로 김영삼 총재 등 총재단 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법원에 제소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있었다. 결국 법원이 이들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고 신민당 총재단의 권한 정지와 아울러 전당대회 의장인 정운갑(鄭雲甲)을 총재 직무대행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민당은 사실상 2원적인 운영을 하게 되었다.

한편 9월 16일자 뉴욕 타임즈에 김영삼 총재가 카터 미행정부에 대해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 중식을 요구한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여당 측이 이를 사대주의로 규정하고 김영삼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10월 4일 국회에서 신민당 의원들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의 국회의원직 제명이 통과되었다. 이 사건 이후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던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66명 전원과 민주통일당 의원 3명은 10·26 사태 이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퇴서가 일괄 반려되었다.³⁹⁾

1980년에 접어들어 범야세력의 통합과 야권 대통령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김영삼 총재 등의 당권파와 김대중 등의 재야인사측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4월 7일 김대중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민당 입당 포기선언을 함으로써 야권통합은 무산되었다.

신민당은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1967년 2월 11일 창당된 이래 13년 8개월 만에 헌법 부칙에 의거하여 자동 해산되었다.

3) 민주통일당

민주통일당은 1972년 9월의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유진산이 대표위원으

39) 위의 책, 303~304쪽.

로 선출된 것에 반발하여 반진산연합파가 만든 정당으로, 1973년 1월 27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대표최고위원에 양일동(梁一東), 최고위원에 김홍일, 윤제술·정화암·김선태 등을 선출하였다.

민주통일당은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7명의 공천자중 불과 3명이 당선되었으며,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63명의 공천자 중 3명을 당선시키는 데 불과하였다.

1975년부터 범야세력 결집의 명분으로 신민당과의 합당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으나, 결국 1980년 10월 제5공화국 헌법의 공포로 1973년 1월 30일 창당 이래 7년 9개월 만에 헌법 부칙에 의거하여 자동 해산되었다.

3. 성남·광주지역의 정당활동

성남시는 서울특별시 외곽도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한 '시 설치와 군의 폐지분합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73년 7월 1일자로 성남시로 승격되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제4공화국 기간에 있어서 광주군·이천군·여주군 등과 함께 경기도 제4선거구의 한 선거구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선거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제4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종래의 1선거구 1인의 소선거구제에서 1선거구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동반 당선의 양상을 보였는데,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여주·이천·광주)에서도 1973년의 제9대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 후보와 신민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그러나 1978년의 제10대 총선에서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이 아니라 민주공화당의 정동성(鄭東星) 후보와 무소속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당선되었다. 신민당의 유기준 후보도 6만여표를 득표하여 당선된 두 사람의 7만여표 선에는 못 미쳤으나 선전하였다.

성남·광주지역의 정당은 여당인 민주공화당과 더불어 제1야당인 신민당이 제3공화국시기부터 존립하였는데,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정당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1973년에 다시 지역선거 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되



선거구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제4공화국 헌법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종래의 1선거구 1인의 소선거구제에서 1선거구 2인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었다. 그 밖에 신민당으로부터 분리된 민주통일당이 중앙당 창당과 더불어 1973년 1월 27일 지구당 창당을 등록하였다.

제4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성남·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을 등록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7-2]와 같다.

성남·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멸일자	비고
성남시· 여주군· 이천군· 광주군	민주통일당	이운수(李允洙)	1973. 1. 27	1980. 10. 27	1980년 10월 27일 제5공 화국 헌법 공 포로 정당 자 통 해산
	민주공화당	차지철(車智澈)	1973. 6. 4	1980. 10. 27	
	신 민 당	오세응(吳世應)	1973. 6. 13	1980. 10. 27	
	조선민주당	서병국(徐丙國)	1976. 6. 18	1976. 7. 24	
	한국기민당	민호영(閔浩榮)	1978. 11. 14	1979. 3. 3	

제6절 제5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10.26사태 이후 위기관리를 위하여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 9호 해제와 민주 구속인사의 석방 및 복권 검토 등을 통해 정국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려 했으나, 국회·재야단체와 일반시민들의 성급한 정치참여 욕구의 폭발로 인한 사회혼란으로 5.17 전국 비상계엄 확대조치로 연결되고 급기야 광주 사태라는 비극을 초래하였다.⁴⁰⁾

광주사태 직후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등 신군부 세력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으며, 뒤이어 국보위의 상임위원장과 국군보안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던 전두환 장군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40) 안해균(1986),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출판부, 370쪽.

전두환 대통령의 새로운 위기관리 정부는 정부 단독의 개헌작업과 사회 개혁을 통하여 제5공화국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10월 22일 새 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0월 27일 공포되었다. 그리고 1981년 2월 11일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가 실시되고,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회의에서 전두환(全斗煥)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의 5년 단임제를 채택함으로써 평화적 정권교체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선출 방법으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택하여 후에 대통령 직선제로의 강력한 개헌 논의를 유발하게 하였다.

1980년 11월 25일 정치활동 규제조치와 아울러 정치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1981년 1월부터 많은 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창당되었는데, 민주정의당(1.15), 민주한국당(1.17), 민주사회당(1.20), 한국국민당(1.23), 민권당(1.23) 등이 그것이다.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90석, 전국구 61석 등 총 151석, 민주한국당이 지역구 57석, 전국구 24석 총 81석,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지역구 18석, 전국구 7석 등 총 25석을 획득하여 국회는 이들 3개 정당에 의해 운영되게 되었다. 제11대 총선은 대부분의 구정치인들의 참여가 제외된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이 확대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2월 12일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



광주사태 직후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등 신군부 세력은 초헌법적 국가기관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국보위 상임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주요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진 3-7-5〉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취임



〈사진 3-7-6〉 전두환 제11~12대 대통령 취임

필 등 15명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 피규제 대상자에 대한 해금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거 직전 창당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이 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보다 큰 정치적 변화는 제12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3월6일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에 대한 전면 해금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행보가 정가(政界)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1986년에 들어 정국은 개헌 논쟁으로 인한 대결과 파행의 연속이었다. 연초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서명운동 등 장외에서 전개되던 개헌 문제는 '4·30 청와대회담'과 '5·3 인천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내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여·야간 개헌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졌으며 야권 내에서도 개헌노선에 분열상을 보이기도 했다.⁴¹⁾

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 『대한민국정당사』 제3집 (1980-1988), 35-42쪽.

1987년에 들어서면서 제5공화국의 권위주의 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월에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였고, 4월에는 국민들의 직선제개헌 열망을 무산시켜 버린 전두환 대통령의 4·13 개헌논의 금지담화가 발표되었다. 6월 10일에는 민정당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노태우 대표위원을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그 동안 누적되어 왔던 국민들의 불만을 폭발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야당인 민주당과 재야단체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6월 10일과 6월 26일의 국민대회는 33개 도시와 4개 군·읍, 그리고 270개 지역에서 150여만명이 참여하여 6월항쟁의 절정을 이루었다.⁴²⁾ 위기에 몰린 정부·여당은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으로 하여금 8개항을 담은 '국민대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향한 특별선언'을 발표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6.29선언으로 통칭되는 발표의 내용을 보면, ① 대통령직선제로의 헌법 개정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 ③ 김대중씨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④ 새 헌법에서 기본권조항 강화 및 인권신장 ⑤ 언론자유와 창달 ⑥ 지방자치제 및 교육자율화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사회정화조치 실시 등이다.

6·29선언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10월 27일의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0월 29일 공포됨으로써 제6공화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42) 한국정치연구회(1990), 『한국정치사』, 백산서당, 402쪽.

2. 정당활동

제5공화국에 있어서 정당활동은 많은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규제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출현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신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민주정의당과 구신민당계열 인사들의 민주한국당, 그리고 구공화당 인사들의 한국국민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을 비롯한 중진급의 정치활동 규제대상자들이 점차 해금됨에 따라 민주한국당은 신한민주당-통일민주당·평화민주당으로, 한국국민당은 신민주공화당으로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그 밖에 혁신정당으로 민주사회당 등이 있었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 정당활동은 많은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규제된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출현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1) 민주정의당

1980년 11월 21일부터 정당활동이 허용됨에 따라 권정달, 이종찬 등 신군부세력은 공화당의 잔여 조직과 이재형(李載潁), 유석현(劉錫鉉), 윤길중(尹吉重) 등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여·야 정치인들을 규합하여 1981년 1월 15일 민주정의당을 창당하였다.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창당대회에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을 초대 총재 겸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그 해 2월 11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서 민정당 소속 후보자 중 74.4%가 당선되었으며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과 전두환 후보가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1981년의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은 총 276석 중 90석의 지역구 의석과 61석의 비례대표제 의석을 획득하여 원내 제1당이 됨으로써 다당제 구도 하에서 다수 여당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의 35.25%의 득표율로 지역구 87석, 전국구 61석 등 총 148석을 차지하여 원내 다수당이 되었으나, 득표율 29.26%로 지역구 59석 전국구 17석 등 총 67석을 차지하여 제1야당으로 진출한 신생 야당인 신한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한편 정래혁(丁來赫) 민정당 대표위원의 부정부패 사건과 전두환 대통령의 인척이 관련된 이철희·장영자의 어음사기 사건은 민정당의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정래혁(丁來赫) 민정당 대표위원의 부정부패 사건과 전두환 대통령의 인척이 관련된 이철희·장영자의 어음사기 사건은 민정당의 신뢰성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민정당은 사회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1987년 노태우(盧泰愚) 민정당 대표위원의 6·29선언에 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87년 12월 16일 야당 대통령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노태우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민정당은 어렵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였다.

2) 민주한국당

민주한국당은 5.18 이후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 중 정치활동 적격자로 판정됨에 따라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유치송, 김은하 등 구신민당 소속의원 17명과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1981년 1월 17일 창당되었다. 민주한국당(민한당)은 창당대회에서 유치송(柳致松)을 당총재 겸 대통령후보로 추대하였다.

1981년 2월의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한당 후보인 유치송은 7.7%에 해당하는 404표를 얻는데 그쳤으며, 3월에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한당은 유효 투표수의 21.6%를 획득하여 지역구 57석, 전국구 24석을 확보함으로써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에서는 지역구 26석, 전국구 9석 등 35석의 의석을 얻는데 그쳐, 신생 야당인 신한민주당에 제1야당의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⁴³⁾

43) 중앙관리위원회, 앞의 책, 28쪽.

유치송 총재는 제12대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을 사퇴하였으며, 민한당은 3월 30일 제3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조운형(趙尹衡)을 새 총재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당선자 중 30명이 신한민주당, 2명이 한국국민당으로 집단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민한당에는 3명의 국회의원만이 남게 되었다. 조운형 총재는 집단 탈당의 책임을 지고 총재직을 사퇴했으며, 이에 민한당은 9월 1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유치송을 총재로 다시 선출하였다.

민한당은 그 후 제6공화국에 들어 1988년의 제13대 총선에서 한 명의 후보자도 당선시키지 못함에 따라 정당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해체되었다.

3)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은 5.18 이후 정치활동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김종철, 양찬우,

이만섭 등 구공화당 및 유정희 출신인사들을 중심으로 1981년 1월23일 창당되었다. 한국국민당(국민당)은 창당대회에서 김종철(金鍾哲)을 당총재 겸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였다.

1981년 2월의 제12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당의 김종철 후보는 총 유효투표의 1.6%에 해당하는 85표를 얻는 데 그쳤으며, 3월에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당은 지역구 18석, 전국구 7석 등 총 25석의 의석을 획득하여 제3당의 위치를 확보했다. 그리고 1985년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한민주당의 돌풍과 인물 빈곤으로 말미암아 지역구 15명, 전국구 5명 등 총 20석의 의석만을 확보하였다.

국민당은 김종철 총재가 총선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남에 따라 3월 22일 제3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만섭(李萬燮)을 새 총재로 선출하였다.

1987년 9월 28일 김종필이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자 국민당의 최재구, 김효영, 신철균, 김용채, 강경식, 조용직 등 6명은 국민당을 탈당하여 신민주공화당에 입당하였다. 국민당은 10월 8일 소속의원이 1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섭단체 기능을 상실하였으며, 그 후 소속의원들이 하나 둘 탈당함에 따라 1988년 1월말에는 이만섭 총재 1명만이 남게 되었다. 한국국민당은 1988년의 총선에서 한 개의 의석도 획득하지 못해 정당법 제38조에 근거하여 해체되었다.

4) 신한민주당

1984년 12월부터 정치규제에서 풀려난 이민우, 김동영, 신도환, 이기택 등 구신민당 중진과 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인사 등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작업이 진행되어 1985년 1월 18일 이민우(李敏雨)를 총재로 하는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신한민주당(신한당)은 창당 25일만에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 등 총 67석의 의석을 획득하여 기존의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을 누르고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신한당은 총선 후 민한당과 국민당의 당선자를 대거 영입하여 103석의 의석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신한당은 다양한 계파의 연합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내 통합을 이루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대통령후보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참여하게 대립함으로써 결국 신한민주당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양분되었다.



대통령후보 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참여하게 대립함으로써 결국 신한민주당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양분되었다.

주당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으로 양분되었다. 그 후 1988년 제13대 총선에서 신한당 후보자가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함으로써 정당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신한민주당은 해체되었다.

5) 통일민주당

김영삼의 정치활동 재개와 함께 김영삼계와 김대중계가 연합하여 1987년 5월 1일 통일민주당이 창당되었으며, 총재에는 김영삼(金泳三)이 선출되었다.

통일민주당은 67명의 신한민주당 소속의원들을 흡수하여 창당과 함께 제1야당이 되었으며, 민통련 등 재야단체와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개헌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직선제 개헌합의를 얻어냈다.

10월 27일 대통령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새 헌법이 제정되자 통일민주당은 김영삼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28.0%를 획득하여 36.6%를 득표한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 이어 2위를 하는 데 그쳤다.

6) 평화민주당

1987년 6·29선언으로 김대중이 사면·복권되고 통일민주당의 제13대 대통령선거 단일화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종재, 노승환, 이용희, 양순직 등 김대중계는 통일민주당에서 이탈하여 11월 12일 김대중을 총재로 하는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평화민주당은 창당대회에서 김대중(金大中)을 당총재 겸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27.1%를 획득하여 노태우, 김영삼에 이어 3위를 하는 데 그쳤다.

7) 신민주공화당

6·29선언 이후 각 정치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구공화당 총

재 김종필은 1987년 9월 28일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10월 30일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창당대회에서 김종필(金鍾泌)을 당총재 겸 대통령후보로 추대했다.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김종필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8.1%를 획득하여 4위를 기록하였다.

8) 혁신 정당

그 밖에 고정훈을 당수로 하는 민주사회당이 1981년 1월 20일 창당되었는데, 민주사회당은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정훈(高貞勳), 백찬기(白燦基) 등 2명이 당선되어 5·16 이후 처음으로 혁신 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 후 민주사회당은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명을 당선시킨 신정당(대표: 金甲洙)과 1982년 3월 24일 신정사회당이란 당명으로 합당하였다가 1985년 7월 15일 사회민주당(대표: 金哲)에 통합·흡수되었는데,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확보에 실패하여 정당법에 의해 1988년 4월 29일 등록이 취소되었다.

3. 성남·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

제5공화국 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후 1980년 11월 25일부터 그 동안 중단되었던 정치활동이 다시 허용됨에 따라 1981년 1월부터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권당 등 많은 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창당되었으며, 대부분 중앙당 창당에 이어 지구당 창당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다. 먼저 민주정의당이 1981년 1월중앙당을 창당한 직후인 2월에 지구당 창당을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였으며, 1월 20일을 전후하여 창당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민주사회당, 민권당, 신정당 등도 중앙당 창당 후 곧바로 성남·광주지구당 창당을 지역선관위에 등록하였다. 제5공화국 시기에 있어서 성남·광주지역의 지구당 현황을 보면 [표 7-3]과 같다.

제5공화국에 있어서는 성남시의 인구 증가로 성남시와 광주군이 단일



성남시의 인구 증가로 성남시와 광주군이 단일 선거구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정당의 경우 성남시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광주군에 당 연락소를 두고 정당활동을 전개하였다.

선거구가 되었는데, 대부분의 정당의 경우 성남시에 지구당 사무실을 설치하고 광주군에 당 연락소를 두고 정당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당활동의 결과는 선거에서의 득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제5공화국 기간에 해당되는 제11대 및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됨으로써 정당조직 활동의 효과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동반 당선된李大燾(李大燾) 후보의 당선은 신정당 또는 한국국민당이라는 정당의 역할보다는 개인적 인기로 기인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광주군	민주정의당	오세웅(吳世應)	1981. 2.21	성남시 신흥2동 218-5
	민주한국당	이용배(李雄培)	1981. 1.17	성남시 신흥1동 180-4
	민주사회당	안재훈(安在薰)	1981. 2.21	성남시 태평2동 384
	한국국민당	강희규(姜熙圭)	1981. 2. 3	성남시 중동G지구 112
	민 권 당	황두영(黃斗英)	1981. 2. 7	성남시 신흥1동 191-15
	신 정 당	李大燾(李大燾)	1981. 1.24	성남시 신흥3동 218-4
	자유민족당	김대찬(金大贊)	1981. 1.24	성남시 태평1동 6146
	불 만 당	김진원(金振元)	1981. 3.31	성남시 성남동 4-40



제7절 제6공화국

1. 국내 정치상황

제6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1987년 12월 16일의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모처럼의 정권교체의 기회로 보아 야당후보 단일화를 열망하였으나 김영삼과 김대중이 각기 대통령후보로 나섬으로써 노태우(盧泰愚) 민정당 후보가 김영삼(28.0%), 김대중(27.0%), 김종필(8.1%)보다 앞선 유효 투표의 36.6%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여당인 민정당은 총 299석 중에서 125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평화민주당 70석, 통일민주

당 59석, 신민주공화당 35석을 합치면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우리 의회정치사상 처음 보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가 탄생하였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지역기반에 기반을 둔 4당체제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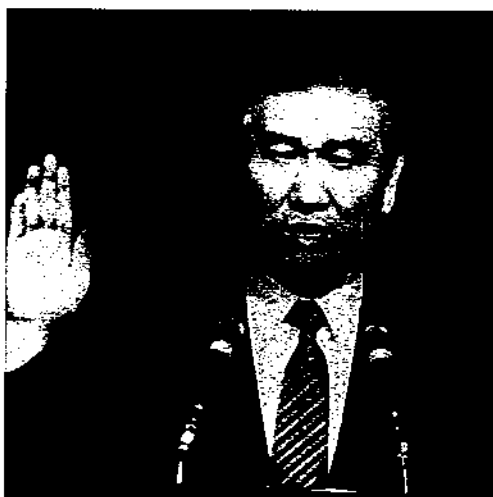
여소야대의 구도로 시작된 국회에서는 일해재단, 광주민주화운동, 언론 등 일련의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유신체제 이후 16년 만에 국정감사를 재개하였다. 국정감사에서는 삼청교육대 사망자, 언론통폐합과정, 부실기업정리과정, 전두환 친인척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① 각계의 남북교류 추진 ② 이산가족의 방문 생사확인 ③ 남북직접교역·문화교방 ④ 우방의 대북한 교역 인정 ⑤ 남·북간의 경쟁적 대결외교 종식 ⑥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하는 ‘7·7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북정책에 고무 받아 일련의 재야인사 및 학생대표의 방북이 있었으며, 이에 제6공화국 정부는 재야, 노동운동, 학생운동, 종교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소위公安정국(公安政局)을 조성하기도 했다.

여당인 민정당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서 민주통일당,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소위 ‘구국의 결단’이란 명분하에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을 선언하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다. 3당 합당을 통해서 안정적 정치기반을 확보한 민주자유당(민자당)은 1991년 3월 26일의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6월 20일의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결국 30년 만에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 결과는 국회의석 2/3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여당으로 등장한 민자당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었고, 여·야관계의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여 새로운 정치적 불안요인을 낳았다.

통합신당인 민자당은 1992년 3월 25일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299석 중 과반수 의석에 못 미치는 149석(지역구 116석 전국구 33석)을 획득하여 제13대 총선 때 3당이 획득한 219석보다 70석이나 적었다. 이는 3당의 통합신당인 민자당이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⁴⁵⁾



〈사진 3-7-7〉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

44) 4당체제는 제13대 선거에서 정화되기 시작한 지역감정이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욱 첨예화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다: 신병순(1993), 『한국 정치론』, 법문사, 166쪽.



여소야대의 구도로 시작된 국회에서는 일해재단, 광주민주화운동, 언론 등 일련의 청문회가 개최되었으며, 유신체제 이후 16년 만에 국정감사를 재개하였다. 국정감사에서는 삼청교육대 사망자, 언론통폐합과정, 부실기업정리과정, 전두환 친인척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다.

45)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694-695쪽.

1980년 후반 소련·동구권의 붕괴로 세계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사회주의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0년대 초에 들어 동구권 국가, 소련 및 중국 등과 국교를 수립하는 한편, 남북한 관계에서도 남·북한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남·북간 화해 및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민자당은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내분을 겪었으며, 우여곡절을 겪은 뒤 5월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金泳三) 후보는 유효투표수의 42%를 득표하여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등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 정당활동

제6공화국에 있어서 정당구도는 초기에는 신군부 세력 중심의 민주정의당, 김영삼 중심의 통일민주당, 김대중 중심의 평화민주당, 김종필 중심의 신민주공화당 등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통합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에 따라 여당인 민주자유당, 제1야당인 평화민주당, 그리고 정주영이 새로 창당한 통일국민당 등의 3개 정당구도로 재편되었다. 그 밖에 3당 통합으로 야권에 잔류한 통일민주당 잔류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있었다.

1) 민주정의당

민주정의당은 1987년 12월 노태우 후보를 제13대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정당은 유효투표수의 33.96%의 득표로 총 299석 중 지역구 87석 전국구 38석 총 125석을 획득함으로써 과반수의석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원내 제1당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야당의 동의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원내 제1당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야당의 동의없이 실질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없이 실질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정당은 노대통령의 중간평가 연기문제에 대해서는 평민당과 연합하고 북방정책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공조하고,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 야당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였다.

민정당은 사안마다 야당들과 힘겨운 교섭을 벌여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자 당면한 불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정당은 1990년 1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 등 3인의 합당선언으로 2월1일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통일민주당 및 신민주공화당과 합당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민정당은 1981년 1월 25일 창당된 이래 9년 만에 3당의 합당을 위하여 간판을 내리게 되었다.

2)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46석, 전국구 13석 등 총 5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제3당으로 전락하였다. 제2야당의 한계를 느낀 통일민주당은 1990년 1월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민주정의당 및 신민주공화당과 합당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통일민주당은 1987년 5월 1일 창당된 후 2년 8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기택, 노무현 등 3당통합에 합류하지 않은 통일민주당 잔류파들은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3)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은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27석, 전국구 8석 등 총 35석을 확보함으로써 원내 제4당으로 부상하였다. 신민주공화당은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제 3야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였으며, 사안별로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협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0년 2월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합당을 위한 당의 해체를 의결하였다. 이로써 신민주공화당은 1987년 10월 30일 창당된 후 2년 3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4) 민주자유당

1990년 1월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당 김영삼 총재, 공화당



3당 합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과 1987년 대선 패배 후 제13대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전략한 김영삼의 입지, 군소정당의 형편을 면치 못하게 된 김종필의 궁지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46) 김현우, 앞의 책, 644쪽.

47) 신명순, 앞의 책, 171쪽.

김종필 총재는 청와대에서 회동하여 3당 통합에 의한 신당 창당 및 자당 5인씩 15명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합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과 1987년 대선 패배 후 제13대 총선에서 제2야당으로 전략한 김영삼의 입지, 군소정당의 형편을 면치 못하게 된 김종필의 궁지가 맞물려서 이루어진 것이다.⁴⁶⁾

민주자유당은 개헌선인 198석을 웃도는 216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으로 탄생됨으로써, 과거 권위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거대여당에 의한 독주와 다수의 횡포가 다시금 환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 방송관계법 개정안, 추곡수매가 동의안, 광주보상법안 등의 통과에서 여당에 의한 단독법안 상정과 단독 날치기 통과가 되풀이된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대응하여 야당은 본회의장 농성과 국회 등원거부 등 과거의 행태를 재현함으로써 의회정치는 발전이 아닌 쇠퇴를 나타내었다.⁴⁷⁾

1992년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은 149석을 확보하였으나 과반수에 1석이 모자라는 여소야대 현상이 재현되었다. 그 후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소속의원을 입당시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제14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다. 결국 1992년 5월 개최된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金泳三) 대표최고위원이 대의원 66%의 지지를 얻어 33%의 득표를 한 이종찬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운동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민자당을 탈당하였다.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의 김영삼(金泳三) 후보가 41.4%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민자당은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5) 평화민주당

평화민주당은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으나,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54석, 전국구 16석 등 총 70석을 확보함으로써 통일민주당을 제치고 제 1야당으로 부상하였다. 평화민주당(평민당)은 제 1야당으로서 5공청산 청문회와 악법개폐 등을 주도하는 한편 노태우 대통

령의 중간평가 연기에 동의하는 등 여당과 이슈별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90년 1월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평민당은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 평민당은 거대 여당인 민자당의 국회운영 독주에 맞서 의원직 사퇴 또는 단식투쟁 등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평민당은 1991년 4월 9일 김관석, 이우정, 오충일 등 신민주연합과 합당하여 김대중(金大中)을 총재로 하고 당명을 신민당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신민당은 6월에 실시된 광역의회선거에서 민자당 65.1%에 비해 19.1%를 당선시키는 데 그침으로써, 이를 만회하고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9월 16일, 1990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주당과의 통합을 성사시켜 당명을 민주당으로 하고 공동대표위원에 김대중(金大中), 이기택(李基澤)을 선출하였다.

6) 민주당

3당 통합 후 이기택, 김광일, 노무현 의원 등 통일민주당의 잔류파와 무소속의 이철, 박찬중 의원 등이 비호남권에서 야당 재건을 목표로 1990년 6월 15일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그 후 민주당은 평화민주당과 합당을 시도하였으나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2선 후퇴론'을 주장하는 통합반대파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1991년 9월 16일 평민당의 후신인 신민당과 통합하여 통합야당으로 새 출발하였다.

통합야당인 민주당은 1992년의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상외의 선전을 하여 지역구 75석과 전국구 22석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김대중(金大中) 후보는 33.8%를 득표하여 42.0%를 득표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대통령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직후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민주당은 1993년 3월 후계체제와 당의 진로를 논의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7) 통일국민당

1992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한 통일국민당이 김동길(金東吉) 등의 새한당을 흡수하여 2월 8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다.⁴⁸⁾ 제 6공화국의 정당사에서 통일국민당의 급성장과 그 시련을 하나의 이변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국민당은 마케트식 홍보 전략과 조직력을 동원하여 3.24 총선에서 창당 한달 보름만에 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을 획득하여 제3당으로 부상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1992년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16.3%를 득표하여 42.0%의 김영삼 후보, 33.8%의 김대중 후보에 이어 3위를 하는 데 그쳤다. 통일국민당은 대통령선거 이후 당내 분열과 혼선이 가중되었으며, 정주영 대표의 사퇴에 이어 국회의원직 퇴진으로 위기국면에 놓이게 되었다.

8) 기타

그 밖에 제6공화국 시기의 정당으로 신정당, 새한국당, 민중당 등이 있다. 신정당은 1992년 2월 25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찬종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하였다. 3.24총선에서는 1명만이 당선되어 당의 명맥을 유지하였으며, 12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찬중 후보가 6.4%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새한국당은 김영삼이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후 반김영삼 기치를 내세운 이종찬, 채문식, 김용환 등이 1992년 10월 23일 창당하였으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부분이 통일국민당에 입당함으로써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다. 이종찬(李鍾贊) 대표도 대통령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통일국민당에 입당하였다. 그러나 통일국민당과 새한국당의 통합은 그 절차상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제6공화국 하에 있어서 진보세력인 민중당은 1989년 11월 결성된 '진보적 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을 모태로 하여 1년 동안의 이합집산과

48) 통일국민당의 창당동기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여념이 없고 경제진당은 여동기 때문에 창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현우, 앞의 책, 687쪽.

정을 거친 뒤 1990년 11월 10일 창당되었다. 진보정당준비모임은 한겨레민주당과 '민중의 당'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전민련의 백기완(白基玩), 계훈제(桂勳梯), 박형규(朴炯圭) 등의 참여로 활기를 띠었다.

1992년 3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민중당은 한 사람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했으며, 전체 득표율도 1.5%에 불과하여 지지기반의 미약함을 나타냈다.

제5공화국 시기에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등은 1988년의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명의 후보자도 당선시키지 못함에 따라 정당법 제38조에 근거하여 모두 해체되었다.

3.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제5공화국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는 성남지역과 광주지역이 함께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6공화국 시기부터 성남시는 독자적인 선거구로 되었다. 1987년 말 성남시의 인구는 약 49만명에 달해 전국 시규모 10위로 부상하였고, 1989년 5월1일에는 수정출장소, 중원출장소 등 2개 출장소가 각각 수정구와 중원구로 승격되었다.⁴⁹⁾

성남시 선거구는 1988년의 제13대 총선 시에는 성남시 갑구와 성남시 을구로 분리되었다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따라 1992년의 제14대 총선부터는 성남시 수정구 및 성남시 중원·분당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성남지역의 정당을 보면 먼저 성남시 갑구 지구당의 경우 1990년 1월 3당통합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면서 민주정의당의 김충호 위원장, 통일민주당의 장문영 위원장, 신민주공화당의 이대엽 위원장의 공동명의로 1990년 2월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지구당 창당등록을 하였으며, 3당통합 후 통일민주당의 잔류파들을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당도 창당 다음 해인 1991년 9월지구당 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곧바로 신민당으로 통합됨에 따라 1992년 2월 신민당지구당으로 다시 등록을 하였다. 한편 1992년 말의 대선을 앞두고 창당된 통일국민당도 1992년 10월지구당 등록을 하였다.

지구당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 시 득표상황을 보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갑구에서는 신민주공화당의 이대엽(李大燾) 후보가



제5공화국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는 성남지역과 광주지역이 함께 편성되어 있었는데, 제6공화국 시기부터 성남시는 독자적인 선거구로 되었다.

49) 1988년 7월1일 종래의 둔마출장소, 대왕출장소, 낙생출장소를 폐지하고 성남시 수정출장소 및 중원출장소를 설치하였다: 성남시(1998),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30쪽.

당선되고 성남시 을구에서는 평화민주당의 이찬구(李讚九)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제14대 총선에서는 성남시 수정구에서 민주당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당선되고 중원·분당구에서는 민주자유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6공화국에서의 성남시의 지구당 현황을 보면 [표 7-4]와 같다.

표 7-4 성남시의 지구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갑구	민주자유당	김충호(金忠鎬)	1990. 2.15	신흥2동 135-1
		장문영(張文英)	(1992. 2.21)	
		이대엽(李大燾)		
	공명민주당	고석봉(高錫鳳)	1990. 5.23	태평4동 2058
	민 주 당	이윤수(李允洙)	1991. 9.16 (1992. 1.22)	신흥1동 5493-6
	통일국민당	허재영(許載瑛)	1992.10.19	태평2동 3363
	새 한 국 당	최상면(崔尙勉)	1992.12.10	신흥2동 123-29
성남시 을구	민 주 자 유 당	오세웅(吳世應)	1990. 2.15	금광1동 1789
	공명 민주당	윤상열(尹相烈)	1990. 5.21	성남동 27-9
	사 회 당	한성수(韓聖洙)	1990. 9.12	수내동 87-8
	민 중 당	임동현(林東顯)	1990.10.31	은행동 1147
	민 주 당	조성준(趙成俊)	1991. 9.16	성남동 27-9
	신정치개혁당	김기평(金基平)	1992. 2.24	중동 554
	통 일 국 민 당	이찬구(李讚九)	1992. 3. 3	성남동 27-9
	새 한 국 당	홍대원(洪大源)	1992.12. 5	성남동 28-11

* 후에 성남시 갑구는 수정구로, 성남시 을구는 중원·분당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제8절 문민정부

1. 국내 정치상황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3당 합당으로 탄생된 민주자유당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대권을 쟁취하였으며, 이로써 1993년 2월 25일 32년 만에 문민정부(文民政府)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중심이 군부·군 출신으로부터 민간 정치인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⁵⁰⁾

비록 여당에서 야당으로의 수평적 정권교체는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자 김영삼(金泳三)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저항해 온 야당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평적 정권교체였다.

김영삼 정권은 출범 초부터 3당 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5·6공 군부세력과의 차별화를 부각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공직자 재산공개 등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작업을 통해 국회의장 등 고위공직자를 축재 혐의로 정치권에서 축출하기도 했으며, 전두환을 정점으로 했던 ‘하나회’를 해체·숙청하는 등 군의 파벌을 혁파하여 정치군인의 온상을 허물었다. 특히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으로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 등 2명의 전직 대통령과 관련자를 구속·수감하는 대사건을 만들었다.⁵¹⁾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그 과정에서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표적 사정과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査定)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서 ‘복지부동’ 또는 ‘복지안동’이라는 용어가 회자되는 등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인 공직사회의 저항도 제기되었다. 그리고 1995년 1월 김영삼 대통령의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의 당직배제 발언과 그에 따른 김종필의 탈당은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1994년 3월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통합선거법은 종래의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등을 통합한 것으로 김영삼 정부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⁵²⁾ 이 법은 1995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전국 규모로 처음 적용되어 그 효과를 발휘하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직후 정계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은 민주자유당의 분열로 김종필 대표가 분리해 나오면서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자 비슷한



〈사진 3-7-8〉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

50) 김현우(2000), 『한국정당동향운동사』, 을유문화사, 714쪽.



김영삼 정부의 출범은 권력의 중심이 군부·군 출신으로부터 민간 정치인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51) 김영삼 정부 수립 후 처음 맞은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10월19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11월16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8인 후인 11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이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 5·18 특별법 제정을 전격적으로 지시하고 이튿날 ‘역사바로세우기’로 규정하면서 12월3일 합천으로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하기에 이르렀다.

52) 민준기(2001), 『21세기 한국의 정치』, 뚝문사, 326쪽.

시기에 정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6.27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8일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을 선언하고 정계에 복귀하였다.

한편 민자당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박찬종 등 중량급 인사들의 영입과 아울러 2월7일 당명을 민주자유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변경하였다.⁵³⁾

이러한 정계변화를 바탕으로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139석,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 민주당 15석, 무소속 16석 등을 획득하였으며, 이로써 3당 정립구도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제13대 총선 이후 연속해서 여소야대의 구도를 낳게 된 상황 하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은 정국안정을 위해 무소속 당선자를 영입하여 여대야소 구도를 구축하였다.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그 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나 국민의 이해 부족, 그리고 추진과정의 독선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와 동참을 구하는 데 미흡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취한 개혁 작업은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라는 비판과 함께 군부 독재를 대신하는 문민 독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은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서 물려져 있었던 비리들을 과감하게 파헤치고 바로잡는 데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정치영역의 확대와 기업의 자율화 추구 등으로 민주정치 체제의 요건이 크게 충족되는 바탕을 마련했다.

2. 정당활동

문민정부시기에 있어서 정당 활동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여당과 김대중 중심의 새정치국민회의, 김종필 중심의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야당계열인 민주당 등으로 나뉜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간의 합당 또는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합당하였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대통령 선거전에 임하였다.

53) 1990년 2월3당합당시부터 사용하던 당명을 변경한 것은 3당합당체제의 중식을 의미하는 동시에 기존의 당 이미지를 바꾸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김현우, 앞의 책, 742쪽.



김영삼 정권의 개혁은 그 방향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나 국민의 이해 부족, 그리고 추진과정의 독선으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와 동참을 구하는 데 미흡했다.

1)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민주자유당은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새로운 집권당으로 거듭 태어났다. 집권 후 당의 지지도가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개혁에 대한 명분을 굳건히 확보하고 정국 주도권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전·노(全·盧) 전직 대통령 부정축재 비리사건과 5·18 특별법 제정, 그리고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창당 등 정국상황 변화로 민자당은 1996년 2월 7일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신한국당은 출범 직후 실시된 1996년 4월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139석을 확보하여 79석의 새정치국민회의, 50석의 자유민주연합과 함께 3당 정립구도를 형성하였으며, 서울지역에서 47석 중 27석을 차지해 사상 첫 여대(與人)현상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일찍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996년 연말에 발생한 노동법 국회강행 통과사태와 한보사태,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차남 김현철 구속사태로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러한 국면 속에 신한국당은 1997년 3월전국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홍구(李洪九) 대표의 후임으로 이회창을 새 대표로 선출했고, 7월에는 개정된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회창, 이인제, 박찬종 등 6명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경선을 통해 60.0%을 획득한 이회창(李會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 후 9월 30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회창 대표를 새 총재로 선출하고 대표최고위원에는 이한동을 지명하였다.

이회창 후보는 경선 직후 한때 지지도가 50%를 상회했으나, 야당에서 제기한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와 이인제 후보의 탈당 및 당내 분란으로 지지도가 급락하여 고전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둔 11월21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의 통합신당인 한나라당이 출범함으로써⁵⁴⁾ 막판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와 접전을 벌이게 되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에는 신한국당의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총재에는 조순(趙淳) 민주당 총재가 선출되었다.

1997년 12월18일의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회창 후보는 총 유효투표 중 38.7%를 얻는 데 그쳐 40.3%를 획득한 김대중 후보에게 패하였다.

54) 김현우, 앞의 책, 754쪽.

2)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은 정계은퇴 번복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민주당 내 추종자들을 이끌고 1995년 9월 5일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였다. 이 때 의석수 분포는 민주자유당 168석에 이어 65석으로 제1야당의 위치에 있었으며, 김대중 추종세력이 빠져나간 민주당은 이기택 세력과 스스로 구당파로 부른 반 이기택 세력간의 내분, 그리고 반김대중노선이라는 틀 속에서 30석으로 제3당의 위치를 유지하였다.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는 창당 7개월여 만에 치러진 1996년의 제15대 총선에서 당초 목표했던 100석에 훨씬 못 미치는 79석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김대중 총재도 전국구 14번의 배수진을 치고 내각제 개헌 지지선인 100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자신도 원외로 밀려났다. 더욱이 서울에서 국민회의 중진들의 대거 낙선은 충격을 더하였다.

당내·외의 '반김대중' 역풍에 휘말린 김대중은 재기의 발판으로 자유민주연합과의 연대를 추진했다. 총선 후 자민련 흔들기에 시달리던 김종필도 국민회의의 도움이 필요한 터이라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쉽게 손을 잡았다. 양당은 원내대책은 물론 경제·안보에도 협력관계를 유지하였고,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한 내각제 개헌 등 공조의 폭과 깊이는 더욱 발전하였다. 그러나 단일화의 관건인 내각제 문제가 매듭 되지 못한 상황에서 1997년 5월과 6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김대중과 김종필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국민회의는 이인제가 신한국당을 뛰쳐나와 대선에 출마하자 여권의 후보 난립에 따른 틈새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김대중 총재의 독주체비를 갖추나갔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후보 단일화가 대선 필승카드임을 인식하고 전당대회 이후인 6월부터 적극적인 협상에 착수하여 5개월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적 실험인 야권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⁵⁵⁾ 결국 김대중(金大中)은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유효투표 총수의 40.3%를 획득함으로써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내·외의 '반김대중' 역풍에 휘말린 김대중은 재기의 발판으로 자유민주연합과의 연대를 추진했다. 총선 후 자민련 흔들기에 시달리던 김종필도 국민회의의 도움이 필요한 터이라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쉽게 손을 잡았다.

55) 김대중 총재가 10월27일 밤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청구 등 자택을 은밀히 방문하여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한 것을 놓고 여론이 '민심야합', '나눠먹기식 권력매분'이라고 몰아붙여 한때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3) 자유민주연합

1994년 말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민주자유당의 김종필체제는 1995년 1월 김종필 대표의 사퇴 선언과 함께 끝나고, 5월 30일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의 창당으로 이어졌다.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자민련은 6·27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놀랍게도 충남과 대전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하였다.

자민련은 1997년 6월 전당대회에서의 경선을 통해 김종필(金鍾泌)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고 ‘파워 JP플랜’의 기치 아래 김 총재의 유권자 접촉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자민련은 자신들이 추진해온 내각제 개헌이 정치권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자 제15대 대선 승리를 통하여 내각제를 구현하기로 전술을 수정하기에 이른다.

자민련은 1997년 7월 국민회의와 야권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갖고 양당 중심의 정권교체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후 양당은 ‘6인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양당 총재는 11월 3일 국회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종필 총재는 김대중 총재와의 후보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 지은 후 곧바로 ‘DJP 연대’의 파괴력을 높이기 위해 무소속 박태준(朴泰俊) 의원을 포함하는 ‘DJT 연대’를 모색했다. 이에 박태준은 11월 21일 자민련 중앙위원회에서 제3대 총재로 선출되고, 김종필 총재는 명예총재로 추대되어 당무 일선에서 물러났다.

4) 민주당

김영삼의 3당 통합으로 야권의 한 축이 붕괴된 뒤에 제14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김영삼은 대통령에, 그리고 김대중은 정계에서 은퇴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4반세기 동안 한국 야권을 이끌어 왔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이른바 ‘양 김’의 야당시대는 막을 내리는 듯했다. 김대중의 정계은퇴로 유일 야당인 민주당은 이기택(李基澤)을 중심으로 하는 9인 집단지도체제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구심점은 김대중이었고, 배후에 있는 김대중의 영향력은 전면의 이기택의 영향력보다 훨씬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이 정계복귀와 더불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함

으로써 민주당은 제3당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1995년 12월 민주당은 장을병(張乙炳) 등의 개혁신당과의 합당으로 통합민주당이 되었다가 1996년 6월에 다시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민주당은 통합민주당 시기인 1996년 4월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139석, 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에 이어 15석으로 제4당에 머물렀다.

민주당은 1997년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조순(趙淳)을 총재로 추대하였으며,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과 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창당되었다.

5) 국민신당

국민신당은 신한국당 경선에서 패배한 이인제를 중심으로 1997년 11월 4일 창당되었으며, 이인제(李仁濟)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12월의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인제 후보는 약 490만표를 얻어 3위에 머물렀다. 그 후 국민신당은 이만섭(李萬燮)을 총재로 선출하고 1998년 9월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에 흡수·통합됨으로써 창당 10개월여 만에 공식 해체되었다.

3.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문민정부시기에 있어서 성남 지역의 지구당은 초기에는 수정구와 중원구·분당구의 2개 지구당으로 나뉘었는데, 후기에 와서 중원구·분당구 지구당이 중원구 지구당과 분당구 지구당으로 분리되어 성남시의 지구당은 3개 지구당으로 확대되었다.

문민정부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의 지구당은 초기에는 수정구와 중원구·분당구의 2개 지구당으로 나뉘었는데, 후기에 와서 중원구·분당구 지구당이 중원구 지구당과 분당구 지구당으로 분리되어 성남시의 지구당은 3개 지구당으로 확대되었다. 문민정부 시기의 성남지역의 정당으로는 먼저 1990년 3당통합 직후 지구당 등록을 한 민주자유당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민주당과 통합하여 한나라당이 되면서 지구당 등록을 변경하였고, 야당들도 민주당, 신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정당의 분리·통합 및 생성에 따라 지구당의 등록 및 명칭변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문민정부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의 지구당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집권여당과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많은 야당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정당들의 현황을 보면 [표7-5]와 같다.

문민정부 시기에는 1996년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번 있었는데,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등 3개 선거구에서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간의 3파전이였다.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투표결과 새정치국민회의(이윤수), 자유민주연합(李大煥), 신한국당(유제인)의 순위를 보여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당선되었고, 중원구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조성준), 신한국당(정완립), 자유민주연합(강희규)의 순위로 역시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성준(趙誠俊)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신도시 지역인 분당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새정치국민회의(나필열), 자유민주연합(권현성)을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성남지역의 자유당 현황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민주자유당	김충호·장문영·李大煥 (金忠鎬·張文英·李大煥)	1990. 2.15	신흥2동 135-1
	신한국당	상 동	1998. 2.23	신흥2동 135-1
	민 주 당	이 윤 수(李允洙)	1991. 9.16	신흥1동 5493-6
	통일국민당	허 재 영(許載瑛)	1992. 10.19	태평2동 3363
	새 한국당	최 상 면(崔尙勉)	1992. 12.10	신흥2동 123-29
	대한민주당	최 진 선(崔珍善)	1993. 8.27	태평4동 1644
	신 민 당	허 재 영(許載瑛)	1994. 7. 8	태평2동 3363
	자유민주연합	이 대煥(李大煥)	1995. 4.28	신흥2동 32
	새정치국민회의	이 윤 수(李允洙)	1995. 8.25	신흥1동 5493-6
	무당파국민연합	최 상 면(崔尙勉)	1996. 3.11	단대동 4132
	통합민주당	김 준 기(金準基)	1996. 3.21	북정동 415
	21세기	한 봉 학(韓鳳學)	1997. 10.14	신흥3동 3792
	한민족공동체 (바른나라정치연합)			
	국민신당	유 제 인(柳濟仁)	1997. 10.28	신흥2동 923-1
	한나라당	김 동 선(金東銑)	1998. 2.23	신흥3동 3405-2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민주자유당	오 세 응(吳世應)	1996. 3.19	금광1동 1789
	민 주 당	조 성 준(趙誠俊)	1991. 9.16	성남동 27-9
	신정치개혁당	김 기 평(金基平)	1992. 2.24	중동 554
	통일국민당	이 찬 구(李讚九)	1992. 3. 3	성남동 27-9
	새한국당	홍 대 원(洪大源)	1992. 12. 5	성남동 28-11
	대한민주당	이 병 목(李炳默)	1993.12.15	금광동 3551
	신 민 당	유 창 일(柳彰日)	1995. 6.22	성남동 15-35
	대한민주당	김 무 한(金武漢)	1993.10.15	금광동 3551
		김 중 우(金鍾宇)	1994.11.29	중동 3757
	자유민주연합	이 용 균(李龍均)	1995. 5.31	하대원동 125-5
성남시 중원구	기독교민당	김 중 우(金鍾宇)	1994.11.29	중동 3757
	새정치국민회의	조 성 준(趙誠俊)	1995.12.13	성남동 5-17
	대한민주당	김 무 한(金武漢)	1993.10.15	금광동 3551
	자유민주연합	강 희 규(姜熙圭)	1996. 2.17	하대원동 125-5
	무당파전국연합	이 호 승(李鎬承)	1996. 3.12	성남동 84
	통합민주당	김 일 주(金一柱)	1996. 3.12	중동 789
	신한국당	정 완 립(鄭完立)	1996. 3.19	금광동 1789
	민 주 당	김 일 주(金一柱)	1996. 6.24	중동 789
	통일한국당	이 상 갑(李相甲)	1997. 9.12	상대원동 152-3
	21세기한민족공동체	신 창 호(申昶浩)	1997. 10. 8	금광동 산 21
성남시 분당구	국민신당	최 인 식(崔仁植)	1997.10.30	중동 1191
	건설국민승리21	이 홍 성(李弘成)	1997.11.21	성남동 137-7
	한나라당	김 일 주(金一柱)	1998. 2.23	중동 789
	민주자유당	오 세 응(吳世應)	1995. 8.24	야탑동 598
	자유민주연합권	권 현 성(權憲成)	1995.10.11	야탑동 360-6 분당메트로 빌딩602호
	개혁신당	성 유 보(成裕普)	1995.11.24	야탑동 530-4 송문상가 202호
	통합민주당	성 유 보(成裕普)	1995. 2.21	야탑동 530-4 송문상가 202호
	새정치국민회의	나 필 열(羅必烈)	1996. 1.24	서현동 248-1 대명프라자 301호
	무당파국민연합	안 상 문(安相文)	1996. 3. 12	야탑동 335 장미마을 825- 1602
	신한국당	오 세 응(吳世應)	1995. 8. 24	야탑동 598
성남시 분당구	민 주 당	강 철 온(姜哲殷)	1997. 1. 12	정자동 112 한솔주공5단지 중 합상가 208호
	통일한국당	노 점 자(盧点子)	1997. 1. 30	서현동 90 올림픽스포츠헤터 114 호
	21세기한민족공동체	김 인 기(金仁基)	1997. 10.13	구미동 무지개마을 205-4 브 미엘프라자 3층
	바른나라 정치연합	상 동	1997. 10. 31	"
	한나라당	오 세 응(吳世應)	1998. 2. 26	수내동 83-3

제9절 국민의 정부

1. 국내 정치상황

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성립된 ‘국민의 정부’는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권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호남지역에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의 연대로 이룩된 정권으로서, 정권의 획득에서부터 양자간에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연합한 공동집권 형태의 상황이었다.⁵⁶⁾

공동정권은 1997년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서 “공동 집권 뒤 양측이 국정에 같이 참여하고 1999년 말까지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약속 내용에 따라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하고 내각 각료를 안배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반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의 국회인준이 지연되는 등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김종필 총리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정권출범 반년이 지나서야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서리(署理)’ 꼬리를 땔 수 있었다.

공동여당은 2000년 4월 13일에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명칭을 바꾼 새천년민주당은 선전을 한 반면, 자유민주연합이 극도의 부진을 보여 국회의석 273석 중 132석으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인위적 정계개편은 없었다.”던 공동여당은 결국 구여권의 야당의원들을 영입함으로써 여소야대를 가까스로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의 공동정권은 당초 합의문에서 약속했던 내각제 개헌에 대한 견해 차이 등 두 당간 원천적 갈등요인과 함께 김대중·김종필 간의 불화가 노골화되면서 결국 2001년 9월 공조(共助)가 파기되었다.



〈사진 3-7-9〉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취임

56) 김영삼 정권이 의형상으로는 집권당의 정권유지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세력 정권교체’였다면 김대중 정권은 의형상으로는 정당간의 수평적 정권교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민주화 세력과 5·16 쿠데타 및 유신주도 세력이 연합해 성립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성립된 ‘국민의 정부’는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권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초반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의 제동으로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의 국회인준이 지연되는 등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57) 만준기, 앞의 책, 329쪽.

58) 김용호(2001),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430-431쪽.



국민의 정부는 연합정권의 약점과 의회에서의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지도력'을 부각시켜 IMF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였다.

제16대 총선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대규모 선거유세, 청중동원 등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TV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방식이 주도해 나가는 새로운 선거문화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⁵⁷⁾ 또 하나는 정치권을 일신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외침이 거세게 일었고 실제로 정치권에 대단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400여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한 총선시민연대는 사상 유례가 없는 공천반대운동과 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⁵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연합정권의 약점과 의회에서의 여·야 갈등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지도력'을 부각시켜 IMF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경제회생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였다. 특히 금융 및 대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외자유치 전략 등 경제개혁 조치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북문제와 관련하여 소위 '햇볕정책'을 수립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체제 구축을 도모하였으며,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가의 역량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비판의 엇갈린 견해가 공존한다.

2. 정당활동

1)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하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에 의한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뤄내는 쾌거를 거뒀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회의는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총 299석의 국회의원 중 79석(지역구 66석 전국구 13석)의 약세를 면치 못하였으며,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이 X자형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 주듯이 호남지역에 치중된 지역정당의 모습에 불과하였다.⁵⁹⁾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러한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려는 차원에서 2000년 1월 20일 새천년민주당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4월의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하였다. 투표결과 새천년민주당은 제

59)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호남지역 득표율은 광주 97.3%, 전남 94.7%, 전북 92.3%인 반면, 영남지역에서는 경남 11.0%, 울산 11.8%, 대구 12.5%, 경북 13.7%이었다.

15대 총선의 득표율 25.59%보다 약 10%가 상승한 35.87% 득표로 115석(지역구 96석, 전국구 19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공동정권의 한 축(軸)인 자유민주연합의 부진으로 공동여당의 의석은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12월의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4월경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競選)을 실시하였다. 한화갑, 노무현, 이인제, 정동영 등 7명이 입후보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경선에서 극적인 반전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노무현(盧武鉉)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월드컵 4강 진출로 급작스레 부각된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 성공으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물리치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공식 출범한 정당으로, 1990년 1월의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의 '3당 합당체제'는 이미 와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출범은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민주당 조순(趙淳) 총재의 당 대 당 통합을 통한 대선 연대추진이라는 결단에 따라 이뤄졌다. 직업 정치인이 아닌 두 아마추어 정치인의 주도로 탄생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3김이 주도해 온 한국 정치의 변화를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1997년의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의 연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조된 정당이라는 점에서 대선 패배로 인해 당을 지탱할 응집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당내 구조변화가 불가피했다.⁶⁰⁾

한나라당은 특히 구민주당과 구신한국당의 합당으로 인해 과거 '한 지붕 세 가족'으로 표현됐던 구민자당, 신한국당보다 더욱 복잡하게 계파가 혼재하고 있는 역학구조로서 불안정성은 더욱 컸다. 당내 역학관계는 구신한국당 안의 이회창 후보 직계, 민정계의 김윤환 고문계, 이한동 고문계, 민주계의 김영삼 대통령 직계, 김덕룡 의원계, 구민주당의 이기택 고문계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였다.



직업 정치인이 아닌 두 아마추어 정치인의 주도로 탄생함으로써 한나라당은 당시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 김종필 총재 등 3김이 주도해 온 한국 정치의 변화를 천명했다.

60) 한국정치사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끝난 후 대·소규모의 정계개편은 필연적 정치현상이었고, 따라서 제15대 대선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정계 지각변동과 아울러 한나라당의 진로는 정계개편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1998년 초부터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과 당 지도부 경선 등 당 지도체제 개편논의가 공론화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으나, 김종필 총리 인준 반대투쟁 등 강력한 대여투쟁을 벌이면서 더욱 불거지지 않고 내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조순 총재-이한동 대표 등 당 지도부는 6월 지방선거까지 기존 지도체제의 고수를 주장했고, 이회창 명예총재-김윤환 고문 등 당내 비주류 측은 당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8월 31일 전당대회에서는 이회창, 이한동, 김덕룡, 서청원 등 4명이 경합을 벌인 결과 이회창(李會昌)이 다시 총재로 당선되었으며, 조순 총재는 명예총재로 추대되어 당무 일선에서 떠났다. 그 후 이회창 체제는 계속되는 내·외의 시련 속에서도 당의 지도체제와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야당으로 면모를 갖추으로써 재집권을 위한 기반을 쌓아갔다.

2002년 12월의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도 4~5월경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하였다. 경선평정에는 이회창, 최병렬, 이부영, 이상희 등 4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이회창(李會昌)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회창 후보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에게 패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

3)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공동여당으로 내각제 개헌을 둘러싸고 국민회의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김종필의 국무총리 취임 등 집권 여당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김종필의 후임으로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한동(李漢東)이 한 때 대표를 맡았으나, 이한동은 양당간 공조과기 이후 국무총리직을 택함에 따라 제명되었다. 자유민주연합은 2000년 4월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에도 못 미치는 17석(지역구 12석, 전국구 5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으며,⁶¹⁾ 그 후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탈당사태가 이어져 당의 진로와 관련하여 고초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 자유민주연합과 새천년민주당으로 이루어진 공동여당간의 정책 혼선이 가끔 벌어져 권력구조의 갈등을 드러냈으며, 결국 2001년 9월두 당간 공조가 파기되어 공동 여당은 해체되었다.

61) 자유민주연합은 제15대 총선에서 50석(지역구 41석, 전국구 9석)을 획득하였다.

4) 기타

그 밖에 민주노동당, 하나로국민연합, 사회당, 호국당 등 4개 정당은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대통령후보를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의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투표자 수의 3.9%에 해당하는 95만 7천여 표를 얻어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3.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국민의 정부 시기에 와서 성남지역의 선거구는 분당구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 3개로 분화되었으며, 후에 분당구가 갑·을 선거구로 다시 나뉘어짐에 따라 4개 지역구로 증설되었다. 성남지역의 정당으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갑, 분당구 을 등 모두에서 문민정부 이래(이 시기에는 3개 선거구) 활동하고 있었으며, 민주노동당이 분당 갑구를 제외한 3개 선거구에서 활약하였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 있어서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은 [표 5-6]과 같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의 경우 새천년민주당(이운수), 한나라당(김동선), 자유민주연합(김을동) 등 3당이 경합을 보인 가운데 새천년민주당의 이운수(李允洙)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되었으며, 중원구에서는 새천년민주당(조성준), 한나라당(김일주), 민주노동당(정형주) 등의 3당 경합 속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조성준(趙誠俊)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분당 갑구와 을구에서는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경합 속에서 각각 한나라당의 고흥길(高興吉) 후보가 새천년민주당의 강봉균 후보를, 한나라당의 임태희(任太熙) 후보가 새천년민주당의 이상철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기에 와서 성남 지역의 선거구는 분당구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등 3개로 분화되었으며, 후에 분당구가 갑·을 선거구로 다시 나뉘어짐에 따라 4개 지역구로 증설되었다.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한 나 라 당	김 동 선(金東旋)	1998. 2.23	신흥3동 3405-2
		새천년민주당	이 윤 수(李允洙)	2000. 1.18	남성빌딩 401호
		민주노동당	박 우 형(朴祐亨)	2000. 5.24	신흥1동 5496-3
		녹색평화당	박 재 영(朴在永)	2002. 5.16	태평3동 3661
		복지민주통일당	박 종 훈(朴宗勳)	2002. 9.19	수진1동 663-2
		민주광명당	박 행 규(朴幸圭)	2002. 9.19	수진1동 1273-1
		국태민안호국당	김 수 길(金壽吉)	2002.11.25	수진2동 3347
					수진1동 1359
성남시 중원구		한나라당	김 일 주(金一枝)	1998. 2.23	중동 789
		새천년민주당	조 성 준(趙誠俊)	2000. 1.21	중동 550
		민주노동당	정 형 주(丁炯周)	2000. 5.24	중동 898
		노년권익보호당	조 세 환(趙世煥)	2002. 5. 2	성남동 3348
		녹색평화당	이 창 열(李昌烈)	2002. 5.17	상대원동 4226
		복지민주통일당	이 창 경(李昌景)	2002. 9.24	상대원동 (동천빌라 A-212)
		국민통합21	이 영 성(李英成)	2002.11. 4	하대원동 143-1
		자유민주연합	오 성 수(吳誠洙) * 직무대리자	1999. 1.20	야탑동 세신옴니코아 513호
성남시 분당구		새천년민주당	나 필 열(羅必烈)	2000. 1.24	정자동46-1 명진상가402호
		새천년민주당	강 봉 균(姜奉均)	2000. 3. 2	서현동 251-2 (주)대우자판B/D 층
			허 운 나(許雲那)	(2002. 3.18)	야탑동 290-1 중탑상가 B/D 2층
		한나라당	고 흥 길(高興吉)	2000. 3.13	야탑동 352-2
		자유민주연합	강 대 기(姜大基)	2000. 3.20	야탑동 382-8 광명프라자 306호
		민주국민당	양 재 헌(梁在憲)	2000. 3.27	야탑동 290-2 복정B/D 303호
		통일한국당	노 점 자(盧点子)	2000. 8.22	서현동 90 올림픽스포츠센터 114호
		하나로국민연합	강 대 기(姜大基)	2002.12.19	야탑동 399 장미현대831-406
성남시 분당구 을		새천년민주당	김 재 일(金在日)	2002. 3.18	구미동 25-2 엘레강스프라자1 동 704호
		한나라당	임 태 희(任太熙)	2000. 3.23	구미동 252-2 엘레강스B/D 502호
		자유민주연합	오 세 응(吳世應)	2000. 3.27	수내동 83-3 수협B/D 2층
		민주노동당	김 현 경(金鉉京)	2002.12. 6	정자동 63-8
		개혁국민신당	김 병 욱(金炳旭)	2002.11.25	정자동 한솔청구101-402

제10절 참여정부

1. 국내 정치상황

2002년 12월의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 등이며, 4대 국정원리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경제난, 대북문제, 이라크 파병안 처리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극도의 여소야대 정국하에서 출범 초기부터 국무총리 및 감사원장 인준처리,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등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측근 비리 및 대선자금 수사 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제17대 총선 정국을 맞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2003년 새로이 창당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정당간의 격전이 치열했다.



〈사진 3-7: 10〉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

2. 정당활동

참여정부의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한 정권의 정당활동을 기술하기에는 이르다. 다만 2004년 1월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등의 4당 구도로 정립되어 있다. 그 밖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급진전을 보인 민주노동당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제15대에 이어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가 연이어 패배함으로써 당 지도체제 및 대선자금 수사 등 당내·외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번 대선을 지휘하였던 서청원 대표에 이어 최병렬(崔秉烈) 대표 체제가 구축되어 당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과반수 의석을 가진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원내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과제였다.

2)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후보를 내세워 재집권을 창출한 집권당이면서도 집권 주도세력의 탈퇴로 야당의 위치로 전락되었다. 지난번 대선시 당 대표였던 한화갑이 물러난 후 정대철, 박상천을 거쳐 현재는 조순형(趙舜衡) 대표체제가 구축되어 당 운영을 맡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 확보와 아울러 지역정당으로부터의 탈피가 최대의 과제였다.

3)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탈당파, 개혁당 등 혁신 성향의 인사들이 2003년 11월 결성한 정당으로, 김원기 대표에 이어 정동영(鄭東泳) 의장 체제가 구축되어 당 운영을 맡고 있다. 탈호남의 전국 정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수 의석 확보로 행정권의 안정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였다.

4) 자유민주연합

현존하는 정당으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당세가 위축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소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

5) 기타 정당

그 밖의 여러 정당 중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의 활동상이나 현재의 사회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민주노동당의 활동이 주목된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은 1% 이상을 나타냈으나 국회의석은 확보하지 못하였다.

3. 성남지역의 지구당 현황

성남시의 지구당은 국민의정부 시기에 있어서와 같이 수정구, 중원구, 분당 갑구, 분당 을구 등 4개 선거구로 되어 있다. 4개 선거구 모두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등을 중심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치열한 득표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1월현재 성남시 지역의 지구당 현황을 보면 [표 7-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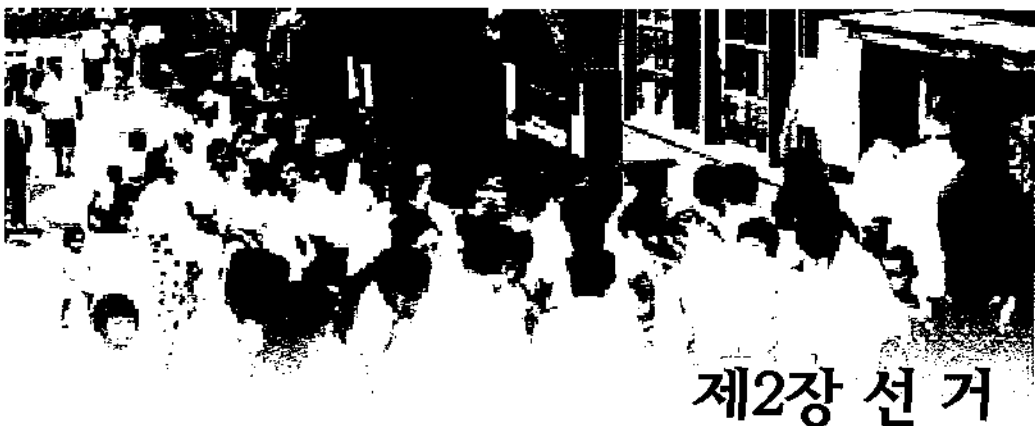
참여정부 시기에 와서 정당활동의 특징은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이 중앙당 창당에 이어 지구당을 창당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수정구	한나라당	김을동(金乙東)	1998. 2.23	산성동 844(4층)
	새천년민주당	이윤수(李允洙)	2000. 1.18	신흥1동 5493
	열린우리당	황수연	2004. 1.14	태평2동 3365-1(402)
	개혁국민정당	김태년(金太年)	2003. 3.18	태평2동 3365
	민주국민당	최상면(崔尙勉)	2000. 3.28	신흥2동 139-3
	민주노동당	김미희(金美希)	2002.11.29	태평2동 3418
	녹색평화당	박재영(朴在永)	2002. 5.16	수진1동 663-2
	복지민주통일당	박종훈(朴宗勳)	2002. 9.19	수진1동 1273-1
	민주광명당	박형규(朴幸圭)	2002. 9.19	수진2동 3347
	국대인안호국당	김수길(金壽吉)	2002.11.25	수진1동 1359
	천주평화통일가정당	박노욱(朴魯旭)	2003. 3. 5	태평1동 6982
	한나라당	김일주(金一柱)	1998. 2.23	중동 789 가곡빌딩 5층
	새천년민주당	조성준(趙誠俊)	2000. 1.21	중동 550 성보빌딩 3층
성남시 중원구	자유민주연합	최인식(崔仁植)		금광1동 단대쇼펍빌관 2층
	민주노동당	정형주(丁炯周)	2000. 5.24	중동 898
	통일한국당	이상갑		상대원1동 삼익@ 101-601
	노년권익보호당	조세환(趙世煥)	2002. 5. 2	성남동 3348 2층
	녹색평화당	이창열(李昌烈)	2002. 5.17	상대원동 4226
	복지민주통일당	이창경(李昌景)	2002. 9.24	상대원동(동환빌라 A동 212호)
	개혁국민정당	국중범(郭重範)	2003. 3.18	은행동 1579(1층)
	천주평화통일가정당	권인진(權仁眞)	2003. 4.29	성남동 3982
	열린우리당	이상선		중동 865(3층)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2000. 3.13	야탑동 352-2
	새천년민주당	허운나(許雲那)	2000. 3. 2	수내2동 코끼리상가 1층 66호
	자유민주연합	공 석	2000. 3.20	야탑동 382-8 광명프라자 306호
	민주국민당	양재현(梁在憲)	2000. 3.27	야탑동 290-2 복정 B/D 303호
성남시 분당구(갑)	통일한국당	노점자(盧点子)	2000. 8.22	서현동 90 올림픽스포츠헤나114호

선거구	정 당	대 표 자	등록일자	소재지
성남시	하나로국민연합	강대기(姜大基)	2002.12.19	야탑동 399 장미현대@ 831-406
분당구(갑)	개혁국민정당	김용준(金容俊)	2003. 3.28	야탑동 286-3, 203호
	찬주평화통일가정당	장관용(張寬用)	2003. 5.19	야탑3동 44-2 동천빌딩 101호
	열린우리당	윤광열(尹光烈)	2003.11.11	이매1동 249-1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2000. 3.23	구미동 252-2 엘레강스 B/D 502호
성남시 분당구(을)	새천년민주당	김재일(金在日)	2002. 3.13	구미동 35-10
	자유민주연합	오세응(吳世應)	2000. 3.27	수내동 83-3 수협 B/D 2층
	민주노동당	김현경(金鉉京)	2000.11.25	정자1동 63-8, 지층
	개혁국민신당	김병욱(金炳旭)	2002.11.25	수내동 쌍용@ 503-1502
	천주평화통일가정당	이정섭(李正燮)	2003. 6.23	정자동 32-12
	복지민주통일당	윤학주(尹學柱)	2003. 9.18	정자동 194
	열린우리당	여운식	2003.12.15	구미동 24-1 현대벤처 B/D 308호

※ 성남시 관내 3개(수정구, 중원구, 분당갑,을구) 선거관리위원회 자료(2004년 1월현재).

◎ 집필 崔恒洵 경원대학교 교수



제2장 선거

제1절 대통령 선거

1. 초대 대통령 및 1·2대 부통령 선거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의회는 초대 국회의장에 이승만(李承晩), 부의장에 신익희(申翼熙)·김동원(金東元)을 선출하였다. 제헌의회는 대통령 중심제를 골격으로 한 헌법을 1948년 6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⁶²⁾ 7월 17일 이승만 국회의장의 서명·공포로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헌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통령선거는 재적의원 1/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투표로서 당선자를 결정하며,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하였다.

1948년 7월 20일 초대 정·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서 실시되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표 7-8]과 같이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등을 훨씬 앞선 180표를 획득하여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62) 한국민주당은 당초 이승만을 국가원수로 하고 행정수반은 자당에서 겸하고자 내각책임제를 기도하였으나 이승만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국가와 행정의 수반인 미국식 대통령제를 원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제로 수정하였다: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윤유문화사, 241쪽, 121-122쪽.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결과 이승만(李承晩)이 김구 13표, 안재홍 2표 등을 훨씬 앞선 180표를 획득하여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7-8) 초대 대통령선거결과(1948.7.20)			
후보자	구분	득표수	비 고
이 승 만 (李承晩)		180	서재필은 외국국적 취득자로 무효 처리됨.
김 구 (金 九)		13	
안 재 홍 (安在鴻)		2	
서 재 필 (徐載弼)		1(무효)	
합 계		1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그리고 부통령 선거에는 [표 7-9]와 같이 19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1차 투표결과 이시영 113표, 김구 65표, 조만식 10표 등으로 2/3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었으며, 최고 득표자인 이시영과 김구에 대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시영(李始榮)이 133표를 획득하여 62표를 획득한 김구를 물리치고 초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7-9) 초대 부통령선거결과(1948.7.20)			
후 보 자	1차 투표 득 표 수	2차 투표 득 표 수	비 고
이 시 영 (李始榮)	113	133	2차투표는 1차 투 표의 최다득표자 인 이시영 과 김 구의 2인을 대상 으로 하였음.
김 구 (金 九)	65	62	
조 만 식 (曹晩植)	10	—	
오 세 창 (吳世昌)	5	—	
장 택 상 (張澤相)	3	—	
서 상 일 (徐相日)	1	—	
이 구 수 (李龜洙)	0	1(무효)	
무 효	0	1(무효)	
합 계	197	19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1951년 5월 9일 사임함에 따라 5월 16일 제2대 부통령 선거가 역시 국회 간선으로 실시되었다. 제2대 국회의 재적의원 210명 중 151명이 출석한 가운데 [표 7-10]과 같이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2/3 이상을 득표한 사람이 없어 결국 3차 결선투표에서 김성수(金性洙)가 이갑성의 73표보다 많은 78표를 획득하여 제2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표 7-10) 제2대 부통령선거 결과(1951년 5월 16일)

후 보 자	1차 투표 득 표 수	2차 투표 득 표 수	3차 투표 득 표 수	비 고
김 성 수 (金性洙)	66	68	78	2차 투표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인 김성수와 이갑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3 이상 득표자가 없어 3차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당선됨.
이 갑 성 (李甲成)	53	65	73	
함 태 영 (咸台永)	17	10(무효)	—	
장 택 상 (張澤相)	11	5(무효)	—	
지 청 천 (池青天)	2	2	—	
김 창 숙 (金昌淑)	1	1	—	
무 효				
합 계	151	151	15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2.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

초대 대통령과 1·2대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나,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부터는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직선제 논의는 1951년 11월 30일 이승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때 대통령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려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서는 재선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⁶³⁾ 당시 국회의 세력 분포는 원내 자유당 93석, 민주국민당 39석, 민우회 25석, 무소속 18석 등으로, 원내 자유당파에 속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가 야당 성향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은 1952년 1월 18일 표결결과 재적의원 163명 중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로 부결되었다.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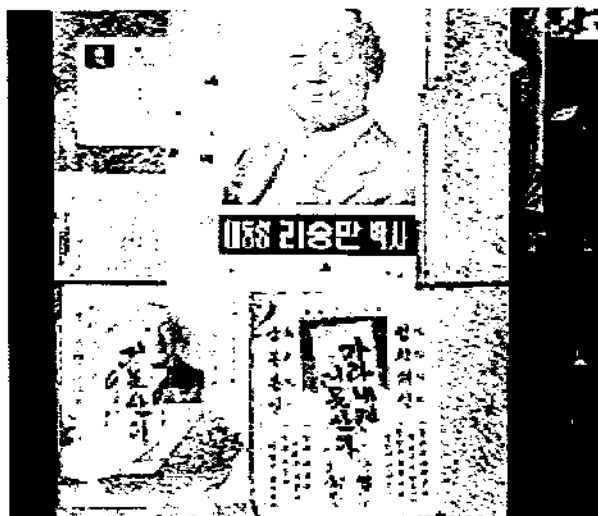
이렇게 국회가 정부 제출의 개헌안을 부결시킴과 아울러 4월 17일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자 정부는 5월 14일 지난번 부결되었던 개헌안을 약간 수정한 대통령 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5월 25일 경남 및 전남·북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80여명이 감금된 상황에서 표결이 실시되었는데, 발췌 개헌안은 7월 4일 재적의원 183명 중 166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통과되었다.



초대 대통령과 1·2대 부통령은 국회에서 간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나, 제2대 대통령과 제3대 부통령부터는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63) 최한수(1996),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64) 김현우, 앞의 책, 269쪽.



〈사진 3-7: 11〉 제2대 대통령 선거 벽보



〈사진 3-7: 12〉 득표상황 게시

따라서 1952년 8월 5일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 및 제3대 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국민 직선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의 이승만, 무소속의 이시영, 조봉암, 신흥우 등 4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88.0%를 나타낸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11]과 같이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유효투표의 74.6%에 해당하는 5,238,769표를 득표하여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 이승만은 657,174표를 얻어 차점자인 조봉암의 44,967표를 훨씬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43,344표를 얻어 차점자인 이시영의 3,127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획득하였다.

제2대 대통령선거 결과(1952. 8.5)					
후보자	자유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유효투표수
지역	이승만 (李承晩)	조 봉 암 (曹奉岩)	이 시 영 (李始榮)	신 흥 우 (申興雨)	
전 국	5,238,769	797,504	764,715	219,696	7,020,684
경기도	657,174	44,967	34,704	12,891	749,736
광주군	43,347	1,934	2,127	800	48,2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1952년 8월 5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제3대 부통령선거에는 자

유당의 이범석, 이갑성, 민주국민당의 조병옥, 조선민주당의 이윤영, 여자국민당의 임영신, 대한노동총연맹의 전진한, 무소속의 함태영, 백성옥, 정기원 등 9명이 입후보하였다. 자유당은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범석을 지명하였으며, 이갑성도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그런데 선거도중 이승만이 무소속의 함태영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투표결과 [표 7-12]



(사진 3-7-13) 3대 부통령 선거 벽보

와 같이 함태영(咸台永)이 유효 투표수의 41.3%에 해당하는 2,943,813표를 득표하여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 함태영은 347,799표를 얻어 자유당 이범석의 252,090표를 앞질렀고, 광주군에서도 함태영은 24,739표로 이범석의 15,205표보다 많이 앞섰다.

표 7-12		제3대 부통령선거 결과(1952. 8. 5)									
후보자	자 유 당		민주 국민당	조선 국민당	여자 국민당	대한 노총	무 소 속			유효 득표수	
지역	이범석 (李範奭)	이갑성 (李甲成)	조병옥 (趙炳玉)	이윤영 (李允榮)	임영신 (任永信)	전진한 (錢鎭漢)	함태영 (咸台永)	백성옥 (白性郁)	정기원 (鄭基元)		
전 국	1,815,692	500,972	575,260	458,583	190,211	302,471	2,943,813	181,388	164,907	7,133,297	
경기도	252,090	35,154	27,776	42,038	13,195	21,076	347,799	10,547	12,593	762,268	
광주군	15,205	1,929	1,271	2,523	875	1,251	24,739	542	619	48,95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3. 제3대 대통령 및 제4대 부통령 선거

자유당은 1954년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1954년 9월 6일 초대 대통령의 종신 연임제와 일부 헌법 조항의 국민투표 회부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국회에서 재적의원 203명중 20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를 뒤인 11월 29



〈사진 3-7-14〉 신익희와 장면의 선거유세

일 자유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의 4사5입(四捨五入)은 135명이라는 근거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헌법 개정안의 통과를 선포하였다. 헌법 개정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중임 제한 조항에 적용되지 않고 종신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당은 3월 5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기봉을 지명하였다. 이승만은 처음에는 불출마

의사를 표명하였다가 출마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게 되자 3월 27일 민의를 수용하여 대통령 출마의 의사를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은 1956년 3월 28일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 부통령 후보에 장면을 지명하였다. 이와 함께 야당의 단일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조봉암을 후보로 내세운 진보당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선거전이 종반전에 접어든 5월 5일 호남지방의 유세에 나선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이승만과 조봉암 간의 대결로 좁혀졌다.

투표율 94.4%를 나타낸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13]과 같이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유효 투표수의 70%에 해당하는 5,046,437표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무소속의 조봉암은 30%에 해당하는 2,163,808표를 획득하여 저력을 과시했다.⁶⁵⁾

경기도에서 이승만은 유효 투표수의 77.1%에 해당하는 607,757표를 득표하여 조봉암의 180,150표(22.9%)를 압도적으로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이승만은 17,789표를 획득하여 조봉암의 6,872표를 훨씬 앞질렀다.

65) 조봉암의 선전(善戰)은 개인적 지지도 상승도 한 요인이겠으나 반이승만표 가운데 신익희를 지지하는 표가 대안으로 조봉암을 선택한 측면도 있다: 최한수, 앞의 책, 226쪽.

〈표 7-13〉

제3대 대통령선거 결과(1956.5.15)

후보자	자 유 당		진 보 당	유효 투표수
	이 승 만(李 承 晩)	조 봉 암(曹 奉 岩)		
전 국	5,046,437	2,163,808		7,210,245
경기도	607,757	180,150		787,907
광주군	17,789	6,872		24,66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1956년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제4대 부통령선거에는 당초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조선민주당의 이윤영, 대한민국민당의 윤치영, 진보당의 박기출, 무소속의 이범석, 백성육, 이종태 등 8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 도중 박기출 후보와 이종태 후보의 사퇴로 선거전은 6파전으로 압축되었다.

투표 결과 [표 7-14]와 같이 민주당의 장면(張勉)이 유효 투표수의 46.4%에 해당하는 4,012,654표를 획득하여 3,805,502표를 얻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제치고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장면 후보는 경기도에서 450,140표를 득표하여 이기붕 후보의 424,104표를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이기붕 후보의 12,993표보다 많은 26,559표를 득표하였다.

표 7-14 제4대 부통령선거결과(1956.5.15)							
후보자	자유당	민주당	조선민주당	대한국민당	무소속		유효
지역	이기붕 (李起鵬)	장면 (張勉)	이윤영 (李允榮)	윤치영 (尹致暎)	이범석 (李範奭)	백성육 (白性郁)	투표수
전 국	3,805,502	4,012,654	34,926	241,278	317,579	230,555	8,642,494
경 기 도	424,104	450,140	6,768	40,720	55,621	25,216	1,002,569
광 주 군	12,993	26,559	253	1,589	1,859	1,220	44,47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 상황(초대~제14대)』.

4.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

제4대 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자유당은 1960년에 있을 정·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개정, 야당 성향의 경향신문 폐간 등을 행하였으며, 특히 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헌법상 별도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정·부통령 선거 조항을 정·부통령 단일티켓제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개헌에 성공하지 못했다.

자유당은 1959년 6월 제9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4선 출마를 지지하고 대통령 후보에 이승만, 부통령 후보에 이기붕을 지명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 등의 문제로 신파와 구파간의 내분이 계속되던 중 중도파 및 신파의 곽상훈, 박순천 최고위원이 당직을 사퇴하고



〈사진 3-7-15〉 제4대
대통령선거 벽보

1960년 2월 미국에서 병환치료 중 서거함에 따라 대통령선거는 단일 입후보의 경우 유효투표의 1/3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는 대통령선거법에 의해 단일 후보인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는 공교롭게도 1956년 선거와 1960년 선거 두 번에 걸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사망하는 불운을 겪었다.



〈사진 3-7-16〉 신병 치료치
도미하는 조병옥과 지지자들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단독 입후보하여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부통령 선거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더욱이 이승만 대통령이 고령으로 임기 중 사망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당은 이기붕 후보를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하였다.

제5대 부통령 선거에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 통일당의 김준연, 여자국민당의 임영신 등 4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 양상은 처음부터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와 민주당의 장면 후보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투표율 97.0%를 나타낸 1960년 3월 15일의 정·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는 [표 7-15]와 같이 단일 후보인 자유당의 이승만(李承晩)이 유효투표수 88.7%에 해당하는 9,633,376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으며, 부통령에는 [표 7-16]과 같이 자유당의 이기붕(李起鵬)이 유효 투표수의 79.0%에 해당하는 8,337,059표를 득표하여 1,843,758표를 획득한 민주당의 장면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구파의 조병옥 대표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 포기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11월 26일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구파의 조병옥이 대통령 후보로, 신파의 장면이 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 밖에 반독재민주수호연맹의 장택상, 민족주의민주사회당의 전진한, 진보당의 김달호 등도 대통령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로 입후보하지는 않았다.

그 후 민주당의 조병옥(趙炳玉) 후보가

경기도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 후보는 유효 투표수의 87.1%에 해당하는 1,139,927표를 획득하였으며, 이기붕 부통령후보는 955,804표를 득표하여 278,686표를 얻은 장면을 크게 앞질렀다. 그리고 광주군에서도 이승만은 유효 투표수의 88.0%에 해당하는 52,555표를 얻었으며, 이기붕도 41,865표를 득표하여 16,741표를 득표한 장면 후보를 훨씬 앞섰다. 그러나 1960년 3·15선거는 자유당이 4할 사전투표, 3인조·9인조 투표조 편성, 선거감찰반 동원 등 갖은 부정선거방법을 동원하였던 관계로 4·19혁명 직후인 4월 26일 소집된 국회에서 무효로 결정되었다.

〈표 7-15〉 제4대 대통령선거 결과(1960. 3. 15)

후보자	자유당	비고
지역	이승만(李承晩)	
전 국	9,633,376	
경 기 도	1,139,927	민주당 조병옥 후보의 서거로 단독 입후보함.
광 주 군	52,55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표 7-16〉 제5대 부통령선거 결과(1960. 3. 15)

후보자	자유당	통일당	여자민주당	민주당	유효투표수
지역	이기붕 (李起鵬)	김준연 (金俊淵)	임영신 (任永信)	장면 (張勉)	
전 국	8,337,059	249,095	97,533	1,843,758	10,527,445
경 기 도	955,804	20,372	8,771	278,686	1,263,633
광 주 군	41,865	249,095	184	16,741	307,88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 상황(초대~제14대)』.

5. 제4대 대통령 간접선거

1960년 3월 15일 실시되었던 정·부통령 선거는 4·19 이후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무효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제4대 대통령 선거는 1960년 7월 29일 총선에 의해 구성된 제5대 국회에서 다시 실시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와 국가원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와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수로서의 상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제4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행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자가 당선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었다.

1960년 7월 29일 총선에 의해 구성된 제5대 국회는 민의원 의장에 박상훈(郭尙勳), 부의장에 이영준(李榮俊), 서민호(徐珉濤)를, 그리고 참의원의장에는 백낙준(白樂濬), 부의장에 소선규(蘇宣奎)를 선출하였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신파와 구파로 갈려 국회에서의 대통령 선출과 국무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대립하였다. 양 계파는 모두 상징적 국가원수에 불과한 대통령보다 실질적 권력 행사자인 국무총리에 자파 인사를 선출하고자 하였다.⁶⁸⁾ 이렇게 민주당의 구파와 신파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박상훈 등 중도파는 당의 분열방지를 위해서 1960년 8월 윤보선, 장면, 박상훈 등의 3자회담을 주선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다.

1960년 8월 12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263명 중 259명이 출석한 가운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선출이 있었다. 먼저 대통령 선거에서는 구파의 윤보선(尹潽善)이 [표 7-17]과 같이 출석의원 259명 중 압도적 다수인 208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신파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 자파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구파의 결정에 동조함으로써 국무총리를 자파의 지도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제4대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1960.8.12)			
후보자	득표수	후보자	득표수
윤 보 선 (尹潽善)	208	김 시 현 (金始顯)	1
김 창 숙 (金昌淑)	29	나 용 균 (羅容均)	1
백 낙 준 (白樂濬)	3	박 순 천 (朴順天)	1
변 영 태 (卞榮泰)	3	유 옥 우 (劉沃祐)	1
김 도 연 (金度演)	2	이 철 승 (李哲承)	1
허 정 (許政)	2	무 효	6
김 병 로 (金炳魯)	1	합 계	259(263)

* () 안은 재적의원수임.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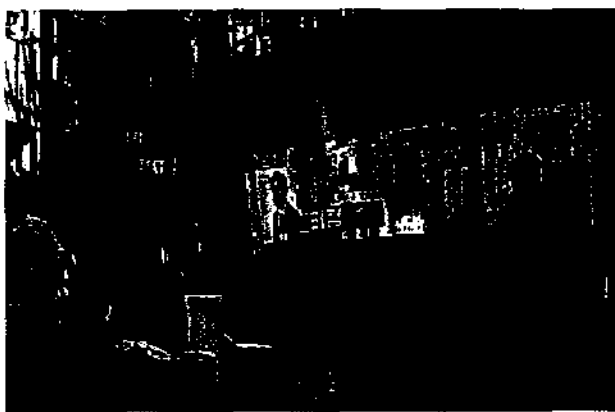
68) 신파는 대통령에 구파의 윤보선, 국무총리에는 신파의 장면을 당선시키고자 한 반면, 구파는 대통령에 구파의 윤보선, 국무총리에 구파의 김도연이든지 또는 대통령에 신파의 장면, 국무총리에 구파의 김도연을 당선시키고자 하였다.

다음날인 8월 13일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윤보선은 헌법 규정에 따라 당적을 탈당하는 등 초당적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밝혔으나 8월 17일 국무총리 후보지명에서는 구파의 김도연(金度演)을 지명하였다. 그러나 김도연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이 신파 등의 반대로 민의원 재적의원 228명 중 2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1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됨에 따라, 윤보선 대통령은 8월 19일 제 2차로 신파의 장면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게 되었다. 장면(張勉)은 민의원 의원 22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7표, 반대 107표, 무효 1표로 국무총리 인준을 받음으로써 내각책임제하의 국무총리로 선출되었다.

장면 내각은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한지 3일 후인 5월 18일 계엄령을 추인하고, 내각 총사퇴와 군사혁명위원회에 정권이양을 결의하는 마지막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1960년 8월 23일 출범한지 8개월 만에 붕괴되었다.

6. 제5대 대통령 선거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효력이 정지되었던 헌법은 1962년 11월 5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발의되고 12월 17일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78.8% 찬성으로 확정되었으며, 12월 26일 정식으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1월 16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국회의원 선거법이, 2월 1일에는 대통령 선거법이 제정되었다. 새로운 대통령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후보등록에서 정당의 추천을 요건으로 하고, ② 당선자는 비교다수로 하되 최고 득표자가 2인일 때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③ 대통령 후보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⁶⁷⁾



〈사진 3-7:17〉제5대 대통령 선거 벽보

67) 위의 책, 232쪽.

1963년 중 민정 이양이 결정됨에 따라 각 정치 세력은 대통령 선거에 대

비하여 정당을 창당하고 선거 전략을 구상하였다. 민주공화당은 2월 2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5월 27일 전당대회에서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으며, 야당인 민정당은 5월 14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윤보선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한편 민주당은 7월 18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야권단일후보를 주장하여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자유민주당은 9월 3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송요찬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당은 9월 14일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허정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실시된 제5대 대통령 선거에는 당초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의 당의 허정, 자유민주당의 송요찬, 추풍회의 오재영, 정민회의 변영태, 신흥당의 장이석 등 7인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도중 송요찬과 허정이 윤보선 지지를 선언하면서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입후보자는 5인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선거전은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간의 경쟁으로 압축되었다.

투표율 85.0%를 나타낸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18]과 같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는 유효 투표수의 46.6%인 4,702,640표를 획득하여, 민정당의 윤보선이 얻은 4,546,614표(45.1%)보다 약 15만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보선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등에서, 박정희는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에서 강세를 보여 '표의 남북현상'을 나타냈다.⁶⁸⁾

경기도와 광주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윤보선이 661,984표를 득표하여 384,764표를 득표한 박정희를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윤보선은 19,884표를 득표하여 12,078표를 득표한 박정희를 앞질렀다.



윤보선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북 등에서, 박정희는 전남·북, 경남·북, 제주 등에서 강세를 보여 '표의 남북현상'을 나타냈다. 경기도와 광주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보다 더 많은 표를 획득하였다.

68) 안해균(1986),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75쪽; 최한수, 앞의 책, 235쪽.

제5대 대통령선거 결과(1963.10.15)						
후보자 지역	민주공화당 박 정 희 (朴正熙)	추풍회 오 재 영 (吳在泳)	민정당 윤 보 선 (尹潽善)	정민회 변 영 태 (卞榮泰)	신흥당 장 이 석 (張履奭)	유효투표수
전 국	4,702,640	408,664	4,546,614	224,443	198,837	10,081,198
경 기 도	384,764	54,770	661,984	34,775	27,554	1,163,847
광 주 군	12,078	2,140	19,884	1,187	1,277	36,55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7. 제6대 대통령 선거

제3공화국에서 강력한 정부·여당에 대응하여 야권통합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던 중 민주당과 신한당은 1967년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2월 11일 합당을 선언하고 신민당으로 출범하였다. 통합신당인 신민당은 대통령 후보에 윤보선, 대표위원에 유진오를 선출하였다.

여당인 민주공화당도 비슷한 시기인 2월 2일 제4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정희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고 제집권의 총선 태세에 돌입하였다. 한편 제6대 국회의 개원 초부터 논의되어 온 대통령 선거법이 1963년 12월 3일 개정되었는데, 개정 선거법은 국외체류 부재자에 대한 우편 투표제도의 신설,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의 단축 등 사소한 문제를 제외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1967년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윤보선, 대중당의 서민호, 한국독립당의 전진한, 민주당의 김준연, 통한당의 오재영, 정의당의 이세진 등 7명이 입후보하였다. 대통령선거전은 선거도중 서민호가 사퇴하여 6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실제로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간의 두 번째 대결로 압축되었다.

투표율 83.6%를 나타낸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19]와 같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1.4%에 해당하는 5,688,666표를 획득하여 4,526,541표(40.9%)를 획득한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를 1,162,125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보선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박정희는 영남지역에서 압승을 보임으로써 ‘표의 동서현상’이 나타났다.⁶⁹⁾

이러한 현상으로 경기도와 광주군에서는 윤보선이 박정희보다 더 많은 득표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윤보선 후보는 674,964표를 획득하여 525,676표를 득표한 박정희 후보를 앞섰으며, 광주군에서도 윤보선 후보는 22,330표를 득표하여 14,283표를 득표한 박정희를 앞질렀다.



〈사진 3-7: 18〉 60년 대 공명 선거 포스터

69) 김현우(2000), 『한국정당당 합운동사』, 윤유분화사, 474~475쪽.

《표 7-19》 제7대 대통령선거(1969.5.3)		표 7-19					
후보자	정의당	한국독립당	신민당	민중당	민주공화당	통합당	유효득표수
지역	이세진 (李世鎭)	전진환 (錢鎭漢)	윤보선 (尹潽善)	김준연 (金俊淵)	박정희 (朴正熙)	오재영 (吳在泳)	
전 국	98,433	232,179	4,526,541	248,369	5,688,666	264,533	11,058,721
경 기 도	11,209	25,306	674,964	23,248	525,676	22,383	1,282,606
광 주 군	542	1,100	22,330	1,031	14,283	1,051	40,33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8. 제7대 대통령 선거



정부·여당에 의해 제안된 3선개헌안이 1969년 9월14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1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3번째 집권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정부·여당에 의해 제안된 3선개헌안이 1969년 9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17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3번째 집권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당시 헌법 제69조 3항은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라고 개정된 것이다.⁷⁰⁾

3선개헌 후 여당인 민주공화당은 1971년 3월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등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통합야당인 신민당은 1970년 1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유진산을 당수로 선출하고 3선개헌에 항의하여 6개월간 국회 등원을 거부했던 투쟁 방식에 종지부를 찍고 국회 등원을 결정하였으며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이 ‘40대기수론’을 제창한 가운데 9월 29일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2차례에 걸친 투표를 거쳐 김대중(金大中)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편 국민당은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재야인사와 신민당의 일부 중진들을 흡수하여 1971년 1월 6일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윤보선을 총재로 선출하였으며, 3월 전당대회에서 박기출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였다.

1971년 4월 27일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김대중, 국민당의 박기출, 통일사회당의 김철, 정의당의 진복기,

70) 위의 책, 488-489쪽.

자민당의 이종윤, 민중당의 성보경 등 총 7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도중 김철과 성보경이 입후보를 사퇴하여 결국 5명만이 선거를 치렀다.⁷¹⁾ 그러나 실제상 대통령 선거전은 세 번째 집권을 노리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와 신민당의 40대 기수 김대중 간의 치열한 접전이었다.

투표율 79.8%를 나타낸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20]과 같이 민주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53.2%에 해당하는 6,342,828표를 득표하여 5,395,900표(45.3%)를 획득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946,928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지역별로는 박정희 후보가 부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에서 압승하고 충남에서 우세를 보인 반면, 김대중 후보는 서울에서 압승하고 경기, 전북, 전남에서 우세하였다.

경기도에서 김대중 후보는 696,582표를 득표하여 박정희 후보의 687,985표를 근소한 차로 앞질렀으며, 광주군에서도 김대중 후보는 33,251표를 획득하여 30,478표를 획득한 박정희 후보보다 약간 우세하였다. 성남지역 역시 김대중 후보는 17,973표를 획득하여 15,318표를 획득한 박정희 후보를 약간 앞지르는 현상을 보였다.

71) 대중당은 1971년 3월4일 서민호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였으나 서민호는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를 6일 앞둔 1971년 4월21일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위의 책, 488쪽.

표 7-20 제7대 대통령선거결과(1971.4.27)						
후보자 지역	민주공화당 박정희 (朴正熙)	신민당 김대중 (金大中)	국민당 박기출 (朴己出)	자민당 이종윤 (李鍾潤)	정의당 진복기 (陳福其)	유효득표수
전 국	6,342,828	5,395,900	43,753	17,823	122,914	11,923,218
경 기 도	687,985	696,582	6,547	2,995	13,770	1,407,879
광 주 군	30,478	33,251	380	211	779	65,099
성 남 지역	15,318	17,973	182	87	294	33,85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대통령선거상황(초대~제14대)」.

9.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0월 발표된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해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지되는 등 헌법의 일부 효력이 정지되었다. 이어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대통령의 3권 통제, 임기 6년의 간접 선거, 중임제한 철폐,



〈사진 3-7: 19〉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설치, 국회의원 1/3의 대통령 지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신헌법안을 의결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를 추천하려는 대의원은 200명 이상의 추천장과 후보자 승낙

서를 첨부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민회의 집회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했다.

유신헌법에 따른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거방식은 1972년 12월 23일의 제8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1978년 7월 6일의 제9대 대통령 선거, 1979년 12월 6일의 제10대 대통령 선거, 1980년 8월 27일의 제11대 대통령 선거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적용되었다.

제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는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으며, 대통령후보 등록마감일인 12월 22일 박상훈 등 515명의 대의원은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국회사무처에 등록 신청하였다. 박정희(朴正熙) 후보는 단일 후보로서 [표 7-21]과 같이 12월 23일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2,359명의 대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357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7-21〉 제8대 대통령선거 결과(1972. 12. 23)					
대의원 정수	재적 대의원	투표수	후보자 득표 박정희	무효	비고
2,359	2,359	2,359	2,357	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3), 『대한민국선거사』(제2집).

10. 제9대 대통령 선거

민주공화당은 1978년의 제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신체제의 지속

을 당의 기본정책으로 정하고 선거에 임하였다. 한편 신민당에서는 1978년 초부터 대통령 선거에 당의 후보자를 낸 것인가를 두고 명분론과 현실론이 대립하였다. 명분론을 주장하는 측은 정당의 복표가 정권장악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현실론을 주장하는 측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다고 해도 선거에 이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결국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의 “승산이 희박한 대통령 선거보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의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신민당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⁷²⁾

72) 위의 책, 534-535쪽.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5월18일 실시되었으며, 곽상훈 등 507명의 대의원들은 대통령 후보 등록마감일인 7월5일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국회사무처에 등록 신청하였다.

제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단독 후보인 박정희(朴正熙) 후보는 [표 7-22]와 같이 1978년 7월 6일 첫 집회를 가진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대의원 2,581명 중 2,578명이 참석한 가운데 2,577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9대 대통령선거결과(1978.7.6)						
대의원 정수	사퇴·사망	재적 대의원	투표수	후보자 득표 박정희	무효	기권
2,583	2	2,581	2,578	2,577	1	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0), 『역대대통령선거상황』.

11. 제10대 대통령 선거

‘10·26 사건’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제10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집회일을 1979년 12월 6일로 공고하였다.

이에 앞서 민주공화당은 1979년 11월당무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희 총재의 사망으로 공석중인 당 총재에 김종필을 선출하고, 곧이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보궐선거에 김종필 총재를 입후보 시킬 것을 의결하였으나, 김 총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는 대통령 보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월 5일까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827명의 추천을 받은 최규하 후보만이 단일 입후보하였으며, 최규하(崔圭夏) 후보는 [표 7-23]과 같이 12월 6일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2,560명 중 2,549명이 참석한 가운데 2,456표를 득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7-23		제10대 대통령선거 결과(1972. 12. 6)				
대의원 정수	사퇴·사망	재적 대의원	투표수	후보자 득표 최규하	무효	기권
2,583	23	2,560	2,549	2,465	84	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0), 『역대대통령선거상황』.

12. 제11대 대통령 선거



과도적 권력기구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입법·행정·사법 등 3부를 장악하게 되자, 최규하 대통령은 8월 16일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기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의 취임 후 노동자 시위, 학생 시위 등으로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12.12 사태 후 급부상한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과도적 권력기구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입법·행정·사법 등 3부를 장악하게 되자, 최규하 대통령은 8월 16일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기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박충훈(朴忠勳) 국무총리서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8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의 전두환(全斗煥) 상임위원장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다. 전두환 후보는 [표 7-24]와 같이 8월 27일 개최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재적 대의원 2,540명 중 2,5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524표를 득표하여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표 7-24		제11대 대통령선거 결과(1980. 8. 27)				
대의원 정수	사퇴·사망	재적 대의원	투표수	후보자 득표 전두환	무효	기권
2,583	43	2,540	2,525	2,524	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0), 『역대대통령선거상황』.

13. 제12대 대통령 선거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 하에서 진행해 온 헌법개정안을 1980년 10월 10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 22일 국민투표에 붙여 찬성을 얻음으로써 제5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의 내용 중 대통령의 권한에서 긴급조치권과 국회의원 1/3 추천권 및 법관임명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간선제 및 7년 단임의 임기제를 채택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5,000명 이상의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되며, 대통령에 입후보하는 자는 정당 또는 일정수의 대통령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의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도록 하였다. 또한 1981년 1월 23일 개정된 대통령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선거인 후보자 등록 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인수 '200인 이상 300인 이하'를 '100인 이상 150인 이하'로, 인구 5,000명 미만 선거구에서의 '100인 이상 150인 이하'를 '50인 이상 70인 이하'로 하향 조정하였다.⁷³⁾

이는 대통령 선거인 후보자 등록시 요구되는 선거권자의 추천인수를 완화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인 후보자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는 1981년 2월 11일 실시되었으며, 제12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민한당의 유치송, 국민당의 김종철, 민권당의 김의백 등 4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가 실시되었다.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대통령 선거인 총 5,278명 중 5,271명이 투표한 결과 [표 7-25]와 같이 민주정의당의 전두환(全斗煥) 후보가 90.2%에 해당하는 4,755명의 지지를 얻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전두환 후보는 투표자수 670표 중 620표를 획득하였으며, 성남시가 포함된 경기 제 4선거구(성남·여주·광주·이천)에서는 투표자수 101명 중 97표를 얻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의 내용 중 대통령의 권한에서 긴급조치권과 국회의원 1/3 추천권 및 법관임명권을 삭제하고, 대통령의 간선제 및 7년 단임의 임기제를 채택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73) 국회사무처(1995), 『국가보위입법회와사료』, 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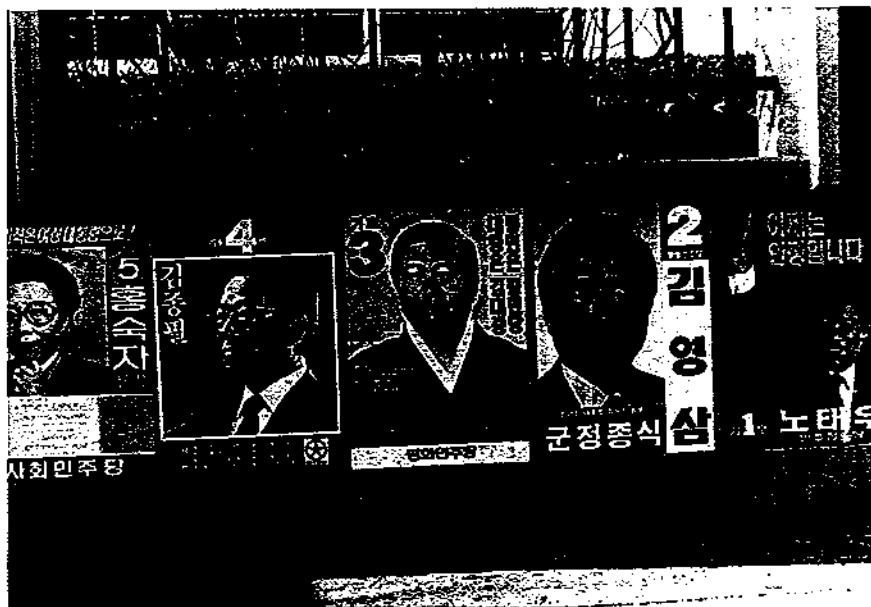
[47-25]

제12대 대통령선거결과(1981. 2. 25)

후보자 지역	민주정의당 전두환 (全斗煥)	민주한국당 유치송 (柳致松)	한국국민당 김종철 (金鍾喆)	민권당 김의택 (金義澤)	유효투표수
전국	4,755	404	85	26	5,720
경기도	620	43	4	3	670
성남시*	97	3	0	1	101

*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여주·광주·이천)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5), 『제12대 대통령선거총람』.

14. 제13대 대통령 선거

〈사진 3-7-20〉 제13대 대통령
선거 벽보

정권교체와 개헌 문제가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6.10 민주항쟁과 이에 따른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7년에 들어 정권교체와 개헌 문제가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6.10 민주항쟁과 이에 따른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7월 1일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6.29선언의 8개항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 개헌을 이루면 임기 중에 새 헌법에 따라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1988년 2월 15일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정치 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바로 직선제 개헌작업에 착수하여 10월 12일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정의당은 이미 6월 10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총재를 중심으로 선거전략을 착실히 전개한 반면, 야권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등 3인의 주요 야당 지도자들이 각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분열 양상을 보였다. 특히 김대중이 8월 8일 통일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김영삼과의 후보 단일화를 약속한 것과 달리 평화민주당을 만들어 대통령 후보로 나섬으로써 재야측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김영삼·김대중간 대통령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⁷⁴⁾

74) 김현우, 앞의 책, 616-617쪽.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사회민주당의 홍숙자, 일체민주당의 김선적, 한국의통일한국당의 신정일, 무소속의 백기완 등 8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홍숙자, 김선적, 백기완 등이 후보를 사퇴하여 대통령 후보자는 모두 5명으로 압축되었다. 이 선거는 1972년 유신체제 이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되었다는 데의의가 있었으며, 선거기간 동안 30여 년에 걸친 군정 종식과 민주화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간의 단일화 문제가 선거 마지막까지 관심을 끌었다.

투표율 89.2%를 나타낸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5-26]과 같이 민주정의당의 노태우(盧泰燾)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6.6%인 8,282,738표를 획득하여 김영삼 후보의 6,337,581표(28.9%), 김대중 후보의 6,113,375표(27.0%), 김종필 후보의 1,823,067표(8.1%)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1.5%인 1,204,235표를 획득하여 차점자인 김영삼의 800,274표(27.5%)를 앞섰으며, 성남시의 경우는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4.8%에 해당하는 91,230표로 노태우 후보의 88,476표(33.7%)를 앞질렀다.

〈제7-26〉

제13대 대통령선거결과(1987. 12.16)

후보자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한국의 통일한국당	
지역	노태우 (盧泰愚)	김영삼 (金泳三)	김대중 (金大中)	김종필 (金鍾泌)	신정일 (申正一)	유효투표수
전 국	8,282,738	6,337,581	6,113,375	1,823,067	46,650	22,603,411
경 기 도	1,204,235	800,274	647,934	247,259	5,621	2,905,323
성 남 시	88,476	60,433	91,230	21,957	355	262,45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 「제13대 대통령선거총람」.

15. 제14대 대통령 선거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여권과 야권이 각기 통합된 정치권의 재편 상황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졌다.

75) 김영삼은 김대중 후보에 맞선 사람은 김영삼 밖에 없다는 김영삼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민주자유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것이다. 위의 책, 703쪽.

제14대 대통령 선거는 여권과 야권이 각기 통합된 정치권의 재편 상황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커다란 관심이 모아졌다. 먼저 1990년 3당통합으로 탄생된 민주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문제를 둘러싸고 각 계파간의 알력이 표출된 가운데, 1992년 5월 19일 여당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실시하였다. 이날 김영삼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이종찬의 경선거부로 단독 출마한 경선에서 총 투표수 6,660표 중 66.3%인 4,418표를 얻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⁷⁵⁾ 또한 1991년 평화민주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창당된 민주당은 5월 26일 개최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김대중은 1971년과 1987년에 이어 대통령 선거에 3번째 도전하게 되었다.

한편 1992년 1월창당하여 3.24총선에서 21석을 획득함으로써 급부상



〈사진 3-7-21〉 제14대 대통령 선거 벽보

한 통일국민당은 5월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정주영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1992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4대 대통령 선거에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신정당의 박찬종, 정의당의 이병호, 무소속의 백기완, 김옥선 등 7명의 후보들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81.9%를 나타낸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27]과 같이 민주자유당의 김영삼(金泳三)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42.0%인 9,977,332표를 획득하여 8,041,284표(33.8%)를 획득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190만표 차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는 16.3%인 3,880,067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경기도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유효 투표수의 36.3%인 1,254,025표를 득표하여 김대중 후보 32.0%, 정주영 후보 23.1%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성남시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1.2%인 140,288표를 획득하여 김영삼 후보의 108,891표(32.0%), 정주영 후보의 61,526표(18.1%)를 앞섰다. 그러나 분당구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18,505표를 득표하여 13,235표를 얻은 김대중 후보를 앞질렀다.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1992. 12.18)								
후보자 지역	민주자유당 김영삼 (金泳三)	신민당 김대중 (金大中)	통일국민당 정주영 (鄭周永)	신정당 박찬종 (朴燦鍾)	정의당 이병호 (李丙昊)	무소속 김옥선 (金玉仙)	무소속 백기완 (白基玩)	유효투표수
전 국	9,977,332	8,041,284	3,880,067	1,516,047	35,739	86,292	238,648	23,775,409
경기도	1,254,025	1,103,498	798,356	239,140	6,299	13,685	36,392	3,451,395
성남시 (합계)	108,891	140,288	61,526	20,953	363	1,112	3,132	336,265
성남시 수정구	45,415	64,714	25,866	9,230	168	533	1,394	147,320
성남시 중원구	44,971	62,339	26,657	8,550	161	485	1,336	144,499
성남시 분당구	18,505	13,235	9,003	3,173	34	94	402	44,44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 「제14대 대통령선거총람」.

16. 제15대 대통령 선거



〈사진 3-7:22〉 제15대 대통령 선거 벽보

김영삼 정권의 출범 후 민주자유당에서 당명을 바꾼 신한국당은 1997년 7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경선을 통해 이회창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하였다. 집권당 최초로 이루어진 자유 경선에서는 이회창, 이인제, 박찬중, 김덕룡, 이한동, 이수성 등 6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이회창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다시 행한 2차 투표에서 총 투표수 11,544표 중 60.0%인 6,922표를 얻어 4,622표(40.0%)를 얻은 이인제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경선에 나섰던 이인제가 11월 4일 여론지지율을 이유로 국민신당을 결성하여 대통령 후보로 출마함으로써 신한국당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시련을 안게 되었다.

신한국당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당세의 확장을 꾀하던 중 김대중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함으로써 분당사태를 겪게 된 민주당⁷⁶⁾과 합당하여 1997년 11월 21일 통합신당인 한나라당을 출범시키고 총재에 조순, 대통령 후보에 이회창을 선출하였다.

한편 정계복귀와 더불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대통령후보로 나선 김대중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과 'DJP연대'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전에 대비하였다.

1997년 12월 18일 실시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국민신당의 이인제, 국민승리21의 권영길, 통일

76) 민주당은 3당합당 당시 (1990. 2. 9) 합당을 거부하였던 이기택 등 통일민주당 잔류파에 의해 결성된 민주당이 모태이다. 그 후 평화민주당과 결합하여 민주당이라는 야권 통합신당을 결성하였다가 김대중이 제14대 대선에서 낙선한 후 이기택 총재체제로 유지되었으며, 김대중의 정계복귀 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함으로써 다시 분당된 것이다.

한국당의 신정일, 바른나라정치연합의 김한식, 공화당의 허경영 등 7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였는데, 실질상으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와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간의 대결이었다. 투표율 80.7%를 나타낸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28]과 같이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金大中)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0.3%인 10,326,275표를 획득하여 9,935,718표(38.7%)를 득표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약 39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도 김대중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39.3%인 1,781,577표를 득표하여 1,612,108표(35.5%)를 획득한 이회창 후보를 앞섰다. 성남시의 경우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각각 49.4%인 70,909표, 49.2%인 73,650표를 얻어 93,818표(27.7%), 40,779표(27.2%)를 획득한 이회창 후보를 크게 앞지른 반면, 신시가지인 분당구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51.1%인 109,195표를 득표하여 김대중 후보의 75,438표(35.3%)를 훨씬 앞섰다.

표 7-28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1997. 12.18)						
지역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신당	건설국민승리21	공화당	바른나라정치연합	통일한국당	유효투표수
후보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허경영	김한식	신정일	
전국	9,935,718	10,326,275	4,925,591	306,026	39,055	48,717	61,056	25,642,438
경기도	1,612,108	1,781,577	1,071,704	47,608	7,077	8,035	7,415	4,535,524
성남시(합계)	189,792	219,997	90,806	4,677	541	907	429	507,149
성남시 수정구	39,818	70,909	30,914	1,362	188	265	151	143,607
성남시 중원구	40,779	73,650	33,343	1,299	182	254	154	149,661
성남시 분당구	109,195	75,438	26,549	2,016	171	388	124	213,88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총람』.

17. 제16대 대통령 선거



〈사진 3-7 : 23〉 제16대 대통령
선거 벽보



여·야 주요정당들이 대통령 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競選)'에서 일반국민까지 참여시키는 소위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다는 점이다.

2002년 말경에 실시될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환경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주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하나는 여·야 주요정당들이 대통령후보 확정을 위한 '당내 경선(競選)'에서 일반국민까지 참여시키는 소위 국민참여 선거인단을 통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였다는 점이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참여 경선과정에서 주요정당들은 2002년 연초부터 대선후보 경선에 일반국민을 선

거인단으로 모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구성된 국민참여 선거인단 7만명을 대상으로 2002년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김종권, 한화갑, 노무현, 이인제, 정동영, 김근태, 유종근 등 7명의 후보자들이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역별 경선을 벌였는데, 극적인 반전과정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노무현(盧武鉉)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한나라당도 국민참여 선거인단 5만명을 대상으로 2002년 4월 13일부터 5월 9일까지 이회창, 최병렬, 이부영, 이상희 등 4명의 후보자들이 전국 11개 권역을 순회하며 지역별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였는데, 이회창(李會昌)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또 하나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미디어 선거와 인터넷 선거가 급속히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5대 대통령선거시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방송광고나 TV합동토론 등 미디어선거운동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정도로 활성화되었으며, 신문 및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언론기관 초청 대담 및 토론회 등 선거법에서 정한 모든 유형의 미

디어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활용, 인터넷방송·신문, 인터넷 동영상,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 발송, 전자메일 송부 등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의한 다양한 선거운동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선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선정국은 연초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가 점쳐졌으며 국민경선과정을 거치면서 한 때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월드컵축구 4강 진출로 무소속의 정몽준 후보가 급작스레 부각됨으로써 이회창, 정몽준의 우세 속에 노무현 열세의 판도가 대선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바로 앞두고 노무현-정몽준 연합과 이를 통한 노무현으로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회창-노무현의 예측불허의 대결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선거일을 맞게 되었다.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하나로국민연합의 이한동,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사회당의 김영규, 호국당의 김길수 등 6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였는데, 투표 직전까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간의 팽팽한 접전이 이루어졌다. 투표율 70.8%를 나타낸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결과 <표 5-29>와 같이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유효투표수의 48.9%인 12,014,277표를 득표하여 11,443,297표(46.6%)를 득표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570,980표 앞질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노무현이 유효 투표수의 50.7%인 2,430,193표를 득표하여 2,120,191표(44.2%)를 득표한 이회창을 앞섰으며, 성남시에서도 노무현은 유효 투표수 474,045표 중 245,690표를 득표하여 210,039표를 득표한 이회창을 앞질렀다.

성남시의 경우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각각 77,373표(60.5%), 79,181표(60.5%)로 이회창 후보를 앞선 반면, 분당구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119,039(55.3%)를 득표하여 노무현 후보를 앞질렀다.

제16대 대·지방선거 결과(2002. 12. 9)							
지역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盧武鉉)	하나로국민연합 이한동 (李漢東)	민주노동당 권영길 (權永吉)	사회당 김영규 (金英圭)	호국당 김길수 (金吉洙)	유효투표수
전국	11,443,297	12,014,277	74,027	957,148	22,063	51,104	24,561,916
경기도	2,120,191	2,430,193	26,072	209,346	4,119	8,085	4,798,006
성남시 (합계)	210,039	245,690	1,166	16,202	311	637	474,045
성남시 수정구	45,122	77,373	325	4,652	102	219	127,783
성남시 중원구	45,888	79,181	365	5,060	233	94	130,821
성남시 분당구	119,039	89,136	476	6,490	115	185	215,44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 『제16대 대통령선거 총람』.

18. 역대 대통령(제1대~16대) 및 부통령(제1대~4대) 현황

1) 대통령 현황

제1대~3대 대통령 이승만



제4대 대통령 윤보선



제5대~9대 대통령 박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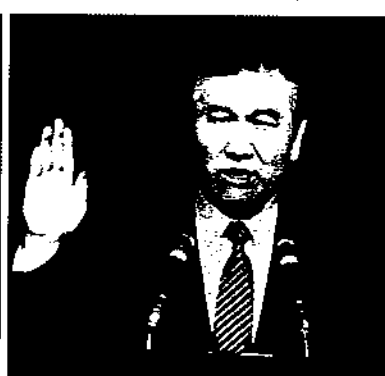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제11대~12대 대통령 전두환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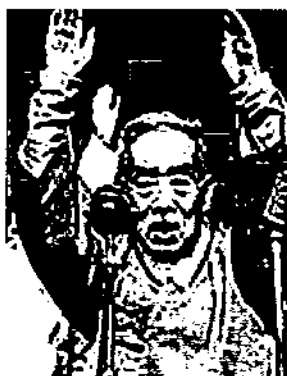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2) 부통령 현황

제1대 부통령 이시영



제2대 부통령 김성수



제3대 부통령 함태영



제4대 부통령 장면



제2절 국회의원 선거

1. 제헌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24〉 제헌국회의원 선거 투표장면

미 군정당국은 한국의 법령은 한국인이 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완전한 민정(民政)을 이루기 위하여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 118호로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창설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그 해 10월에 민선의원 45인, 11월에는 관선의원 45인이 선정되어 모두 90인으로 입법의원(立法議院)을 구성하고 12월 12일 개원식을 거행

하였다. 입법의원은 의장에 김규식(金奎植), 부의장에 최동오(崔東旽)·윤기섭(尹琦燮)을 선출하고 각종 법안을 심의·제정하였다.

그러나 'UN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 하에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총선거 실시'라는 UN에서의 한국 문제 결의와 관련하여 입법의원 내에는 찬성의 민선의원측과 반대의 관선의원측 간에 격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결국 UN총회 결의에 따른 선거 가능한 지역의 총선 문제가 의제로 상정되면서 김규식 등 28명의 반대측 의원들이 사퇴한 가운데 총선 결의안이 1948년 2월 23일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UN한국위원단에 송부되어 제헌의원 선거를 뒷받침하였다.

5.10 총선의 준비와 집행을 맡은 미 군정당국은 1948년 3월 17일 종전의 입법의원 선거법(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5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후 군정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 선거법을 공포하였다. 전문 57조로 구성된 이 선거법은 ① 자유·평등·비밀·보통 선거를 원칙으로 임기 2년, 정원 200명을 규정하였으며, ② 선거권은 한국국적 소지자로서 만 21세, 피선거권은 만 25세에 달한 자에게 부여하였고, ③ 각 선거구마다 1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⁷⁷⁾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전국의 총 200개의 선거구 중에서 치안 관계로 선거시행이 보류된 북제주의 갑·을구를 제외한 198개의 선거구에서 실시되었다.⁷⁸⁾ 5.10선거에는 의원정수 200명에 대하여 입후보자수는 948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4.7대 1이었으며, 좌익계와 남북협상파가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⁷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235명을 위시하여 48개 정당·사회단체가 선거에 참여하였다. 무소속 입후보자들은 총 입후보자의 44%에 해당하는 417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총 29개 선거구에 160명이 입후보하여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광주군의 경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속의 신익희(申翼熙)가 단독 입후보하였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95.5%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으며, 투표결과 [표 7-30]과 같이 무소속이 의원정수의 45.2%에 해당하는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승만 노선을 지지해 오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이 각각 55석, 29석으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기타 군소정당 1~2석 등으로, 이렇게 군소정당이 난립한 것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상황과 의회정치의 미숙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총 29개 의석 중 무소속이 16석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독립촉성국민회 7석, 한국민주당 2석, 대동청년단 3석, 한국독립당 1석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대한독립촉성회의의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무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선거 후 한국민주당은 무소속 및 다른 정파의원들을 영입하여 80석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는데, 당시는 정당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소속정당에 대한 충성심이나 귀속의식이 배양되기 전의 시기였기에 선거 후 쉽게 소속정당을 변경하는 의원들이 많았다.⁸⁰⁾

77) 김현우(2000), 『한국정당문화운동사』, 을유문화사, 236쪽.

78) 제주도에서는 선거방해를 위한 좌익세력의 소위 '4·3폭동'으로 2개 선거구가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가 1년 후인 1949년 5월10일에 실시되었다.

79) UN의 주관하에 미 군정당국이 제정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적용된 이 선거에는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는 김구, 김규식 등 중간노선의 정치세력과 좌익계열이 불참하였으며, 좌익계열은 선거를 전후하여 극심한 선거 방해 및 파괴공작을 자행하였다: 김현우(2001),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504쪽.



군소정당이 난립한 것은 당시의 혼란한 정치상황과 의회정치의 미숙함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0)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eds, 1984), *Controversies in Voting and Behavior*, Washington, D.C.: CQ Press, pp.106-131; 김현우, 앞의 책에서 재인용.

〈표 7-30〉 제헌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득표율(%)

구분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득표율(%)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무 소 속	85	16	40.3	49.6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	7	26.1	23.0
한 국 민 주 당	29	2	13.5	8.8
대 등 청 년 단	12	3	9.6	11.3
조선민족청년단	6	0	2.2	1.1
대한노동총연맹	1	0	1.6	2.3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2	0	0.8	0.7
기타 단체 ⁸⁾	10	1	5.9	3.2
합 계	200	29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 국회의원 선거상황(제1대~11대)」.

8) 기타 단체 당선자 10명은 조선민주당, 대한청년당, 한국독립당, 교육협회, 단민회, 대성회, 유노회, 민족통일본부, 조선공화당, 부산15구락부 등에서 각각 1명씩이다.

〈표 7-31〉 제헌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48.5.10)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대한독립 촉성국민회	신익희 (申翼熙)	57	입법의원 의장 자유신문사 사장	무투표

2.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제헌 국회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 군정법령이었던 구 국회의원 선거법을 폐지하고 1950년 4월12일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다.



〈사진 3-7-26〉 투표용지 발송 작업 모습

제헌 국회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 군정법령이었던 구 국회의원 선거법을 폐지하고 1950년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다. 새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미 군정하의 국회의원 선거법과 비슷하였으며, 선거구가 200개에서 210개로 늘어나고 피선거권의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미 군정하의 국회의원 선거법과 비슷하였으며, 선거구가 200개에서 210개로 늘어나고 피선거권의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미 군정하의 국회의원 선거법과 비슷하였으며, 선거구가 200개에서 210개로 늘어나고 피선거권의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미 군정하의 국회의원 선거법과 비슷하였으며, 선거구가 200개에서 210개로 늘어나고 피선거권의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제헌 국회의원 선거는 기본적으로 미 군정하의 국회의원 선거법과 비슷하였으며, 선거구가 200개에서 210개로 늘어나고 피선거권의 일부 조항이 변경된 것만이 다를 뿐이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자는 의원정수 210개 의석에 대하여

2,209명으로 평균경쟁률이 10.5대 1에 달하였다. 여당인 대한국민당 165명, 야당인 민주국민당 154명 등 39개 정당·사회단체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무소속이 총 입후보자수의 68.5%에 해당하는 1,513명에 이르렀다. 무소속 입후보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불참하였던 남북협상파와 일부 중간파가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제헌국회의 29개 의석보다 1석이 늘어난 30개 의석에 대하여 314명이 입후보하여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민주당의 신익희를 비롯하여 무소속 5명, 국민회 1명, 유도회(備道會) 1명 등 8명이 입후보하였다.

선거에서 각 정당이 내세운 정책 중에는 유명무실한 것이 많았는데, 보수적 성격을 띤 민주국민당이 내세운 당의 정책 중 중요한 기본산업의 국유화 또는 통제관리, 그리고 근로대중 본위의 사회입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주목을 끌었다.⁸²⁾

투표율 91.9%를 나타낸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32]와 같이 무소속이 의원 정수 210명의 60%에 해당하는 126명으로 가장 많이 당선되었으며,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이 각각 24석을 차지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30개 의석 가운데 무소속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국민당 6명, 민주국민당 3명의 순으로 당선되었다.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민주당의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29,525표를 득표하여 압도적 다수로 제헌 국회의원에 이어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득표율(%)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무소속	126	19	62.9	64.8
대한국민당	24	6	9.7	13.3
민주국민당	24	3	9.8	9.3
국민회	14	0	6.8	4.7
대한청년단	10	0	3.3	2.8
대한노동총연맹	3	0	1.7	1.2
사회당	2	1	1.3	1.2
일민구락부	3	1	1.0	1.8
한국독립당	0	0	0.3	0.3
기타단체 ⁸³⁾	4	0	3.2	1.0
합계	210	30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82) 김현우(2000), 『정당통합운동사』, 윤유문화사, 260-261쪽.



〈사진 3-7-25〉 광주군 출신 제헌 국회의원 신익희

83) 기타 단체 당선자 4명은 민족자유연맹, 대한부인회, 불교, 여자국민당 등에서 각각 1명씩이다.

제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50. 5.30)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민주국민당	신익희(申翼熙)	59	국회의원	29,525
	무소속	이강목(李康穆)	29	공민교장	3,050
	무소속	강태연(姜泰演)	48	회사대표	3,605
	무소속	김낙규(金洛奎)	67	회사대표	493
	무소속	구성서(具聖書)	56	여중교원	사퇴
	국민회	안재정(安載琺)	48	상업	471
	유도회(儒道會)	이창선(李彰善)	44	의생	330
	무소속	선정식(宣正植)	63	농업	446
합계(유효투표수)					37,920

3. 제3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27〉 피난지 부산에서 열린 6. 25국회

제2대 국회는 1950년 6월 19일 개원하여 국회의장에 신익희(申翼熙), 부의장에 조봉암(曹奉岩)과 장택상(張澤相)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개원 6일 만인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회의원 210명 중 사망 또는 피살된 의원이 8명, 남북 또는 행방불명된 의원이 27명이었다. 행방불명 또는 남북된 의원 중 경기도 출신의원은 안

재홍(安在鴻, 평택), 김웅진(金雄鎭, 화성읍구), 이종성(李宗脜, 이천), 유기수(柳驥秀, 용인), 김강배(金康培, 연백갑구), 백상규(白相圭, 장단) 등 6명이었다. 국회는 실종된 의원들이 다시 돌아와서 등록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이들 의원의 숫자만큼은 재적의원 수에 산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임시수도인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부산에서 1952년 중 실시될 제2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선출방법을 둘러싸고 개헌파동이 발생하였다. 1952년 7월 4일 이른바 부산정치 파동으로 통과된 발췌 개헌안에 의하여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시중인 것을 이유로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하고 민의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통과된 발췌 개헌안에 의하여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전시중인 것을 이유로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하고 민의

원만을 선출하는 제3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3대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수는 제2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10석이었으나, 휴전선 이북지역인 7개 선거구가 제외되어 203개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다.

양원제의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이 변경되어야 했으나, 실제로 민의원 의원선거만 실시되었기 때문에 1950년의 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자유당과 민주국민당이 각각 처음으로 정당후보 공천제도를 도입하여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 주목된다. 정당 공천제도의 시행으로 정당의 소속의원 및 당원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다.⁸⁴⁾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의원정수 203명에 대하여 입후보자는 1,207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5.9대 1이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야당인 민주국민당 등 14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였으나, 후보자 10명 이상을 추천한 정당·사회단체는 4개에 불과하였다. 제2대 국회에 비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사회단체의 수가 감소하여 군소정당이 몰락하고 주요정당을 중심으로 정당정치의 틀이 잡혀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무소속 입후보자는 전체 후보자의 66%에 해당하는 797명에 이르러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기도에서는 30개 선거구 중 휴전선 이북지역인 개성시(開城市), 개풍군(開豐郡), 장단군(長湍郡), 연백군 갑·을(延白郡 甲·乙), 용진군 갑·을(龍津郡 甲·乙) 등 7개 선거구가 제외되어 실제 23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10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4.3대 1이었다.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민주당의 신익희와 자유당의 최인규, 강태연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91.1%를 나타낸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5-34]와 같이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6.2%에 해당하는 114석(공천자 99명, 비공천자 15명)을 차지하였으며, 민주국민당 15석, 국민회 3석, 대한국민당 3석 등의 득표상황을 나타냈다. 그리고 무소속은 자유당의 득표율 36.8% 114개 의석에 비해, 47.9% 득표로 67석을 차지함으로써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의 폐단이 노정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총 23개 의석 가운데 자유당이 16석을 차지하고 무소속 6석, 민국당 1석의 분포로 나타났다.

84) 자유당은 1953년 5월을 전후하여 원내·외 자유당이 통합하여 국회의원 과반수를 점한 자유당이 되었고, 반면 민주국민당은 29석으로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위의 책, 288쪽.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강태연 후보가 도중에 사퇴하여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와 자유당의 최인규 후보가 대결하였는데, 신익희(申翼熙) 후보가 24,218표를 획득하여 18,712표를 득표한 최인규 후보에게 승리하였다.

《표 7-34》 제3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인명

구분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득표율(%)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무 소 속	67	6	47.9	31.0
자 유 당	114	16	36.8	43.7
민주국민당	15	1	7.9	5.2
국 민 회	3	0	2.6	0
대한국민당	3	0	1.0	0
제헌국회의원 동지회	1	0	3.8	20.1
합 계	203	23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35》 제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광주군 투표결과(1954.5.20)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민주국민당	신익희(申翼熙)	63	민의원 의장	24,218
	자유당	최인규(崔仁圭)	35	회사원	18,712
	자유당	강태연(姜泰演)	50	회사중역	사퇴
	합계(유효투표수)				42,930

그런데 신익희 의원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호남지방 유세도중 1956년 5월 사망함에 따라 1956년 8월 23일 잔여 임기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보궐선거에는 자유당의 박재덕, 민주국민당의 신하균, 무소속의 허호영, 이강목 등 4명의 후보들이 출마하였는데, 투표결과 [표 7-36]과 같이 고 신익희 의원의 아들인 민주당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20,014표를 득표하여 19,761표를 득표한 자유당의 박재덕 후보를 250여 표의 근소한 차이로 이겨 당선되었다.

《표 7-36》 제3대 국회의원보궐선거 경기도광주군 투표결과(1956.8.23)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민주당	신하균(申河均)	37	무직	20,014
	무소속	허호영(許浩永)	41	회사원	511
	무소속	이강목(李康穆)	36	목사	2,649
	자유당	박재덕(朴在惠)	36	농업	19,761
	합계(유효투표수)				42,935

4. 제4대 국회의원 선거

1958년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법 개정 문제가 정계의 큰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1952년의 발췌 개헌 이후 헌법은 국회를 양원으로 구성할 것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를 위한 법 개정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여·야는 각기 독자적인 선거법안을 마련한 후 ‘국회의원 선거법안 여·야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의 선거법안을 검토한 결과, 민의원 의원 선거와 참의원 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을 만들어 1958년 1월 1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1월 25일 공포되었다.

개정된 민의원 의원선거법은 1950년에 제정된 국회의원 선거법 내용에 야당의 주장 중 투표참관인의 권한 확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일정 수에 대한 정당추천 허용 등이 수용되고, 여당의 주장 중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로 기탁금제와 선거 공영제,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의 제한 등이 수용된 것이다.⁸⁵⁾

85) 김현우(2002), 『한국의회론』, 을유문화사, 510-512쪽.

새로 제정된 참의원 의원선거법에 의하면 참의원 의원선거는 선거구를 각 시·도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60만에 2인씩 선출하고 선거구수는 30개, 의원정수는 70명으로 하며, 그 외 선거관련 사항은 민의원 의원선거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 공포 후 1년 이내에 참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의원 의원선거만이 실시되고 1958년 5월2일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3대 때보다 30개가 늘어난 233개 선거구에서 여당인 자유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14개 정당 단체가 추천한 84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3.6대 1이었다. 군소정당의 난립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무소속 후보가 총 후보자의 42.2%에 해당하는 357명으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25개 선거구에 88명이 입후보하여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자유당의 최인규, 민주당의 신하균, 무소속의 김익준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90.7%를 나타낸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37]과 같이 자유당이 의원정수의 54.1%에 해당하는 126석(공천자 121명, 비공천자 5명)을 획득하였으며, 민주당이 79석, 무소속이 27석을 차지하였



〈사진 3-7:28〉 자유당 최인규 후보

다. 따라서 제4대 총선을 통해 자유당과 민주당 간의 양당구도가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4대 총선에서도 자유당은 42.1% 득표로 전체 의석의 54.1%에 해당하는 의석을 점유했던 반면, 민주당은 34.2% 득표로 전체 의석의 33.9%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는 등 제3대 총선에서와 같이 소선거구 다수 투표제의 폐단이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25개 의석 가운데 자유당이 14석을 차지하고 민주당 8석, 무소속 3석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자유당의 최인규(崔仁圭) 후보가 29,055표를 획득하여 16,497표를 획득한 민주당의 신하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구분		당선자수(명)		득표율(%)	
정당·단체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무 소 속		27	3	21.7	20.8
자 유 당		126	14	42.1	43.7
민주국민당		79	8	34.1	35.0
통 일 당		1	0	0.5	0
국 민 회		0	0	0.5	0
기 타		0	0	1.1	0.5
합 계		233	25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대~11대)』.

제4회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58. 5. 2)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자유당	최인규(崔仁圭)	39	무직	29,055	
	무소속	김익준(金益俊)	42	실업	3,995	
	민주당	신하균(申河均)	39	민의원의원	16,497	
	합계(유효투표수)				49,547	

5. 제5대 국회의원 선거

4.19혁명 후 제1공화국이 붕괴되고 허정(許政) 과도정부가 수립되어 내각책임제 개헌과 총선거의 공정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내각책임제와 양

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은 1960년 6월 15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같은 날 정부에 의해 공포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와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의한 선출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연령이 헌법에 의하여 만21세에서 20세로 낮춰졌고, 참의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35세에서 30세로 변경되었다.⁸⁶⁾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도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일주일 후인 6월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그 개정 내용을 보면 ① 입후보 등록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천인제 대신 신고제 채택, ② 부재자 투표제도 신설, ③ 기탁금제도 신설(민의원 의원후보 30만원, 참의원 의원후보 50만원), ④ 투표 참관인제도 강화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기입 등이다.

그리고 1960년 7월 29일 개정 헌법 및 개정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제5대 민의원의원선거와 초대 참의원 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4.19 후 활발해진 혁신 정당들이 대결하였고, 민주당에서는 신파와 구파간의 대결로 공천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1) 민의원 의원선거

1960년 7월 29일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는 민의원의 원정수 233명에 대하여 입후보자 총수가 1,563명이었으나, 등록 직후 45명이 입후보를 사퇴하여 입후보자 수는 1,518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6.5대 1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하여 14개 정당·단체가 참여하였으며, 무소속 입후보자 수는 전체 입후보자 수의 64.3%에 해당하는 977명이었다.

민주당은 233개 선거구에 227명을 공천하였으나 신파와 구파가 당의 공식 공천자와 별도로 110명을 추가 공천하였으며, 혁신계 정당들도 많은 후보자를 내세웠다. 자유당 당원들은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며 자유당의 명칭을 내걸고 민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54명뿐이었다.

경기도에서는 민의원 의석 25석에 대하여 무소속 180명, 민주당 35명을 포함하여 총 243명이 입후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9.7대 1의 경쟁률을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와 민의원·참의원의 양원제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선거에 의한 선출제 등을 규정하였으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86) 위의 책, 515-516쪽.



〈사진 3-7:29〉 광주군 무소속 후보 신하균

보였으며, 경기도 광주군에서는 민주당의 장동국, 자유당의 박재덕, 무소속의 신하균 등 모두 12명이 입후보하였다.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84.3%를 나타냈으며, 이 선거에서 처음으로 부재자의 우편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표 7-39]와 같이 민주당이 41.7% 득표로 전체의석의 75.1%에 해당하는 175석을 차지하였으며, 다른 정당들은 사회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그리고 무소속 49석에 불과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후보 14명, 무소속 후보 11명이 당선되었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무소속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24,098를 득표하여 2위인 민주당의 장동국 후보를 크게 앞질러 제3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어 재선되었다.

표 7-39 제5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득표율(%)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민 주 당	175	14	41.7	33.7
자 유 당	2	0	2.7	5.2
무 소 속	49	11	46.8	56.7
사회대중당	4	0	6.0	1.6
한국사회당	1	0	0.6	0.4
통 일 당	1	0	0.2	0
한국독립당	0	0	0.2	0.7
기타단체	1	0	1.8	1.7
합계	233	25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40 제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60. 7.29)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무소속	신하균(申河均)	41	농업	24,098
	무소속	이진묵(李辰默)	54	사회사업	3,287
	무소속	김명진(金明鎭)	37	농업	2,014
	자유당	박재덕(朴在應)	43	무직	2,564
	무소속	김해진(金海振)	46	농업	2,960
	무소속	이원영(李元榮)	53	회사원	3,598
	무소속	이강목(李康穆)	39	교육사업	1,826

〈표 7-40〉 제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군 투표결과(1960. 7.29)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무소속	오봉규(吳琫圭)	35	회사원	867
	무소속	홍기복(洪基福)	50	상업	959
	민주당	장동국(張東國)	54	농업	5,835
	무소속	강태연(姜泰演)	56	회사대표	1,754
	무소속	이동상(李東商)	33	군인	1,912
		합계(유효투표수)			51,674

2) 참의원 의원선거

1952년의 발췌 개헌에 의해 양원제를 채택한 이래 제3대 및 제4대 국회에서는 민의원만으로 구성되었다가 1960년 7.29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의원 의원선거와 함께 참의원의 원선거가 실시되었다. 개정된 참의원 의원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참의원 의원선거구는 서울특별시·도 단위로 하고, ② 의원정수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2인 내지 8인으로 하여 3년마다 1/2씩 교체하며, ③ 투표자가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제한연기투표제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1960년 7월29일 민의원 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참의원 의원선거에는 의원정수 58명에 대하여 무소속 129명, 민주당 61명, 자유당 13명 등 총 21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은 3.6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총 의석 6석에 대하여 22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3.7대 1이었다.

참의원 의원선거의 투표자는 민의원 의원선거의 투표자보다 31,233명이 적은 9,747,688명이었다. 이것은 투표 절차상 민의원 의원 투표를 먼저 하고 참의원 의원 투표를 나중에 한 관계로 참의원 의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투표결과 [표 7-41]과 같이 민주당이 39.0%를 득표하여 전체 의석의 53.4%에 해당하는 31석을 차지하였으며, 무소속 20석, 자유당 4석 등의 분포를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3명, 무소속 2명, 자유당 1명이 참의원 의원에 당선되었다. 득표순에 따라 여운홍, 정낙필, 신의식 등 3명이 임기 6년의 1부 참의원으로, 김용성, 이교선, 하상훈 등 3명은 임기 3년의 2부 참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투표 절차상 민의원 의원 투표를 먼저 하고 참의원 의원 투표를 나중에 한 관계로 참의원 의원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7-41〉 제5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정당·단체	당선자수(명)		득표율(%)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민 주 당	31	3	51.4	39.0
자 유 당	4	1	6.1	5.9
무 소 속	20	2	38.1	49.3
사회대중당	1	0	1.4	2.4
한국사회당	1	0	1.3	0.9
기 타 단 체	1	0	1.7	2.5
합 계	58	6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42〉 제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투표결과(1960. 7.29)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비고
경기도	무소속	여운홍(呂運弘)	68	무직	439,755	제1부 (임기6년)
	민주당	정낙필(鄭樂弼)	62	무직	196,310	
	자유당	신의식(申義湜)	50	신문사사장	179,313	
	민주당	김용성(金龍星)	35	대학강사	170,282	제2부 (임기3년)
	무소속	이교선(李敎善)	57	무직	162,734	
	무소속	하상훈(河相勳)	69	무직	146,783	

6. 제6대 국회의원 선거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그 정치적 기능과 권한이 크게 감소된 반면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후 군사정권은 대통령 책임제와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확정시키고 12월 26일 공포하였다. 헌법 개정으로 국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어 그 정치적 기능과 권한이 크게 감소된 반면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은 강화되었다.

5.16 군사정권은 1963년 1월 1일부터 정치활동 금지를 해제한 후 곧바로 1월1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선거권은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② 선거구는 지역구와 전국구로 구분하여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 전국구 비례 대표제를 병행 실시하며(국회의원 총수 175명, 지역구 131

명, 전국구 44석), ③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당 추천제를 실시하고 선거운동은 정당본위로 하며, ④ 공영선거제를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⁸⁷⁾

1963년 11월 26일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 지역구 131석, 전국구 44석에 대하여 입후보자는 지역구 847명, 전국구 15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지역구 6.5대 1, 전국구 3.5대 1이었다. 민주공화당에서는 지역구 131명 전국구 31명이, 민정당에서는 지역구 131명 전국구 30명이 입후보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구 의석이 25개에서 13개로 축소되었는데, 총 95명이 입후보하여 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성남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제5지구(광주군·이천군) 선거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최하영, 민정당의 신하균, 민주당의 장동국 등 모두 7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72.1%를 나타낸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43]과 같이 민주공화당이 총 의석의 62.8%에 해당하는 110석(지역구 88석, 전국구 22석)을 차지하였으며, 민정당은 41석(지역구 27석, 전국구 14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민주당은 13석(지역구 8석, 전국구 5석), 자유민주당은 9석(지역구 6석, 전국구 3석), 국민의당은 2석(지역구)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민주공화당 7명, 민정당 5명, 민주당 1명이 당선되었으며, 경기도 제 5지구(광주군·이천군)의 경우 민정당의 신하균(申河均) 후보가 32,353표를 득표하여 민주공화당의 최하영 후보를 누르고 제3대, 제5대에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43 제6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정당·단체	구분 당 선 자 수(명)			득표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합계	전국	경기도
자유민주당	6(0)	3	9	8.1	4.7
국 민 의 당	2(0)	0	2	8.8	10.4
민 주 당	8(1)	5	13	13.6	16.7
민 정 당	27(5)	14	41	20.1	21.6
민주공화당	88(7)	22	110	33.5	27.0
기 타	0(0)	0	0	15.9	19.6
합 계	131(13)	44	175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87) 안희수(1995), 『한국정당정찰론』, 나남출판, 360~362쪽.

〈표 7-44〉 제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이천군) 투표결과(1963. 11. 26)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이천군	민정당	신하균(申河均)	45	국회의원	32,353
	자유당	엄유섭(嚴維燮)	41	개발사업	3,174
	자유민주당	권오전(權五典)	57	농업	2,399
	국민의당	박종진(朴種振)	29	농업	2,411
	보수당	강태연(姜泰演)	60	농업	2,258
	민주당	장동국(張東國)	57	농업	5,183
	민주공화당	최하영(崔夏永)	55	농업	24,085
합계(유효투표수)				71,863	

7. 제7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30〉 국회의원 선거
벽보

제6대 국회는 1966년 9월 22일 정당법과 선거관계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4일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사본 교부제도 신설, ② 선거운동 제한규정의 일부 완화, ③ 투표 동지표의 교부제도 변경 등이다.

1967년에 접어들어 여·야간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으며, 야당인 신한당과 민중당은 2월 7일 통합야당인 신민당을 창당하여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였다.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 선거 바로 뒤인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는 지역구 131석, 전국구 44석에 대하여 입후보자는 지역구 702명, 전국구 119명으로 평균경쟁률은 지역구 5.4대 1, 전국구 2.7대 1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구 13개 의석에 대해서 총 72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성남지역이 속하는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이천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차지철, 신민당의 신하균, 민중당의 권오전, 대중당의 김흥수 등 4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76.1%를 나타낸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45]와 같이 민주공화당이 득표율 50.6%로 의원정수의 73.7%에 해당하는 129석(지역구 102석, 전국구 27석)을 획득하였으며, 신민당은 득표율 32.7%로 45석(지역구 28석, 전국구 17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공화당이 10석, 신민당이 3석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제5지역 선거구(광주군·이천군)의 경우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 후보가 56,683표를 획득하여 20,421표를 획득한 3선 의원인 신민당의 신하균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사진 3-7-31〉 민주공화당 차지철 후보

표 7-45 제7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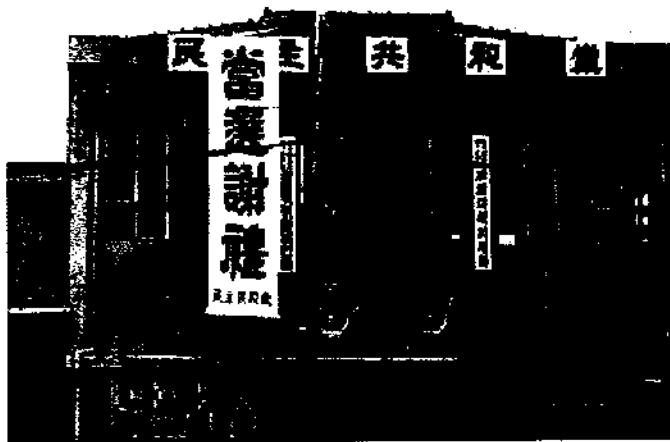
구분 정당·단체	당 선 자 수(명)			득표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합계	전국	경기도
대 중 당	1(0)	0	1	2.3	1.5
신 민 당	28(3)	17	45	32.7	32.0
민주공화당	102(10)	27	129	50.6	54.6
기 타	0(0)	0	0	14.4	11.9
합 계	131(13)	44	175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표 7-46 제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5지구 선거구(광주군·이천군) 투표결과(1967.6.8)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이천군	민주공화당	차지철(車智澈)	32	국회의원	56,683
	민주당	권오전(權五典)	61	정당인	872
	대중당	김흥수(金興洙)	29	상업	1,368
	신민당	신하균(申河均)	48	국회의원	20,421
	합계(유효투표수)				79,344

8.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32〉 민주공화당 지구당사에 내걸린 당선사례 현수막



제7대 국회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88) 위의 책, 528-530쪽 참조; 최한수(1996), 『한국선거정치론』, 대왕사, 345쪽.

제7대 국회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제7대 총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 야간의 협상과정에서 발생하여 1968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① 지역구 15개 증설, ② 예비선거인명부제도 신설, ③ 선거운동 방법과 선거절차 개선 등이다.

두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1969년 10월 27일 3선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후 여 · 야 협상과정에서 논의되어 1970년 12월 22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① 지역구를 146개에서 153개로 증설하고, ② 전국구 의석을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유효투표 총수의 5/100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배분하고, ③ 국회의원 선거 기간을 30일에서 22일간으로 단축하고, ④ 선거운동방법을 개선하는 것 등이다.⁸⁸⁾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의석 지역구 153석, 전국구 51석을 대상으로 입후보자는 지역구 577명, 전국구 121명이었으며 평균경쟁률은 지역구 3.8대 1, 전국구 2.4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의석수 16석에 대해 5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성남지역이 속하는 경기도 제6지구(광주군 · 이천군)의 경우 민주공화당의 차지철, 신민당의 유기준, 국민당의 박인식, 대중당의 정기영 등 4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73.2%를 나타낸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47]과 같이 민주공화당이 득표율 48.8%로 의원정수의 55.4%에 해당하는 113석(지역구 86석, 전국구 27석)을 획득하였으며, 신민당은 득표율 44.4%로 의원정수 43.6%에 해당하는 89석(지역구 65석, 전국구 24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16석 중에서 공화당이 11석, 신민당이 4석, 민중당이 1석을 차지하였으며, 경기도 제 6지구 선거구(광주군 · 이천군)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이 54,021표를 획득하여 36,898표를 획득한 신

민당의 유기준 후보를 누르고 제7대에 이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47 제8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정당·단체	당 선 자 수(명)			득표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합계	전국	경기도
민주공화당	86(11)	27	113	48.8	50.5
신 민 당	65(4)	24	89	44.4	40.5
국 민 당	1(0)	0	1	4.0	4.0
대 중 당	0(0)	0	0	0.5	0.5
민중당	1(1)	0	1	1.4	3.7
통일사회당	0(0)	0	0	0.9	0.8
합계	153(16)	51	204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대~11대)」.

표 7-48 제8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6선거구 선거결과(당주권·이천군)투표현황(1971. 5.2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민주공화당	차지철(車智澈)	36	국회의원	54,021
	신민당	유기준(兪棋濬)	46	정당인	36,898
이천군	국민당	곽인식(郭寅植)	32	정당인	1,692
	대중당	정기영(鄭起榮)	26	상업	862
합계(유효투표수)					93,473

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1972년 10월유신 후 비상국무회의에서 마련된 헌법 개정안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되고 한 달 후인 12월 27일 확정·공포됨으로써 제4공화국 헌법이 확정되었다. 개정 헌법에서는 국회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의원의 임기는 지역구 의원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의원 3년으로 규정하였다.

곧이어 12월 30일 국회의원 선거법이 제정·공포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지역구는 1구 1인 소선거구제에서 1구 2인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 ②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146명, 통일주체국민회의선출 73명 등 총 219



개정 헌법에서는 국회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은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의원의 임기는 지역구 의원 6년,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의원 3년으로 규정하였다.

89) 김현우(2002), 『한국의회 본』, 온유문화사, 533쪽.

명으로 조정하며, ③ 입후보자의 정당 공천 요건을 완화하고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는 것 등이다.⁸⁹⁾

1973년 2월 27일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정수 지역구 73개 선거구 146개 의석에 대해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등 3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33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2.3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8개 선거구 16개 의석에 대해 총 34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의 성남지역이 속한 경기도 제4선거구(광주군·이천군·여주군)의 경우 민주공화당의 차지철, 신민당의 오세웅, 민주통일당의 유기준, 무소속의 이윤수 등 5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 73.0%를 나타낸 제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49]와 같이 민주공화당이 득표율 38.7%로 전 지역구에서 당선되어 73석을 획득하였으며, 신민당은 득표율 32.5%로 52석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민주통일당은 2석, 무소속은 19석을 차지하였다.

한 지역구에서 2인씩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의 경우 제 8선거구(포천·연천·가평·양평)에서 민주공화당의 김용채(金鎔棗) 후보와 신민당의 천명기(千命基)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것을 비롯하여 총 8개 선거구 중 6개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와 신민당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현재의 성남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제 4선거구(여주·광주·이천)의 경우도 여·야 의원의 동반 당선구에 속하는데, 공화당의 차지철(車智澈) 후보와 신민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각각 53,586표, 51,399표를 획득하여 국회의원에 함께 당선되었다.

표 7-49 제9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단체별 당선연령					
구분	당선자수(지역구, 명)		득표율(%)		비고
정당·단체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민주공화당	73	9	38.7	43.4	
신민당	52	6	32.5	36.2	지역구 146
민주통일당	2	0	10.2	9.9	유정희 73
무소속	19	1	18.6	10.5	
합계	146	16	100	100	21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대~11대)』.

표 7-50 제9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광주군·이천군·여주군)투표결과(1973. 2. 27)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광주군	이천군	여주군	계
광주군	민주공화당	차지철(車智澈)	38	정당인	20,389	15,544	17,653	53,586
	신민당	오세응(吳世應)	39	정당인	21,846	15,101	14,452	51,399
이천군	민주통일당	유기준(兪棋濬)	48	정당인	23,105	6,208	3,187	32,491
여주군	무소속	이윤수(李允洙)	33	무직	4,693	1,508	1,518	7,719
	무소속	서영석(徐英錫)	46	정당인	2,502	935	1,432	4,869
합계(유효투표수)					72,535	39,296	38,233	150,064

10.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제9대 국회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이 있었다. 첫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1973년 3월 12일 제9대 국회가 구성된 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며, 두 번째의 선거법 개정은 1977년 12월 31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이었다. 이 시기는 긴급조치 제 9호(1975. 5. 13)에 의하여 유산체제에 대한 논쟁이 일체 금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법의 큰 골격에는 변화가 없었고 지역적인 내용의 개정만 있었다.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내용은 ① 선거구를 총 77개로 4개 증설하고 의원정수를 219명에서 지역구 154명,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출 77명 등 231명으로 증원하며, ② 후보자 기탁금 액수를 정당추천후보자 200만원에서 300만원, 무소속후보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③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 투표참관인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⁹⁰⁾

90) 위의 책, 535-536쪽.

1978년 12월 12일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는 증가된 지역구 의원정수 154석에 대해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등 3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47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3.1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6개 의석에 총 47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9대 1이었으며, 광주군에서 분리된 성남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 제 4선거구(여주·이천·광주·성남)의 경우 민주공화당의 정동성, 신민당의 유기준, 민주통일당의 박종진 등 7명이 입후보하였다.



〈사진 3-7-33〉 무소속 오세응 후보



〈사진 3-7-34〉 민주공화당 정동성 후보



이렇게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지른 것은 1948년 이후 총선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그만큼 유신체제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투표율 77.1%를 나타낸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51]과 같이 민주공화당이 득표율 31.7%로 전국 77개 지역구에서 68석을 획득하였으며, 신민당은 32.8%를 득표하여 61석을 차지하였다. 득표율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보다 1.1%를 더 많이 득표한 신민당이 의석수에 있어서는 7석을 더 적게 획득하는 이변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앞지른 것은 1948년 이후 총선에서 처음 있는 일로서, 그만큼 유신체제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경기도에서는 8개 선거구 16개 의석 중에서 7개 선거구에서 민주공화당 후보와 신민당후보가 동반 당선되었으며, 제 4선거구(여주·이천·광주·성남)에서만 공화당후보와 무소속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경기도 제 4선거구에서는 민주공화당의 정동성(鄭東星) 후보가 76,569표를 얻어 75,076표를 얻은 무소속의 오세응(吳世應)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단체별 당선현황						
구분 정당·단체	당선자수(지역구, 명)		득표율(%)		비고	
	전국	경기도	전국	경기도		
민주공화당	68	8	31.7	35.7		
신민당	61	7	32.8	33.0	지역구 146	
민주통일당	3	0	7.4	5.0	유정회 77	
무소속	22	1	28.1	26.3		
합계	156	16	100	100	23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제4선거구(성남시, 여주군, 광주군, 이천군) 투표결과(1978.12.12)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성남시	여주군	광주군	이천군	계
성남시	민주공화당	정동성(鄭東星)	39	회사대표	33,664	17,601	11,469	13,835	76,569
	신민당	유기준(俞棋濬)	53	회사대표	31,171	5,377	13,605	10,623	60,776
여주군	민주통일당	박종진(朴鍾振)	44	정당인	12,087	1,447	3,923	1,625	19,082
	무소속	황두영(黃斗榮)	51	정당인	6,639	1,162	894	1,593	10,288
광주군	무소속	민호영(閔浩英)	40	정당인	1,398	1,416	574	910	4,298
	무소속	신동명(申東溟)	40	정당인	1,727	719	573	1,112	4,131
이천군	무소속	오세응(吳世應)	45	정당인	38,840	12,794	7,681	15,761	75,076
	합계(유효투표수)				125,526	40,516	38,719	45,459	250,220

11. 제11대 국회의원선거

1980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해 제5공화국 헌법이 확정됨으로써 제1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며, 개정 헌법에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1년 1월 29일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을 공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구를 지역구와 전국구를 구분하고 전국구 의원의 정수는 지역구의 1/2로 한다. ② 지역구는 총 92개로 하고 1지역구에서 2명씩 선출한다. ③ 지역구 선거의 경우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의 추천을, 당원이 아닌 자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 700인 이하의 추천장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다. ④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의석을 얻은 정당에게 총 의석의 2/3를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 1/3은 그 밖의 정당에게 획득한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⑤ 후보자 등록시 무소속 후보자는 1,500만원, 정당추천 후보자는 700만원의 기탁금을 낸다.⁹¹⁾

91)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568쪽.

1981년 3월 25일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의 92개 선거구 184개 의석을 대상으로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 12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635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3.5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24석에 대하여 78명이 입후보하여 3.2의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남·광주지역의 경우 민주정의당의 오세웅, 신정당의 이대엽, 민주한국당의 이용배 등 8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9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는 무소속을 제외한 12개 정당에서 총 228명이 입후보하여 2.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 3-7 : 35〉 선거 유세

투표율 78.4%를 나타낸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53]과 같이 민주정의당이 득표율 35.8%로 90석을, 민주한국당이 21.6%를 득표하여 57석을,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13.3%를 득표하여 18석을 획득하였



〈사진 3-7-36〉 신정당 이대엽 후보

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 점유율에 따라 민정당에게는 총 의석의 2/3에 해당하는 61석이 배정되었으며, 민주한국당 24석, 한국국민당 7석 등으로 배분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성남시와 광주군이 단일 선거구가 되었는데, 경기도 제4 선거구(성남·광주)의 경우 민주정의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81,093표를 획득하여 49,801표를 획득한 신정당의 이대엽(李大燁)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정당·단체	구분 당선자 수(명)			득표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민주정의당	90(12)	61	151	35.8	38.7
민주한국당	57(10)	24	81	21.6	23.1
한국국민당	18(1)	7	25	13.3	10.4
민주사회당	2(0)	0	2	3.0	3.3
민 권 당	2(0)	0	2	6.7	5.7
민주농민당	1(0)	0	2	1.4	6.8
무 소 속	11(0)	0	11	10.7	7.4
기타정당 ⁹²⁾	3(1)	0	3	7.5	4.6
합계	184(24)	92	276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9), 『역대국회의원선거상황(제1대~11대)』.

92) 기타 정당에는 원안민주당, 신정당, 안민당, 사회당, 한국국민당, 봉안민주당 등이 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경기도 제4선거구(성남시·광주군)) 투표결과(1981. 3.2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계
					성남시	광주군	
성남시 광주군	민주정의당	오세웅(吳世應)	47	국보위입법위원	59,729	21,364	81,093
	신정당	이대엽(李大燁)	45	정당인	42,156	7,645	49,801
	민주한국당	이웅배(李雄培)	36	회사원	20,129	5,094	25,223
	한국민주당	강희규(姜熙奎)	41	약사	10,507	2,258	12,765
	민권당	황두영(黃斗英)	53	정당인	7,467	1,868	9,335
	한국국민당	김찬묵(金燦默)	35	건축사	6,083	1,653	7,736
	통일 민족당	윤주연(尹柱淵)	64	제조업	4,014	533	4,547
	민주사회당	안재훈(安再勳)	42	회사대표	2,656	955	3,517
	무소속	조경화(趙景華)	45	의사	4,551	1,195	5,346
	합계(유효투표수)				157,292	42,565	199,857

12.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1985년 2월에 실시될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4년 7월 25일 국회의원 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 선거법은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에는 지역구, 전국구 의석 수 등 종전과 변화가 없고 선거운동 규제, 투·개표 참관인 제도 등이 부분적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전국구 후보자는 선거일 공고일과 동시에 공무원 등의 직에서 해임토록 하고, ② 전국구 후보자도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한 액수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고, ③ 투·개표참관인수를 늘리는 것 등이다.⁹³⁾

93) 김현우(2002), 『한국국회론』, 을유문화사, 543쪽.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92개 지역구, 184개 의석을 대상으로 민주정의당,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신한민주당 등 9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38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1.39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선거구 20석을 대상으로 43명이 입후보하여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남·광주지역의 경우 민주정의당의 오세웅, 민주한국당의 강원재, 한국국민당의 이대엽, 신한민주당 이윤수 등 5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6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는 92개 의석에 대하여 171명이 입후보하여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 84.6%를 나타낸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55]와 같이 민주정의당이 지역구 의석 184석 중 87개 의석을 획득하였으며, 신한민주당 50석, 민주한국당 26석, 한국국민당 15석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전국구 의석은 지역구 의석 점유율에 따라 민주정의당에게는 총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61석이 배정되었으며, 신한민주당 17석, 민주한국당 9석, 한국국민당 5석 등으로 배분되었다.

특히 선거직전 정치활동 규제법에서 풀려난 정치인들로 조직된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하여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총 67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경기도에서는 민주정의당이 10개 지역구에서 모두 의석을 확보한 데 이어 신한민주당 4석, 민주한국당 3석, 한국국민당 3석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경기도 제2선거구인 성남시·광주군의 경우 한국국민당의 이대엽(李大燾) 후보가 83,663표를 획득하여 70,046표를 획득한 민주정의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선거직전 정치활동 규제법에서 풀려난 정치인들로 조직된 신한민주당이 창당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하여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하여 총 67석으로 제2당으로 부상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제1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득표율(%)

정당별	당 선 자 수(명)			득표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민주정의당	87(10)	61	148	32.25	34.2
신한민주당	50(4)	17	67	29.26	28.0
민주한국당	26(3)	9	35	19.68	21.4
한국국민당	15(3)	5	20	9.16	13.4
신정사회당	1(0)	0	1	1.45	0.5
무소속	4(0)	0	4	3.24	2.0
기타정당 ⁹⁴⁾	1(0)	0	1	1.96	0.5
합계	184(20)	92	276	100	100

94) 기타 정당은 민권당, 자유민주당, 근로노동당, 신민주당 등이며, 의석은 신민주당 1석이다.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5), 「제12대국회의원선거총람」.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제1선거구(성남시·광주군) 투표율(%)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계
					성남시	광주군	
성남시· 광주군	민주정의당	오세응(吳世應)	51	국회의원	51,595	18,454	70,046
	민주한국당	강원채(康源采)	42	국회의원	35,076	7,754	42,830
	한국국민당	이대엽(李大燦)	49	국회의원	77,719	6,444	83,663
	신한민주당	이운수(李允洙)	46	정치인	13,608	5,037	18,645
	신정사회당	김기평(金基平)	42	농업	7,004	1,624	8,628
	무소속	유기준(俞棋濬)	60	회사대표	22,976	26,081	49,048
	합계(유효투표수)				207,978	65,394	273,372

13.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1987년 11월 28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다.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1987년 11월 28일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됨으로써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는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다.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988년 3월 17일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상황 속에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종래 1구에서 2인씩 선출하던 중선거구제를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② 92개 지

역선거구를 224개로 늘리는 대신 전국구 의원수를 종래 지역구 의원 정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감축하여 국회의석을 지역구 224석, 전국구 75석 등 총 299석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전국구 의석 배분에 있어 제1당에 무조건 2/3를 배분하던 것을 제1당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이 50% 미만일 때 전국구 의석의 1/2을 배정하도록 하고 ④ 후보자 기탁금을 정당 및 전국구 후보자 1천만원, 무소속 후보자 2천만원으로 정하고 투표 통지표 교부 입회인 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⁹⁵⁾



〈사진 3-7: 37〉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 포스터

95) 김현우, 앞의 책, 636쪽; 최한수, 앞의 책, 374쪽.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의석 224석에 대하여 14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1,04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4.7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28석을 대상으로 129명이 입후보하여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남시의 경우 갑구(수정구)는 민주정의당의 김충호, 통일민주당의 장문영, 평화민주당의 이운수, 신민주공화당의 이대엽 등 4명이, 을구(중원구·분당구)는 민주정의당의 오세웅, 통일민주당의 양건주, 평화민주당의 이찬구 등 5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는 75개 의석에 대하여 7개 정당에서 173명이 입후보하여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 75.8%를 나타낸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결과 [표 7-57]과 같이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득표율 33.9%로 지역구 의석 224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7석을 획득하여, 개정선거법의 규정대로 전국구 의석 75석의 1/2인 38석을 배분받아 국회의석 총 299석 중 125석으로 41.8%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평화민주당은 호남유권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구 54석, 전국구 16석 등 총 70석을 확보함으로써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으며, 통일민주당은 59석(지역구 46석 전국구 13석), 신민주공화당은 35석(지역구 27석 전국구 8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28석의 지역구 의석 중 민주정의당이 16석, 평화민주당 1석, 통일민주당 4석, 신민주공화당 6석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선거구로 되어 갑구와 을



〈사진 3-7-38〉 평화 민주당
이찬구 후보

96) 기타 정당은 기독교민당, 민
중의당, 사회민주당, 우리정
의당, 제3세대당, 한주의통
일한국당 등이다.

구로 나뉘어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성남 갑구에서는 39.1%의 44,625표를 득표한 신민주공화당의 이대엽(李大燁) 후보가 당선되었고, 성남 을구에서는 평화민주당의 이찬구(李讚九) 후보가 35.5%인 33,187표를 획득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57〉 제13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연령

구분 정당·단체	당 선 자 수(명)			득표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민주정의당	87(16)	38	125	33.96	36.1
평화민주당	54(1)	16	70	23.83	22.9
통일민주당	46(4)	13	59	19.26	15.9
신민주공화당	27(6)	8	35	15.59	18.1
산한민주당	0(0)	0	0	0.24	0.1
민주한국당	0(0)	0	0	0.17	1.3
한겨레민주당	1(0)	0	1	1.28	0.6
한국국민당	0(0)	0	0	0.33	0.4
무소속	9(1)	0	9	4.75	4.2
기타 정당 ⁹⁶⁾	0(0)	0	0	0.59	0.4
합계	224(28)	75	299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 『제13대국회의원선거총람』.

〈표 7-58〉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성남시갑구유효투표구분(1988.4.26)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갑구	민주정의당	김충호(金忠鎬)	57	회사대표	29,237
	통일민주당	장문영(張文英)	43	연구소	9,909
	평화민주당	이윤수(李允洙)	49	정치인	30,420
	신민주공화당	이대엽(李大燁)	52	국회의원	44,625
합계(유효투표수)					114,191

〈표 7-59〉 제13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성남시을구유효투표구분(1988.4.26)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을구	민주정의당	오세웅(吳世應)	55	국회의원	30,056
	통일민주당	양건주(梁健柱)	49	정치인	7,448
	평화민주당	이찬구(李讚九)	46	정치인	33,187
	신민주공화당	김기평(金基平)	46	정치인	19,754
	한국국민당	정완립(鄭完立)	32	회사대표	3,096
합계(유효투표수)					93,541

14.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39〉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안내 벽보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결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90년 1월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을 창당하면서 다시 정계재편의 주도권을 잡았다. 따라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14대 대통령선거의 예비전일 뿐만 아니라 3당 통합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한 관심대상이 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협상을 통해 공동 발의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1992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개정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국회의석이 299석으로 종전과 같으나 지역구는 35만 이상 선거구의 분구로 13개 구 늘고 전국구는 13석 감소하였고, ② 전국구 의원 배정에 있어 총선결과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으면 제1당에 전국구 의석의 1/2을 우선 배정하던 것을 의석비율에 의한 배정으로 바꾸었으며, ③ 후보자의 기탁금을 종전에는 정당 후보자(지역 및 전국구) 1,000만원, 무소속 후보자 2,000만원 하던 것을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 구분 없이 균등하게 1,000만원으로 조정한 것 등이다. 그 밖에 선거운동에 있어 유급 선거원 제도를 폐지하고 자원봉사 선거운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한 수당을 폐지하고 실비만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정당연설회를 부활시키고 인쇄물의 호별 투입, 후보자 경력방송, 여론조사 등이 허용되었다.

1992년 3월 25일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의석 237석을 대상으로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 등 6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의 결과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던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1990년 1월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하여 거대여당 민주자유당을 창당하면서 다시 정계재편의 주도권을 잡았다.

1,20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율은 4.4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31개 의석을 대상으로 139명이 입후보하여 4.3대 1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 민주자유당의 이대엽, 민주당의 이윤수, 신정당의 최상면 등 3명이, 중원구·분당구 선거구에서 민주자유당의 오세웅, 민주당의 조성준, 통일민주당의 이찬구 등 6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는 62개 의석에 대하여 5개 정당에서 154명이 입후보하여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 71.9%를 나타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60]과 같이 민주자유당은 득표율 38.5%로 지역구에서 116석을 획득하여 전국구 33석을 배정받아 총 국회의석이 과반수에 1석 모자라는 149석을 획득하였으며, 민주당은 득표율 29.2%로 97석(지역구 75석, 전국구 22석), 통일국민당은 17.4%를 득표하여 31석(지역구 24석, 전국구 7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31개의 지역구 의석 중 민주자유당 18석, 민주당 8석, 통일국민당 5석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에서는 58,727표를 득표한 민주당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민주자유당 이대엽 후보의 55,013표를 앞질러 당선되었으며, 중원구·분당구에서는 민주자유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51,989표를 획득하여 41,583표를 획득한 민주당의 조성준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사진 3-7:40〉 민주당 이윤수 후보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인명						
정당·단체	구분			득표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민주자유당	116(18)	33	149	38.5	37.1	
민주당	75(8)	22	97	29.2	31.8	
통일국민당	24(5)	7	31	17.4	19.6	
신정당	1(0)	0	1	1.8	1.6	
공명민주당	0(0)	0	0	0.1	0.1	
민중당	0(0)	0	0	1.5	2.0	
무소속	21(0)	0	21	11.5	7.8	
합계	237(31)	62	299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 『제14대국회의원선거총람』.

〈표 7-6〉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1992.3.24)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수정구	자유민주당	이대엽(李大燁)	56	국회의원	55,013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53	정치인	58,727
	신정당	최상면(崔尙勉)	37	정치인	7,194
합계(유효투표수)					120,934

〈표 7-62〉 제1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분당구 선거구 투표결과(1992.3.24)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중원구	분당구	계
성남시 중원구 분당구	민주자유당	오세응(吳世應)	58	정치인	45,677	6,312	51,989
	민주당	조성준(趙誠揆)	43	정당인	38,549	3,034	41,583
	통일국민당	이찬구(李讚九)	50	국회의원	20,842	4,221	25,063
	신정당	김기평(金基平)	49	농장경영	4,712	340	5,052
	민중당	임동헌(林東縣)	32	정당인	3,604	351	3,955
	무소속	홍대원(洪大源)	51	무직	2,573	782	3,355
합계(유효투표수)					115,957	15,040	130,997

15.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여기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4년 3월 16일 공포된 것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종래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 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의장 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거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사진 3-7: 4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홍보탑

거법 등이 하나의 단일법으로 통합되었고, 선거일이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로 법정화 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준비행위 및 선거관리 업무의 사전준비가 가능해졌다.⁹⁷⁾

97) 김현우(2000), 『한국정당통합운동사』, 을유문화사, 554-556쪽.

그 밖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중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보면 ① 선거구는 종전과 같이 1선거구 1인의 소선거구제로 하되 제1당 여부에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였고, ② 의원정수는 299명으로 고정시키고 지역구는 16개를 늘려 253개 선거구로 하고 전국구는 46석으로 줄였으며, ③ 후보자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등록재산 대상에 대한 신고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④ 선거운동 규제 방법을 포괄적 제한·금지 방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한 것 등이다.

1996년 4월 11일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지역구 253개 의석을 대상으로 신한국당,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등 8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총 1,38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은 5.5대 1이었다. 경기도에서는 38개 지역구 의석에 대하여 총 201명이 입후보하여 5.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성남지역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유제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윤수, 자유민주연합의 이대엽 등 5명이,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정완랍,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성준, 자유민주연합의 강희규 등 5명이, 그리고 분당구 선거구에서는 신한국당의 오세웅, 새정치국민회의의 나팔렬 등 6명이 입후보하였다. 그리고 전국구 46개 의석에 대해 5개 정당에서 161명이 입후보하여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 63.9%로 종래에 비해 매우 낮은 투표율을 보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결과 [표 7-63]과 같이 신한국당은 득표율 34.5%로 지역구에서 121석을 획득하여 전국구 18석을 배정 받아 총 139석을 차지하였으며, 새정치국민회의는 25.30% 득표로 79석(지역구 66석, 전국구 13석)을, 자유민주연합은 16.17% 득표로 50석(지역구 41석, 전국구 9석)을 획득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총 38석의 지역구 의석 중 신한국당 18석, 새정치국민회의 10석, 자유민주연합 5석, 통합민주당 3석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에서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39,359표를 득표하여 37,863표를 얻은 자유민주연합의 이대엽 후보를 앞질러 당

선되었으며, 중원구에서는 40,022표를 득표한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성준 후보, 그리고 분당구에서는 49,674표를 획득한 민주자유당의 오세웅(吳世應)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표 7-63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인명

정 당	지역구(경기도)	당 선 자 수(명)		득표율(%)
		전국구	계	경기도
신한국당	121(18)	18	139	34.52
새정치국민회의	66(10)	13	79	27.4
통합민주당	9(3)	6	15	11.23
자유민주연합	41(5)	9	50	16.17
무소속	16(2)	0	16	11.85
기타 정당 ⁹⁸⁾	0	0	0	0.93
합계	253(38)	46	299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제15대국회의원선거총람」.



〈사진 3-7 : 42〉 새정치 국민회의 조성준 후보

98) 기타 정당에는 대한민주당, 무당파국민연합, 21세기한독당, 천민당 등이 포함된다.

표 7-64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1996. 4.11)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수정구	신한국당	유제인(柳濟仁)	48	변호사	20,644
	새정치국민회의	이운수(李允洙)	57	국회의원	39,359
	통합민주당	김준기(金準基)	57	교육자	6,460
	자유민주연합	이대엽(李大燁)	60	정당인	37,863
	무소속	장문영(張文英)	51	민주문화연구소	1,662
합계(유효투표수)					105,988

표 7-65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투표결과(1996. 4.11)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중원구	신한국당	정완립(鄭完立)	40	정당인	27,355
	새정치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	47	정당인	40,022
	통합민주당	김일주(金一柱)	43	정당인	7,318
	자유민주연합	강희규(姜熙圭)	56	기업인	21,700
	무소속	정형주(丁炯周)	31	사회운동가	8,794
합계(유효투표수)					105,189

표 3-7-38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강구도 상남시 지역구 투표결과(1998. 4.11)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분당구	신한국당	오세웅(吳世應)	62	국회의원	49,674
	새정치국민회의	나필열(羅必列)	59	정당인	38,439
	통합민주당	성유보(成裕普)	52	정당인	28,444
	자유민주연합	권헌성(權憲成)	37	정당인	29,240
	무소속	김종우(金鍾宇)	40	어린이집대표	1,668
	무소속	엄형민(嚴炯敏)	53	건설업	2,786
합계(유효투표수)					150,251

16.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사진 3-7-43〉 시민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여는 길목에서 이루어진 첫 선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1998년 8월부터 정치제도 개선 연구단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개진한 후 선거 직전인 2000년 2월 9일 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내용 중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한 50명 이내의 선거부정 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후보자의 최근 3년간 재산세와 소득세의 납부실적,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등 후보자들의 자질검증을 위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8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비례대표 139명, 지역구 1,040명 등 총 1,179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지역구는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석 41석을 대상으로 171명이 입후보하여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김동선, 새천년민주당의 이윤수, 자유민주연합의 김을동 등 6명이,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김일주, 새천년민주당의 조성준 등 5명이, 분당구 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고흥길, 새천년민주당의 강봉균 등 4명이, 그리고 분당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임태희, 새천년민주당의 이상철 등 3명이 입후보하였다.

투표율이 역대 총선 중 가장 낮은 57.2%로 나타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67]과 같이 한나라당이 득표율 38.96%로 지역구 의석 112석을 획득하였고 새천년민주당은 35.87%를 득표하여 96석을 얻었다. 자유민주연합은 9.84%를 득표하여 12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한나라당 21석, 새천년민주당 19석, 자유민주연합 5석 등으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한나라당 133석,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유민주연합 17석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석 41석에 대하여 한나라당 18석, 새천년민주당 22석, 자유민주연합 1석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이윤수(李允洙) 후보가 37,602표를 얻어 한나라당의 김동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고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조성준(趙誠俊) 후보가 43.64%인 40,187표를 획득하여 한나라당의 김일주 후보에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한편 분당구 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고흥길(高興吉) 후보가 44,857표를 획득하여 새천년민주당의 강봉균 후보를, 분당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임태희(任太熙) 후보가 50.86%인 40,036표를 획득하여 새천년민주당의 이상철 후보를 이기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후보자와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후보자의 최근 3년간 재산세와 소득세의 납부실적, 금고 이상의 전과기록 등 후보자들의 자질검증을 위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사진 3-7: 44〉 한나라당 고흥길 후보



〈사진 3-7: 45〉 한나라당 임태희 후보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별 당선현황						
정당	구분	당 선 자 수(명)			득표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한나라당	112(18)	21	133	38.96	39.08	
새천년민주당	96(22)	19	115	35.87	40.90	
자유민주연합	12(1)	5	17	9.84	12.38	
민주국민당	1(0)	1	2	3.68	1.57	

정당	구분 지역구(경기도)	당 선 자 수(명)		득표율(%)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희망의 한국신당	1(0)	0	1	0.41	0.05
공화당	0(0)	0	0	0.02	0.1
민주노동당	0(0)	0	0	1.18	1.23
청년진보당	0(0)	0	0	0.66	0.0
무소속	5(0)	0	5	9.38	4.69
합계	227	46	273	1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총람』.

표 7-63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구선거구 투표결과(2000. 4.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수정구	한나라당	김동선(金東鎭)	56	정치인	23,952
	새천년민주당	이윤수(李允洙)	61	국회의원	37,602
	자유민주연합	김을동(金乙東)	54	대학겸임교수	19,018
수정구	민주국민당	최상면(崔尙勉)	45	경영컨설턴트	1,373
	공화당	김기평(金基平)	58	자영업	1,357
	무소속	허재안(許載顔)	47	대학시간강사	7,476
합계(유효투표수)					90,778

표 7-69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선거구 투표결과(2000. 4.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중원구	한나라당	김일주(金一柱)	47	정치인	23,123
	새천년민주당	조성준(趙誠俊)	51	국회의원	40,187
	자유민주연합	최인식(崔仁植)	44	정당인	5,881
중원구	민주노동당	정형주(鄭炯周)	35	정당인	19,781
	무소속	황한설(黃漢燮)	54	회사대표	3,109
합계(유효투표수)					92,081

표 7-70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선거구 투표결과(2000. 4.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수
성남시 분당갑구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55	정당인	44,857
	새천년민주당	강봉균(康奉均)	56	정당인	35,881
	자유민주연합	강대기(姜大基)	48	정당인	3,764
분당갑구	민주국민당	양재현(梁在憲)	44	자영업	2,026
	합계(유효투표수)				86,528

〈사진 3-7〉 제16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유효투표소(2000.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직업	득표
성남시 분당을구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43	정당인	40,036
	새천년민주당	이상철(李相哲)	52	정당인	34,783
	자유민주연합	오세응(吳世應)	66	국회의원	3,895
합계(유효투표수)					78,714

17.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적인 선거라는 점과 제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역사적 사건속에서 실시되었다.

역대 선거와 달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존의 '1인 1표' 투표방식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정당명부식 투표제도가 도입되어 '1인 2투표제 방식'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역구 의석 2석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 12.9%를 차지함으로써 총 10석의 의석으로 사상 최초로 국회에 등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04년 4월15일 실시되었다. 이번 총선에는 14개 정당과 무소속에서 비례대표 190명, 지역구 1,175명 등 총 1,365명이 입후보하였으며, 지역구는 평균 4.8대 1, 비례대표는 평균 3.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석 49석을 대상으로 22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김을동, 새천년민주당의 이운수, 열린우리당의 김태년, 자유민주연합의 서병선, 민주노동당의 김미희 등 9명이,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신상진, 새천년민주



〈사진 3-7: 46〉 군복무유원자들의 부재자 투표모습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 실시된 전국적인 선거라는 점과 제16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역사적 사건속에서 실시되었다.

당의 김태식, 열린우리당의 이상락, 민주노동당의 정형주 등 6명이, 분당구 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고흥길, 새천년민주당의 김종우, 열린우리당의 허운나 등 5명이, 그리고 분당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임태희, 새천년민주당의 박인수, 열린우리당 김재일 등 5명이 입후보하였다.

전국 평균 투표율 60.6%를 나타낸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결과 [표 7-72]와 같이 열린우리당이 129석을 획득하였으며, 한나라당이 100석을 획득하였다. 새천년민주당은 5석을 얻었으며, 자유민주연합은 4석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또한 민주노동당 2석, 국민통합21 1석 및 무소속 2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대표 의석은 열린우리당 23석(37.7%), 한나라당 21석(35.3%), 민주노동당 8석(12.9%), 새천년민주당 4석(7.0%) 등으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지역구 의석 49석에 대하여 열린우리당 35석, 한나라당 14석 등의 분포를 보였으며, 성남시의 경우 수정구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의 김태년(金太年) 후보가 43.9%인 47,478표를 얻어 한나라당의 김을동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고 중원구 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이상락(李相樂) 후보가 39.2%인 42,770표를 획득하여 한나라당의 신상진 후보에 앞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한편 분당구 갑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고흥길(高興吉) 후보가 54.1%인 56,421표를 획득하여 열린우리당의 허운나 후보를, 분당구 을 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임태희(任太熙) 후보가 54.0%인 55,171표를 획득하여 열린우리당의 김재일 후보를 이기고 각각 국회의원에 재선되었다.



〈사진 3-7: 47〉 열린우리당
김태년 후보



〈사진 3-7: 48〉 열린우리당
이상락 후보

구분	당선자수(명)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열린우리당	129(35)	23	152	37.7	39.9
한나라당	100(14)	21	121	35.3	35.2
민주노동당	2	8	10	12.9	13.6
새천년민주당	4	9	7.0	6.2	-
자유민주연합	4	-	4	2.8	2.2

구분	당선자수(명)			비례대표 정당지지율(%)	
	지역구(경기도)	전국구	계	전국	경기도
기타**	3	-	3	4.3	2.9
합계	243	56	299	100	100

* 자료: <http://www.nec.go.kr>.

** 기타에는 국민통합21, 민주국민당, 가자희망 2080, 공화당, 구국총연합, 기독교당, 노년권익 보호당, 녹색시민당, 사회당, 무소속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7-73》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투표결과(2004.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득표수
	한나라당	김을동(金乙東)	58	여	방송인	32,665
	새천년민주당	이운수(李允洙)	65	남	국회의원	10,666
	열린우리당	김태년(金太年)	39	남	연구소장	47,478
	자민련	서병선(徐炳善)	42	남	정치인	1,463
성남시 수정구	민주국민당	최상면(崔尙勉)	49	남	경영컨설턴트	354
	녹색시민당	임미모(任美模)	44	남	노련사무국장	369
	민주노동당	김미희(金美希)	38	여	정당인	12,618
	무소속	양현덕(梁賢德)	46	남	기업인	1,429
	무소속	이규민(李揆珉)	45	남	교수	992
	합계(유효투표수)					108,034

《표 7-74》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 투표결과(2004.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득표수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	47	남	의사	27,032
성남시 중원구	새천년민주당	김태식(金台植)	64	남	국회의원	11,082
	열린우리당	이상락(李相樂)	50	남	정당인	42,770
	자민련	김기평(金基平)	62	남	자영업	1,456
성남시 중원구	민주노동당	정형주(丁炯周)	39	남	정당인	22,640
	무소속	이영성(李英成)	63	여	사회사업가	4,084
	합계(유효투표수)					109,064

《표 7-75》 제17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 투표결과(2004.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득표수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59	남	국회의원	56,421
	새천년민주당	김종우(金鍾宇)	48	남	정당인	3,445
	열린우리당	허운나(許雲那)	55	여	교수	42,362
성남시 분당구 (갑)	무소속	강정길(姜正吉)	62	남	무직	1,215
	무소속	장명화(張明和)	63	남	무직	867
	합계(유효투표수)					104,310

《표 7-16》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중기표 성별·분당구·연령별 투표율(2004. 4. 15)

선거구	정당	성명	연령	성별	직업	득표수
성남시 분당구 (을)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47	남	국회의원	55,171
	새천년민주당	박인수(朴仁洙)	34	남	정당인	4,004
	열린우리당	김재일(金在日)	51	남	정당인	42,043
	녹색사민당	김태수(金泰壽)	52	남	약사	462
	무소속	주정모(朱琺模)	43	남	저술가	575
	합계(유효투표수)					102,255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 역대 성남지역 국회의원 현황(제1대 ~ 17대)

신익희(申翼熙)



제헌 · 2~3대 의원

- 와세다대학 정경학과 졸업
- 3·1독립운동 참가
- 상해(上海)임시정부 내무부장
- 입법의원 의장
- 자유신문 사장
- 국회 의장
- 제헌국회의원 당선(1948.5.10)
- 제2대 국회의원(1950.5.30)
- 제3대 국회의원(1954.5.20)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
- 민주당 최고의원
- 제3대 대통령선거 입후보

차지철(車智澈)



제 6~9 대 의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
- 5·16군사혁명 참가
- 육군 중령예편
- 청와대 경호실장(대통령 박정희)
- 대통령특사 중남미 순방
- 제6대 국회의원(전국구)
- 제7대 국회의원(1967.6.8)
- 제8대 국회의원(1971.5.25)
- 제9대 국회의원(1973.2.27)
- 월남시찰 단장

신하균(申河均)



3·5·6대 의원

- 중국 상해 광화상대 졸업
- 제3대 국회의원(보선에서 당선, 1956.8.23)
- 제5대 국회의원(1960.7.29)
- 제6대 국회의원(1963.11.26)
- 한국외국어대학 강사
- 민주당 중앙위원
- 민정당 경기제5지구당 위원장
- 민중당 정치훈련원장

최인규(崔仁圭)



제4대 의원

- 뉴욕대학 상학과 졸업
- 자유당 중앙위원
- 외자청장
- 동남아무역사절단 정부대표
- 대한 교역공사 이사장
- UNKRA 미국주재 한국대표
- 제4대 국회의원(1958.5.2)
- 내무부장관(1960.3.15 부정선거 주동)

오세응(吳世應)



제8~12, 14~15대 의원

- 연세대학교 정외과 졸업
- 미 아메리칸대학 정치학박사
- 민주협 초대회장
- 8대 국회의원(신민당 전국구)
- 9대 국회의원(신민당, 광주, 이천, 여주)
- 신민당 원내부총무
- 10대 국회의원(성남, 광주, 이천, 여주 무소속당선)
- 11대, 12대 국회의원(성남, 광주, 주민정)
- 14대 · 15대 국회의원
- IPU한국대표 단장 및 집행위원
- 국회 문공위원장 · 국회 부의장

정동성(鄭東星)



제10~13대 의원

- 경희대학교 정외과 졸업, 동대학원 수료
- 미 웨스턴리저브대학 대학원수료
- 미 애리조나 주립대학 대학원수료
- 전국대학생 총연맹 의장
- 공화당 청년문화위원장
- 10대 국회의원(성남, 광주, 여주, 이천)
- 11, 12대 국회의원(여주, 이천, 용인)
- 국회교체위원장, 국회상공위원장, 민정당 원내총무, 국회내무위원장, 체육부장관
- 민자당 여주지구당 위원장

이대엽(李大燁)



제11대~13대 의원

-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일신 중 · 고교 교사
- 한국영화배우협회 부회장
- 제11대, 12대 국회의원(성남, 광주, 주민정당)
- 신정당 부총재, 국민당 중앙위원회 의장
- 한 · 일 의원연맹 상임간사
- 제13대 국회의원(성남 갑 공화당)
- 세계민간항공 명예총재 · 국회교체위원장 · 민자당 성남수정지구당위원장
- (현)성남시장

이찬구(李讚九)



제13대 의원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내외문제연구회 통일문제 담당 보좌역
- 통일원 통일연구소 교수
- 민주사회당 용인, 이천, 여주지구당위원장, 평민당 당무지도위원
- 통일문제 특별위원장
- 제13대 국회의원 당선(성남을지구)
- 한국청신문화연구소장
- 삼단계 통일정책, 북한주민의 불안요인 분석, 한국병의 원인과 대책 등 저서 발행

이윤수(李允洙)



제14~16대 의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신민당 김대중대통령 후보 경호
- 실장 특별보좌역
- 산한 민주당 성남, 광주위원장
- 평화민주당 창당발기인
- 평화민주당 경기도광주 대통령선거대책위원장
- 민주당 김대중후보 비서실 차장
- 새천년민주당 원내 수석부총무
- 국회스카우트위원연맹 회장
- 국회환경노동위원장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고흥길(高興吉)



제16~17대 의원

- 서울대 정치학과 졸
- 성균관대 경제개발대학원 수료
- 미 미주리대 신문대학원 수학
-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석사
- 중앙일보 정치 외신 북한 사회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 제16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총재 특보
- (현)국회 언론발전연구회 회장
- (현)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 (현)사단법인 한국 혈액암 협회 회장
- 국회언론발전 연구회장

조성준(趙誠俊)



제15~16대 의원

- 고려대 법대 졸업
- 김대중 총재 특보
- 노사정위간사위원, 원내부총무
- 민주당 직능위원장
- 외국인노동자보호대책기획단장
- 조 · 태정학 연구회 책임연구위원
- 제15대 국회의원
- 제16대 국회의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 새정치국민회의 원내부총무
- 새정치국민회의 직능위원회위원장
- 경기도 대학원 겸임교수

임태희(任太熙)



제16~17대 의원

- 서울대 경영대 동대학원 졸업
- 옥스포드대학 수학
- 행정고시 합격
- 재무부 산업관세과 외환정책과 · 금융정책과, 재경원 예산정책과
- 청와대 경제비서실 근무
- 재경부 산업경제과장
- 제16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부대변인, 제2정조위원장
-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 국회재정 경제위원

김태년(金太年)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 성남청년단체연합 의장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 남북 경찰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지방분권 전국연대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미군기지 성남이전반대 범대위 사무국장 - 성남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제17대 의원	이상락(李相樂) - 성남YMCA근로청소년야간학교 교장 - 주민협동조합 이사장 -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설립·이사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중원구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민생활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초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 제5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17대 의원
--	---

제3절 기타 선거 및 투표

1.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1)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제 4 공화국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임무를 보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1/3을 선거하는 외에도 중요한 통일정책을 심의·결정하고 국회가 발의·의결한 개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972년 11월 25일 제정·공포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법과 그 시행령에는 선거구를 구·시·읍·면을 단위로 하여 전국 1,630개로 정해지, 인구 10만 미만의 선거구는 1개 선거구로 하고 인구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가 혼용되어 한 선거구에서 1명 내지 5명의 대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1월 21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제 4공화국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원을 선출한다.

- ② 피선거권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3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해당 선거구에서 계속 2년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부여한다.
- ③ 선거운동은 철저한 공영제로 실시한다.
- ④ 후보자는 유권자 3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⑤ 정치인(국회의원, 정당의 당원)의 입후보는 금지한다.

1972년 12월 15일 실시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는 2,359명의 정원에 총 6,16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3.4대 1이었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685명이 사퇴하고 1명이 사망, 44명이 등록 무효 됨으로써 결국 5,434명이 입후보하였다.⁹⁹⁾ 경기도의 경우 280명의 대의원 선출에 714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6대 1이었다.

투표율 70.4%를 나타낸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투표결과 전국의 206개 선거구에서 225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9개 선거구에서 총 12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당시 성남출장소 지역에서는 [표 7-77]와 같이 5개 선거구에 총 16명이 입후보하여 1명이 도중 사퇴하고 4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11명이 투표로 선출되었다. 성남지역 5개 선거구의 11명의 당선자 중에서 중부 제3선거구의 노병천(盧秉天) 후보가 5,799표를 획득하여 최다 득표하였다.

9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2), 「대한민국정당사」(제2집), 37쪽.

표 7-77)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성남출장소 지역, 1972. 12. 15)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중부 제2선거구	강복현(姜福鉉)	38	고퇴	상업	-	무투표당선
	문영술(文永述)	45	대졸	수공업	-	무투표당선
	한백업(韓百燮)	40	국졸	상업	-	무투표당선
	정덕봉(鄭德奉)	39	고졸	상업	-	무투표당선
중부 제3선거구	노병천(盧秉天)	43	대졸	상업	5,799	당선
	김진태(金振台)	35	대졸	상업	5,099	당선
	김영삼(金永三)	27	대졸	목축업	3,243	(당선후 사망)
	박용무(朴容武)	36	고졸	상업	3,383	(당선후 사망)
대왕선거구	안용성(安容成)	36	국졸	농업	1,490	당선
낙생선거구	김영훈(金永勳)	30	고졸	농업	1,716	당선
돌마선거구	이호규(李鎬圭)	53	중졸	농업	1,551	당선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2),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명부」.

2)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7년 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이 대의원 선거구가 1,630개에서 1,665개로 35개 증설되고 대의원 수가 2,359명에서 2,583명으로 증가되는 등 일부 개정되었다.

1978년 5월 18일 실시된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는 2,583명의 정원에 총 5,672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2.2대 1이었다. 그러나 투표 전날까지 125명이 사퇴하고 35명의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5,417명이 입후보하였다. 경기도에서는 319명의 대의원 선출에 총 729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3대 1이었다.

투표결과 무투표 당선된 자는 236개 선거구에 332명이었으며, 선거가 실시된 1,429개 선거구에서 2,551명이 당선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36개 선거구에서 총 39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으며, 선거가 실시된 지역에서 280명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성남시는 3개 선거구로 구분되고 15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총 5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3.6대 1이었다. 특히 제 2선거구에서는 5명 선출에 23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4.6대 1로서 전국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성남시의 15명 당선자 중에서 제 1선거구의李大燾(李大燾) 후보가 7,792표를 획득하여 최다 득표하였는데, 성남시의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현황을 보면 [표 7-78]과 같다.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결과(성남시 1978. 5. 18)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제1선거구	이경구(李京求)	39	대학원수료	상업	2,537	당선
	조영이(趙英二)	44	대학원수료	연예인	3,343	당선
	강희규(姜熙圭)	39	대졸	상업	3,235	당선
	李大燾(李大燾)	43	대졸	연예인	7,792	당선
	김찬회(金讚會)	40	고졸	상업	2,539	당선
제2선거구	박종민(朴鍾敏)	55	고졸	상업	2,212	당선
	문희식(文會植)	38	대졸	운수업	2,729	당선
	이형하(李亨河)	58	대졸	상업	2,146	당선
	양상근(梁相根)	44	고졸	상업	3,414	당선
	강복현(姜福鉉)	44	고졸	상업	2,019	당선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제3선거구	노병천(盧秉天)	49	대졸	무직	7,106	당선
	김찬묵(金燦默)	35	대학원수료	건축설계사	4,035	당선
	공재현(孔在賢)	45	고졸	상업	3,060	당선
	이계남(李季南)	47	대졸	상업	3,715	당선
	김기식(金基植)	38	중졸	회사원	3,767	당선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78),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의대의원 당선자 명부』.

2.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1980년 10월 22일 국민투표에 의해서 확정된 제 5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0년 12월 26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의결·통과된 대통령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인단의 정수를 5,000명 이상으로 정하고,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당 또는 일정수의 대통령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고 대통령 선거인단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도록 하였다.

제12대 대통령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선거가 1981년 2월 11일에 실시되었는데, 전국 1,905개 선거구에서 총 9,47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은 1.8 대 1이었다. 그러나 선거기간 중 사퇴 186명, 사망 2명, 등록 무효 7명 등으로 최종적으로 9,283명이 입후보하였다.¹⁰⁰⁾ 성남시의 경우 모두 8개 선거구에서 총 78명이 입후보하여 그 중에서 37명이 선출되었는데, 당선자 현황은 [표 7-79]와 같다.

1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대한민국정당사』 제3집(1980-1988년), 10쪽.

표 7-79. 대통령 선거인단선거 결과(성남시 1981.2.11)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제1선거구	박정호(朴廷鎬)	34	대퇴	회사대표	2,808	당선(민정당)
	이순영(李純瑛)	43	대졸	약사	3,440	당선(민정당)
	국중덕(鞠重德)	46	고졸	한 의사	2,797	당선(민정당)
	서한규(徐漢奎)	43	고졸	제조업	2,750	당선(민정당)
	김종식(金鍾湜)	43	고졸	무직	4,285	당선(민정당)
제 2선거구	이우일(李宇一)	44	대졸	약사	2,190	당선(민정당)
	정상규(鄭商奎)	41	대졸	약사	2,503	당선(민정당)
	임명환(林明煥)	54	대퇴	상업	2,131	당선(민정당)

표 7-73 대동선거인단선거결과(공보처 98. 2. 11)

선거구명	성명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제 3선거구	강복현(姜福鉉)	47	고졸	상업	2,455	당선(민정당)
	라필주(羅必柱)	37	고퇴	사업	2,911	당선(민정당)
	김칠봉(金七峰)	45	고졸	회사대표	2,591	당선(민정당)
	김재구(金在九)	61	국졸	종교인	2,897	당선(민정당)
	강대웅(姜大雄)	39	고졸	상업	4,986	당선(민정당)
제 4선거구	임운택(林雲澤)	39	고졸	공업	3,129	당선(무소속)
	김기식(金基植)	41	고졸	상업	3,441	당선(민정당)
	신경호(辛慶浩)	49	대학원 재	상업	3,038	당선(민정당)
	지용규(池龍奎)	45	대졸	상업	2,744	당선(민정당)
	김동성(金東星)	40	고졸	건축업	1,937	당선(민정당)
제 5선거구	김형대(金炯大)	50	사범학교졸	상업	2,512	당선(민정당)
	양승준(梁承俊)	42	대졸	상업	2,614	당선(무소속)
	박광봉(朴光鳳)	34	고졸	상업	2,303	당선(무소속)
	김광길(金光吉)	47	고졸	무직	1,987	당선(무소속)
	고동일(高東一)	47	대퇴	사업		당선(무소속)
제 6선거구	윤수산(尹壽山)	47	대졸	상업	2,604	당선(민한당)
	이건동(李建同)	48	고퇴	상업	1,775	당선(민정당)
	정덕봉(鄭德奉)	48	중졸	건축업	1,875	당선(민정당)
	한백업(韓百)	47	고졸	상업	1,726	당선(민정당)
	이상학(李相學)	40	고졸	건축업	1,477	당선(민정당)
제 7선거구	김종안(金鍾安)	52	고졸	상업	2,065	당선(민정당)
	조준환(曹駿煥)	43	대퇴	상업	2,679	당선(민정당)
	김찬희(金讚會)	43	대졸	사업	2,135	당선(민한당)
	임종섭(林鍾燮)	33	고졸	사업	3,739	당선(민정당)
	이용희(李龍熙)	57	중졸	무직	2,467	당선(민정당)
제 8선거구	안용성(安容成)	45	대졸	농업	2,759	당선(민정당)
	이종식(李鍾植)	40	대졸	상업	1,577	당선(무소속)
	강윤신(姜倫信)	42	고졸	상업	1,800	당선(민정당)
	박명원(朴明遠)	53	중졸	상업	1,397	당선(무소속)

3. 국민투표

1) 제1차 국민투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된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 1962년 11월 5일 공고된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대통령 책임제 채택, ② 부통령제 폐지 및 국무총리제 채택, ③ 국회 단원제 채택, ④ 정당제도 신설 및 복수 정당제도 보장, ⑤ 국회의원 정당공천제 채택 및 무소속 출마 불허 등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실시된 국민투표는 1962년 12월 17일 5·16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제1차 국민투표의 결과를 보면 [표 7-80]와 같이 유권자수는 12,412,798명이고 투표자수는 85.2%인 10,585,998명이었으며, 찬성 투표율은 78.8%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 수는 1,512,281명이고 투표자수는 84.4%인 1,275,898명이었으며 찬성 투표율은 77.2%로 전국상황과 비슷했으며, 지금의 성남지역을 포함하는 광주군에서는 투표자수는 유권자수 69,333명의 84.6%인 58,718명이고 찬성률은 74.4%로 나타났다.

제1차 국민투표 결과(1962.12.17)									
구분	유권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찬성	반대	계				
전국	12,412,798	10,585,998	8,339,333	2,008,801	10,348,134	237,864	1,826,800	85.2	78.8
경기도	1,512,281	1,275,898	985,104	259,816	1,244,920	30,978	236,383	84.4	77.2
광주군 (성남포함)	69,333	58,718	43,741	13,235	56,976	1,742	10,615	84.6	74.4

2) 제2차 국민투표

1969년에 접어들어 대통령의 3번째 중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 문제가 정계의 쟁점으로 부각하였다. 1969년 7월 25일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문제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으며, 8월 7일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국회의원 정수를 150-200명에서 150-250명으로 증원하고, ②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임을 허용하고, ③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하고, ④ 대통령의 중임기간을 3기까지로 개정하는 것 등이다.

헌법 개정안은 9월 14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표 7-81]과 같이 유권자는 15,048,925명이며, 선거권자의 77.1%인 11,604,03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5.1%의 찬성표를 얻어 확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는 1,609,925명이고 투표자 수는 1,249,443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 투표한 사람은 총 투표자의 60.5%이었다. 그리고 당시 성남지역을 포함한 광주군의 경우 유권자는 54,057명이고 투표자 수는 77.6%인 42,018명이었으며, 찬성 투표율은 59.4%를 나타냈다.

제3차 국민투표(1972.10.17)									
구분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 수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지역			찬성	반대	계				
전국	15,048,925	11,604,038	7,553,655	3,636,369	11,190,024	414,014	3,444,887	77.1	65.1
경기도	1,609,925	1,249,443	755,748	451,554	1,207,302	42,141	359,855	77.6	60.5
광주군	54,057	42,018	24,962	15,146	40,108	1,910	12,039	77.6	59.4

3) 제3차 국민투표



비상국무회의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관한 조정, 정당기능의 약화, 헌법위원회의 신설, 경제조항의 보강, 헌법 개정절차의 이원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신헌법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 의해서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이 중지되었으며, 곧이어 10월 27일 비상국무회의는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 관한 조정, 정당기능의 약화, 헌법위원회의 신설, 경제조항의 보강, 헌법 개정절차의 이원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신헌법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하였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표 7-82]과 같이 유권자수는 15,676,395명이고 총유권자의 91.9%에 해당하는 14,410,71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5%의 찬성표를 얻어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는 1,727,059명이고 투표자는 1,626,187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한 사람은 총 투표자의 92.8%에 해당하는 1,508,712명이었다.

당시 성남지역이 포함된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총유권자는 113,000명이

었으며, 투표자는 96.7%인 109,289명이었다. 이 중에서 찬성투표수는 총 투표자의 91.8%에 해당하는 100,275표였다.

표 7-82		표 7-83 국민투표 찬반(1972.11.21)							
구분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 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지역			찬성	반대	계				
전국	15,676,395	14,410,714	13,186,559	1,106,143	14,292,012	118,012	1,265,681	91.9	91.5
경기도	1,727,059	1,626,187	1,508,712	104,759	1,613,471	12,716	100,872	94.2	92.8
광주군	113,000	109,289	100,275	7,525	107,800	1,489	3,711	96.7	91.8
성남지역	72,680	68,821	63,042	4,833	67,875	946	3,895	94.5	91.8

4) 제4차 국민투표

유신체제가 출범한 뒤 1974년부터 야당 및 반체제 인사들을 중심으로 반체제 운동이 전개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22일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현행 헌법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75년 2월 12일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표 7-83]과 같이 유권자수는 16,788,839명이고 투표자수는 총유권자의 79.8%에 해당하는 13,404,245명이었다. 이 중에서 총투표자의 73.1%에 해당되는 9,800,201표가 찬성표로서 유신헌법은 찬성을 얻게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수는 1,892,305명이고 투표자수는 1,603,49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한 사람은 총투표자의 72.5%에 해당하는 1,162,887명이었다.

성남시의 경우 유권자수는 101,601명이고 투표자수는 76,695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한 사람은 총투표자의 64.2%에 해당하는 49,241명이었다.

《표 7-83》 제5차 국민투표 결과(1978.2.12)

구분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찬성	반대	계				
전국	16,788,839	13,404,245	9,800,201	3,370,085	13,170,286	233,959	3,384,594	79.8	73.1
경기도	1,892,305	1,603,494	1,162,887	414,009	1,576,896	26,598	288,811	84.7	72.5
성남지역	101,601	76,695	49,241	25,839	75,080	1,615	24,906	75.5	64.2

5) 제5차 국민투표

1979년 10.26 사태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하면서 표면화된 개헌 문제는 최규하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1980년 3월 14일 헌법개정 심의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 후 전두환의 제11대 대통령 취임 후 마련된 헌법 개정안이 1980년 9월 29일 공고되고 10월 22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었는데, 개정 헌법의 주요내용은 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제한, ②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③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 ④ 국회 권한강화 및 사법권 독립보장, ⑤ 국정자문회의 신설, ⑥ 국회의 원 청렴조항 신설, ⑦ 국민기본권 강화, ⑧ 기존 정당 및 국회 해산 등이다.

1980년 10월 22일 실시된 제5차 국민투표에서 [표 7-84]와 같이 총 유권자수는 20,373,869명이고 투표자수는 총유권자의 95.5%인 19,453,926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 수는 91.6%에 해당하는 17,829,354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수는 2,701,219명이고 투표자수는 2,604,212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 투표한 사람은 총 투표자 수의 94.4%에 해당하는 2,457,368명이었다.

성남시의 경우 유권자는 190,747명이고 투표자는 유권자의 96.6%에 해당하는 184,258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한 사람은 93.2%에 해당하는 171,656명이었다.

《표 7-84》 제5차 국민투표 결과(1980.10.22)

구분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찬성	반대	계				
전국	20,373,869	19,453,926	17,829,354	1,357,673	19,817,027	266,899	919,943	95.5	91.6
경기도	1,701,219	2,604,212	2,457,368	116,545	2,573,913	30,299	97,007	96.4	94.4
성남지역	190,747	184,258	171,656	10,398	182,054	2,204	6,489	96.6	93.2

6) 제6차 국민투표

1987년 6·29선언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여·야 합의로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국민투표에 회부되었는데, 개정 헌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대통령직선제 채택, ②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및 국회해산권 폐지, ③ 국회의 국정감사권 부활, ④ 법관의 임명절차 개선과 헌법재판소 신설, 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 등이다.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표 7-85]과 같이 유권자 수는 25,619,648 명이고 투표자 수는 총유권자의 78.2%인 20,028,672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찬성투표는 93.1%인 18,640,625표였다.

경기도의 경우 유권자 수는 3,284,968명이고 투표자 수는 총유권자의 81.4%인 2,674,509명이었으며, 찬성투표한 사람은 93.4%에 해당하는 2,498,639명이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 295,509명의 유권자 중 74.7%인 220,719명이 투표하였으며, 이 가운데 93.6%인 206,603명이 찬성 투표하였다.



〈사진 3-7·49〉 국민투표 홍보탑



〈사진 3-7·50〉 국민투표 홍보 포스터

제6차 국민투표 결과(1987.10.27)									
구분 지역	유권자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수	기권자	투표율 (%)	찬성 투표율 (%)
			찬성	반대	계				
전국	25,619,648	20,028,672	18,640,625	1,092,702	19,733,327	295,345	5,590,976	78.2	93.1
경기도	3,284,968	2,674,509	2,498,639	125,272	2,623,911	50,598	610,459	81.4	93.4
성남지역	295,509	220,719	206,603	10,943	217,546	3,173	74,790	74.7	93.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와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중립성 보장이 특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1963년 1월 21일 설치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시·도 및 선거구 단위로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임기 및 신분을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 보장을 위해 의사결정기구를 단독 결정기관이 아닌 합의제의 위원회 형식을 취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회 및 법원에서 추천한 인사나 법관, 변호사, 교육자 등 중립적이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구성된다. 그리고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 기관을 독립 위원회형의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세계적인 것으로 그 예가 드물다.



〈사진 3-7:51〉 (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 중앙선거연수원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는 다음의 열 가지를 들 수 있다. 즉 ① 규칙 제정권, ② 선거범죄 조사권, ③ 선거비용 확인·조사권, ④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⑤ 불법시설물에 대한 조치 및 대 집행권, ⑥ 불법선전물의 우송 중지권, ⑦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⑧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 신청권, ⑨ 정치 관계법에 대한 제·개정 의견 제출권 및 ⑩ 선거사무

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 요구권한 등이다.¹⁰¹⁾

2.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

101) <http://home.nec.go.kr>(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1월 현재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1)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

성남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2월 7일『경기도 제7지역 선거구 관리위원회』로 창설되었다. 그 후 1971년 1월 26일『경기도 제8지역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84년 9월 6일에는『경기도 제2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후 1987년 11월 7일『성남시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88년 3월 17일『성남시 갑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1989년 5월 18일『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¹⁰²⁾

102) 성남시사편찬위원회(1993), 『성남시사 20주년』, 성남시 사편찬위원회, 669쪽.

2004년 1월 현재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별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1개, 경기도지사 선거구 1개, 성남시장 선거구 1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구 2개,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구 14개 등이다.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성남시 제1선거구에는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전1동, 수전2동, 단대동 등 6개 동(洞)이, 성남시 제2선거구에는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등 10개 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 선거구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선거구에 포함된 동(洞)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촌동·고등동·시흥동은 1개 선거구로 묶여 있다.



〈사진 3-7:52〉 개표참관인

2)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

1988년 3월 17일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서 성남시 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1989년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¹⁰³⁾

103)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70쪽.

2004년 1월 현재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별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1개, 경기도지사 선거구 1개, 성남시장 선거구 1개,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구 2개,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구 10개 등이다.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경기도의회의원선거 성남시 제 3선거구에는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등 5개 동(洞)이, 성남시 제 4선거구에는 은행1동, 은행2동,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등 5개 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 선거구는 경기도 의회 의원 선거 선거구에 포함된 동(洞)별로 구성되어 있다.

3)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

1991년 10월 25일 신설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개정에 의해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04년 1월 현재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별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2개, 경기도지사 선거구 1개, 성남시장 선거구 1개, 경기도 의회의원 선거구 4개, 그리고 성남시의회의원 선거구 17개 등이다.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성남시 분당구 갑·을 선거구로 구분되는데,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에는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이매1동, 이매2동, 서현1동, 서현2동, 수내1동, 수내2동, 판교동, 운중동 등 11개 동(洞)이 포함되고, 성남시 분당구 을 선거구에는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수내3동, 분당동, 구미동, 금곡동 등 7개 동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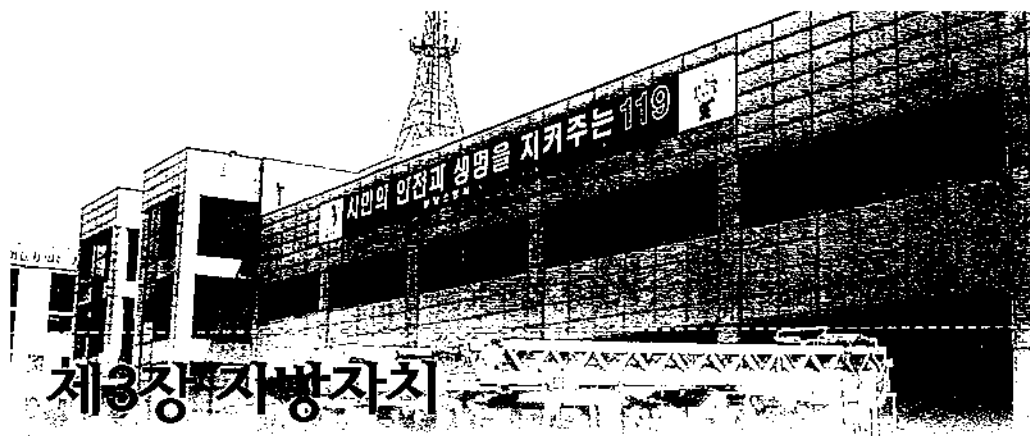
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성남시 제5선거구에는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이매1동, 이매2동 등 65 동(洞)이, 성남시 제6선거구에는 서현1동, 서현2

동, 수내1동, 수내2동, 판교동, 운중동 등 6개 동이, 성남시 제7선거구에는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3개 동이, 그리고 성남시 제8선거구에는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등 4개 동이 포함된다.

성남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는 경기도 의회의원선거 선거구에 포함된 동(洞)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교동·운중동은 1개 선거구로 묶여 있다.

◎ 집필 崔恒洵 경원대학교 교수

尹斗燮 경원대학교 책임연구원



제3장 지방자치 제도의 변천

1. 지방자치의 시작

1) 지방자치법 제정



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는 개원 초부터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행정부는 즉각 실시할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1948년 구성된 제헌 국회는 개원 초부터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정을 서둘렀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행정부는 이것을 즉각 실시할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국회와 행정부간의 대립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에 가서야 법률 제32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서울특별시·도 및 시·읍·면의 2종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도는 단층제, 시는 2층제, 읍·면은 3층제로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시키는 기관대립형(機關對立型)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은 독립제로 하며 ③ 시·읍·면장은 당해 시·읍·면의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시·읍·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시장·도지사는 국가공무원으로

하였다. ④ 지방의회는 4년 임기의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원 수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⑤ 지방의회 의결권에는 제한주의를 채택하고 시·읍·면에 있어서는 의회의 시·읍·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과 시·읍·면장의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여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1949년 12월15일 법 제정 당시의 법 논리상 모순점과 현실적인 불합리성, 그리고 필수규정의 미비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되었다.

제1차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지방의회 구성이 오래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권한 대행과 시·읍·면장의 선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② 지방의회가 성립될 때까지 그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의,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③ 시장은 대통령, 읍·면장은 도지사가 각각 임명하도록 한 것 등이다.

2) 1950년대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제1차 개정 이후에도 지방 선거는 바로 실시되지 않았고 약 2년 후인 1952년 피난 수도 부산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¹⁰⁴⁾ 당시는 정부가 제2대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가 야당세가 강한 국회에 의해 부결된 직후로서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 선거로는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가망이 없어지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정부측 입장을 지지해 줄 전국적인 세력기반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1952년 4월25일에는 시·읍·면 의회의원이, 그리고 5월 10일에는 도의회의원이 선출되어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민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이 당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378명, 읍의회 1,114명, 면의회 16,052명, 그리고 도의회 306명 등이다.¹⁰⁵⁾ 제1대 지방의회는 전국적으로 17개 시의회, 72개 읍의회, 1,308개 면의회, 그리고 7개 도의회가 구성되어 각기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시·읍·면 의회의 경우 시·읍·면장의 선출과 아울러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이 부여되어 의회 우위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¹⁰⁶⁾

104) 이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중 최초로 실시된 선거이나, 서울특별시와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가 미수복된 한국전쟁 기간 중이었다. 김병준(2002),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 법문사, 제 1편 제 3장.

105) 치안상태의 불안으로 전선 지역에 인접한 한수(漢水) 이북의 지역과 계엄령이 선포된 전라북도 관내의 지리산쪽 8개면(완주군 상동면, 남원군 산내면, 주천면, 순창군 쌍치면, 북오면, 구림면, 정읍군 산내면, 내장면)의 선거는 연기되었다.

106) 시·읍·면의회의당리 도의회는 도지사의 선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07)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단체장은 15일 이내에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의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단체장은 당연 퇴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를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원의 총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다시 이루어지면 퇴직하게 된다
http://www.rile.re.kr/gov_index.asp?sel_menu=m01(지방의회발전연구원 홈페이지).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지방의회 해산권이 부여되기는 하였으나 감독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처럼 자유롭지는 못했다. 제1대 지방의회의 경우 불신임 의결권의 남용으로 전국적으로 단체장이 빈번히 해임되고 교체되었다. 1952년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래 최초 3년 동안 의회해산은 18건인 데 비하여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66건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불신임 의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난 사직(辭職) 건수가 무려 1,166건이나 되었다. 당시 자신의 임기 만료 시까지 제임한 시·읍·면장은 40%에 불과하였고,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한 임기동안 3명이 교체되기도 하였다.¹⁰⁷⁾

제1대 지방의회가 가졌던 대표적인 권한으로는 조례 제정권, 예산 결산의 승인권, 청원수리 및 처리권, 의회규칙 제정권, 행정감사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 등이 있다.

1955년 12월12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중 ‘도(道) 행정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의 변경’(지방자치법 제116조)을 골자로 한 제2차 개정 지방자치법에 이어 제3차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종전대로 임명제로 하고 시·읍·면장과 동·리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며 ②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제도를 폐지하며 ③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것 등이다. 제3차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로 제1대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법제상 모순점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지 불과 5개월만인 1956년 7월8일 제4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야당측이 총퇴장한 가운데 자유당 의원 84표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는 중앙정치에 몰려 그 본래의 의의가 퇴색해 갔고 지방자치법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 갔다. 제4차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① 서울특별시와 도의회의원 선거구 책정기준을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② 4년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다.

제2차 지방선거는 1956년 8월 8일에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 및 시·읍·면장 선거를, 8월 13일에는 도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시·읍·면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1956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일부 시·읍·면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먼저 시장 선거는 전국 26개 시(市) 중에서 6개 시(강원도 1, 충북 2, 전북 2, 전남 1)에서만 실시되었으며 평균경쟁률은 4대 1이었다. 6개시의 평균 투표율은 86.6%였으며, 투표결과 자유당 4명, 무소속 2명 등이 당선되었다.

읍장 선거는 전국 76개 읍(邑) 중 30개 읍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102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이 3.3대 1이었다. 투표 결과 당선자는 무소속 20명, 자유당 8명, 민주당 1명, 국민당 1명 등이며, 이 중에서 경기 이천읍, 충북 제천읍, 경북 의성읍 등에서 3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경기도에서는 8개 읍 중 4개 읍에서 실시되었는데, 모두 14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이 3.6대 1이었다.

면장 선거는 전국의 1,389개 면 중 544개면에서 실시되었으며, 총 1,79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결과 당선자는 자유당 282명, 무소속 243명, 민주당 9명, 국민회 6명, 농민회 3명, 기타 1명 등이었으며, 이 중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87명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85개 면 중 106개면에서 총 32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 결과 무소속 58명, 자유당 46명, 민주당 1명, 농민회 1명 등이 당선되었으며, 이 중에서 29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¹⁰⁸⁾

108)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법문사, 96-98쪽.

제2대 지방의회에서는 전국 1,481개 시·읍·면 의회에서 16,954명이, 그리고 10개 시·도의회에서 437명이 선출되었는데, 제1대 의회의 경우와 달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구분하여 단체장의 의회 해산권과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신임 의결권이나 의회 해산권의 폐지는 의회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배격하게 하였다. 예컨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지방정부를 무예산 상태로 방치한다거나 부당한 의사 지연이나 부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행정을 마비시키기도 하였다.¹⁰⁹⁾

109) http://www.rilc.re.kr/gov_in dex.asp?sel_menu=m01(지방의회발전연구원 홈페이지).

1958년 12월26일 공포된 제 5차 개정 지방자치법은 시·읍·면장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직선제는 2년 반만에 폐지되었다.

3) 1960년대의 지방자치

1958년 자유당 정권에 의해 무리하게 강행된 2·4 파동 등으로 제 5차 개정을 본 지방자치법은 4·19 혁명으로 인하여 제6차 개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허정(許政) 과도정부 하에서 제4대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로 구성된 새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개헌을 한 후 선거를 치를 것인가로 논란을 하다가 결국 선개헌(先改憲) 후선거(後選舉)로 귀결을 보게 되었다. 1960년 6월15일 공포된 개정 헌법은 내각책임제 도입과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을 개정·삽입하였다. 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장은 그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기관 선임원칙'을 헌법으로 보장하였다.



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되 적어도 시·읍·면장은 그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기관 선임원칙'을 헌법으로 보장하였다.

1960년 11월1일 개정된 제6차 지방자치법은 ① 서울특별시·도지사, 시·읍·면장, 그리고 동·리 장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 전체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② 서울특별시와 도지사의 선거에는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는 반면, 시·읍·면장 선거에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며 ③ 부재자투표가 인정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후보자의 이름을 적는 기명투표제도를 채택하고 ④ 각급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종래의 인구비례제로부터 민의원 의원 선거구 기준으로 개정하며 ⑤ 선거권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피선거권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만30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만25세로 하는 것 등이다.

1960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56년의 경우와 달리 시·읍·면장 선거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및 도지사선거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4·19 혁명 후 정치적인 참여분위기가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시·읍·면장 선거는 1956년의 경우와 달리 전국의 시·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1960년 12월 26일 실시되었다.

먼저 시장 선거는 전국 26개시를 대상으로 11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평균 투표율은 54.6%였다. 투표 결과 당선자는 민주당이 12명, 무소속 9명, 신민당 5명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인천

과 수원의 2개시에서 총 1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리고 투표율은 52.6%로 저조하였으며, 투표 결과 민주당 출신이 2곳에서 모두 당선되었다.

읍장 선거는 전국 82개 읍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균 72.7%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 결과 당선자는 무소속이 56명으로 전체 읍장의 68.3%를 차지하였으며, 민주당 23명, 신민당 3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9개 읍장에 5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1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63.1%의 투표율을 보인 읍장 선거의 투표 결과 당선자는 무소속이 5명, 민주당 3명, 신민당 1명 등이다.

면장 선거는 전국 1,359개의 면을 대상으로 총 6,63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81.6%의 투표율을 나타낸 면장 선거에서 투표결과 당선자는 무소속이 1,045명으로 전체 면장의 76.9%를 차지했으며, 민주당 297명, 신민당 13명, 기타 5명 등이었다. 경기도에서는 184개 면을 대상으로 총 1,078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74.6%의 투표율을 나타낸 면장 선거의 투표 결과 당선자는 무소속이 154명으로 83.7%를 차지했으며, 민주당이 27명, 신민당 1명, 기타 2명 등이다.

1960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서울특별시 시장 및 도지사 선거는 12월 29일 전국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총 8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투표율은 전국 평균 38.8%로 극히 저조하였으며, 투표 결과 당선자는 민주당 6명, 신민당 3명, 무소속 1명 등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9명이 입후보하였는데, 투표결과 당선자는 민주당 소속 신광균(申光均)이었다.¹¹⁰⁾

제3대 지방의회는 1960년 12월부터 1961년 5월까지로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단체장과 의회가 소속정당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극심하던 시기이었다. 당시 시·읍·면 의회에는 무소속의 진출이 시의회 56.7%, 읍의회 82.7%, 면의회 81.8% 등으로 두드러졌으며, 도의회의 경우는 충남을 비롯한 9개 도에서 무소속이 우세한 형편이었다. 따라서 무소속 의원을 여당과 야당이 각기 자기편으로 흡수하려는 매수 운동이 심화되었다.¹¹¹⁾

장면(張勉) 정부의 초기 구상은 시·읍·면의 완전 자치화로 행정의 민

110) 위의 책, 98~101쪽; 김병준, 앞의 책, 208~209쪽.

111) 정세욱, 앞의 책, 97~100쪽.



정면 정부의 초기 구성은 시·읍·면의 완전 자치화로 행정의 민주화를 기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국가에서 임명함으로써 시급한 경제개발의 능률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당시의 지방자치 실패의 책임에 대해 주로 제도와 운영상의 결함, 무능력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국민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 그리고 주민의 부족한 자치능력 등으로 그 원인이 지적되어 왔다.

주화를 기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국가에서 임명함으로써 시급한 경제개발의 능률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제1공화국 시절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대정부 민주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완전 직선을 요구하였던 대국민 공약을 준수해야만 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1952-1961년간의 시작기는 흔히 자치의 실패였다는 평가가 통설처럼 되어있다. 당시의 지방자치 실패의 책임에 대해 주로 제도와 운영상의 결함, 무능력한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 국민의 낮은 정치의식 수준, 그리고 주민의 부족한 자치능력 등으로 그 원인이 지적되어 왔다. 물론 지방자치 실패의 원인이 제도상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아닌 집권자 측의 필요에 따라 출발하였고 그 시행과정에서도 시작 당시부터 쪼아진 정치적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다. 집권자 측은 지방자치단체를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지해 줄 하나의 지방정치의 기반 정도로 생각하였다.

정치권력의 개입은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는데, 선거에서의 관권 개입은 전반적으로 높지 못했던 당시의 민도(民度)를 더욱 낮게 평가하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투표 과정에서 주민들이 관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방주민의 민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한국 특유의 정치·문화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창기의 지방자치의 실패원인은 자치의 실패라기보다는 관치(官治)의 실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1950년대는 지방자치가 정착하고 발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자치 실시 10년 동안 자치를 관치로 이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끊임없는 정치적 시도와 함께 미비한 환경적 요인까지 겹쳐서 지방자치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과 환경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경험이 결코 부질없는 시행착오가 아니라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자치를 연습하고 익히는 좋은 훈련이 되었다.

2. 지방자치의 중단

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제1공화국에 이어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 하에서 크게 발전할 뻔 했던 지방자치는 1961년 박정희를 앞세운 5·16 군사혁명에 의하여 그 막을 내렸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해산됨으로써 지방자치는 바로 중단되었으며, 곧이어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말살되고 말았다.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될 때까지 30여 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히 중앙정부의 단순한 업무수행기관으로 전락하였으며, 자치사무의 처리는 일방적인 중앙의 지시와 명령에 종속되었다.

지방자치의 중단을 가져온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 되었으며, 지방행정의 개편 등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임시조치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정비되었다. 즉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1961년 제정·공포된 이후 1981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본래 지방자치법의 기능은 정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제 4공화국에 와서 지방자치는 유신헌법에 의해 조국 통일 시까지 실시가 유예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중 관계조문 또한 폐지되었다.

2) 1960~70년대의 지방자치

1961년에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지방자치 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중단을 공식화 했다. 먼저 지방자치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읍·면을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일반 지방행정기관이었던 군(郡)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였다. 선출직이던 읍·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중단하는 내용으로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와 도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으로, 시와 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읍·면을 일반 지방행정기관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 일반 지방행정기관이었던 군(郡)을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였다. 선출직이던 읍·면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가 지닌 민주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참여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군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군사혁명 지도부는 지방자치제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했다. 지방자치가 지닌 민주적 가치와 지역주민의 참여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들어 이를 일시 중단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들로서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제3공화국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절을 두어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했지만,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게 하였다.

새로운 헌법에 의해 공식 출범한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개발 논리와 함께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계획경제의 틀을 확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 관료조직을 동원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였다. 부국강병의 논리로 민주주의의 논리를 밀어내고, 경제성장을 통해 집권과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1972년 10월유신과 함께 제4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국회의원의 1/3이 유정회 의원이란 이름으로 지명되는 체계가 유지되었으며, 지방자치 역시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시기였다. 유신헌법 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 실시 가능성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부정되었다.¹¹²⁾

112) 1973년 1월15일 제7차 지방자치법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만을 담고 있었을 뿐이며 지방자치법의 기능은 전무하였다.

3) 1980년대의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0-70년대의 암흑기를 지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면서 간접선거를 통해 들어선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에서도 지방자치를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상황논리를 들어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그 부칙에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사실상 부정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1985년 지방자치제 실시 연구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게 하고,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을 시도한 점 등은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7년 6월의 시민항쟁과 6·29 선언에 이어 탄생한 10월 27일의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시·군·자치구 의회를 우선 구성하고, 그 다음 시·도 의회를 구성하되 실시시기는 잠정적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에 위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노태우 정권 출범 직후인 1988년 4월 6일 오랫동안 시문화되었던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5·16 이후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어 왔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되었다.¹¹³⁾

6·29 선언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재개 근거가 마련되었다. 제6공화국 헌법을 통해 들어선 노태우 정부는 집권 후 지방자치 실시를 전제로 한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법률안은 1988년 4월 6일 공포되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기본 틀이 된 제8차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서울특별시(特別市)와 직할시(直轄市) 및 도(道)를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시(市)와 군(郡), 특별시와 직할시내의 자치구(自治區)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모두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기관 분리형(機關分離型)을 채택했고, 사무배분과 관련해서는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했다.

1989년 12월 19일 제9차 개정 지방자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하되, 최초로 선출된 시·도지사의 임기 만료까지는 종전의 임명제로 하며 ② 지방의회에 행정사무 감사권을 부여하고 ③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0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④ 농지개량조합, 산림



1985년 지방자치제 실시연구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게 하고,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을 시도한 점 등은 제 3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13) 김병준, 앞의 책, 50-59쪽; 박용(1989), 「과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실태와 교훈」(1) 「지방행정」 10월호; 장병구(2000),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52쪽.



6.29 선언 이후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재개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합, 영업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임·직원을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기형적 지방자치법이 되고 말았다.

114) 제10차 개정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1990년 12월 31일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도 함께 공포되었다. 정세욱, 앞의 책, 108-109쪽.

지방자치법은 1990년 12월에 제10차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각각 실시하는 것 등이었다.¹¹⁴⁾

3. 지방화 시대의 개막

1) 지방자치의 재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재개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자치법의 제9차·10차 개정을 통하여 연기되어 오던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難題)들을 겪으면서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그리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같은 해 6월 20일에 실시되었다. 5·16 군사혁명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만의 일이었다.¹¹⁵⁾

115) 김병준, 앞의 책, 59-60.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하여 1991년 4월 15일 시·군·자치구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같은 해 7월 8일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4,304명의 기초의회 의원과 866명의 광역의회 의원에 의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정부와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와 복잡한 정치일정 등으로 수차례 연기된 후 1995년 6월 27일 제2대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선거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선거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1991년의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의 재개를 공표했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만을 실시함으로써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2)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

1991년의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의 재개를 공표했지만 지방의회 의원 선

거민을 실시함으로써 절름발이 지방자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지방자치법은 1994년 3월 제11차 개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통합(都農統合) 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시에는 동, 읍·면을 두도록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 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제도를 유지하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의정 활동비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⑤ 특별시와 직할시의 부시장과 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1인은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1인은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며, 시·군·자치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였다. ⑥ 시·도의 행정기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군·자치구의 행정기구는 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⑦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⑧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1995년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통일한 것¹¹⁶⁾ 등이다.

지방자치법은 1994년 12월에 제12차 개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며, ②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자치구 외에 군(郡)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농통합 형태



〈사진 3-7-53〉
제2회 지방동시선거
안내 현수막

116)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1995년 선거에 한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간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적용된 것이다.

의 시의 구(區)에는 동 외에 읍·면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임은 3기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 제한 대상에 농·수·축협 등 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의 임직원 등을 추가하였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거나 직접 임용하도록 하였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완화하는 것 등이다. 제12차 개정 지방자치법은 표면상의 개정 취지와는 달리 개정 법률의 일부 규정이 오히려 전면적인 지방선거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비민주적인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비판에 따라 재개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은 1995년 1월 제13차 개정을 맞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5급 이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용하도록 한 것 등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는 1995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외형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 의해 실시되었던 1991년의 지방선거와 달리 1995년의 선거는 1994년에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법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묶은 통합 선거법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 모두에 정당의 후보추천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정당의 후보추천 문제는 1995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한해 정당추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었다.

김영삼 정부 아래에서 치러진 6·27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전국 17,230개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이 날 투표는 4가지 색깔의 투표용지를 두 차례로 나누어 기표하고 같은 색깔의 투표함에 넣는 방식에 따라 1차 투표에서 시·도 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2차 투표에서 시장·도지사와 군수·구청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새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법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묶은 통합 선거법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6·27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2003년 7월까지 여덟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개정은 1999년 8월의 제18차 개정 지방자치법이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① 20세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주민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결산 일정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④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을 지방의회의 위원회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또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권한대행 하도록 한 것 등이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방화 시대가 개막되었고, 노태우 대통령 이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현하여 지방화의 정착을 추진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대통령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시기의 지방자치는 그 간의 권위주의적인 정치·행정 문화에 바탕을 둔 경제성·능률성·효과성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민주성의 정립에 최대의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민주성의 강조와 함께 지방자치 이념으로 중시했던 측면은 공공성의 보장이다. 지방자치 이념으로서의 공공성은 지방자치를 중앙이나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 보호하고 지방자치가 공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인데,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정(地方議政)에 대한 감시활동과 주민참여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지방자치는 그 간의 권위주의적인 정치·행정 문화에 바탕을 둔 경제성·능률성·효과성 차원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민주성의 정립에 최대의 중점을 두었다.

제2절 지방선거

1. 경기도지사 선거

1)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개황

1995년에 실시된 6·27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율은 68.4%로 나타났는데, 이 투표율은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선거 때의 투표율(55.0%, 58.9%)보다는 높았지만 1992년 대통령 선거 때의 투표율(81.9%)과 총선시의 투표율(71.9%)보다는 낮았다. 투표율을 시·도 별로 보면 제주도가 80.5%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가 62.0%로 가장 낮았는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도시 지역의 투표율은 낮고 도(道) 지역의 투표율은 비교적 높았다.¹¹⁷⁾

제1대 시장·도지사 선거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에 총 5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86]과 같이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등 5곳에서는 민주자유당 후보가, 서울, 광주, 전북, 전남 등의 4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그리고 대전, 강원, 충북, 충남 등의 4곳에서는 자유민주연합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¹¹⁸⁾

제1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결과(1995)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	1	-	-	1
부산	1	-	-	-	1
대구	-	-	-	1	1
인천	1	-	-	-	1
광주	-	1	-	-	1
대전	-	-	1	-	1
경기	1	-	-	-	1
강원	-	-	1	-	1
충북	-	-	1	-	1
충남	-	-	1	-	1
전북	-	1	-	-	1
전남	-	1	-	-	1
경북	1	-	-	-	1
경남	1	-	-	-	1

117) 황아란·윤두섭(1995), 「6.27 4대 지방선거 결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쪽.

118) 내무부(1995),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선자 현황」, 내무부 선거업무자료 IX, 12-13쪽;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법문사, 123쪽.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	1	-	-	1
부산	1	-	-	-	1
합계	5 (33.3)	4 (26.7)	4 (26.7)	2 (13.3)	15 (100)

21세기를 열어갈 지방자치단체의 일꾼을 뽑는 1998년 6월 4일의 지방선거는 3년 전의 '6·27지방선거' 때에 비해 공정성 및 공명성의 측면에서는 다소 나아졌으나, 과열·혼탁·금품살포 등을 둘러싼 말썽은 두드러지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질은 역시 저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1998년에 실시된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196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설립 이래 전국 규모의 역대 선거 중 가장 낮은 52.6%로서,¹¹⁹⁾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 때의 68.4%보다 15.8%, 최근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1996년 4·11 총선(63.9%)보다 11.3% 낮은 것이다. 또한 1991년 3월 11일 기초의회의원 선거(55.0%)와 6월 20일 광역의회의원 선거(58.9%)의 투표율보다도 저조하였다.

제2대 시장·도지사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총 4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87]와 같이 한나라당 7명, 국민회의 6명,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3명 등이 당선되었다.¹²⁰⁾

제2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선거결과(1998)						
구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계
서울	-	1	-	-	-	1
부산	1	-	-	-	-	1
대구	1	-	-	-	-	1
인천	-	-	1	-	-	1
광주	-	1	-	-	-	1
대전	1	-	-	-	-	1
울산	1	-	-	-	-	1
경기	-	1	-	-	-	1
강원	1	-	-	-	-	1
충북	-	-	1	-	-	1
충남	-	-	1	-	-	1
전북	-	1	-	-	-	1
전남	-	1	-	-	-	1
경북	1	-	-	-	-	1

119) 기록상으로는 1960년 12월 29일의 서울특별시장 및 도지사선거가 33.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으나,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내린 폭설, 기명 투표 방식 등의 영향이 컸다.

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8a),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선자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계
경남	1	-	-	-	-	1
제주	-	1	-	-	-	1
합계	7	6	3	-	-	16
	(43.3)	(37.5)	(18.7)			(100)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6.13 지방선거는 전국 이래 전국규모 선거 중 최저인 4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주권행사를 포기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1995년 지방선거(68.4%)에 비해서는 20.4%, 1998년 지방선거 때(52.7%)보다는 4.8% 낮은 것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낮은 투표율이 후보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접전 지역이었던 광역시 지역의 투표율은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도(道)보다 유난히 낮았고,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저인 38.6%에 그쳐 최대 투표율을 보인 제주도보다 27.5%나 뒤졌다.

투표율 저조의 원인은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선거 무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연이어 터진 권력형 비리사건과 지방자치단체장 중 40여명이 각종 비리혐의 등에 연루된 것은 정치혐오 냉소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선거전에 대선 후보자들이 앞장서서 선거를 주도하는 바람에 정작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명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았고, 지역별 현안들도 중앙정치의 공방에 묻힌 측면이 컸다. 월드컵 열기 또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멀리하는 데 한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3대 시장·도지사 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총 55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88]과 같이 한나라당 11명, 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1명 등이 당선되었다.¹²¹⁾

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명부」, 451-457쪽.

제3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2002)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서울	1	-	-	-	-	1
부산	1	-	-	-	-	1
대구	1	-	-	-	-	1
인천	1	-	-	-	-	1
광주	-	1	-	-	-	1
대전	1	-	-	-	-	1
울산	1	-	-	-	-	1
경기	1	-	-	-	-	1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강원	1	-	-	-	-	1
충북	1	-	-	-	-	1
충남	-	-	1	-	-	1
전북	-	1	-	-	-	1
전남	-	1	-	-	-	1
경북	1	-	-	-	-	1
경남	1	-	-	-	-	1
제주	-	1	-	-	-	1
합계	11 (68.8)	4 (25.0)	1 (6.2)	-	-	16 (100)

2)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민자당의 이인제, 민주당의 장경우, 자민련의 김문원, 무소속 임사빈 등 4명이 입후보하였으며, 63.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89]와 같이 민주자유당의 이인제(李仁濟) 후보가 1,264,914표를 얻어 민주당의 장경우 후보보다 341,845표를 앞서 당선되었다.¹²²⁾

투표율 60.6%를 나타낸 성남시 지역에서는 투표결과 [표 7-90]와 같이 민자당의 이인제 후보가 133,402표를 득표하여 민주당 장경우 후보의 120,548표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성남시의 경우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민주당의 장경우 후보가 이인제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며, 반면 분당구에서는 민자당의 이인제 후보가 장경우 후보를 큰 표차이로 앞질렀다.

표 7-89 제1대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결과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이인제 (李仁濟)	민자당	남	46	대학졸업	정치인	1,264,914
장경우 (張慶宇)	민주당	남	53	대학졸업	정치인	923,069
김문원 (金文元)	자민련	남	54	대학졸업	정치인	316,637
임사빈 (任仕彬)	무소속	남	59	대학졸업	정치인	613,624

122) <http://homs.nec.go.kr/7070/sinfo/sinfo.htm>(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제1대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명부).

123) 경기도지사 선거서 선거인수는 5,043,174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3,188,871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70,627표이며, 가권수는 1,854,303표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3,118,244표였다.

표 7-90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득표현황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민자당 이인제	유효투표수 후보자별 득표수		무소속 임사빈	합계	무효 투표수	기권수
				민주당 장경우	자민련 김문원				
성남시 합계	553,044	340,862	133,402	120,548	28,782	24,380	225,877	4,014	212,182
성남시 수정구	181,291	110,971	39,330	42,027	9,878	17,439	108,674	2,297	70,320
성남시 중원구	190,201	113,965	41,540	43,186	8,992	17,813	111,531	2,434	76,236
성남시 분당구	181,552	115,926	52,532	35,335	9,912	16,567	114,346	1,580	65,626

3)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와 국민회의의 임창열 후보의 맞대결로 관심이 높았던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44.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91]과 같이 국민회의의 임창열(林昌烈) 후보가 1,549,189표를 획득하여 1,303,340표를 얻은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를 물리치고 경기도 지사에 당선되었다.

투표율 41.7%를 나타낸 성남시 지역에서는 투표결과 [표 7-91]과 같이 국민회의의 임창열 후보가 174,613표를 득표하여 손학규 후보의 140,768표를 앞섰다. 성남시의 경우 제1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와 같이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에서는 국민회의의 임창열 후보가 손학규 후보를 크게 앞선 반면, 신시가지인 분당구에서는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가 임창열 후보를 앞질렀다.

124) 경기도지사선거시 선거인수는 5,800,425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2,800,202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47,673표이며, 기권수는 2,900,223표이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2,852,529표였다.

표 7-91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결과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손학규 (孫鶴圭)	한나라당	남	50	대학졸업	정당인	1,303,340
임창열 (林昌烈)	국민회의	남	54	대학졸업	정치인	1,549,189

〈표 7-92〉

제2대 경기도지사 선거 성남시 득표현황

선거인구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합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손학규	국민회의 임창열			
성남시 합계	631,622	319,954	140,768	174,613	315,381	4,573	311,668
성남시 수정구	182,711	90,928	34,284	55,040	89,324	1,604	91,783
성남시 중원구	190,779	94,722	35,211	57,913	93,124	1,598	96,057
성남시 분당구	258,132	134,304	71,273	61,660	132,933	1,371	123,828

4) 제3대 경기도지사 선거

제3대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한나라당의 손학규, 민주당의 진념, 민주노동당의 김준기 등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 44.6%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93]과 같이 한나라당의 손학규(孫鶴圭) 후보가 1,744,291표를 획득하여 1,075,243표를 얻은 진념 후보를 큰 표 차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투표율 41.7%를 나타낸 성남시 지역의 투표결과 [표 7-94]와 같이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는 160,639표를 득표하여 민주당의 진념 후보의 112,547표를 앞섰다. 성남시의 경우 한나라당의 손학규 후보는 제1대 및 제2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때와 달리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신시가지인 분당구 등에서 민주당의 진념 후보를 모두 앞섰다.

〈표 7-93〉

제3대 경기도지사 선거 투표결과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손학규 (孫鶴圭)	한나라당	남	54	대학원졸업	정당인	1,744,291
진념 (陳念)	민주당	남	61	대학졸업	정당인	1,075,243
김준기 (金準基)	민주노동당	남	63	대학졸업	정당인	168,357

125) 경기도지사 선거시 선거인수는 6,777,575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3,024,844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36,953표이며, 기권수는 3,752,731표였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2,987,891표였다.

《표 7-84》

제3대 경기도지사선거성명제 득표인수

선거구명	선거인수	투표자수	유효투표수			합계	무효투표수	기권수
			후보자별 득표수					
			한나라당 손학규	민주당 진념	민주노동당 김준기			
성남시 합계	673,050	290,074	160,639	112,547	13,945	287,131	2,943	382,976
성남시 수정구	192,566	78,431	37,715	34,523	5,176	77,414	1,017	114,135
성남시 중원구	199,094	76,103	36,501	33,577	4,923	75,001	1,102	122,991
성남시 분당구	281,390	135,540	86,423	44,447	3,846	134,716	824	145,850

5) 역대 민선 경기도지사 현황

구 분	성 명	약 력
	이인제(李仁濟) (민선 제1대)	· 서울대 법대 졸업 · 대전지방법원 판사 · 제13대~14대, 16대 국회의원
	임창렬(林昌烈) (민선 제2대)	· 윌리엄스칼리지 개발경제학과 졸업 · 통상산업부장관 ·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손학규(孫鶴圭) (민선 제3대)	·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영국 옥스퍼드대 졸업(정치학박사) · 보건복지부 장관, 제14대~16대 국회의원

2. 성남시장 선거

1)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개황

제1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서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 총 94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민자당 70명(30.4%), 민주당 84명(36.5%), 자민련 23명(10.0%), 그리고 무소속 53명(23.1%)이 각각 당선되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5개 구청장 중에서 민주당이 23개 지역에서 당선되었으며, 민자당은 2개 지역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¹²⁶⁾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보면 [표 7-95]와 같다.

126) 내무부, 앞의 책, 12-13쪽.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2	23	-	-	25
부산	14	-	-	2	16
대구	2	-	1	5	8
인천	5	5	-	-	10
광주	-	5	-	-	5
대전	-	1	4	-	5
경기	13	11	-	7	31
강원	9	1	1	7	18
충북	4	2	2	3	11
충남	-	-	15	-	15
전북	-	13	-	1	14
전남	-	22	-	2	24
경북	8	1	-	14	23
경남	10	-	-	11	21
제주	3	-	-	1	4
합계	70 (30.4)	84 (36.5)	23 (10.0)	53 (23.1)	230 (100)

제2대 시장·군수·구청장선거는 전국 232개 시·군·구에 총 67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96]과 같이 국민회의 84명, 한나라당 74명, 자민련 29명, 그리고 국민신당 1명 등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등에서 공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이 44개 시·군·구에서 당선되어 선전하는 현상을 보였다.

표 7-96 제2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1998)

구분	한나라당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계
서울	5	19	1	-	-	25
부산	11	-	-	-	5	16
대구	7	-	-	-	1	8
인천	-	9	1	-	-	10
광주	-	5	-	-	-	5
대전	-	1	4	-	-	5
울산	3	-	-	-	2	5
경기	6	20	2	-	3	31
강원	13	1	2	-	2	18
충북	-	2	6	-	3	11
충남	-	-	11	1	3	15
전북	-	9	-	-	5	14
전남	-	15	-	-	7	22
경북	14	1	2	-	6	23
경남	14	-	-	-	6	20
제주	1	2	-	-	1	4
합계	74 (31.9)	84 (36.2)	29 (12.5)	1 (0.4)	44 (19.0)	232 (100)

제3대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는 전국 232개 시·군·구에 75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97]과 같이 한나라당이 140명, 민주당 44명, 자민련 16명, 민주노동당 2명, 그리고 무소속 30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60%를 상회하는 당선율을 보였는데, 이는 역대 지방선거 및 총선에서 유례가 없던 일이었다.

표 7-97 제3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2002)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서울	22	3	-	-	-	25
부산	13	-	-	-	3	16
대구	8	-	-	-	-	8
인천	8	2	-	-	-	10
광주	-	4	-	-	1	5
대전	-	-	5	-	-	5
울산	3	-	-	2	-	5
경기	24	4	1	-	2	31
강원	15	2	-	-	1	18
충북	5	1	3	-	2	11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충남	4	2	7	-	2	15
전북	-	9	-	-	5	14
전남	-	16	-	-	6	22
경북	21	-	-	-	2	23
경남	16	-	-	-	4	20
제주	1	1	-	-	2	4
합계	140 (60.3)	44 (19.0)	16 (6.9)	2 (0.9)	30 (12.9)	232 (100)

2) 제1대 성남시장 선거

제1대 성남시장 선거에는 민자당의 김종태, 민주당의 김병량, 무소속의 오성수 등 7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¹²⁷⁾ 60.6%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98]와 같이 무소속의 오성수(吳誠洙) 후보가 130,374표를 얻어 122,797표를 얻은 민주당의 김병량 후보를 제치고 성남 시장에 당선되었다.



〈사진 3-7: 54〉 민선 1대 시장 오성수

127)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제1대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명부).

[표 7-98] 제1대 성남시장 투표결과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김종태 (金鍾泰)	민자당	남	57	대학졸업	정치인	60,916
김병량 (金炳亮)	민주당	남	59	대학졸업	정치인	122,797
김영복 (金泳福)	무소속	남	53	대학원졸업	공익사업	12,027
오성수 (吳誠洙)	무소속	남	60	대학원 수료	상업	130,374
유홍식 (柳弘植)	무소속	남	48	대학원졸업	상업	3,532
이용균 (李龍均)	무소속	남	46	대학원졸업	정치인	2,382
전해중 (全海重)	무소속	남	52	대학원수료	건설업	2,703
합계(유효투표수)						334,731

128) 성남시장 선거시 선거인수는 552,824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340,853명이었다. 무효투표수는 6,122표이며, 기권수는 212,071표이었다. 성남시장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334,731표이었다.

129)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데이터베이스 제2대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명부).



〈사진 3-7: 55〉 민선 2대 시장 김병량

3) 제2대 성남시장 선거

제2대 성남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황한섭, 국민회의의 김병량 후보, 무소속의 오성수 등 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였으며,¹²⁹⁾ 50.5%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99]과 같이 제1대 시장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입후보한 국민회의의 김병량(金炳亮) 후보가 151,475표를 얻어 초대 민선시장이었었던 오성수 후보를 35,352표 차로 누르고 시장에 당선되었다.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황한섭 (黃漢燮)	한나라당	남	52	전문대졸퇴	정당인	48,220
김병량 (金炳亮)	국민회의	남	62	대학원졸업	정치인	151,475
오성수 (吳誠洙)	무소속	남	63	대학 중퇴	성남시장	116,123
합계(유효투표수)						315,818

4) 제3대 성남시장 선거



〈사진 3-7: 56〉 민선 3대 시장 이대엽

41.7%의 투표율을 보인 제3대 성남시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대엽, 민주당의 김병량, 자민련의 최인식 등 5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으며, 41.7%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결과 [표 7-100]와 같이 한나라당의 이대엽 후보가 154,622표를 득표하여 110,408표를 얻은 전 시장이었었던 민주당의 김병량 후보를 44,214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이대엽 (李大煥)	한나라당	남	67	대학졸업	정당인	154,622

130) 성남시장 선거시 선거인수는 631,622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319,951명이었으며, 무효투표수는 4,133표이며, 기권수는 311,671표이었다. 성남시장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315,818표이었다.

131) 성남시장 선거시 선거인수는 673,050명이었으며, 투표자수는 290,073명이었으며, 무효투표수는 3,876표이며, 기권수는 382,977표이었다. 성남시장 선거의 유효투표수는 286,197표이었다.

후보자	소속정당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김병량 (金炳亮)	민주당	남	66	대학졸업	성남시장	110,408
최인식 (崔仁植)	자민련	남	46	대학원졸업	정당인	6,672
최상면 (崔尙勉)	민국당	남	47	대학 졸업	경영컨설턴트	3,820
정원섭 (鄭元燮)	무소속	남	49	대학원졸업	정치인	10,675
합계(유효투표수)						286,197

5) 역대 민선 성남시장 현황

구 분	성 명	약 력
제1대	오성수(吳誠洙)	· 건국대 행정대학원수료 · 광명시장 · 성남시장 · 원광대 대학원 졸업
제2대	김병량(金炳亮)	· 경기도 부지사 · 성남시장 · 경남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제3대	이대엽(李大燾)	· 신정당 부총재 · 제11대~13대 국회의원 · 한· 일 의원연맹 상임간사

3.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1) 광역지방의회의원 선거 개황

1961년 5월 16일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관치 지방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명맥만을 유지하여 오다가 1990년 12월말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30년이란 한 세대 휴면을 깨고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법에 의하여 1991년 3월26일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6월20일 시·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투표율은 전국 평

132) 한국지방행정연구(1991).
『지방의회의원 선거
분석을 위한 연구』, 182쪽.

균 58.9%를 나타냈다. 투표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74.7%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특별시가 52.4%로 가장 낮았다.

제3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에 총 2,877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101]와 같이 민자당 564명, 신민당 165명, 민주당 21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15명 등이 당선되었다.¹³²⁾

제3대 광역의회 의원선거 결과 (1991)						
구분	민자당	신민당	민주당	민중당	무소속	계
서울	110	21	1	-	-	132
부산	50	-	1	-	-	51
대구	26	-	-	-	2	28
인천	20	1	3	-	3	27
광주	-	19	-	-	4	23
대전	14	2	1	-	6	23
경기	94	3	2	-	18	117
강원	34	-	1	1	18	54
충북	31	-	2	-	5	38
충남	37	-	4	-	14	55
전북	-	51	-	-	1	52
전남	1	67	-	-	5	73
경북	66	-	5	-	16	87
경남	73	1	1	-	14	89
제주	8	-	-	-	9	17
합계	564 (65.2)	165 (19.0)	21 (2.4)	1 (0.1)	115 (13.3)	866 (100)



제1대(1956. 8. 13)
제2대(1960. 12. 12)
1952년 5월 10일 실시한 도
의회 의원선거는 서울시와 경
기도, 강원도 지역에서는 실시
하지 못하였다.

제4대 시·도의회 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68.4%로 나타났는데, 지난 1991년 6월20일 시·도의회 의원선거(58.9%)에 비해 9.5% 상승하였다. 이는 과거 52~60년대 서울특별시와 도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투표율 평균 8.1%(1952년 81.0%, 1956년 86.0%, 1960년 67.4%)보다는 낮은 편이나, 1991년의 선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제4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15개 시·도에 총 2,446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102]과 같이 민자당 286명, 민주당 352명, 자민련 86명, 무소속 151명 등이 당선되었다.

표 7-102 제4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1995)

구분	민자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11	122	-	-	133
부산	50	-	-	5	55
대구	8	-	7	22	37
인천	13	18	-	1	32
광주	-	23	-	-	23
대전	-	-	23	-	23
경기	52	57	-	14	123
강원	27	6	1	18	52
충북	12	10	4	10	36
충남	3	2	49	1	55
전북	-	49	-	3	52
전남	1	62	-	5	68
경북	50	1	2	31	84
경남	52	-	-	33	85
제주	7	2	-	8	17
합계	286 (32.7)	352 (40.2)	86 (9.8)	151 (17.3)	875 (100)

제5대 지방의회의원 선거도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와 같이 별도 시행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의원과 단체장 선거 등 4대 지방선거를 1998년 6월4일 동시에 실시하였다.

시·도의회의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2.4%로서 지난 1995년 시·도의회의원 선거(68.4%)에 비해 낮아졌다. 이는 과거 1952-60년대의 서울특별시와 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의 평균 투표율 78.1%(1952년 81.0%, 1956년 86.0%, 1960년 67.4%)보다 낮은 편이며, 1991년과 1995년의 선거 때보다 현저하게 낮다.

제5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총 1,57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103]과 같이 한나라당 224명, 새정치국민회의 271명, 자민련 82명, 무소속 39명 등이 당선되었다.

표 7-103 제5대 광역의회의원선거 결과(1998)

구분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무소속	계
서울	15	78	1	-	94
부산	43	-	1	-	44

구분	한나라당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무소속	계
대구	26	-	-	-	26
인천	4	20	1	1	26
광주	-	14	-	-	14
대전	-	-	14	-	14
울산	9	-	-	5	14
경기	18	61	9	-	88
강원	21	12	3	6	42
충북	-	3	17	4	24
충남	-	1	30	1	32
전북	-	31	-	2	34
전남	-	42	1	7	50
경북	44	-	5	5	54
경남	41	-	-	5	46
제주	3	8	-	3	14
합계	224 (36.4)	271 (44.0)	82 (13.3)	39 (6.3)	616 (100)

2002년 6월 13일 실시된 제 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선거사상 최저라는 48.8%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그 막을 내렸다. 월드컵의 열기에 묻혀 투표율이 저조하지는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2년의 지방선거의 투표 결과를 보면, 최근에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도시지역의 투표율이 낮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울산을 제외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투표율이 각각 45.7%, 42.4%로서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으며, 인천광역시 39.4%라는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반면 도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표율이 50%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제주도가 69.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제6대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총 1,531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투표결과 [표 7-98]과 같이 한나라당 431명, 민주당 121명, 자민련 29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29명 등이 당선되었다.

표 7-104 제3대 경기도의회의원선거구별(1991)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무소속	계
서울	82	10	-	-	-	92
부산	40	-	-	-	-	40
대구	24	-	-	-	-	24
인천	23	2	-	-	1	26
광주	-	16	-	-	-	16
대전	8	-	8	-	-	16
울산	13	-	-	2	1	16
경기	84	7	-	-	3	94
강원	31	6	-	-	2	39
충북	19	1	2	-	2	24
충남	7	3	19	-	3	32
전북	-	27	-	-	5	32
전남	-	44	-	-	2	46
경북	47	-	-	-	4	51
경남	44	-	-	-	4	48
제주	9	5	-	-	2	16
합계	431 (70.8)	121 (19.8)	29 (4.8)	2 (0.3)	29 (4.3)	612 (100)

2)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총 114개 선거구에서 117명을 선출하는데, 성남시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6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23명이 입후보하여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전국 경쟁률(3.3대 1)이나 경기도 전체의 경쟁률(3.2대 1)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었다.

투표결과 [표 7-105]와 같이 민자당 후보가 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신민당은 성남시 제 6선거구 한 곳에서만 당선되었다.

표 7-105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성남시선거구별(1991.6.20)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1	민자당	강대웅 (姜大雄)	남	49	대학원수료	마을금고 이사장	10,817
성남시 제2	민자당	유중백 (柳重伯)	남	51	대학원수료	건설업	12,636
성남시 제3	민자당	금옥례 (琴玉禮)	여	56	대학졸업	의사	14,011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4	민자당	안상문 (安相文)	남	51	대학원수료	신용협동 조합이사장	11,610
성남시 제5	민자당	정원립 (鄭完立)	남	46	대학원수료	회사대표	12,984
성남시 제6	신민당	정형만 (鄭亨晩)	남	40	대학원수료	정당인	9,635

3)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의원정수 총 123명 중 성남시에서는 8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8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27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3.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61.7%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기도의회의원 투표결과 [표 7-106]과 같이 민주당이 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민자당은 1명에 불과했다.

표 7-106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선거결과(성남시선거구)(95.6.21)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1	민주당	김종식 (金鐘湜)	남	50	고등학교 졸업	정당인	16,794
성남시 제2	민주당	손정문 (孫正文)	남	58	고등학교 졸업	정치인	12,921
성남시 제3	민주당	허재안 (許載顔)	남	42	대학원수료	정당인	18,140
성남시 제4	민주당	이일남 (李一男)	남	49	대학졸업	공업	14,375
성남시 제5	민주당	이상락 (李相樂)	남	42	대학원수료	기타	25,444
성남시 제6	민주당	정형만 (鄭亨晩)	남	44	대학원수료	정당인	19,303
성남시 제7	민자당	강대기 (姜大基)	남	43	대학원졸업	기타	22,060
성남시 제8	민주당	정소앙 (鄭素昂)	남	29	대학원재학	정당인	22,941

4)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의원정수 총 88명 중 성남시에서는 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6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13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50%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결과 [표 7-107]과 같이 새정치국민회의 4명, 한나라당 2명이 당선되었다.

[표 7-107]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선거구표(1995.6.4)							
선거구명	정당명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1	국민회의	손정문 (孫正文)	남	61	고등학교 졸업	정당인	26,988
성남시 제2	국민회의	허재안 (許載顔)	남	45	대학원 재학	경기도의원 무투표당선	
성남시 제3	국민회의	이영성 (李英成)	여	57	대학졸업	정당인	29,615
성남시 제4	국민회의	이상락 (李相樂)	남	45	고등학교 졸업	경기도의원	29,450
성남시 제5	한나라당	강대기 (姜大基)	남	46	중학교졸업	부동산대업	30,474
성남시 제6	한나라당	정원섭 (鄭元燮)	남	45	대학원졸업	상업	32,075

5)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의원정수 총 94명 중 성남시에서는 8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8명의 도의원을 선출하였다. 총 19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이 2.38대 1이었으며, 41.7%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결과 [표 7-108]와 같이 한나라당 7명, 민주당 1명이 당선되었다.

제4선거구 이상락이 국회의원 후보로 도의원직을 사퇴하였고, 2004. 6. 5 보궐선거에서 이삼순의원이 당선 되었다.

[표 7-108]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성남시선거구표(2002.6.13)							
선거구	소속정당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1	한나라당	강선장 (姜善章)	남	55	대학원재학	정당인	19,353
성남시 제2	한나라당	임정복 (林正福)	남	46	고등학교 졸업	정당인	13,993
성남시 제3	한나라당	임봉규 (林奉奎)	남	51	대학원졸업	사단법인 이사장	15,616
성남시 제4	민주당	이상락 (李相樂)	남	49	독학	경기도의원	20,993
	열린우리당	이삼순 (李三順)	여	42	대학교 졸업	정당인	2004. 6. 5 보궐선거 당선

선거구	소속정당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시 제5	한나라당	강희철 (姜熙喆)	남	42	대학졸업	사업	24,984
성남시 제6	한나라당	이태순 (李泰淳)	남	43	대학졸업	학원경영	20,899
성남시 제7	한나라당	김현욱 (金顯旭)	남	38	대학원졸업	회사전무	20,660
성남시 제8	한나라당	정재영 (鄭在英)	남	47	고등학교 졸업	정당인	22,001

6) 역대 민선 경기도의회 의원(성남시 출신) 현황

 강대웅(姜大雄) 의원(제3대) - 경원대 경영대학원 및 중앙대 행정대학원 수료 - 단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경기도정·성남시정 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유중백(柳重伯) 의원(제3대) - 고려대 경영대학원 및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유한주택건설(주) 대표이사 - 성남시정 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건설위원
 금옥례(琴玉禮) 의원(제3대) - 고려대 의과대학 졸업 - 영동의원 개원 - 여의사회 성남지부 회장 - 경기도의회 운영·보사환경위원	 안상문(安相文) 의원(제3대)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바르게살기운동 중원구 협의회장 - 경기도의회 내무위원 - 성남시 중원구 구정자문위원
 정완립(鄭完立) 의원(제3대) - 한국방송통신대 졸업, 고려대 경영대학원 수료 - 한국청년 YMCA 전국연맹 회장 - 민자당 중앙위원 - 경기도의회 내무위원	 정형만(鄭亨晩) 의원(제3대~4대) - 서울법대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사회경제법 전공) 수료 - 크리스찬아카데미 노동사회위원 - 경기도의회 도시위원 - 서울법대 동창회장(28회)



김종식(金鍾湜) 의원(제4대)

- 조양고 졸업
- 민주당 성남시 수정구지구당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



허재안(許載顔) 의원(제4대~5대)

- 경원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 민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 새정치국민회의 경기도지부 정책실장



이상락(李相樂) 의원(제4대~6대)

- 성남시의회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위원



정소앙(鄭素昂) 의원(제4대)

- 서강대 정책대학원 재학
- 아·태재단 후원위원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객원연구원
- 국민의회의 부대변인



정원섭(鄭元燮) 의원(제5대)

- 뉴욕대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 한화경제연구소
- 새천년민주당 중앙위원
- 아·태경제연구소 소장



손정문(孫正文) 의원(제4대~5대)

- 홍익고 졸업
- 민주당 중앙당 중앙위원
- 국민회의 성남시 수정구지구당 부위원장
- 간행물편집위원회 부위원장



이일남(李一男) 의원(제4대)

- 경희대 졸업
- 성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신용협동조합 성남시협의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대기(姜大基) 의원(제4대~5대)

- 경원대 경영대학원 졸업
- 성남시의회 의원
- 농촌지도자 경기도 연합회장
- 경기도의회 농림수산위원



이영성(李英成) 의원(제5대)

- 이화여대 국문학과 졸업
- 경기도의회 의원
- 성남시 시장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강선장(姜善章) 의원(제6대)

- 한국체육대 대학원 박사
- 풍생중·고등학교 교사
-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
-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임정복(林正福) 의원(제6대)

- 대동상고 졸업
- 대해약품(주) 대표이사
- 경기도 예술교육신문사 발행인 및 편집인
- 정의사회구현봉사단 단장



임봉규(林奉奎) 의원(제6대)

- 미국 휴스턴 신학대학원 신학과 졸업
- 새천년민주당 중원구지구당 부위원장
-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관리이사
- 한나라당 중원구지구당 수석부위원장



강희철(姜熙喆) 의원(제6대)

- 영남대 토목공학과 졸업
- 한보그룹 자카르타지사 근무
-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과장
- 분당구 재활용센터 운영



이태순(李泰淳) 의원(제6대)

- 한남대 법정대학 졸업
- 분당구 축구연합회장
- 성남시 축구연합회 부회장
- 제2대~3대 성남시의회 의원



김현욱(金顯旭) 의원(제6대)

- 고려대 노동대학원 졸업
- 한라건설(주) 기획실팀장
- 경기 환경포럼 회장
- 분당 노동문제연구소 소장



정재영(鄭在英) 의원(제6대)

- 효성고 졸업
- 낙생농협 전무
- 성남문화원 이사
- 한나라당 성남시 분당 을지구당 부위원장



이삼순(李三順) 의원(제6대)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 사)한국웅변협회 성남시지부 지부장(현)
- 우리성남만들기 대표(현)
- 한반도재단 여성위원회 부위원장(현)
- 2004. 6.5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 선거에서 당선



장정은(張廷銀) 의원(제6대)

- 경원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 현) 성남병원 기획조정부장
- 현)성남 시민포럼 감사
- 현)제6대 경기도의회 보사환경 여성위원회 위원
- 비례 대표(한나라당)



김선규(金善閔) 의원(제6대)

- 수원매향여자고등학교 졸업
-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 성남시 시의회 의원
- 현) 제 6대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
- 비례대표 (새천년 민주당)

4.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

교육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시·도교육위원회 위원이 시·도 지방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선출방법은 1차로 시·군·자치구의회에서 2명을 시·도의회에 추천하면 시·도의회 의원들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1991년의 제1대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에서 위원정수는 26개 시·군지역 교육청별 1명씩 총 26명이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서 성남시의 경우 1인을 대상으로 총 13명이 입후보하였는데, 이 가운데 교육경력 소지자는 5명이었으며, 비경력자는 8명이었다.

1991년 7월24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의원 45명 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자 등의 소견 발표회를 갖고 경력자로 전영수와 비경력자로 이창렬이 추천되었다. 8월 20일 경기도의회에서 투표결과 성남시 지역 교육위원으로 전영수(全永壽)가 당선되었다¹³³⁾

1995년 8월 22일과 9월 28일 두 차례에¹³⁴⁾ 걸쳐 실시된 제2대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에서는 총 25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제2대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는 시·군 통합에 따라 강화군 강화교육청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으로써 제1대 교육위원회 위원정수보다 1명 줄어들었다.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제1대 교육위원선거와 동일하며, 성남시 지역 교육위원으로 전영수(全永壽)가 당선되었다.

1998년 8월 18일 제3대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서는 13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되었다. 교육위원 정수의 감소는 지역별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감소와 경제 불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자구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성남시가 포함된 경기 제4선거구(광주·성남·하남·여주·용인·이천)의 교육위원으로 강창희(姜昌熙)가 당선되었다.¹³⁵⁾

1998년 교육위원 선거에서부터 위원의 선출방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제2대 교육위원까지는 시·군 지역 교육청 별로 해당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던 것을 경기도를 6개 권역¹³⁶⁾으로 구분하여 선거구를 구성하고 각 선거구에 속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다.

2002년 7월 11일에 실시된 제4대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에서는 총 42명

133) 성남시사편찬위원회(1993), 「성남시사」 711-714쪽.

134) 8월22일에 20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9월28일에 5명의 위원을 재선출하였는데, 이는 5개 시·군 지방의회의 구성이 늦어전에 기인한다.

135) <http://www.ggbe.go.kr/introduce/introduce2.html>(경기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136) 제 1선거구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 제 2선거구 부천·광명·시흥, 제 3선거구 안양·군포·안산·과천·의왕, 제 4선거구 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이주, 제5선거구 고양·김포·파주 등에서는 각 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제 6선거구인 의정부·남양주·구리·양평·가평·포천·연천·동두천·양주 등에서는 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였다.

의 입후보자 중에서 13명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선출방식에 있어서 선거구는 제3대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와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위원 선거인을 해당 선거구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에서 학교운영위원 전체로 확대시켰다.

제4대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선거 결과 성남시가 포함된 경기 제4선거구에서는 7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강창희(姜昌熙)와 전영수(全永壽)가 교육위원에 당선되었다.

경기도 역대 교육위원 현황



전영수(全永壽) 위원(제1대~2대, 4대)

- 경희대 교육대학원 수료
- 춘천 성수여중·성수중 교무과장
- 성남시 체육회 부회장



강창희(姜昌熙) 위원(제2대~4대)

- 고려대 교육대학원 졸업
- 용인 태성중·고등학교 교사
- 제2대 2기 경기도 교육위원회 부의장
- 제3대 2기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장

5.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1)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 개황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에 의해서 1991년 3월 26일 시·군 및 자치구인 기초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4,304명의 시·군 및 자치구 의원을 선출하였고,¹³⁷⁾ 4월 15일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가 일제히 개원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개막을 보게 되었다.

1991년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5%였으며, 특히 서울의 42.3%를 비롯하여 부산 49.7%, 대구 44.5%, 인천 42.7%, 광주 50.8%, 대전 49.0% 등 대도시 지역의 경우 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양양군으로 84.6%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서울 서초구 잠곡로 34.6%였다.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137) 기초의회 의원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① 후보자의 낮은 지명도와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② 지방자치제의 의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③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제1대 기초의회 의원선거에는 전국 260개 시·군·자치구 의회에 총 10,120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5년 6월 27일 동시 선거로 실시된 제2대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전국 평균 68.6%로서, 이는 지난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 55%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낮은 반면 농촌지역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제2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230개 시·군·자치구 의회에 총 11,970명이 입후보하고 4,541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8년 6월 4일 동시 선거로 실시된 제3대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53.2%로서, 이는 지난 1995년 6월에 실시된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 68.6%보다 낮은 것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낮은 반면 농촌지역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제3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232개 시·군·자치구 의회에 총 7,754명이 입후보하고 3,489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평균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02년 6월 13일 세 번째 동시 선거로 실시된 제4대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전국 평균 48.8%로서, 이는 지난 역대 지방선거 사상 가장 낮은 것이며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낮은 반면 농촌지역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39.4%의 투표율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는 5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제4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전국 232개 시·군·자치구 의회에 총



사진 3-7-57 투표하는 유권자

8,373명이 입후보하고 3,485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여 평균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991년부터 네 차례 실시된 역대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 실시현황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7-10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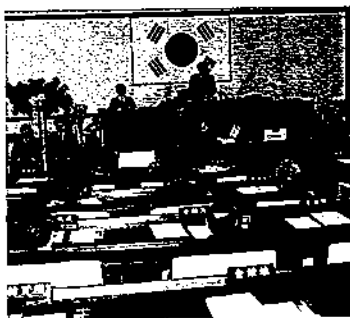
선거일	기초지방의회수	의원정수	입후보자수	평균경쟁률	평균투표율	비고
1991. 3.26	260	4,304	10,120	2.4:1	55.0	제1대
1995. 6.27	230	4,541	11,970	2.6:1	68.6	제2대
1998. 6. 4	232	3,489	7,754	2.2:1	53.2	제3대
2002. 6.13	232	3,485	8,373	2.4:1	48.8	제4대

138) 당선된 45명의 시의원 중에는 1991년 7월24일에 실시한 경기도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뇌물수취와 기타 법적사건에 의해 11명의 시의원이 제명, 퇴직, 사직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큰 오감을 남기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992년 7월22일 재선거(1명)와 1992년 4월14일 보궐선거(4명)가 치러졌다.

2)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사진 3-7-58〉 제1대 의원 선서(1991.4.15)



〈사진 3-7-59〉 첫 개회선언하는 손영태 초대의장



〈사진 3-7-60〉 성남시의회 현판식(1991.4.15)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는 의원정수 45명에 대해 109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평균 경쟁률이 2.4대 1이었다. 투표결과 [표 7-110]와 같이 총 31개 선거구에서 45명이 시의원에 당선되었다.¹³⁹⁾

1992년 4월14일 보궐선거에서는 산성동의 정재의, 상대원 1동의 박치선, 김일도, 금곡동의 최병성 등이 당선되었으며, 1992년 7월22일 재선거에서는 상대원 3동에서 이영성이 당선되었다.¹³⁹⁾

139) 성남시의회(2001), 『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66-69쪽;
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표 7-110) 제1대 성남시의회의원 성남시 선거 결과 (1991. 3월 기준)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신흥1동	박용두 (朴鎬斗)	남	46	대학원 수료	상업	2,214	당선
	유선일 (劉鮮一)	남	48	중학교 졸업	상업	2,363	당선
신흥2동	조영이 (趙英二)	남	56	대학원수료	건설업	2,928	당선
	최명근 (崔明根)	남	53	대학졸업	무직	2,594	당선
신흥3동	성규삼 (成圭三)	남	47	대학원수료	약사	3,320	당선
태평1동	김종안 (金鍾安)	남	61	고등학교 졸업	관광업	1,414	당선
	정수웅 (鄭秀雄)	남	50	고등학교 졸업	건축업	3,059	당선
태평2동	장두영 (張斗榮)	남	60	고등학교 졸업	건축업	2,600	당선
	김삼근 (金三根)	남	46	고등학교 졸업	건축업	2,169	당선
태평3동	전형수 (金炯瑯)	남	54	대학졸업	건축업	2,445	당선
	조명천 (趙命天)	남	43	대학원수료	상업	1,904	당선
태평4동	정덕봉 (鄭德奉)	남	57	중학교졸업	건축업	1,867	당선
	손영태 (孫榮泰)	남	49	대학원수료	상업	2,599	당선
수진1동	김종기 (金鍾基)	남	52	고등학교 중퇴	상업	2,048	당선
	김상문 (金相文)	남	57	고등학교 중퇴	상업	1,411	당선
단대동	송태심 (宋泰燾)	남	53	대학원수료	건설업	2,793	당선
	정재의 (鄭在義)	남	48	고등학교 졸업	상업	2,214	'92.4.14보궐 선거에서당선
산성동	전윤실 (全允賈)	남	56	중학교졸업	건축업	2,418	당선후'92.4.14 제명(보궐수회)
양지동	김종윤 (金鍾允)	남	47	대학원수료	기타	2,214	당선
북정동	윤민섭 (尹敏燾)	남	50	고등학교 졸업	농업	1,449	당선
신촌동	이희재 (李喜載)	남	53	고등학교 졸업	농업	1,056	당선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고등동	박선태 (朴先泰)	남	57	국민학교 졸업	상업	660	당선
시흥동	남장우 (南長祐)	남	52	고등학교 졸업	상업	608	당선
성남동	윤기중 (尹基重)	남	43	대학원수료	마을금고 이사장	3,028	당선
	김광숙 (金光淑)	남	45	고등학교 졸업	부동산 중개업	2,647	당선후 '92.2.14 사직(교육위원 선출과정문의)
중동	장명섭 (張明燮)	남	48	대학중퇴	회사대표	3,322	당선후 '91.5.26형 확정판결에의하 여 퇴직(금품수뢰)
	정상규 (鄭商奎)	남	50	대학졸업	약사	3,307	당선
금광1동	홍순두 (洪淳斗)	남	42	전문대 졸업	상업	2,266	당선
	전동의 (田東儀)	남	52	중학교 졸업	부동산 중개업	2,439	당선후 '91.10.14 제명(금품수뢰)
금광2동	강운선 (姜雲善)	남	49	고등학교 졸업	건축업	2,428	당선후 '91.10.14 제명(금품수뢰)
	라필주 (羅必柱)	남	46	대학원수료	건축업	2,958	당선
은행1동	김상현 (金常顯)	남	45	대학원수료	제조업	1,408	당선
은행2동	이상락 (李相樂)	남	37	고등학교 졸업	노동	1,676	당선후 '91.10.18 제명(임금위조)
	강부원 (姜富遠)	남	58	고등학교 중퇴	정당인	1,727	당선
상대원 1동	김종만 (金鍾萬)	남	40	대학원수료	보험업	3,110	당선후 '91.10.18 제명(뇌물수뢰)
	김민성 (金敏成)	남	42	대학원수료	건축업	2,381	당선후 '92.2.6사직 (아파트분양문의)
상대원 2동	박치선 (朴致先)	남	53	대학원수료	부동산	1,810	'92.4.14보궐 선거에서당선
	김일도 (金鎭道)	남	49	중학교졸업	상업	1,515	'92.4.14보궐 선거에서당선
상대원 2동	김영봉 (金永奉)	남	50	대학원수료	서비스업	3,235	당선
	윤석일 (尹錫日)	남	51	고등학교 졸업	상업	2,255	당선후 '91.7.5제명
상대원 2동	김종환 (金鍾煥)	남	49	대학원수료	상업	2,534	당선후 '91.5.26 사직(헌호사업위원)
	김동성 (金東星)	남	49	대학원수료	건축업	2,746	당선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비고
상대원 2동	이영성 (李英成)	여	50	대학졸업	상업	2,209	'92.7.22 재선거에서 당선
분당동	한백찬 (韓百瓚)	남	39	고등학교 졸업	농업	152	당선
이매동	강대기 (姜大基)	남	38	대학원수료	세차장업	903	당선
여수동	이용배 (李容培)	남	50	대학원수료	공업	3,609	당선
판교동	나철재 (羅哲在)	남	49	대학재학	상업	1,465	당선
금곡동	이종길 (李鍾吉)	남	48	고등학교 졸업	건설업	378	당선후 '92.2.6사직 (변호사법위반)
	최명성 (崔秉成)	남	36	대학원수료	농업	431	'92.1.14보궐선거 에서 당선
	이건영 (李建榮)	남	44	고등학교 졸업	농업	434	당선

3)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는 의원 정수 50명에 대하여 총 139명이 입후보하여 평균경쟁률이 2.78대 1로서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비해 경쟁률이 치열해졌다.¹⁴⁰⁾ 성남시의회 의원 정수는 1991년의 45명보다 5명이 늘어난 것이다.

투표율 58.97%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의 투표결과 [표 7-111]와 같이 수정구 17명, 중원구 16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¹⁴¹⁾

140) 황아란·윤부섭(1996),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80-96쪽.

141) 성남시의회, 앞의 책, 480-484쪽.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결과 (1992.6.27)						
수정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신흥1동	박용두 (朴鎔斗)	남	50	대학원 수료	상업	4,392
신흥2동	최명근 (崔明根)	남	58	대학 졸업	정치인	3,798
신흥2동	나운채 (羅雲採)	남	57	대학원 수료	공익사업	5,016
신흥3동	박찬범 (朴贊範)	남	51	대학원 수료	상업	2,132
태평1동	정수웅 (鄭秀雄)	남	54	대학원 수료	기타	4,876
태평2동	김삼근 (金三根)	남	51	대학원 수료	상업	2,913

수정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태평3동	김미희 (金美希)	여	29	대학 졸업	약사	2,341
태평4동	박용승 (朴用承)	남	33	대학원 졸업	정치인	2,644
수진1동	손영태 (孫榮泰)	남	54	대학원 졸업	정치인	4,741
수진2동	권태흥 (權泰興)	남	56	대학 졸업	기타	2,437
단대동	전준민 (田埈民)	남	37	전문대 졸업	회사원	2,569
산성동	정재의 (鄭在義)	남	53	대학원	졸업상업	2,873
양지동	김종운 (金鍾允)	남	52	대학원수료	정당인	2,295
북정동	강규식 (姜圭植)	남	58	고등학교중퇴	기타	857
신촌동	이인순 (李仁淳)	남	54	대학 졸업	상업	1,026
시흥동	남장우 (南長祐)	남	52	고등학교졸업	농업	778
고등동	이수영 (李洙永)	남	40	대학원 수료	농업	887
중원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동	윤기중 (尹基重)	남	47	대학원 수료	마을금고 이사장	4,031
성남동	김종수 (金宗洙)	남	36	대학 졸업	회사 대표	2,643
중동	장명섭 (張明燮)	남	53	대학 중퇴	건설업	4,253
중동	권찬오 (權鑽五)	남	59	대학원 중퇴	상업	2,711
금광1동	홍순두 (洪淳斗)	남	47	전문대 졸업	사업	3,787
금광1동	염동준 (廉東俊)	남	53	고등학교졸업	마을금고 이사장	4,563
금광2동	최병원 (崔丙元)	남	50	대학원 졸업	무직	3,842
금광2동	신현갑 (申鉉甲)	남	38	대학원 수료	사업	3,701

중원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은행1동	김상현 (金常顯)	남	52	대학원 수료	건축업	2,458
은행2동	강부원 (姜富遠)	남	62	고등학교중퇴	공제회 회장	무투표당선
은행2동	김원희 (金元熙)	남	47	대학원 수료	사업	무투표당선
상대원1동	김세환 (金世煥)	남	61	대학원 수료	부동산 임대업	3,212
상대원1동	최연옥 (崔蓮玉)	여	57	대학원 수료	상업	4,069
상대원2동	김영봉 (金永奉)	남	55	대학원 수료	시의원	4,420
상대원3동	김지숙 (金芝淑)	여	28	고등학교졸업	푸른마을 대표	3,586
여수동	안종대 (安鍾大)	남	49	대학원 수료	건축업	2,306
분당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분당동	오인석 (吳仁錫)	남	61	대학 졸업	건설업	5,027
서현동	김숙배 (金淑培)	여	59	대학원 수료	상업	4,094
서현동	장영춘 (張泳椿)	남	56	대학원 졸업	소비자보호소 소장	3,659
내정동	이태순 (李泰淳)	남	36	대학원 수료	학원 원장	2,954
정자동	최오균 (崔午均)	남	47	대학원 수료	운수업	4,246
정자동	김동환 (金東煥)	남	35	대학원 수료	회사 대표	3,266
초림동	홍양일 (洪良一)	남	53	대학 졸업	회사원	4,098
서당동	안정연 (安正演)	남	54	대학 졸업	회사원	3,915
수내동	김용준 (金容駿)	남	56	대학원 수료	무직	2,517
이매동	강주동 (姜周東)	남	42	대학원 수료	환경운동가	6,699
야탑동	유인갑 (柳寅甲)	남	37	대학 졸업	상업	3,710

분당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중탑동	임봉규 (林鳳奎)	남	46	고등학교졸업	회사원	2,975
하탑동	석규섭 (石圭燮)	남	49	대학 졸업	회사원	4,820
매송동	김철홍 (金哲洪)	남	43	대학원 수료	상업	3,659
판교동	정재의 (鄭在儀)	남	59	대학원 수료	사업	827
금곡동	김준식 (金俊植)	남	42	대학원 재학	건축업	1,924
운중동	김두일 (金斗鎬)	남	36	전문대 졸업	상업	524

4) 제2대 의원 변동사항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수는 수정구 17명, 중원구 16명, 분당구 17명 총 50명의 의원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1968년 6월 30일까지 만 3년의 임기로서 초대(初代, 제1대) 의원의 경우 45명이었으므로, 5명이 증원된 셈이다. 초대의원의 임기는 만 4년 77일이다. 이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대 의원 중에서 최오균(崔午均)의원이 97. 10. 30일 무단 전출로 직권 말소되고, 김동환(金東煥)의원은 96. 8. 2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강주동(姜周東)·김종수(金宗洙)·김준식(金俊植)의원 등 3명의 의원은 광역의원 출마 관계로 '98. 4. 5 사직하였다.

총 5명 의원의 변동이 있었으나, 3명의 의원은 불과 만기(1968. 6. 30) 2개월을 앞두고 광역의원 출마로 사직하였기에 “2대 의원총람”에 수록하였으며, 정자동의 최병성 의원이 97년 1월 30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어 임기말('98. 6. 30)까지는 실제적으로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당선자 명단에는 50명의 의원명단이 게재되었으나 “의원총람”에는 49명의 의원이 수록되었다.

5)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는 의원 정수 40명에 대하여 총 90명이 입후보하여 경쟁률은 2.25대 1이었다.¹⁴²⁾ 성남시의회 의원 정수는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정수 50명보다 10명이 줄어들었다.

142) 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투표율 50.5%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112]과 같이 수정구에서 13명, 중원구에서 10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¹⁴³⁾

143) 성남시의회, 앞의 책, 802~805쪽.

표 7-112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결과(1998.6.4)						
수정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신흥1동	박용두 (朴鎬斗)	남	53	고등학교졸업	상업	4,704
신흥2동	나운채 (羅雲埰)	남	60	독학	성남시의원	4,589
신흥3동	우종수 (禹鍾秀)	남	46	대학 재학	회사 대표	2,811
태평1동	최유석 (崔裕碩)	남	39	대학 졸업	정당인	3,503
태평2동	표진형 (表振馨)	남	39	고등학교졸업	상업	4,432
태평3동	김미희 (金美希)	여	32	대학 졸업	약사	1,983
태평4동	박용승 (朴用承)	남	36	초등학교졸업	정당인	3,697
수진1동	홍경표 (洪慶杓)	남	60	중학교 졸업	상업	3,283
수진2동	이근연 (李根淵)	남	57	중학교 졸업	건설업	3,871
단대동	전준민 (田埈珉)	남	40	전문대 졸업	성남시의원	3,474
산성동 복정동	강응득 (姜龍得)	남	57	고등학교졸업	건축업	무투표당선
양지동	김종운 (金鍾允)	남	55	중학교 졸업	성남시의원	2,289
신촌동·고등 동·시흥동	이수영 (李洙永)	남	47	고등학교졸업	농장경영	1,630

중원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동	김종수 (金宗洙)	남	39	전문대 졸업	무직	4,598
중동	권찬오 (權鑽五)	남	62	고등학교졸업	숙박업	5,292
금광1동	염동준 (廉東俊)	남	56	고등학교졸업	마을금고 이사장	4,898
금광2동	신현갑 (申鉉甲)	남	41	초등학교졸업	사진관 운영	6,040
은행1동	김상현 (金常顯)	남	55	대학 졸업	광고업	2,868
은행2동	강부원 (姜富遠)	남	65	고등학교중퇴	성남시의원	5,867
상대원1동	방익환 (方益煥)	남	45	대학원 수료	상업	4,724
상대원2동	이계남 (李季南)	남	66	고등학교졸업	사회사업	4,272
상대원3동	김두일 (金斗鎭)	남	39	전문대졸업	회사 대표	2,507
여수동	김민자 (金敏子)	여	56	고등학교졸업	회사 대표	3,069
분당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분당동	오인석 (吳仁錫)	남	60	대학 졸업	건축설비업	3,205
수내동	박권중 (朴權鍾)	남	38	전문대졸업	상업	무투표당선
초림동	홍양일 (洪良一)	남	56	대학 중퇴	회사원	3,239
내정동	이태순 (李泰淳)	남	39	대학원 졸업	학원경영	무투표당선
정자동	최병성 (崔秉成)	남	43	대학 재학	사업	3,808
불정동	홍방희 (洪芳惠)	남	46	고등학교졸업	회사 대표	무투표당선
신기동	이완구 (李玩求)	남	56	전문대 졸업	마을금고 이사장	4,504
서현동	장영춘 (張泳椿)	남	59	대학 졸업	성남시의원	4,882

분당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서당동	윤광열 (尹光烈)	남	43	고등학교졸업	제조업	3,410
이매동	방영기 (方榮基)	남	40	대학 재학	국악인	무투표당선
매송동	김철홍 (金哲洪)	남	46	초등학교졸업	사업	3,407
야탑동	박희동 (朴喜東)	남	40	고등학교졸업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3,747
종탑동	박문석 (朴文石)	남	35	대학 졸업	신문사 지사장	4,594
하탑동	석규섭 (石圭燮)	남	52	대학 졸업	무직	무투표당선
판교동	김대진 (金大振)	남	51	고등학교졸업	농업	1,795
운중동	이호섭 (李虎燮)	남	40	고등학교졸업	사업	5,831
금곡동	전이만 (全二萬)	남	58	대학 졸업	사업	6,559

4. 제3대 시의원 변동사항

제3대 의원정수는 40명으로 2대 의원수에 비하면 10명의 의원이 감소되었으나 5명의 의원 변동이 발생하였다. 태평동의 박용승(朴用承) 의원, 북정동의 강용득(姜龍得) 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99.2.23일에 퇴직, 양지동의 김종윤(金鍾允) 의원은 병역법위반 으로 퇴직(2000.5.12), 성남동 김종수(金宗洙)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퇴직('99.12.28)하였으며, 서현동 장영춘(張泳椿) 의원은 도의원 출마 관계로 사직(2000.5.27)하게 되어 결국 5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99.8.26 재선거에서 태평4동에는 한선상(韓善相) 의원, 북정동 장윤영(張允榮) 의원이 당선 되었고, 양지동에서는 박광봉(朴光鳳) 의원(2000.10.26), 성남동에서는 김선규(金善圭) 의원(2000.6.8), 서현동에는 김숙배(金淑培)(2000.10.26)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결국 자진

사직 의원 1명, 법률 위반으로 4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재선거·보궐선거에서 5명의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3대 의원의 정수인 40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5)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의원 정수 41명을 대상으로 총 102명이 입후보하여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의원 정수는 제3대의 40명이 비해 인구증가에 따라 1명이 증가한 것이다.

투표율 41.7%를 나타낸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 투표결과 [표 7-113]과 같이 수정구에서 14명, 중원구에서 10명, 그리고 분당구에서 17명이 당선되었다.¹⁴⁴⁾

144)

1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수정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신흥1동	문길만 (文吉滿)	남	43	중학교 중퇴	회사 대표	3,113
신흥2동	홍준기 (洪駿基)	남	62	대학 졸업	자영업	4,637
신흥3동	유철식 (柳哲植)	남	42	대학 졸업	기업인	2,440
태평1동	이상호 (李相皓)	남	39	대학 졸업	체육관 관장	3,204
태평2동	표진형 (表振馨)	남	43	독학	상업	2,749
태평3동	김완창 (金完昌)	남	52	독학	회사 대표	1,938
태평4동	한선상 (韓善相)	남	42	전문대 재학	회사 대표	2,187
수진1동	홍경표 (洪慶杓)	남	64	독학	상업	2,975
수진2동	정응섭 (鄭應燮)	남	45	고등학교 졸업	회사 대표	2,506
단대동	윤춘모 (尹春模)	남	37	대학 졸업	어린이집 경영	1,822
산성동	장운영 (張允榮)	남	42	대학 졸업	교육업	2,037
양지동	박광봉 (朴光鳳)	남	55	중학교 졸업	건설업	1,706

수정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북정동	홍용기 (洪容基)	남	51	고등학교 졸업	무직	무투표당선
신촌·고등· 시흥동	이수영 (李洙永)	남	51	대학 재학	농업	2,094
중원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성남동	강태식 (姜泰植)	남	59	전문대 졸업	요식업	4,895
중동	김유석 (金裕錫)	남	38	대학원 재학	학원 원장	4,572
금광1동	염동준 (廉東俊)	남	60	고등학교 졸업	성남시의원	무투표당선
금광2동	신현갑 (申鉉甲)	남	45	초등학교 졸업	사진관 운영	4,488
은행1동	김상현 (金常顯)	남	59	대학 졸업	성남시의원	2,594
은행2동	최화영 (崔和永)	남	50	전문대 졸업	자영업	5,805
상대원1동	방익환 (方益煥)	남	49	중학교 졸업	상업	4,076
상대원2동	지관근 (池管根)	남	37	대학 졸업	사회복지사	무투표당선
상대원3동	김기명 (金基明)	여	36	고등학교 졸업	사회단체 활동가	1,713
하대원동	김민자 (金敏子)	여	60	전문대 졸업	성남시의원	3,079
분당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분당동	오인석 (吳仁錫)	남	64	대학 졸업	건축설비업	5,148
수내1동	홍양일 (洪良一)	남	60	대학 중퇴	회사 이사	4,167
수내2동	최윤길 (崔允吉)	남	43	고등학교 졸업	회사 대표	2,527
수내3동	박권중 (朴權鍾)	남	42	전문대 졸업	성남시의원	2,855
정자1동	최진섭 (崔鎭燮)	남	44	대학원 수료	회사 대표	4,967
정자2동	김미라 (金美羅)	여	28	대학 졸업	푸른학교 대표	2,301

분당구 선거구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직업	득표수
정자3동	이형만 (李炯滿)	남	46	대학원 졸업	회사 대표	3,105
서현1동	김숙배 (金淑培)	여	66	대학 중퇴	성남시의원	5,832
서현2동	윤광열 (尹光烈)	남	47	대학 재학	제조업	3,950
이매1동	이영희 (李永熙)	남	43	대학 졸업	회사 대표	4,588
이매2동	김철홍 (金哲洪)	남	50	대학원 수료	상업	3,735
야탑1동	민동익 (閔東益)	남	50	초등학교 졸업	자영업	3,378
야탑2동	장대훈 (張大勳)	남	43	대학 졸업	사업	4,213
야탑3동	지수식 (池洙植)	남	42	전문대 졸업	회사 노조위원장	3,850
판교· 운중동	김대진 (金大振)	남	55	대학 재학	농업	2,442
금곡동	이호섭 (李虎燮)	남	44	고등학교 졸업	성남시의원	9,481 (63.7)
구미동	전이만 (全二萬)	남	62	대학 졸업	회사 대표	6,341 (55.4)

☞ 집필尹斗燮 경원대학교 책임연구원
徐辰錫 중부대학교 교수

6) 역대 민선 성남시의회 의원현황

제1대(초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의원임기 1991.4.15 ~ 1995.6.30까지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반기 의장·부의장
의장 : 손 영 태 부의장 : 김 영 봉	의장 : 손 영 태 부의장 : 이 용 배
수 정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 용 두 신흥1동 · 밀양실업고등학교 졸업 · 성남시광고물제작협회장 · 동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상공회의소 2,3대 의원 · 사회체육회 이사 · 수정구청 구정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분당신시가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영 이 신흥2동 · 한양대학 산업대학원 수료 · 성남서중 육성회장 · 서원건설(주) 회장 · 성남시청 자문위원 · 민족통일 성남시협의회 회장 · 성남시 웅변협회회장 · 상공회의소 상임위원 · 광성라이온스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최 명 근 신흥2동 · 건국대학 정외과 졸업 · 이곡초등학교 교사 · 수정구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 수원지검 청소년선도위원 · 성남시 방위협의회 위원 · 건국대재성남동문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간사 성 규 상 신흥3동 · 영남대 약학대 약학과 졸업 · 영남대 약학대학원 수료 · 육군군의학교 교관 · 성남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 수원지법 성남지원 조정위원 · 성남시방위협의회 위원 · 신흥3동 동정자문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정 수 웅 태평1동 · 교통고교 졸업 · 경기도 청소년선도위원 · 성남시 새마을후원회 위원 · 수정구청 구정자문위원 · 태평1동 동정자문위원장 · 건축업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 종 안
태평1동

- 순천농고 졸업
- 새마을지도자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태평1·3동 마을금고 이사장
- 평민당 성남갑지구당 위원
- 은성관광 대표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장 두 연
태평2동

- 대전공고 졸업
- 성남로타리클럽 14대회장
- 새마을운동 성남시지회장
- 성남시 시장자문위원
- 수정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성남지청 선도협의회 수정구 회장
- 성남경찰서 보안지도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조 명 천
태평3동

- 성균관대학 경영대학원 수료
- 새마을문고 성남지부장
- 성남문화원설립 및 초대·2대 원장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 부지부장
- 수정구청 구정자문위원
- 경기도 및 시 위민봉사위원
- 한성새마을독서대학장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박 용 승
태평4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남향토개발연구소장
- 민주당 성남시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위원
- 아태재단후원 특별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 재 익
산성동

- 조치원농고 졸업
- 단대동 새마을지도자
- 한국반공연맹 단대동회장
- 향토예비군소대장
- 산성파출소방범자문위 부위원장
- 산성동 동정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손 영 태
수진1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남중앙로타리클럽 회장
- 성남시새마을운동협의회 위원
- 시장자문위원회 행정분과위원장
- 성남시검선도협의회 간사
- 성남시사회정화협의회 회장
- 바르게살기성남시협의회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김 종 기
수진1동

- 군산상고 졸업
- 부안무송병원 근무
- 민정당수진1동 협의회장
- 미진섬유 대표
- 평민당 성남갑지구당 운영위원장
- 상업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김 상 문
수진2동

- 물리고등학교 졸업
- 평민당 수정구 부위원장
- 수진2동 동정자문위원
- 수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송 태 섭
단대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수정구새마을후원회 회장
- 수정구위민봉사위원장
- 재향경우회자문위원장
- 바르게살기 수정구 고문
- 성남경찰서 대공지도 운영위원
- (주)대성건설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

김 종 윤
양지동

- 수원중 중퇴
- 고등방위협의회 위원
- 고등동파출소 방범위원장
- 수원지검보호관찰위원
- 민자당고등동운영위원장
- 수정구새마을운동회 부회장
- 고등동 동체육회 고문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윤민석
북정동

- 광서고등학교 졸업
- 새마을지도자
- 북정동방범위원장
- 북정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북정동 정화위원장
- 수정구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이희재
신촌동

- 경기상고 졸업
- 광주군청 근무
- 대왕단위농협 근무
- 신촌동마을금고 이사장
- 신촌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수정구농지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사회산업위원장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선태
고등동

- 수원중 중퇴
- 고등동파출소방범위원장
- 수원지검보호관찰위원
- 민자당고등동운영위원장
- 수정구새마을운영회 부회장
- 고등동 체육회 고문
- 제1대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남장우
시흥동

- 효성고교 졸업
- 민정당지도자(성남시총회장)
- 민정당 경기2지구당 성남부위원장
- 민정당성남갑지구당 부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
- 수원지검보호관찰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중 원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윤기중
성남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 성남시 육상경기연맹회장
- 경기도위민봉사위원
- 경원대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 중원구새마을지회장
- 성남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정상규
중동

- 중앙대 약학과 졸업
- 성남시약사회 부회장
- 평통자문회의 성남시부회장
-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 성남시시정자문위원
- 중앙약국경영
- 제1대 성남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상현
은행1동

- 안동사범학교 본과졸업
-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사
- 은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동부파출소 방범위원장
- 은행1동 동정자문위원장
- 은행1동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

강부원
은행2동

- 영광고교 중퇴
- 영진기공사 대표
- 평민당성남을지구당 사무국장
- 민주당중원 · 분당지구 부위원장
- 진주강씨 성남종친회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박치선
상대원1동

- 물리고등학교 졸업
- 평민당 수정구 부위원장
- 수진2동 동정 자문위원
- 수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의원

성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영남공전 2년 중퇴 ·금광1동 민정당지도자 ·성남시자연보호감시관협의회 총무 ·금광1동 새마을금고 감사 ·금광1동 통장친목회 총무 ·제1대 성남시의회 전·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춘천고 2년 중퇴 ·상대원1, 3동마을금고 감사 ·대원파출소 방법위원장 ·상대원1동 동정자문위원 ·바르게살기 상대원1동위원장 ·중원구청 위민봉사위원 ·제1대 성남시의회 전·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홍순두 금광1동		김일도 상대원1동	
	·경희대 경영대학원 수료 ·(주)신우설비 대표이사 ·경기도 육상경기연맹 이사 ·경기도 하키협회 회장 ·수원지검보호관찰위원 ·성남시시정자문위원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사회산업위원장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경기광주 J·C클럽 회장 ·성남대원로타리클럽 회장 ·농협중앙회 기획총무과장 ·상대원2동 동정자문위원 ·성남서교 육성회장 ·상대원파출소 방법위원장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나필주 금광2동		김영봉 상대원2동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11대 대통령선거인단 피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위원 ·민주정의당 성남부위원장 ·성남시시정자문위원 ·성남시 홍보위원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여수동 동정자문위원장 ·여수동체육회장 ·하대원파출소 방법위원장 ·성남경찰서 방법자문협의회장 ·여수동마을금고 이사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김동성 상대원3동		이용배 여수동	
	·이화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민주여성유권자연맹 성남지회장 ·평화통일정책자문회 위원 ·성남시장학생 심의위원 ·성남문화원 이사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이영성 상대원3동			
분 당 구			
성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단국대 행정대학원 재학 ·서성남청년회의소 총무재정 이사 ·판교동 민정당지도자 ·판교동 방위협의회 위원 ·낙생국민학교 체육진흥회장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제1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나철재 판교동	

성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 동대문상고 졸업 • 분당동 새마을지도협의회 회장 • 율동정미소 대표 • 농업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 방송통신대 법학과 재학 • 성남시44연합회 초대 회장 • 남부경찰서 선진질서 자문위원 • 중원구 의료보험조합 감사 • 환경위생감시위원 • 92' 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한백찬 분당동		최병성 금곡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남청소년회의소 회장 • 성남시새마을지도자연합회 회장 • 농촌지도자 성남시연합회 회장 • 경기도 4H동문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 효성고등학교 졸업 • 낙생농협 근무 • 민정당·민자당 협의회장 • 남측통일국민연합 도미연수 •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낙생라이온스 이사 • 제1대 성남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
강대기 이매동		이건영 운중동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의원임기 1995.7.1 ~ 1998.6.30까지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반기 의장·부의장	
			
의장: 강 부 원	부의장: 홍 양 일	의장: 김 영 봉	부의장: 박 용 두
수 정 구			• 밀양살업고등학교 졸업 • 성남시체육회 이사 • 동성남 J·C 회장 • 상공회의소 2·3대 의원 • 수정구청 자문위원 • 성남시의회 제1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 •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2대 후반기 부의장
		박 용 두 신흥1동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최명근
신흥2동

- 건국대학교 법정대학 정외학과 졸업
- 총력안보협의회 안보강사
-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부회장
-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
- 바르게살기운동 수정구협의회 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
- 성남시의회 제2대 전·후반기 총무위원장

나은채
신흥2동

- 새정치국민회의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신흥2·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김삼근
태평2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제1대 성남시의회의원
- 새정치국민회의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호남향우회 부회장
- 이태재단 운영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대의원
- 성남시의회 제2대 보사환경, 재무경제 위원

김미희
태평3동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대한약사회 성남분회 이사
- 성남여약사위원회 위원
- 터사랑청소년회 정책국차장
- 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원
- 성남여성전화 이사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용승
태평4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대의원
- 경기도 상무위원
-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 이태재단 후원회 특별위원
- 21C정책연구소 소장, 향토개발 연구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찬범
신흥3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 명예회장
- 신구전문대학교 기성회장
- 성남문화원 이사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범죄 예방위원
- 성남중부경찰서 보안지도위원
- 신흥3동 동정자문위원
- 제2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수웅
태평1동

- 중앙대학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 태평1동 동정자문위원
- 수정구 구정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의원
- 중부경찰서 방법연합회 운영 위원
- 제2대 전반기 재무경제위원장

전준민
단대동

- 경원공업전문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 국제 R·C부회장
- 생활체육조기축구 성남시연합회 이사
- (주)금성기업 대표이사
- 청소년 수련관 운영자문위원
- 성남시 국민생활축구 연합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 재무경제 위원

정재의
산성동

- 중앙대 행정대학원 수료
- 산성동 방위협의회 고문
- 국가정책연구소 회원
- 제1대 성남시의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간사
- 제2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재무경제위원장

김종운
양지동

- 단국대 경영대학원 수료
- 한국택견협회장, 경기도태니스 협회장
- 성남라이온스협회 회장
- 성남시의회 제1대 전반기 총무위원장
- 삼보의료재단 이사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 수정구지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손영태
수진1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제1대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의장
- 서울 대학교 육성회 이사
- 바르게 살기 운동 성남시 협의 회장
- 국제로타리 클럽 3600지구 총재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

권태홍
수진2동

- 한양 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수진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성남시의회 제2대 전 · 후반기 도시건설 위원장

이수영
고등동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 '86 아시게임 운영요원, 성화봉송주자
-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청년회장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은행중학교 육성회장, 제 2초등학교 장학 회장
- 제2대 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 한국 지방자치 연구원 수석 연구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강규식
북정동

- 효성고등학교 중퇴
- 광신교통주식회사 전무이사
- 북정동새마을금고 6 · 7 · 8대 이사장
- 수정구 구정자문위원
- 전국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 대의원
- 동남토건 대표
- 제2대 성남시의회 재무경제, 도시건설위원

이인순
신촌동

-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졸업
- 성남시 '96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 '96예산결산(추경)특별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민자당중원 · 분당지구당 조직장
- 자유 총연맹 성남지부 사무국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남장우
시흥동

- 효성고등학교 졸업
-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도시건설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보사환경 위원장

중 원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윤기중
성남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민주자유당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성남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 중원구 새마을지회장
- 성남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

홍순무
금광1동

- 영남공전 기계과 2년 중퇴
- 평통성남시 협의회자문위원
- 성남시 건축심의 위원
- 금광1동 건축심의 위원
- 금광1동 새마을금고 감사
- 하원초등학교 운영협의회 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염동준
금광1동

- 벌교상업고등학교 졸업
- 금광1동 동정자문위원장
- 금광1동 방위협의회장
- 중동파출소 방범위원장
- 중동파출소 청소년선도위원장
- 금광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 종 수 성남동	· 인천체육대학교 졸업 · 성남로타리클럽 사회봉사위원 · 성남시 육상경기연맹 회장 · 새시대 · 새정치연합 청년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 제3대 성남시의회 전 ·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최 병 원 금광2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남시 금곡동장 · 성남시 금광1동장 · 성남시 상대원1동 동장 · 성남시 금광2동 동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획총무위원
 장 명 섭 중동	· 서울수도대 중퇴 · 새정치국민회의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성호건설 대표이사 · 제2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 현 갑 금광2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성우신용협동조합 수석감사(현) · 성남시 직업사직자협회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남성남 R.C. 동성남 J.C. 외무부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권 찬 오 중동	· 이리공고 졸업 · 성남시 시장자문위원회 위원 겸 상임위원 · 성남시 방위협의회 위원 · 성남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 성남시 재해대책위원 · 성남시 재향군인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김 상 현 은행1동	· 안동사범대 본과졸업 ·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 은행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성남교육청 교육행정 자문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획총무위원
 강 부 원 은행2동	· 영광고등학교 중퇴 · 제13대 대통령선거 김대중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장 · 진주강씨 성남시 종친회장 · 성남시의회 제1대 의원 · 제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김 영 봉 상대원2동	· 경기광주 J · C 회장 · 성남대원로타리클럽 회장 · 농협중앙회 기획총무과장 · 성남서고등학교 육성회장 · 성남남부경찰서 치안행정자문 위원장 · 제11 · 12대성남시 새마을회회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부의장 · 제2대 성남시의회 후반기의장
 김 원 회 은행2동	· 진주농고 졸업 · 은행시장(주)대표이사 · 상이군경회 성남시지부장 · 중원구 구정자문위원 · 알도라이온스클럽 회장 · 성남시의회 제2대 보사환경, 재무경제위원	 김 지 속 상대원3동	· 광주여자상업 고등학교 졸업 · (주)에프고아코리아 노조위원장 · 성남지역사회발전연구소 문화위원 · 성남지역 노동자회 정책위원 · 생활공동체 푸른마을 대표 · 아동폭력방지상담소 자문위원 · 성남시의회 제2대 재무경제, 보사환경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최언옥
상대원1동

- 숭실대학교 대학원 수료
- 중원구 새마을부녀회장
- 중원구 구정자문위원
- 상대원1·3동 새마을금고 이사
- 중원라이온스클럽 회장
-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재무경제, 의회운영 위원

김세환
상대원1동

- 고려대학교 문리학과1년 중퇴
- 남부경찰서 방법연합회 위원
- 선경아파트 통장단번영회 자문 위원
- 신한국당 중원지구당 지도위원
- 민자당 중원·분당지구당 운영 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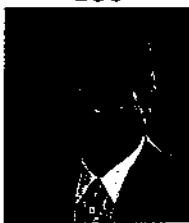
분 당 구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오인석
분당동

- 중앙대학교 문리대학사학과 졸업
- 분당동 체육회장
- 분당구 구정자문위원
- 라이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 민자당 중원·분당지구당 부 위원장
- 분당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도시건설 위원

김웅준
수내동

- 성남시 농촌지도소 지도사
- 성남시 녹지·산업계장
- 성남시 북정, 신흥1·3동, 금광2동·성남 동장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기획 총무위원장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안종대
여수동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여수동 동정자문위원장, 체육회장
- 여수동새마을금고 부이사장
- 중원구 구정자문위원
- 민자당중원·분당지구당 부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 도시건설위원

최병성
정자동

- 방송통신대 법학과 재학
- 성남시 4-H연합회 초대회장
- 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분당중학교 운영위원장
- 제1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보사환경위원

김숙배
서현동

- 청덕여고 졸업, 서울문리대 2년중퇴
- 한국방송공사 심의실 근무, 해럴드운영
- 서현동 새마을부녀회장
- 신한국당 분당갑지구당 부위원장
-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 분당 한국통신 고객협의회 위원
- 제1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장영준
서현동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삼양식품(주) 검사역
- 동양전기 기획실장
- 대한주택공사 소장
- 대장동지역지류소설치문제
- 대책 특별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성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 미국 웨스트민스터대학경영 학과 졸업 • (주)단일화학 부사장 • (주)동진산업 대표이사 • 분당구 구정자문위원장 • 분당구 입주자대표협의회 부회장 • 민자당 분당수석부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2대 전반기 부의장 •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인계 인수대책 특별위원장		• 경원전문대 공업경영학과 졸업 • 성남시 체육회 이사 • 대일초등학교 운영협의회 회장 • 상대원3동 동정자문(방범)위원 • 남부경찰서 보안지도위원 • 성남시 불림협회 자문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홍양일 초립동		김두일 운중동	
	•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년수로 • 분당구 학원협의회 회장 • 분당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이사 • 성남시 학원연합회 이사 • 검찰청 상담지도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 LG전선(주) 생산본부장 • 중소기업청 전기부회 전문위원 • 한국전기공업 협동조합기술 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총동문화 이사 • 제2대 성남시의회 기획총무, 의회운영위원
이태순 내정동		안정연 서당동	
	•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경리 장교 • (주)서한사 영업감사 •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 우성교역 대표 • 제2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보사환경위원		• 조선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호남향우회 회장 • 지방자치발전협의회 하남동지역 회장 • 하남동 방위협의회 위원 • 하남동 동정자문위원 • 하남동 방범위원회 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강주동 이매동		석규설 하탑동	
	• 성남시 강원도민회 회장 • 분당경찰서 방법연합회 운영 위원 • 매송파출소 방범위원장 • 매송동 동정자문위원장 • 아름마을 태영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재무경제, 보사환경위원		•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 성남로타리클럽 회장 •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판교동 동정자문위원장 • 분당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고문 • 낙생파출소 자문위원 • 제2대 성남시의회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
김철홍 매송동		정재의 판교동	
	• 한국 방송 통신대학 법학과 졸업 • 새정치국민회의 분당 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 내외문제 연구회 정책위원 •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 분당 지구회장 • 성남시의회 제2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 경원대 경영대학원 수료 • 분당지방자치협의회 공동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분당지구당 부위원장 • 분당발전시민의 모임 추진위원회 위원 • 분당 YMCA 운영위원회위원 • 청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보사환경위원
유인갑 아탑동		강준식 금곡동	



임 봉 규
충암동

- 충주공업전문대 졸업
- 자유총연맹 자문위원
- 중원구 위민봉사위원
- 해병전우회 축구단장
- 재향군인 회장
- 성남시의회 제2대 보사환경, 재무경제위원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의원연기 1998.7.1 ~ 2002.6.30까지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반기 의장·부의장	
 의장: 염 동 준		 의장: 박 용 두	
 부의장: 오 인 석		 부의장: 전 준 민	
수 정 구		 나 운 채 신흥2동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나 운 채 신흥2동	
 박 용 두 신흥1동	• 밀양실업고등학교 졸업 • 제 1·2·3 대 성남시의회 의원 • 분당신시가지대책특별위원장 • 제 2·3 대 성남상공회의소 의원 • 동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성남시체육회이사, 성남시방위협의회 위원 • 범우부법외방수정지구 회장 • 평통자문회의 수정지구 회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 성남시의회 제 2대 의원 • 신흥2동 방위·방법위원, 동정자문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자문위원 •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 신흥2·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제3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3대 후반기 도시건설, 의회 운영위원	
 우 종 수 신흥3동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석사과정) 수료 • 바르게살기운동수정구협의회장 • 대등은행 성남지점명예지점장 • 중생고등학교 학부모대표회장 •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 제3대후반기 성남시의회운영위원장 • 제3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최 유 석
태평1동

- 광운대학교 전자통신학과 졸업
- 새천년민주당 중앙당 대의원
- 호남향우회 부회장
- 태평1동 지방자치위원장
- 실업대책 추진위원회 위원
- 디자인 산업협의회 위원
- 지역 보건 협의회 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 의회운영 위원

표 진 형
태평2동

- 성남시 광고물 제작협회 지회장
- 경기도명예대민봉사 담당관
- 바르게살기운동 수정구 사무국장
- 성남시상수도수질검사위원회 간사
- 수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경기도 행정모니터 요원
- 한국청소년지도자 수정구지회장
- 새천년민주당 수정구당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경제, 도시건설위원

김 미 희
태평3동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서울대 약학대학 학생회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실업자문제경기도 동부대책위원회공동대표
- 수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터사랑청년회 지도위원
- 성남시의회 제3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 간사

한 선 상
태평4동

- 성동고등학교 졸업
- 이태평화재단 후원회중앙위원
- 태평4동 자율방범대장
- 성남노타리클럽 국제봉사위 원장
- 남도라이온스클럽 이사
- 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도시건설위원

홍 경 표
수진1동

- 중부새마을금고 이사
- 수진1동 동정자문위원장
- 수진1동 동정자문위원 고문
- 청송조기회 고문
- 새천년민주당 수정구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3대 의회운영, 행정경제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이 근 연
수진2동

- (주)충남 종합 상사 대표
- 분당 청년회의소 특우 회장
- 수진2동 방범 협의회 회장
- 동국건설(주)설립, 대표
- 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3대 도시건설, 행정경제위원

박 광 봉
양지동

- 은행 시장 설립 대표이사
- (주)우일산업 대표이사
- 성남시재향군인회 부회장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 수정구 구정자문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아 수 영
신촌 · 고등 · 시흥동

- 경원대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성남 문화상 심사위원
- 성남 청년회의소 회장
-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경기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통 지방행정 위원장
-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
- 한국 지방 자치연구원 수석 연구원
- 성남시의회 제3대 후반기 사회복지 위원장

전 준 민
단대동

- 경원대학 정치공학과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 성남시촉구연합협의회 회장
- 환경크린시스템 국내최초실시
- 조기촉구성남시연합회 회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경제 위원회 위원

장 유 영
산성 · 북정동

- 한양공대 재료공학과 졸업
- 지역정보센터 소장
- 동성남 J · C국제분과 위원장
- 성남문화원 기획실장
- 제3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성남시의회 제 3대의원
- 제3대 의회운영, 행정경제위원
- 성남시의회 제3대 도시건설 행정경제위원

中 院 區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선규
성남동

- 수원대향여자실업고등학교 졸업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 경기도 소비자정책 심의위원
- 경기도 국정국민홍보위원
-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경기도 새마을부녀회 회장
- 경기도 제2간부국민추진위원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

권찬오
중동

- 이리공고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성남시 재향군인회 회장
- 성남시 방위협의회 위원
- 성남시 시정자문위원 및 상임위원
- 민주평화통일 성남시협의회 부회장
- 성남시조례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염동준
금광1동

- 벌교사립고등학교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수석부위원장
- 금광1동 방위협의회 회장
- 금광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 중동파출소 방범위원회 위원장
- 금광1동 동정자문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신현갑
금광2동

- 성남시의회 제2대 의원
- 제2대전반기 보사환경위원회 간사·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중앙신용협동조합 이사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새천년민주당 중원구부위원장
- 천주교 단대동성당 청소년분과 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김상현
은행1동

- 안동사범대학교(본과) 졸업
- 초등학교·중학교 교사
- 제1·2대 성남시의회의원(1대 후반기 총무위원장)
- 성남교육청 교육행정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354B지구 2지대 위원장
- 중부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3대 후반기 행정경제위원회

강부원
은행2동

- 영광고등학교 3년중퇴
- 성남시의회 제1·2대 의원
- 제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성남시의회 제2대 전반기 의장
- 제13대 김대중대통령후보 성남시선거대책본부 사무장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이태평화재단후원회 경기도지부사무국장

방익환
상대원1동

-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회장
- 대한적십자 경기지사 대위원
- 법무부 선도보호 성남지역협의회 위원
- 상대원1동 방위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이계남
상대원2동

- 상대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성남시 새마을운동 성남시 회장
- 상대원2동 동정자문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의화운영위원

김두일
상대원3동

- 경원전문대학 공업경영학과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후반기 경제위원회 간사
- 성남시 체육회 이사
- 성남남부경찰서 보안지도위원
- 상대원3동 동정자문위원, 방범위원
- 성남로타리클럽 청소년봉사위원장
- 제3대 성남시 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민자
여수동

- 강경 여고 졸업
- 한국 여성 유권자연맹 경기도지부 이사
- 새천년민주당 중원지구당 부위원장
- 국제R.C 은행로타리 회장
- 법무부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행정경제위원

분 당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오인석
분당동

- 중앙대학교 문리대학 사학과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 양명중학교 운영위원
- 라이프(가)입주자 대표회장
- 분당동 체육회장
- 분당동 동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홍방희
불정동

- 경원전문대 경영학과 졸업
- 성남시 공군보라매 회장
- 수내파출소 방범위원장
-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 협의회 총간사
- 새천년민주당분당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박권중
수내동

- 성남서고등학교 졸업
- 동서울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분당 청년회의소 회장
- 수내동 바르게 살기 운동 위원장
- 법무부 선도위원, 수내동 등 자문위원, 방범위원
- 행정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행정 경제 위원회 간사



홍양일
초림동

- 미국 웨스트민스터대학 경영학과 졸업
- 제2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 한국해외개발공사 면접담당관
- 단일화학(주)부사장
- 동진산업(주)대표이사
- 분당구 구정자문위원회 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사회복지위원



이태순
내정동

-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년 수료
- 성남시의회 제2대의원, 전반기 의회운영 위 간사
- 서울대성, 종로학원 강사
- 분당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부위원장
- 성남시 학원연합회 이사
- 제3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최병성
정자동

- 경원전문대 경영학과 2년 수료
- 판교동 예비군 동대장
- 낙생라이온스클럽 제14, 15대 회장
- 낙생농협 제8, 9대 조합장
- 분당경찰서 방범연합회 회장
- 판교지구 개발추진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김철홍
매송동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성남시 강원도민회 회장
- 매송동 동정자문위원장
- 매송동파출소 방범자문위원장
- 낙생로 방울벽설치 추진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문석
중탑동

- 목포과학대학 건축과 졸업
-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 (사)한·베트남 청소년문화교류후원회 부회장
- 새천년민주당 분당지구당 정책실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석규섭
하탑동

- 제2대 성남시의회의원
- 성남J·C회장, 호남향우회고문
- 하탑동 동정, 방위협의회 고문
- 새천년민주당 분당지구당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제3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구
신기동

- 중앙대학교 졸업
- 중앙일보 기자
- 서울산업대학교 초빙교수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감사
- 일도라이온스클럽 회장
- 신기동 체육회장
- 분당심포니오케스트라 단장
- 제3대 전반기 행정경제위원장
- 재 성남 경기도민회장

김숙배
서현동

- 서울문리사대 2년중퇴
- 서울문리사대 총동창회 부회장
- 서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제2대 성남시의회 의원
- 사단법인 한국 여성 유권자 연맹 경기지부장
- 중탑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한나라당 분당갑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윤광열
서당동

- 경원전문대 경영학과 2년 수료
- 수내고등학교 운영위원
- 서당초등학교 운영위원
- 서당동 동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서당동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 성남시 태권도협회 운영위원장
- 결식아동 후원회 감사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회운영, 사회복지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방영기
이매동

- 대구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한국국악협회 성남시 지부장
- 대구예술대학교 겸임교수
- 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 이수자
- 분당구 새마을협의회 회장
- 이매역사 추진위원장
- 이매동 동정자문위원장
- 제3대 성남시 의회 전반기 행정 경제 위원회 간사

김대진
판교·운중동

- 경원전문대 경영학과 2년 수료
- 판교동 예비군 동대장
- 낙생 라이온스 클럽 제14, 15대 회장
- 낙생 농협 제8, 9대 조합장
- 분당 경찰서 방법 연합회 회장
- 판교지구 개발 추진위원장
- 제3대 성남시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호섭
금곡동

- 성일상고 졸업
- 성남 4-H연합 회장
- 금곡동 체육진흥 회장
- 청송 고등학교 급식후원 회장
- 바르게 살기 운동 분당구 협의 회장
- 낙생라이온스클럽 회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사회복지위원

전이만
구미동

- 고려대학교 화학과 졸업
- 분당 고압 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장
- 분당구 동정자문협의회 부회장
- 분당지역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단 부회장
- 성남 문화원 이사
- 제3대 성남시 의회 도시건설, 행정경제위원

박희동
야탑동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2년재학
- 성남서고등학교 졸업 졸업
- 성남서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야탑동 체육진흥 회장
- 야탑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분당 신협 초대 이사장
- 성남시의회 제3대 사회복지 도시건설위원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총람	의원임기 2002.7.1 ~ 2006.6.30
전반기 의장·부의장	후반기 의장·부의장
 의장: 김 상 현  부의장: 이 수 영	 의장: 홍 양 일  부의장: 김 민 자
수 정 구	 •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상학과 졸업 • 공군사관학교 3학년 중퇴 • 국제와이즈맨 산성클럽회장 • 한국광고사업협회 성남시지회장 • 고도제한 범시민대책위 홍보국장 • 성남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 • 한나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문 길 만 신흥1동 • 분당청년회의소 회장 • 신흥1동 바르게살기위원장 • 신흥1동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 호남향우회 부위원장 •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부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이 상 호 태평1동 • 성화대학 체육학과 졸업 • 성화대학 체육학과 명예교수 • 한국초등학교 태권도연맹 국제분과 위원장 • 모란로타리클럽 리틀렉터위원장 • 한나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성남문화원 이사 • 성남시 체육회 이사 • 성남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회 부회장 •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홍 준 기 신흥2동 • 건국대학교 상학과 졸업 • 사랑의봉사회 자문위원 • 수정새마을금고 이사 • 사)한국노인복지회 자문위원 • UN세계평화교육자 국제연합 한국대표부 환경전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위원 •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표 진 형 태평2동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경기도행정모니터 요원 • 중앙청소년 지도위원장 • 바르게살기운동 수정구 사무국장 • 새천년민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수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태평2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김 완 창
태평3동

- 태평3동 체육진흥회 회장
- 성남시 바르게살기운동협회 고문
- 성남시 충청향우회 고문
- 성남시시민화합협의회 고문
- 성남시제2건축추진위원회 위원
- 국민은행 태평3동지점 명예 지점장
- 한나라당 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 선 상
태평4동

- 서울 산업대학교 재학
- 태평4동 자율방범 대장
- 금빛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서성남 로타리 클럽 국제봉사 위원장
- 성남 지역 발전 연구소 간사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남도 라이온스클럽 이사
- 제4대 전반기 도시 건설 위원장

홍 경 표
수진1동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새천년 민주당 수정 지구당 부위원장
- 중부 새마을 금고 이사
-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성남시 행정정보 공개심의 위원회 위원
- 충청도민회 자문위원
-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

정 응 섭
수진2동

- 한나라당 수정지구당 부 위원장
- 한국 자유 총연맹 수진2동 위원장
- 성남재향군인회 수진2동 위원장
- 공직자 윤리 위원회 심의위원
- 동성남 청년 회의소 회장
- 중앙정보통신(주) 대표이사
- 제4대 전반기 자치 행정위원회 간사

윤 춘 모
단대동

- 송실대학교 정치외교 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 과정수로
- 사회봉사 후원회 이사
- 송림 고등학교 총동문화 부회장
- 송실대 ROTC 26기 동기회장
- 단대동 주민자치 위원회 고문
- 하림어린집 대표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간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장 윤 영
산성동

- 한양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졸업
- 경원대 행정학 석사과정(도시개발 전공 수료)
- 행정개혁시민연합 집행위원
- 성남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
- 동성남 JC국제분과 위원장
- 성남문화원 기획실장
- 컴퓨터사용자 협의회 이사
- 제4대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박 광 봉
양지동

- (주)은행시장 대표이사
- 동성남로타리클럽 회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재향군인회 성남시부회장
- 화랑무공훈장 수훈
- 한나라당수정지구당 부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의원
- 제4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

홍 응 기
복정동

- 서울 실업고등학교 축산과 졸업
- 이천상공 회의소 근무
- 복정동 주민 자치협의회 부위원장
- 복정동 체육협의회 회장
- 수정구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 복정동 방범협의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 제4대 후반기 도시건설 위원회 간사

이 수 영
신촌 · 고등 · 서흥동

- 성남시시정자문위원회 위원
- 성남청년회의소 회장
- (사)한국지방자치연구원 수석연구원
- 민주평통자문회의 지방행정위원회 위원장
- 왕남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제3대 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성남시의회 부의장

중 원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강태식
성남동

- 우송 대학교 관광 호텔 경영학부 재학
- 성남동 주민 자치위원회 고문
- 성남시 재향군인회 부회장
- 중앙초등학교 체육진흥회 고문
- 중원구 단체장협의회 회장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중원구 지부장
- 모란 흥능갈비 대표
- 제4대 전반기 자치 행정 위원회 위원

김유석
중동

- 경원대 행정 대학원 복지학과 졸업
- 성남시 학원 연합회 정책부 회장
- 남부 경찰서 청소년 지도 위원회 감사
- 성일여고 운영 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 사랑의 손 봉사단 사무 국장
- 미래 제일 학원장
- 제4대 전반기 도시 건설 위원회 간사

염동준
금광1동

- 별교 상업 고등학교 졸업
- 제3대 전반기 성남시 의회 의장
- 시민 화합 협의회 회장
- 호남 향우회 회장
- 새천년 민주당 중원 지구당 부 위원장
- 미군 기지 성남 이전 반대 공동 대책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경제 환경 위원회 위원

신현갑
금광2동

- 성남시 의회 제2·3 대의원
- 천주교 단대동 성당 총회장
- 새천년 민주당 중원 지구당 부 위원장
- 중앙 신용 협동 조합 이사
- 예술원 사전관 대표
- 제4대 전반기 사회 복지 위원회 위원

김상현
은행1동

- 안동 사범학교(본관) 졸업
- 은행1동 새마을 금고 이사장
- 성남 교육청 교육 행정 자문위원
- 제3·4대 현대 아파트입주자 회장
- 국제 라이온스지역 지대 위원장
- 중부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제3대 후반기 행정 경제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성남시 의회 의장

최화영
은행2동

- 철도 전문대학 졸업
- 은행 초등학교 체육 진흥 회장
- 은행중학교 육성회장
- 삼원 초등학교 축구부 육성회장
- 성남시 학원 연합회 회장
- 제4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방익환
상대원1동

- 바르게 살기 운동 성남시 협의 회장
- 중원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상대원1동 방위 협의회 위원
- 쓰레기 소각장 주민 협의회 위원
- 대한 적십자 경기지사 대의원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제4대 전반기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지관근
상대원2동

- 한신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졸업
- 성남시 사회복지 협의회 회장
- 성남시 기초생활 보장 위원회 위원
-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회
- 환경문과 위원장
- 대원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성남 환경 운동 연합회 자문위원
- 사회 복지사(자격취득)
- 제4대 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간사

김기영
상대원3동

- 숭신 여자고등학교 졸업
- 푸른 학교 학부모 회장
- 대일 초등학교 운영 위원
- 쓰레기 소각장 주민협의회 위원
- 민주 노동당 중원지구당 부 위원장
- 독거 노인 반한 봉사단 운영
- 함께하는 주부 모임 부회장
- 제4대 전반기 운영 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도시 건설 위원회 위원



김민자
하대원동

- 경원 전문대학 졸업
- 은행 로타리 클럽 장학 위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원구 지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 성남시 여성특별 위원장
- 새정치 여성연대 성남시지 회장
- 성남시 태권도 연합회 자문 위원
- 하대원동 주민 자치 위원회 고문
- 제4대 전반기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
- 제4대 후반기 성남시 의회 부의장

분 당 구

성 명

학 · 경력 및 소속위원회



오인석
분당동

- 중앙대학교 사학과 졸업
- 민주평통자문회의 성남지회장
- 분당 입주자 대표회장협의회 자문위원
- 성남 환경 운동 연합회 자문위원
- 중앙 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2·3대 성남시의회의 의원
- 제3대 전반기 성남시 의회 부의장
- 제4대 전반기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홍양일
수내1동

- 고려 대학교 법과 대학 3년수로
- 제2,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제2대 전반기 성남시 의회 부의장
- 분당구청 구정 자문위원 위원장
- (주)동진산업 대표이사
- 단일의료(주)이사
- 초림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경제 환경 위원회 위원
- 제4대 후반기 성남시의회의 의장



최운길
수내2동

- 감동 상업고등학교 졸업
- 분당라이온스클럽 직전회장
- 성남시 축구 협회 이사
- 성남시 골프 협회 총무 이사
- 재성남 강원도민회 부회장
- (주)고려캐미칼 대표 이사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최진섭
정자1동

-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 국립공원협회 연구위원
- 한나라당 분당 을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 공원 휴양학회 감사
- 월간 '환경과 조경' 객원기자
- 제4대 전반기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자치 행정 위원회 위원



김미라
정자2동

-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졸업
- 분당 청년회 교육 국장
- 분당 푸른학교 대표
- 미군 기지 성남 이전반대와 우리땅 되찾 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 노동당 분당 을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 제4대 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이형만
정자3동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한나라당 분당을지구당 부위원장
- 단국대학교공과대학 학생회장
- 성남시대학생연합회 초대회장
- 성남시테니스협회 부회장
- 정자3동 바르게살기운동 위원장
- 제4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숙배
서현1동

- 서울 문리사대 중퇴
- 한나라당 분당 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 복지재단 중립복지관운영 자문위원
- 수원지법 성남 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사)한국여성 유권자연맹 경기지부 회장
- 서현중학교 지역위원
- 제4대 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
- 제4대 후반기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박 권 중
수내3동

- 동서울 대학 통신공학과 졸업
- 한나라당 분당 을지구당 부위원장
- 수내 초등학교 운영 위원장
- 분당 청년 회의소 회장
- 성남서고 제4회 동창 회장
- 수내3동 자율 방범 회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 위원장

이 영 호
이매1동

- 단국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한나라당 분당 갑지구당 부 위원장
- ROTC중앙회 부회장
- 동산 라이온스 클럽 이사
- 분당 충청향우회 부회장
- 이매1동 주민 자치 위원회 고문
- 리더스 해운(주)대표이사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 위원 회 간사

김 철 호
이매2동

- 제2,3대 성남시의회 의원
-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회 위원
-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위원
- 재성남 강원도민회 고문
- 한나라당 분당갑지구당 부위원장
- 경성(주)대표이사
- 제4대 전반기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경제 환경 위원회 위원

민 동 익
야탑2동

- 한나라당 분당 갑지구당 부위원장
- 분당 신용 협동조합 이사장
- 재성남 충청 향우회 부회장
- 분당 경찰서 행정 발전 위원회 위원
- 명동 식품 대표
- 미림 CME(주) 회장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치행정위원회 위원

장 대 훈
야탑2동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한나라당 분당갑지구당 부위원장
- 하탑 초등학교 운영위원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성남지회 이사
- 성남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성남 시민의모임 운영위원
- LG프라자 대표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 위원장

성 명

학·경력 및 소속위원회

윤 광 열
서현2동

- 서울산업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성남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중간사 및 부 회장
- 새천년민주당 분당갑지구당 수석부위원장
- 성남시 아동 보육 위원회 위원
- 열린 우리당 분당 갑지구당 운영위원장
- 제3대 성남시의회 의원
- 성남시 태권도 협회 운영위 원장
- 분당 결식아동 후원회 회장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사회복지 위원장

지 수 식
야탑3동

- 대림 공업 대학 졸업
- 삼영전자(주) 5~8대 노조위원장
- 한국 노총 금속노련 부위원장
- 성남 생활 체육 족구 연합회 회장
- 삼영 전자(주) 회사원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 위 원회 위원

김 대 진
판교·운중동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판교동 예비군 동대장
- 낙생 농협 제8·9대 조합장
- 분당경찰서 방범 연합 회장
- 한국 자유총연맹 성남시 지부장
- 판교지구 개발 추진 위원장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 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이 호 섭
금곡동

-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 졸업
- 금곡동 체육 진흥회 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분당구협의회 회장
- 제3대 성남시 의회 의원
- 한나라당 분당을 지구당 부위원장
- 제주 목장 대표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 위원 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경제환경 위원장

전 이 만
구미동

- 고려대학교 4년졸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불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위한 특별위원 회 위원장
- (주)대정산업 대표이사
- 제3대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 회 위원
-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 집필 趙潤濟 성남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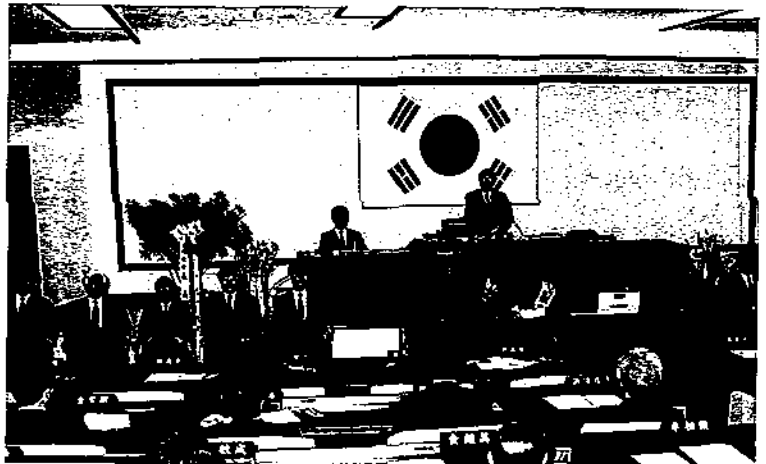
제3절 성남시의회 조직과 활동

1. 성남시의회 조직

1) 성남시의회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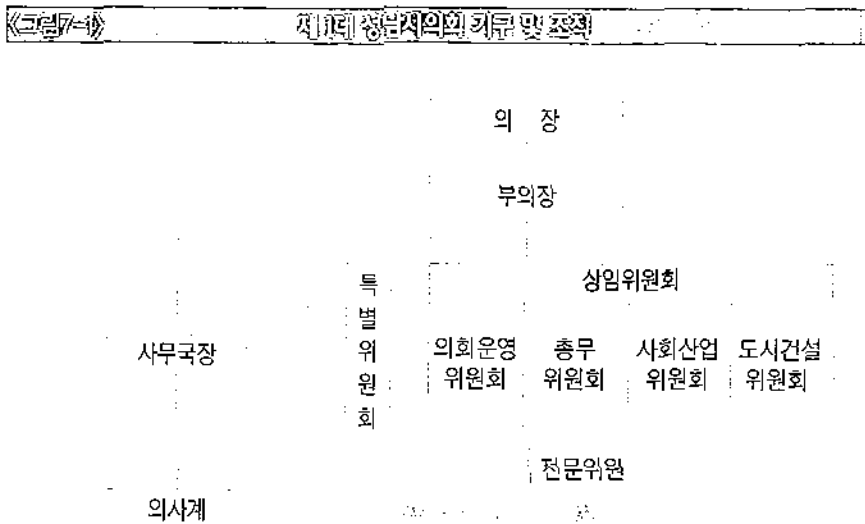
성남시의회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다.

1991년 4월15일 45명의 의원(수정구 22명, 중원구 23명)들이 개원한 제1대 성남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의사계) 및 전문위원 등의 체계를 갖추어 출범하였다.



〈사진 3-7-6〉 성남시의회 전체 회의

제1대 성남시의회 의 기구와 조직은 다음의 [그림 7-1]과 같다.



145) 성남시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개원하고 있다. 제1대 성남시의회의 후반기 개원은 1993년 4월 12일, 제2대는 1997년 1월 9일, 제3대는 2000년 7월 5일 각각 개원하였다.

146)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147) 지방의회 의장단의 선출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① 지방의회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호선하는 방법. ② 지방의회 의원선거시 의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법. ③ 주민의 직접 선거로(또는 지방의회가)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의장을 겸임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첫째의 예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둘째의 예로는 미국의 워싱턴 특별구, 셋째의 예로는 독일의 일부 읍·면, 미국·캐나다의 일부 시, 그리고 프랑스의 시·읍·면 등을 각각 들 수 있다. 한편 부의장에 관해서는 이를 두는 나라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임시의장을 두는 나라(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프랑스(약간), 캐나다의 몬트리올 도시공동체(1명), 뉴욕시(1명), 일본(1명)을, 후자의 예로는 워싱턴특별구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선거권자의 직접 선출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러한 조직편제는 성남시의회 제1대를 기점으로 하여 1995년 7월 14일 50명의 의원(수정구 17명, 중원구 16명, 분당구 17명)들이 개원한 제2대와 1998년 7월 14일 40명의 의원(수정구 13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7명)들이 개원한 제3대 성남시의회에 이르기까지 그 골격을 유지한 채 의원정수의 변경, 상임위원회의 확대와 축소, 그리고 의회 사무국 기구 개편 및 인력의 증원 등이 있었다.¹⁴⁵⁾

2002년 7월 9일 41명의 의원(수정구 14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7명)들이 개원한 제4대 성남시의회의 2004년 1월 현재 기구와 조직은 다음과 같다.¹⁴⁶⁾

성남시의회 의장단 및 조직

의 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사무국장
의회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의정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팀
도시건설위원회	홍보자료팀

2) 성남시의회 의장단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 약간명으로 구성되며, 선거권자의 직접 선출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¹⁴⁷⁾ 의장단의 임기는 당초 4년으로 규정했으나, 1956년 2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시 1년으로 단축되었다가 1958년 12월의 개정에 의해 2년으로 연장되었다.

성남시의회는 의장단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선출하고 있는데, 제1대 전반기·후반기 의장에 손영태(孫榮泰)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

대 전반기 의장에 강부원(姜富遠) 의원, 후반기 의장에 김영봉(金永奉)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3대 전반기 의장에는 염동준(廉東俊)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는 박용두(朴鎔斗)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4대 전반기 의장에 김상현(金常顯) 의원, 후반기 의장에 홍양일(洪良一) 의원 등이 선출되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의회 대표권, 의사 정리권, 질서 유지권 및 사무 감독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보면 ① 법률로서 규정하는 방식, ② 인구수에 따른 상임위원회 수를 법률로 정해 놓고 조례로 설치하는 하는 방식, ③ 집행부가 제출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회기 중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방식, ④ 자치헌장으로 규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방식 중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조례에 의해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 수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정수 13인 이상 30인 이하인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 31인 이상 40인 이하인 의회는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 41인 이상인 의회는 5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8개, 그 외의 시·도의회에는 4~7개, 그리고 시·군·구 의회에는 3~5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¹⁴⁸⁾



사진 3-7: 62 상임 위원회

성남시의회는 제1대에서 4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제2대에는

148)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20조의 2, 별표 7; 정세욱(2000), 『지방자치학』, 법문사, 520쪽.

외국 지방의회의 경우 위원회의 수는 캐나다의 몬트리알시의회 집행위원회, 독일의 Kreis위원회, 프랑스의 도의회 집행위원회와 같이 1개를 두고 있는 나라, 일본과 같이 인구비례원칙에 의하여 상한을 두는 나라, 그리고 미국의 일부 시처럼 지방의회가 임의로 그 수를 정하는 나라(시) 등 매우 다양하다. 대체로 유럽 제국의 지방의회 중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1개만을 설치하는 곳이 많으나, 미국의 지방의회는 의원수에 비하여 위원회를 많이 설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컨대, 워싱턴 특별구의회는 의원수가 13명인데 10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뉴욕시의회 의원수는 51명인데도 21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능을 다루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비하여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관한 보완적 기능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49)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캐나다 몬트리알 도시공동체인데, 이 곳 의회의 기능과 그 구역 내 29개 시 의회의 기능간에는 중복되는 것이 없다.

150) 전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는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이 있으며, 후자의 관리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는 내부위원회, 경제·자격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의원정수의 증가로 5개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제3대에서는 의원 정수의 감소로 4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다가 현재 제4대에 와서는 5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지방의회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기초 자치단체 의회와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기초자치단체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능을 다루기 위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비하여 광역자치단체 의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관한 보완적 기능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¹⁴⁹⁾

과거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위원회 특성을 보면 ① 광역자치단체와 대도시의회 뿐만 아니라 소도시, 읍·면 의회에도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② 주민의 편익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개발 등 본질적인 업무를 다루는 위원회보다는 조직내부의 관리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의 수가 많았으며,¹⁵⁰⁾ ③ 광역자치단체 의회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가 유사했으며, ④ 위원회별로 정원의 차이가 많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성남시의회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1)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991년 4월16일 개최된 제 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¹⁵¹⁾ 위원회별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1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소속의원 현황은 다음의 [표 7-114]과 같다.

151) 성남시의회(2001).『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79쪽.

표 7-114 제1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간사	박용두	강부원	김중운	김상현	나필주	이희재	남장우	남장우	
	김일도	김일도	최명근	최명근	최병성	최병성	홍순두	홍순두	
		최명근		장두영		성규삼		조영이	
		송태섭		이영성		김상문		박용두	
		강대기		조명천		정재의		정수웅	
		조영이		윤기중		박선태		김종안	
		홍순두		이건영		정상규		윤민섭	
위원		김종기		박치선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김종안		이용배	
				송태섭		강대기		나철재	
								박용승	
계	9명		11명		11명		11명		

(2)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995년 7월 14일 개최된 제40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¹⁵²⁾

152) 성남시의회, 앞의 책, 492-493쪽.

[표 7-115]와 같이 제1대 의회에 비해 위원회 수가 1개 증가되었는데, 이는 의원 정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표 7-115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구분	의회운영		기획총무		재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박용승	장명섭	김용준	최명근	정수웅	정재의	남장우	남장우	권태홍	권태홍	
간사	이태순	신현갑	박찬범	김미희	이인순	김두일	신현갑	이수영	김종수	김종수	
	최명근	나운채	손영태	박찬범	최연욱	박용두	김삼근	박용승	박용두	강규식	
위원	김상현	박찬범	김미희	손영태	정재의	나운채	전준민	김종윤	장명섭	장명섭	
	안정연	강규식	윤기중	윤기중	강규식	정수웅	김종윤	권찬오	홍순두	홍순두	
	최연욱	권찬오	염동준	염동준	나운채	김삼근	이수영	신현갑	김세환	김세환	
	김삼근	최병원	최병성	최병원	김영봉	전준민	권찬오	김지숙	오인석	안종대	
	김숙배	김상현	김상현	김상현	김지숙	이인순	김원희	홍양일	최오균	오인석	
	김두일	강부원	최명근	김용준	홍양일	강부원	김숙배	최병성	김동환	장영춘	
	김동환	오인석	안종대	이태순	이태순	김원희	강주등	김숙배	장영춘	석규섭	

구분	의회운영 위원회		기획총무 위원회		재무경제 위원회		보사환경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	오인석 최오균	강주동 임봉규	안정연 유인갑	안정연 유인갑	김철홍 박용승	최연옥 임봉규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석규섭 김준식	정재의
계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명	13명	13명	12명	11명

153)

http://sn.council.or.kr/index_member.html(성남
시의회 홈페이지).

(3) 제3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제3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1998년 7월15일 개최된 제6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다.¹⁵³⁾

[표 7-116]과 같이 제2대 의회에 비해 위원회수가 1개 감소되었는데, 이는 의원정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표 7-116 제3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구분	의회운영 위원회		행정경제 위원회		사회복지 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간사	나운채	우종수	이완구	김상현	신현갑	이수영	김종수	석규섭	
	박문석	장윤영	방영기	박권종	김미희	김두일	김대진	홍방희	
	우종수	홍경표	박용두	홍경표	최유석	최유석	나운채	나운채	
	최유석	방익환	표진형	이근연	한선상	김미희	우종수	우종수	
	표진형	이태순	홍경표	전준민	김종윤	신현갑	이근연	표진형	
위원	이근연	이계남	전준민	장윤영	이수영	이계남	장윤영	한성상	
	전준민	최병성	김상현	염동준	김두일	홍양일	권찬오	김선규	
	이수영	홍양일	강부원	강부원	김민자	최병성	오인석	권찬오	
	강부원	이호섭	방익환	방익환	최병성	윤광열	홍방희	오인석	
	김민자	나운채	이계남	김민자	윤광열	김철홍	장영춘	이완구	
	박권종	박문석	박권종	이태순	김철홍	이호섭	박문석	박희동	
	윤광열	김대진	홍양일	방영기	박희동	박광봉	석규섭	박문석	
	나운채	우종수	이태순	전이만	이호섭	김숙배	전이만	김대진	
	박문석	장윤영	이완구	김상현	신현갑	이수영	김종수	석규섭	
			방영기	박권종	김미희	김두일	김대진	홍방희	
계	12명	12명	13명	13명	13명	13명	13명	13명	

(4) 제4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2004년 7월 현재)

제4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는 2002년 7월 10일 개최된 제 9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었는데, [표 7-117]과 같이 제3대 의회에 비해 위원회 수가 1개 증가되었다.¹⁵⁴⁾

구분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방익환	박광봉	박권종	이호섭	김숙배	윤광열	한선상	김대진
간사	유철식	김완창	정응섭	이상호	이영희	문길만	윤춘모	지관근	김유석	홍용기
	표진형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문길만	장운영	유철식	유철식	홍준기	홍준기
	최진섭	강태식	표진형	김완창	장운영	이수영	최화영	윤춘모	홍용기	한선상
	문길만	이수영	김완창	홍경표	이수영	염동준	신현갑	신현갑	김기명	김유석
위원	김민자	박권종	홍경표	정응섭	염동준	김상현	지관근	최화영	오인석	김기명
	김철홍	이영희	박광봉	강태식	김민자	김민자	최윤길	최윤길	장대훈	오인석
	최화영	신현갑	강태식	방익환	홍양일	박권종	김미라	김미라	지수식	장대훈
	이형만	최윤길	최진섭	최진섭	김철홍	이영희	이형만	이형만	김대진	지수식
	홍준기	김숙배	민동익	민동익	이호섭	김홍철	윤광열	김숙배	전이만	전이만
	김기명	김유석	방익환	박광봉	박권종	이호섭	김숙배	윤광열	한선상	김대진
	전이만	오인석	정응섭	이상호	이영희	문길만	윤춘모	지관근	김유석	홍용기
	홍경표	전이만								
	유철식	김완창								
계	12명	12명	10명	10명	10명	10명	13명	13명	12명	11명

154)

http://sn.council.or.kr/index_member.html(성남시의회 홈페이지).

2. 성남시의회 의 역할과 활동

1) 성남시의회 의 역할

성남시의회는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 정책 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분쟁 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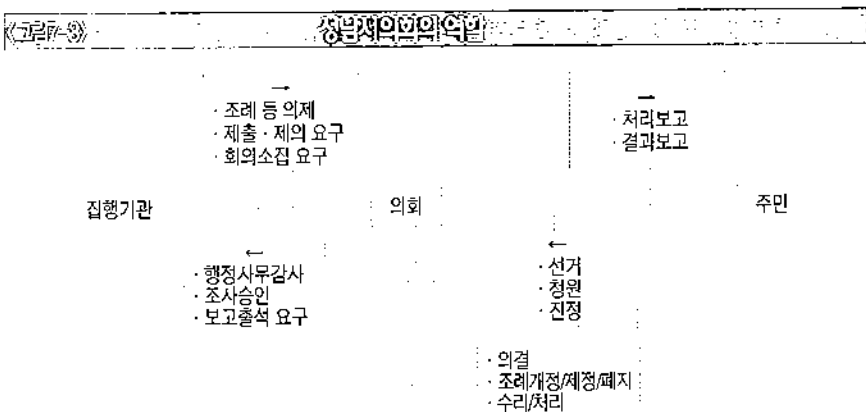


성남시의회는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 정책 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분쟁 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할은 조례안 의결, 예산안 확정, 사용료 분담금 등의 부과·징수 등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과 각종 동의에 대한 승인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로서의 역할은 각종 건의안, 결의안, 청원채택과 질문·질의, 감사, 그리고 조사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의 감시·독려자로서의 역할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요구 및 출석요구, 지방행정에 대한 질문 등을 수행하는 것이고, 분쟁 조정자와 민원 해결자로서의 역할은 지역주민 민원해결(진정서 처리)과 청원심사·채택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7-3]은 이상과 같은 성남시의회 의 역할을 종합하여 도시(圖示)한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시(市) 조례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 등의 의안처리 권한을 가지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청원수리 및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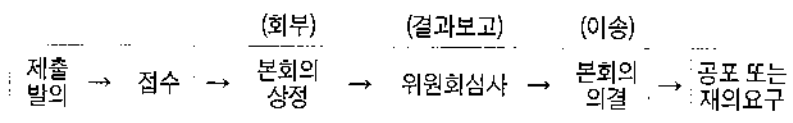
※ 도표안에 “→”표는 업무 처리 추진순서임 이하 같음.

(1) 의안 처리

성남시의회 의안은 크게 조례안과 예산안 처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먼저 전반적인 성남시의회 의안처리과정을 보면 [그림 7-4]와 같이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의회 의원 1/5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접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의사담당보고와 제출·발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게 된다. 그 후 해당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서 의결하게 되면, 성남시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공포 또는 재의요구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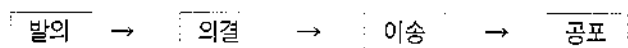
〈그림 7-4〉 성남시의회 의안 처리 절차



조례란 성남시의 법률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조례안은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 반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등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한다.

성남시의회는 조례제정절차를 보면 [그림 7-5]와 같이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발의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시의회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성남시장에게 이송하면, 성남시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¹⁵⁵⁾

〈그림 7-5〉 성남시의회 조례제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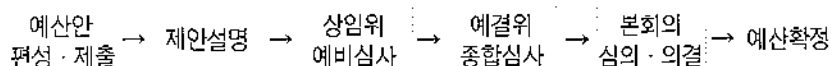


예산이란 성남시의 한 해 동안 살림규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먼저 성남시의회는 예산안 처리 절차는 [그림 7-7]과 같이 성남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성남시의회에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면,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성남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게 된다. 그 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예산을 의결하여, 의결된 예산을 3일내에 성남시의회 의장이 성남시장에게 이송하게 되면 확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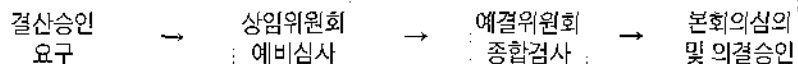
155) 성남시 조례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에 발생한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의결에 대해 성남시장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게 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그림 7-6〕 성남시의회의 예산안 처리 절차



결산 승인 절차는 [그림 7-7]과 같이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가 선임한 결산 감사위원회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말까지 성남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서를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거친 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승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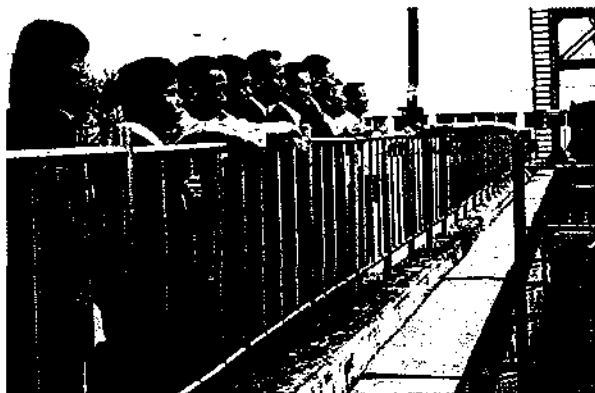
〔그림 7-7〕 성남시의회의 결산 승인 절차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사무를 감사 및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2) 행정 감시권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사무를 감사 및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지 확인, 서류의 제출과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러한 성남시의회의 행정 감시권에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가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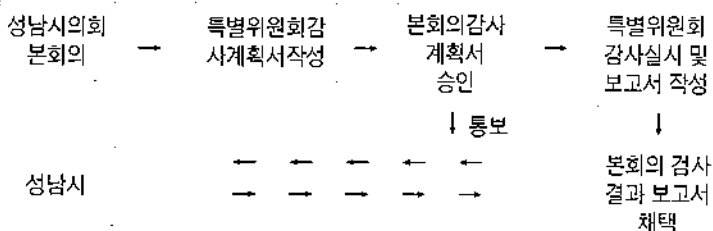
〈사진 3-7-6〉 튜원 하수처리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 중 7일 이내에 시정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절차는 [그림 7-9]과 같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후 성남시의회 본회

의에서 감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성남시에 통보하게 된다. 그 후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성남시에 통보하고, 성남시는 감사처리 결과를 성남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림 7-8〉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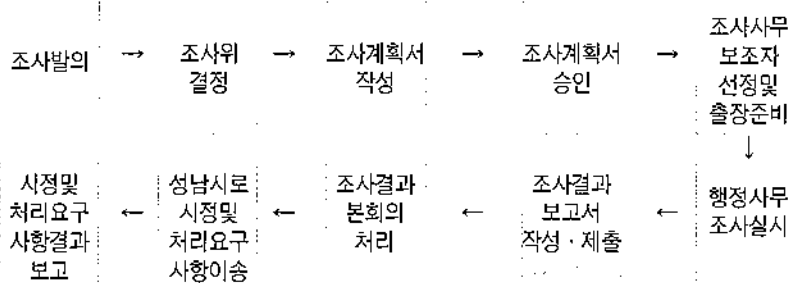


성남시의회의 행정 사무조사 절차는 [그림 7-9]와 같이 성남시의회 재직 의원 1/3이상의 조사 발의가 있게 되면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결정한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조사사무 보조자 선정 및 현지 출장 준비를 거쳐 보고 서류제출중인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고,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한다. 그 후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면, 성남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채택하여 성남시에 이송한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의회가 요구한 시정 및 처리 요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 3-7:64〉 행정감사

〈그림 7-9〉 성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절차



(3) 자율권

성남시의회는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이를 자율권이라고 하는데, 자율권에는 ①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 결정, ②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 규칙 제정, ③ 위원회 구성 및 의안발의권, ④ 의장단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그리고 ⑤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등이 있다.

(4) 기타 권한

그 밖에 성남시의회에서는 ①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징수, ②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③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④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그리고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5) 성남시의회의 회의 운영

성남시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구분되는데, 정례회는 연 2회 35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먼저 정례회는 매년 7월5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의결로 9-10월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는데,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된다.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는 3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개최되어야 하는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 등을 처리하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행정 사무감사,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처리한다.

한편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시에 집회되고, 15일 이내로 열리며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거나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의 심사 등을 처리한다.

2) 제1대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1991. 4.15 ~ 1995. 6.30)

(1) 회의 현황

1991년 4월 9일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성남시장이 최초로 임시 집회일을 공고하였고, 성남시의회는 4월 15일 오전 10시 원(院) 구성을 위한 최초 집회를 가졌다.¹⁵⁶⁾

이 날 회의에서는 등록의원 수, 집회 일시 및 소집 요구장 등에 대한 이익수(李益洙)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상정된 부의안건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관한 건이었다.¹⁵⁷⁾

제1대 성남시의회는 본회의 37회를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6회, 총무위원회 22회, 사회사업위원회 20회, 도시건설위원회 21회 등을 비롯하여 각 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가 열렸다. 행정 사무감사는 각 위원회 및 분과별로 이루어졌다.

156) 원 구성 이전의 의원 좌석은 단상을 향한 앞임 우측부터 구청별, 선거구별, 최다득표순으로 배치하여 의원활동에 임하게 되었다.

157) 성남시의회(2001), 『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70쪽.

제1대 성남시의회의회의현황			
회의명	개최횟수	회의명	개최횟수
본회의	37회	내무분과	1회
의회운영위원회	26회	산업경제분과	1회
총무위원회	22회	보건사회분과	1회
사회산업위원회	20회	도시분과	1회
도시건설위원회	21회	건설분과	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회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감사
기획문공분과	1회	특별위원회	13개

* 참조: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2) 의안처리 활동 현황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의정활동을 벌인 제1대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총 370건의 의안 처리 접수 건수 중 369건을 처리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1991년의 성남 시민현장조례개정안, 1992년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993년의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안), 1994년의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총 286건의 조례안 처리를 비롯해서 예산안 처리 12건, 의견 청취 30건, 결의안 7건 등이다.

158)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199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은 1994년까지만 제시하고 1995년 전반기의 활동실적은 1995년 제2대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에 포함하였다.

제1대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19] 및 [표 7-120]와 같다.¹⁵⁸⁾

성남시의회 의안 처리 현황 (1991~1992년)													
(1991년)							(1992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합계	85	84	-	-	-	-	124	124	-	-	-	-	-
예산안	-	-	-	-	-	-	6	6	-	-	-	-	-
결산안	1	1	-	-	-	-	1	1	-	-	-	-	-
조례안	76	76	-	-	-	-	76	76	-	-	-	-	-
청원안	2	1	-	-	-	1	1	1	-	-	-	-	-
건의안	-	-	-	-	-	-	3	3	-	-	-	-	-
결의안	-	-	-	-	-	-	7	7	-	-	-	-	-
의견청취	-	-	-	-	-	-	24	24	-	-	-	-	-
기타	6	6	-	-	-	-	6	6	-	-	-	-	-

* 자료: 성남시의회(1992·1993), 『의정백서(1991·1992)』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1993~1994년)														
(1993년)							(1994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합계	81	81	-	-	-	-	-	80	80	-	-	-	-	-
예산안	3	3	3	-	-	-	-	3	3	-	-	-	-	-
결산안	1	1	1	-	-	-	-	1	1	-	-	-	-	-
조례안	50	50	-	-	-	-	-	52	52	-	-	-	-	-
청원안	-	-	-	-	-	-	-	1	1	-	-	-	-	-
건의안	5	5	-	-	-	-	-	-	-	-	-	-	-	-
의견청취	3	3	-	-	-	-	-	3	3	-	-	-	-	-
기타	19	19	-	-	-	-	-	20	20	-	-	-	-	-

* 자료: 성남시의회(1994·1995), 『의정백서(1993·1994)』

(3) 행정 사무감사 현황

제1대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감사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는 3일간 실시되었으며, 1994년에는 7일간 실시되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표 7-121]에서와 같이 제1대 성남시의회 기간인 4년간에 걸쳐 총 27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 등을 처리하였다.

제2대 성남시의회의 의정사무감사 실적					
구분	검사기간	합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1991	12.5 ~ 12.7	18	-	-	-
1992	11.30 ~ 12.2	41	22	19	-
1993	12.1 ~ 12.3	69	45	24	-
1994	12.1 ~ 12.7	146	104	42	-

3) 제2대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1995. 7. 1 ~ 1998. 6.30)

(1) 회의 현황

제2대 성남시의회의는 1995년 7월 1일 개원한 후, 본회의 24회, 의회운영위원회 23회, 기획총무위원회 18회, 재무경제위원회 19회 등 총 10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초의 회의는 1995년 7월 13일 개최된 제 40회 임시회의로서 50명의 시의원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는 황재영(黃在英)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의장, 부의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었다.¹⁵⁹⁾

159) 성남시의회, 앞의 책, 486 쪽.

제2대 성남시의회의 회의현황			
회의명	개최횟수	회의명	개최횟수
본회의	24회	도시건설위원회	17회
의회운영위원회	2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회
기획총무위원회	18회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감사
재무경제위원회	19회	특별위원회	1개
보사환경위원회	18회		

* 참조: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2) 의안 처리 현황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의정활동을 벌인 제2대 성남시의회의 의안 처리 현황을 보면 총 300건의 의안처리접수 건수 중 294건을 처리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1995년의 성남시 주거환경 개선지역 조례중 개정 조례안, 1996년의 성남시 도시공원 조례(안), 1997년의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188건의 조례안 처리를 비롯하여 의견 청취 20건, 결

160)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1998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은 1997년까지만 제시하고 1998년 전반기의 활동실적은 1998년 제3대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에 포함하였다.

의안 18건, 청원안 3건 등이다.

제2대 성남시의회 의안 처리 현황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⁰⁾

성남시의회 의안처리현황(1995~1996년)														
(1995년)								(1996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접수	처리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합계	97	97	-	-	-	-	-	115	113	75	27	9	2	2
예산안	4	4	-	-	-	-	-	4	4	1	3	-	-	-
결산안	1	1	-	-	-	-	-	1	1	1	-	-	-	-
소계	63	63	-	-	-	-	-	74	72	47	20	4	1	2
조례	-	-	-	-	-	-	-	6	5	2	2	1	-	1
의원발의	-	-	-	-	-	-	-	1	1	1	-	-	-	-
의원발의	-	-	-	-	-	-	-	67	66	44	18	3	1	1
시장제출	-	-	-	-	-	-	-							

성남시의회 의안처리현황(1995~1996년)														
(1995년)								(1996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접수	처리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재의안								4	4	4				
동의(승인)안														
청원안	1	1						2	2	2				
건의안								2	2	2				
결의안								9	9	6			3	
의견정취	7	7						7	7	5			2	
기타	21	21						7	7	6			1	
중요재산								5	5	1	4			
취득처분														

* 자료: 성남시의회(1996·1997), 『의정백서(1995·1996)』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합계	88	88					
예산안	3	3					
결산안	1	1					
소계	53	53					
의원							
조발의							
레의원회							
안발의							
시장							
제출							
체의안							
동의							
(승인)안							
청원안							
건의안							
결의안	9	9					
의견청취	6	6					
기타	15	15					
중요재산							
취득처분							

* 자료: 성남시의회(1998), 『의정백서(1997)』

(3) 행정 사무감사 현황

제2대 성남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1995년에는 5일간 실시되었으며, 1996년과 1997년에는 7일간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표 7-124]와 같이 제2대 성남시의회기간인 3년간에 걸쳐 총 1,129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등을 처리하였다.

표 7-124 제2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현황						
구분	검사기간	합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1995	11.29 ~ 12. 3	345	227	78	40	
1996	11.29 ~ 12. 5	359	161	147	51	
1997	11.29 ~ 12. 5	425	189	161	75	

4) 제3대 성남시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1998. 7. 1 ~ 2002. 6.30)

(1) 회의 현황

제3대 성남시의회의는 1998년 7월 1일에 개원하였으며 그 후 4년간 본회의 35회를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회 27회, 운영총무위원회 4회, 기획총무위원회 7회, 행정경제위원회 21회 등 총 10개 위원회에서 141회의 회의가 열렸다.

제3대 성남시의회의의 최초 회의는 7월 14일 개최된 제 64회 임시회로서 40명의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낙건(成樂健)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인 의원선서, 의장 선거, 부의장선거 등을 처리하였다.¹⁶¹⁾

161) 성남시의회, 앞의 책, 808 쪽.

제3대 성남시의회의의 의정활동			
회의명	개최횟수	회의명	개최횟수
본회의	35회	보사환경위원회	2회
의회운영위원회	27회	사회복지위원회	21회
운영총무위원회	4회	도시건설위원회	29회
기획총무위원회	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회
재무경제위원회	2회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감사
행정경제위원회	21회	특별위원회	3개
사회경제위원회	7회		

* 참조: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2) 의안 처리 현황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의정활동을 벌인 제3대 성남시의회의의 의안처리 현황을 보면 총 461건의 의안 처리접수 건수 중 459건을 처리하였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1998년의 성남시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1999년의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2000년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안, 2001년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중 개중 조례안 등 총 288건의 조례안 처리를 비롯하여 동의(승인)안 32건, 결의안 20건, 의견 청취 17건, 청원안 8건 등이다.

제3대 성남시의회의의 의안처리 현황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26] 및 [표 7-127]과 같다.¹⁶²⁾

162)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200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의회 활동 실적은 2001년까지만 제시하고 2002년 전반기의 활동실적은 제4대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에 포함하였다.

표 7-126 성남시의회 의원처리 현황 (1998~1999년) (1998년) (1999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원안							원안				
합계	96	96	67	27	1	1		122	121	68	48	5		1
예산안	4	4	2	2				4	4	1	3			
결산안	1	1	1					1	1	1				
소계	60	60	41	19				85	85	43	37	5		
의원														
조발의	11	11	10	1				10	10	4	4	2		
례의원회														
안발의														
시장														
제출	49	49	31	18				75	75	39	33	3		
재의안	1	1			1									
동의														
(승인)안	3	3	2	1				5	5	4	1			
청원안														
건의안	2	2	2					2	2	2				
결의안	7	7	6					6	6	5	1			
의견청취	3	3	1	1				1	1		1			
				(의견제시)							(의견제시)			
기타	11	11	9	2				14	13	10	3			1
중요재산														
취득처분	4	4	2	2				4	4	2	2			

* 자료: 성남시의회(2000), 『제3대 전반기 의정백서』.

표 7-127 성남시의회 의원처리 현황 (2000~2001년) (2000년) (2001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가결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원안							원안				
합계	133	132	94	34	1	2	1	110	110	73	31	6	-	-
예산안	4	4	2	2	-	-	-	5	5	4	1	-	-	-
결산안	1	1	1	-	-	-	-	1	1	1	-	-	-	-
소계	82	81	56	25	-	-	-	62	62	36	22	4	-	-
의원														
조발의	11	11	9	2	-	-	-	11	4	4	3	4	-	-
례의원회														
안발의	-	-	-	-	-	-	-	-	-	-	-	-	-	-
시장														
제출	71	70	47	23	-	-	1	51	51	32	19	-	-	-
재의안	1	1	-	-	1	-	-	-	-	-	-	-	-	-
동의														
(승인)안	14	14	10	2	1	1	-	10	10	6	4	-	-	-
청원안	4	4	2	1	-	1	-	4	4	2	-	2	-	-
건의안	3	3	3	-	-	-	-	2	2	2	-	-	-	-
결의안	3	3	3	-	-	-	-	4	4	4	-	-	-	-
의견청취	7	7	5	2	-	-	-	6	6	5	1	-	-	-
				(의견제시)							(의견제시)			
기타	10	10	10	2	-	-	-	10	10	10	-	-	-	-
중요재산														
취득처분	6	6	4	2	-	-	-	6	6	3	3	-	-	-

* 자료: 성남시의회(2002), 『제3대 후반기 의정백서』.

(3) 행정 사무감사 현황

제3대 성남시의회는 행정 사무감사는 각 연도별로 모두 7일간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표 7-128]과 같이 제3대 성남시의회 기간인 4년간에 걸쳐 총 1,15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등을 처리하였다.

제3대 성남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현황						
구분	검사기간	합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1998	11.27 ~ 12. 3	378	123	166	89	
1999	11.26 ~ 12. 2	271	112	111	48	
2000	11.27 ~ 12. 3	287	111	135	41	
2001	11.28 ~ 12. 4	216	101	75	40	

5) 제4대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 실적(2002. 6.30 ~ 2003. 12 현재)

(1) 회의 현황

제4대 성남시의회는 2002년 6월30일에 개원하였다. 제4대 성남시의회 의 최초 회의는 41명의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7월9일 개최된 제 99회 임시회로 김형대(金炯大) 사무국장의 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인 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등을 처리하였다.¹⁶³⁾

제 99회 임시회부터 제 112회 본회의까지 총 14회의 회의가 열렸으며, 의회운영위원회 14회, 자치행정위원회 14회 등 각 위원회별 회의가 진행되었다.¹⁶⁴⁾

제4대 성남시의회 회의 현황 (2003년 12월 기준)			
회의명	개최횟수	회의명	개최횟수
본회의	14회	도시건설위원회	13회
의회운영위원회	14회	예산결산위원회	8회
자치행정위원회	14회	행정사무감사	각 위원회별 감사
경제환경위원회	12회	특별위원회	3개
사회복지위원회	13회		

* 참조: <http://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163) www.sncouncil.com(성남시의회 홈페이지).

164) 제4대 성남시의회는 2003년도 주요 의안처리 및 의정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시회 및 정례회 운영(임시회 개최: 6회 45일, 안건심의 83건, 정례회 개최: 2회 35일, 안건심의 45건, 시정질문 및 답변 46명 117건), 특별위원회 운영(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조사특별위원회: 2003. 6.27-9.16 제13차 회의개최, 성남시 현충탑 이전관련 건립현상 공보작품 선정분쟁접 조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2003. 6.26-8.31 제7차 회의 개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회), 열린의회 운영(회의장 방청 및 개방 546명, 의정실 개방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32건, 의회에 바란다, 123건, 타지역 기관 및 단체방문객 접견(외국인포함) 9회 83명), 의정활동을 위한 연구활동(국내 성남시의회 의원연수: 2003년 제1차 의정연수(2003. 3.26-28, 강릉), 2003년 제2차 의정연수(2003.10.13-16, 제주도), 국외 의원연수: 2003년 해 외 연수(2003.11.14-11.24, 유럽 6개국: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의정포럼 개최(2003.3.4 중앙문화정보센터), 타 시 군 의회 벤치마킹 3회 4개 시 군, 현장방문 의정활동 3회 8지역), 봉사활동 전개(사회복지시설 2회, 건 의정대 2회, 기타(태풍피해지역) 2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남시(2004), 비전성남 제103호, 성남시 공보담당관실, 6면.

(2) 의안 처리 현황

2002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제4대 성남시의회의 의안 처리 현황을 보면 총 189건의 의안처리접수 건수 중 186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2002년의 성남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2003년의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04건의 조례안 처리를 비롯하여 의견청취 10건, 동의(승인)안 5건, 결의안 5건, 청원안 2건 등이다.

제4대 성남시의회의 의안처리 현황을 각 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7-130]과 같다.¹⁶⁵⁾

165) 성남시의회의원의 임기는 2002년 6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의회 활동 실적은 2001년까지만 제시하고 2002년 전반기의 활동실적은 2002년 제4대 성남시의회 활동실적에 포함하였다.

[표 7-130]		성남시의회 의안처리 현황 (2002~2003년)													
(2002년)								(2003년)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접수	처리	처리내용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가결 원안	수정	부결	철회	미처리	
합계	79	77	63	13	1	-	2	110	109	-	-	-	-	-	
예산안	5	5	1	4	-	-	-	4	4	-	-	-	-	-	
결산안	1	1	1	-	-	-	-	1	1	-	-	-	-	-	
소계	36	34	26	7	1	-	2	72	71	69	2	-	-	1	
의원 조발의 안	5	4	1	2	1	1	-	-	-	-	-	-	-	-	
의원회 안	1	1	1	-	-	-	-	-	-	-	-	-	-	-	
시장 제출 재의안	30	29	24	5	-	-	-	-	-	-	-	-	-	-	
동의 (승인)안	5	5	4	1	-	-	-	-	-	-	-	-	-	-	
청원안	1	1	1	-	-	-	-	1	1	-	-	-	-	-	
건의안	-	-	-	-	-	-	-	6	6	-	-	-	-	-	
결의안	4	4	4	-	-	-	-	1	1	-	-	-	-	-	
의견청취	10	10	10	-	-	-	-	-	-	-	-	-	-	-	
기타	13	13	13	-	-	-	-	25	25	-	-	-	-	-	
중요재산 취득처분	4	4	3	1	-	-	-	-	-	-	-	-	-	-	

* 자료: 성남시의회(2002·2003), 의정팀 내부자료

(3) 행정 사무감사 현황

제4대 성남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각 연도별로 모두 7일간 실시되었다. 감사결과 [표 7-131]과 같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에 걸쳐

총 55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건의 사항, 그리고 자료 요구 등을 처리하였다.

제4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약					
구분	검사기간	합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자료요구
2002	11.27 ~ 12.3	267	131	102	34
2003	11.29 ~ 12.5	290	89 (문책요구 3)	178	23

3. 성남시의회 사무국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에 사무국(과)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와 서기 등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1950~6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에 사무국(과)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간사와 서기 등을 겸임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도(道)의 경우는 지방과에 의회계를 두어 의회사무를 전담케 하였는데, 이로 인해 인력과 예산은 절감되었지만 지방의회의 기능을 관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의회를 위해서 일했다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살피며 사실상 집행기관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의회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시·군·자치구 의회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각각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지 않고, 의장 추천에 의하여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사무국은 1991년 4월8일 의회사무국 기구설치(조례 제 1123호)에 근거하여 1국, 1계, 17명으로 출범하였으며, 1992년 10월12일에 근거하여 1국, 2계, 23명으로 확대·개편되었다.

그 후 1998년 10월7일에 1국, 4전문위원, 2담당 27명 등으로, 2002년 9월12일에는 1국, 5전문위원, 2담당 30명 등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03년 7월 단행된 의회사무국 기구개편에 의하여 1국, 5전문위원, 3팀장 30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제4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기구 및 역대 사무국장 현황을 보면, [표 7-132] 및 [표 7-133]과 같다.¹⁶⁶⁾

166) <http://www.sncouncil.com>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표 7-132		제4대 성남시의회 사무국 현황								
직급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7	기능8	기능9	기능10
정원	30	1 (사무국장)	3	5	7	1	1	-	9	3
현원	30	1 (사무국장)	3	5	7	1	1	5	7	-

표 7-133		성남시의회 역대 사무국장 현황	
	성명		재임기간
	이익수(李益洙)		1991. 3.27 ~ 1993. 1.19
	배기호(裴基昊)		1993. 1.20 ~ 1994. 5.25
	황재영(黃在英)		1994. 5.26 ~ 1996. 7. 7
	황민섭(黃敏燮)		1996. 7. 8 ~ 1998. 1. 2
	성낙건(成樂健)		1998. 1. 3 ~ 1998. 9.22
	신교철(申敎徹)		1998. 9.23 ~ 1998.10. 7
	이상철(李相喆)		1998.10. 8 ~ 1999. 8.31
	이경식(李敬植)		1999. 9. 1 ~ 2000. 4.30
	박찬성(朴贊成)		2000. 5. 1 ~ 2000.12.29
	김영기(金榮基)		2000.12.30 ~ 2001. 6.30
	이경수(李慶壽)		2001. 7.18 ~ 2001.12.12
	김형대(金炯大)		2001.12.13 ~ 2003. 1.29
	김용겸(金龍謙)		2003. 1.30 ~ 현재

* 자료: 성남시의회(2001), 『성남시의회사』, 성남시의회.

◎ 집필 尹斗燮 경원대학교 책임연구원
徐辰錫 중부대학교 교수